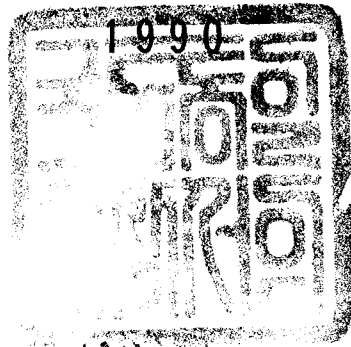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발표1주년기념
통일문제 국제학술회의 발표 논문집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Korean Unification

국통정 90-10-70

'90년대 동북아 새 질서와 한민족공동체 형성

'90s New Order in N.E. Asia and Building of the
Korean National Community



국토통일원
NATIONAL UNIFICATION BOARD

이 책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발표 1주년을 기념하여 1990년 9월 11일, 12일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된 「90년대 동북아 새질서와 한민족공동체 형성」이란 주제의 통일문제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수록한 것입니다.

This book includes the papers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 '90s New order in N.E.Asia and Building of the Korean National Community,” held in Seoul from 11 to 12 September 1990, celebrating the 1st Anniversary of the Announcement of the Korean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목 차

〈제 1 부〉	3
○ 개회사(홍성철, 국토통일위원장)	5
○ 기조연설(이현재,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	15
〈제 2 부〉 동서화해와 한반도 평화구조	25
○ 소련의 위협감소와 한반도 평화구조(벤자민 램버스)	27
○ Soviet Threat Disappearing and Peace-framework on the Korean Peninsula. (Benjamin S. Lambeth)	46
○ 데탕트와 한반도 통일전망(미하일 노소브)	64
○ Detente and Prospects of Korean Reunification (Michael G. Nossov)	79
○ 동서화해와 한반도 통일의 당면과제(다케사다 히데시)	97
○ Detente and Facing Problems of Korean Reunification (Takesada Hideshi)	114
〈제 3 부〉 한민족공동체 회복과 남북협력	127
○ 한반도 통일 :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죠지 쿠나제)	129
○ Unification of Korea : Realism vs Utopianism (George F. Kunadze)	143
○ 군사문제와 한민족공동체 형성(케빈 루이스)	158

○ Toward a Korean National Community : Selected Strategic , Military, and Arms Control Issues (Kevin N. Lewis)	184
○ 남북협력을 통한 한민족공동체 형성 (임용순)	221
○ Ways to Build a Korean National Community through the South - North Cooperation (Yim Yong Soon)	241
< 제 4 부 > 남북연합의 제도적 접근과 당면과제	271
○ '90 년대를 향한 통일정책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제조명 (김학준)	273
○ The Korean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as Seen Through the Various Concepts on the Unification of Multi - System Nations (Kim Hak Joon)	290
○ 남북연합의 제도적 접근의 전망 (이즈미 하지메)	311
○ Prospects of Institutional Approach to Korean Commonwealth (Izumi Hajime)	324
○ 남북연합과 경제협력 (알렉세이 세미요노프)	341
○ The Korean Commonwealth and Economic Cooperation (Alexei I. Semeynov)	358
< 제 5 부 >	377
○ 종합토론요지	379
○ 국제학술회의 전체일정	386

제 1 부

- 개 회 사
- 기 조 연 설

開 會 辭

洪 性 澈
(국토통일원장관)

韓國精神文化研究院 李賢宰院長님!

오늘 뜻깊은 國際學術會議에 참석하기 위해 멀리 美國, 蘇聯, 日本등지에
서 오신 學者여러분!

그리고 國內教授, 專門家, 來賓여러분!

먼저 본인은, 노태우 大統領께서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을 발표하신지
1周年을 맞는 오늘, 국내외 碩學 여러분들을 모신가운데 韓半島 統一問題
國際學術會議를 개최하게 된 것을 큰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來賓 여러분들께 깊은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韓半島 統一問題에 관한 國際學術會議를 갖게 된것은 일년
전 노태우 大統領께서 발표하신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의 意味를 세계
적 석학 여러분들과 함께 재조명해 보고, 나아가 韓半島 平和와 統一의
進路를 摸索해 보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尊敬하는 國內外 學者 여러분!

최근 몇해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韓半島 内外의 情勢는 놀라운 변화를
겪으면서 韓半島 統一의 장래를 밝게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2차세계대전 이후 國際政治의 냉엄한 질서로 지속되어온 東西冷戰이 東歐社會主義 國家들의 開放·改革과 함께 신데탕트의 세 질서로 바뀌었으며, 세계는 葛藤과 對決의 구시대를 청산하고 和解와 協力の 새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國際情勢의 이러한 변화는 冷戰의 희생물로 분단된 우리 민족에게 統一의 새 시대를 열 수 있다는 希望과 機會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國內적으로도 『6·29宣言』이후 각계각층에서 일기 시작한 民主化 물결과 함께 統一에 대한 국민적 關心과 念願이 고조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완수와 함께 北方政策이 성공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우리는 보다 적극적인 統一政策을 추진할 수 있는 내적 기반을 갖게 되었습니다.

第6共和國 출범이후 우리 정부는 이러한 국내외적인 統一環境의 변화에 부응하고 국민적 輿望을 받아들여 北韓을 대결의 상대로서가 아니라, 統一으로 향한 民族共同體의 일원으로 包容해 나가려는 차원에서 統一政策을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이러한 統一政策의 방향은 이미 1988년 노태우 大統領의 이른바 民族自尊과 統一繁榮을 위한 『7·7 特別宣言』과 10월 18일 유엔 總會 演說에서 밝힌 바 있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작년 9월 11일에는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을 우리 정부의 統一에 대한 청사진으로 제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은 南北間의 相互交流과 協力을 통해 民族共同體를 回復·發展시켜 나감으로써 완전한 再統一의 밑바탕을 하나씩 다져 나간다는 점진적 통일에의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統一方案은 완전한 統一로 가는 중간과정의 과도기적인 統一體制로서 『南北聯合』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南北聯合體制 아래에서 南과 北은 民族共同生活圈을 형성하여 共同의 繁榮을 이룩하고, 民族同質性을 回復함으로써 완전한 統一을 促進시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南北聯合』안에 대하여 北韓은 “두개의 朝鮮을 추구하는 分裂方案”이라고 비난하면서 자신들의 『高麗民主聯邦共和國案』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만이 統一을 실현할 수 있는 완벽하고도 唯一無二한 최선의 方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

統一은 하루빨리 實現되어야 하며, 그 완성이 政治的 統合에 있음은 당연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를 부정하는 이는 7千萬 우리 겨레중에 한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統一의 첫발을 내디뎌야 할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 民族은 分斷이후 근 반세기 동안을 南北으로 갈라져 서로 적대하는 體制속에서 살아왔으며, 오늘날 南北의 겨레는 生活樣式과 價値觀마저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1950년 6월 同族間에 치열한 戰爭을 겪었으며, 아직도 南北間에는 깊은 不信과 敵對感이 常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깊은 不信과 오랜 적대, 그리고 異質화된 民族社會를 그대로 둔 채 南과 北이 당장 정치적 統습을 이루는 것이 가능하며 바람직한 것이겠습니까?

저는 이 모든 준엄한 현실을 외면한 어떠한 統一方案이나 논의에 同感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外面한 주의나 주장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은 祖國의 통일이 아니라 民族의 더 긴 시련일 뿐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이야말로 南北의 현실을 合理的으로 고려하고, 우리 겨레의 理想을 담은 가장 실현가능한 統一方案이라고 확신합니다.

尊敬하는 內外學者 여러분!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을 발표한지 불과 1년이 경과하는 동안 세계의 변화는 가히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분단국이었던 東西獨은 오랜 分斷의 障壁을 허물고 社會·經濟統습을 실현하였으며, 이제 완전한 統獨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南北에겐은 이미 統一을 해냈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통일의 바톤은 우리 민족에게 넘겨지고 있습니다.

지난 1년동안 우리는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을 실현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우리의 北方政策은 더욱 성과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헝가리·루마니아등 東歐 社會主義 國家들과 國交關係를 수립하였으며, 소련 및 중국과도 다방면에 걸쳐 協力關係를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노태우 大統領과 고르바초프 大統領의 역사적인 샌프란시스코 會談以後 韓·蘇關係는 더욱 긴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國際學術會議에 세분의 소련인 학자들이 참석한 것이 韓·蘇關係의 발전을 보여주는 좋은 指標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統一은 우리 民族의 課題이며 우리 민족 스스로가 이루어야 할 責務입니다.

國際社會의 신데탕트, 東歐 社會主義의 開放化등 주변환경의 변화가 우리의 統一에 있어 必要條件은 될지 언정 充分條件이 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 1년동안 南北間의 信賴를 回復하고 交流와 協力を 증대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기울여왔습니다.

우리는 北韓에 대해 다각적인 對話와 協力を 제의하였으며, 대화가 南北韓 關係의 改善에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北韓이 제시한 요구가 다소 무리하다 할지라도 受容하고 먼저 讓步한다는 것이 對話에 임하는 우리의 일관된 자세입니다.

그 결과 며칠전에는 南北韓 總理를 대표로 하는 南北高位級會談이 서울에서 개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첫 會議의 결과가 統一을 念願하는 7千萬 겨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北韓은 韓半島 核 撤收와 UN 單一議席加入등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 하면서 우리의 信賴構築方案과 다각적인 交流協力の 제의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無視하고 拒否하는 태도를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 대표의 일원으로 會談에 참여했던 本人으로서로는 참으로 안타까운 순간이었으며, 분단된 현실의 냉인함을 切感하게 하는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俗談에 있듯이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법입니다.

나는 이번 南北高位級會談은 그 결과에 관계없이 分斷이후 최초로 南北의 總理가 만났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南北關係 改善에 있어 획기적인 일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南北當局間의 協議를 통해 統一로 나아가는 첫 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나는 이 會談이 머지않은 장래에 실현될 南北韓 頂上會談의 礎石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内外 貴賓 여러분!

南北 當局者間의 對話와 協力이 南北의 緊張을 緩和하고 信賴의 基盤을

조성하는 통일을 향한 첫걸음이라면, 南北韓 주민간의 만남과 往來는 民族의 同質性을 回復하고 民族共同體를 復元하는 지름길입니다.

특히, 一千萬離散家族의 슬픔과 哀歡은 이제 그 어떤 理由로도 외면할 수 없는 민족의 當面課題로 되고 있습니다.

이에 노태우 大統領께서는 지난 7월 20일 光復 45주년을 맞는 올해 8월 15일을 전후한 5일간을 「民族大交流의 기간」으로 선포하는 특별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宣言은 8.15 解放 이래 이 땅에 지속되어온 分斷의 障壁을 허물고 분단된 민족간에 交流의 물꼬를 트고자 하는 우리 政府의 大決斷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한 이 宣言은 지난해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을 발표하면서 大統領께서 “분단 45년이 되는 올해 8월 15일까지는 南北이 평화와 통일로 가는 突破口를 열겠다”고 밝힌 약속을 실천한 것이기도 합니다.

南北韓間的 全面開放과 自由往來는 북한에 의해서도 이미 수차례 제기된 바 있는 만큼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8.15 民族大交流의 實現에 거는 기대는 자못 큰 것이었습니다.

그 무더위 속에서도 이른 새벽부터 접수창구에 장사진을 이루었던 訪北 希望者 수는 61,355 명이나 되며, 그 대다수는 高齡의 離散家族이었습니다.

이는 血肉을 그리는 離散家族들의 熱望이 얼마나 뜨거우며 통일을 念願하는 우리 민족의 所望이 얼마나 간절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國家保安法 撤廢, 在所者 面會 등 부당한 전제조건을 내세워 우리의 제의를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선별적으로 초청했던 사람들의 訪北조차 끝내 무산시키고 말았습니다.

國內外 學者 여러분, 그리고 內外 貴賓 여러분!

근 반세기동안 理念과 體制를 달리하여 살아온 남북한이 和解하고 協力하며 統一을 실현시키는 것은 실로 쉬운일이 아니며, 또한 짧은 기간내에 이룰 수 있는 일도 아니라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北方의 한파까지 녹인 和解와 協력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열정이 가장 가까운 北韓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北韓은 우리와 한핏줄인 兄弟인 同時에 가장 먼 이웃이기도 합니다.

세계의 놀라운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 所望하는 北韓의 開放과 改革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北韓은 주민들에 대한 統制와 理念教育을 강화함으로써 폐쇄적인 主體體制를 더욱 強化하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北韓도 開放과 和解를 향해 도도히 흐르는 세계적 변화의 물결을 끝내 거역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北韓이 하루속히 開放과 改革의 새 시대를 열고 민족사의 同伴者로 우리와 함께 共存共榮하기를 희망합니다.

나는 北韓의 開放과 改革이 7千萬 겨레가 소망하는 統一繁榮의 새 시대를 열수있는 지름길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國內外學者, 그리고 內賓여러분!

이제 韓半島 統一은 단지 우리 民族의 念願이나 將來問題만으로 국한될 수 없는 세계사람들의 共同的 念願이자 課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東西冷戰의 희생물인 韓半島 分斷은 이제 東西冷戰의 마지막 남은 遺産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韓半島 平和는 世界平和의 밑거름이 될 것이며, 韓半島 통일은 世界平和의 확실한 保證이 될 것입니다.

분단의 障壁이 높다하지만 우리의 統一意志는 더욱 높으며, 분단의 현실이 냉엄한 만큼 우리의 統一熱情은 더욱 뜨겁습니다.

나는 平和와 和解를 향해 進歩하는 世界精神의 힘을 믿습니다.

나는 統一과 繁榮을 향해 前進하는 우리 民族의 精氣를 믿습니다.

우리는 今世紀가 다하기 전에 반드시 分斷을 克服하고 統一繁榮의 새 時代를 열고야 말 것입니다.

尊敬하는 國內外 學者, 그리고 來賓여러분!

저는 이들동안의 이 學術會議에서 深度있는 研究結果와 意見이 교환되어 韓半島 平和와 統一, 더 나아가 세계 평화의 礎石을 닦는 훌륭한 方案들이 찾아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먼 나라에서 오신 碩學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感謝드리며 서울에
계시는 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이 行事に 參與해 주신 國內學者 그리고 行事準
備와 進行에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심심한 感謝를 드리는 바입니다.

感謝합니다.

〈基調演說〉

南北韓 經濟・社會共同體 摸索을 위하여

李 賢 宰
(韓國精神文化研究院長)

I

韓國政府가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이라는 이름으로 民族自存과 統一繁榮을 위한 政策指標를 内外에 闡明한지 1周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年 동안 우리는 실로 形言할 수 없으리만큼 急激한 國際環境의 變化를 겪었습니다.

體制改革과 開放, 相互協力과 和解의 새로운 秩序를 指向한 世界史的 大變革의 潮流가 世界 到處에 가로놓여 있던 閉鎖體制와 分斷狀況의 障壁을 허물어 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와 같이 分斷國의 處地에 있는 獨逸에서는 지난해말의 베를린 障壁 解體 以來 兩獨間의 經濟統合을 實現시킨데 이어 政治統合의 年內 實現을 目標로 막바지 日程을 서두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韓半島에 있어서도 비록 滿足할만한 速度와 內容은 아닐지라도 和解와 交流試圖가 이루어져 왔으며, 最近에 있었던 南北總理會談도 그 實質的 成果에 대한 評價는 且置하고, 南北韓間에 統一意志를 共同確認하고 交流擴大 雰圍氣를 高揚시켰다는 점에서 統一志向 努力過程의 重大한 一齣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韓國에 있어서는 그동안 꾸준히 推進해 온 北方政策의 成果가 着實하게 蓄積되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韓國은 그동안 東유럽의 6個 社會主義 國家와 修交를 하게 되었고, 특히 蘇聯과는 지난 6月의 韓·蘇 頂上會談을 契機로 兩國間 修交의 實現可能性이 急速히 進展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狀況에 직면하면서 韓國政府는 이러한 時代的 進運을 韓半島에 波及시켜야 한다는 政策的 判斷下에 지난 7月 20日 “民族大交流宣言”을 內外에 闡明한 바 있습니다.

“7.20 民族大交流宣言”은 周知하듯이, 世界가 冷戰體制의 對決을 終熄하고 새로운 和解의 秩序를 이루이 나가고 있는 마당에 韓半島만이 唯一하게 冷戰地帶로 남아 있을 수 없다는 民族的 自矜心の 發露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解放 45周年이 되는 이번 光復節을 前後하여 5日間만이라도 南北間에 自由往來의 물꼬를 터놓음으로써 分斷과 戰爭과 敵對關係로 얼룩진 民族史의 誤導된 軌道를 바로잡는 始發點으로 삼자는 의지의 표명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그토록 內外의 期待를 모았던 光復節 民族大交流는 分斷과 相互不信의 쓰라림만 되세긴 채 끝내 霧散되고 말았습니다. 헤어진 家族과 親知를 만나 보려고 가슴을 설레었던 離散家族과 失鄉民들은 다시금 깊은 失望과 挫折속에 望鄉의 恨을 달래야 할 處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統一에 앞서 南北이 共存共榮하는 基本的 土臺를 마련하는 課業자체가 아직도 쉽지 않음을 確認하는 結果만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事實에 挫折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單一民族으로서의 民族感情을 하루속히 되살려 民族共同體를 形成하는 일이 切實함을 마음 깊이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本人은 여기에서 韓國이 統一을 指向하는데 있어서의 現實的·長期的 課題를 되세겨

보게 됩니다.

우리의 統一의 現實的인 道程은 南北韓으로 分斷된 狀況下에서라도 우선 하나의 民族共同體를 이루어 그 바탕위에서 마침내 完全한 統一國家를 이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統一問題는 政府나 權力體制의 立場에서가 아니라 民族構成員의 立場에서 接近해야만 한다는 점에 基本的發想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政府나 權力體制와 같은 政治的 次元에서 統一問題에 接近하기만 한다면, 問題의 性格上 相互接近과 收斂이 어렵게 마련일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理由때문에 두 體制사이에 協商과 決裂, 그리고 再協商을 부질없이 反復하는 동안에, 統一에 대한 民族構成員의 期待는 沮喪되고 民族構成員의 生活만 疲弊하게 되며, 統一은 갈수록 遲延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즉, 統一의 目的이 民族自存과 民族의 繁榮에 있다면 體制統合이나 政治的 統一에만 執着하다가 民族構成員의 福祉를 外面하는 撞着에 빠지지 말고 南北韓 겨레의 福利를 위한 協力부터 考慮함으로써 그러한 協力を 具體적으로 펼쳐나갈 民族共同의 生活圈을 南北韓이 함께 形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은 대체로 이러한 脈絡에 서서 民族共同體 形成이라는 中間過程을 設定함으로써, 國家的 統一에 앞서 民族的 生活圈의 統一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立場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政策認識에 대하여 論理的으로 反論의 餘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歷史的인 事例를 보면, 하나의 民族이 두개의 國家組織을 가지는 경우가 있고(1民族 2國家), 또한 하나의 國家組織 속에 여러 民族이 存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多民族國家). 反面에 우리 民族은 하나의 民族國家를 이루고 살아 온 오랜 歷史的 體驗때문에, 그러한 事例를 쉽게 受容하기 어려운 民族感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理由로, 統一問題를 論議하면서 國家統一을 區分해서 接近하는 방식에 익숙해 있지 못한 것이 또한 事實입니다.

그렇지만 1945年 國土가 兩分되고, 1948年 政府가 兩立되고 그리고 잇따라 1950年에 同族相殘의 戰爭을 겪으면서 民族이 分裂됨에 이른 오늘에 와서는 現實的으로 民族統一과 國家統一을 區分해서 認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現實的 與件을 冷徹히 勘案할 때, 國家統一이 당장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南北韓 同胞들이 겪고 있는 分斷의 苦痛과 不便, 生活上의 損失을 줄여 나가는 한편 그 바탕이 되는 民族統一부터라도 推進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民族의 興亡盛衰를 내다보는 歷史的 眼目에서 보면, 民族은 永遠한 것이고 政治는 짧은 것입니다. 우리가 韓半島에서 하나의 民族生活圈을 이루고 살아 온 歷史는 4천년이 넘지만 理念과 體制를 달리하면서 살아온 歷史는 半世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의 民族이라는 思考와 意識, 그리고 하나의 民族生活圈을 回生시킬 수만 있다면 政治統合, 國家統一을 成就하는 일을 멀지 않은 未來의 問題로 남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民族의 同質性이 破壞되고 民族의 生活圈이 回復되지 않을 경우에는 統一의 바탕과 名分을 永遠히 喪失하게

될 憂慮마저도 있습니다.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도 南北韓의 政府組織을 하나로 합치는 政治的 統一을 이루기 前에, 그 原初的 바탕이 되는 民族 共同生活圈을 이룩하기 위해 經濟統合·社會統合을 먼저 實現해 나가자는데 根本的인 趣旨을 두고 있는 것으로 解釋됩니다.

II

그러면 우리가 이룩하려는 民族共同體의 指向은 어떤 것이어야 할 것인가에 關心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一次的으로 單一民族으로서의 民族的 信賴感을 回復시키는데 實質的인 效果를 期待할 수 있는 分野에서부터 相互 協力을 摸索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선 南北間에 人的·文化的 交流와 經濟的 交流·協力の 實現을 위해 모든 智慧와 努力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같은 分斷國인 獨逸의 例에서 보는 것처럼, 經濟分野에서의 交流·協力は 不信의 障壁을 허물고 信賴를 增進시키는데 더 없이 重要한 作用을 하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政治的인 要素가 介入되지 않고 相互間에 利得을 줄 수 있는 經濟交流와 協力は 南北間의 障壁을 허무는데 가장 活躍 있는 手段이 될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留意되어야 할 것은 交流와 協력에 臨하는 雙方의 動機와 姿勢인바, 雙方의 目標가 政治的 支配를 위한 것이 아니라 國民의 福祉를 위한 것으로 一致되고 그것이 廣範하게 擴散될 때 비로소 經濟共同體는 形成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統一에 한걸음 더 接近하는 南北韓의 社會統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南北韓間에 直接的으로 利得이 되는 經濟交流과 協력이 뚜렷하게 進展되어 간다면, 이를 국민생활의 다른 分野로 擴大하여 社會的 同質性을 점차 摸索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 있어서도 政治的 要素가 될 敏感한 分野에서의 相互接觸과 交流, 共同生活를 摸索하는 것이 單一民族으로서의 共感帶를 넓히고 나아가 社會的 同質性을 回復하는 데 效果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시 留意할 필요가 있는 것은, 南北間에 限定된 몇個 分野에서 同質性이 摸索된다고 해서 그것이 곧 統一로 連結되는 것은 아니라는 事實입니다. 社會統合이 構造化되지 않으면, 南北韓間에 社會共同體가 形成될 수 없으며, 그 경우 統一을 위한 政治的 協商에는 늘 限界가 隨伴되게 마련이며, 政治的 統一도 無意味해지게 됩니다. 統一의 바탕이 되는 南北韓間의 社會的 統合은 어떤 形態의 統合이던 간에, 그것들이 相互 補充的이고 現實的으로는 同時에 竝行하여 이루어지지 않으면 體制間의 統合은 不可能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南北韓이 多方面에 걸친 交流·協力を 展開함에 있어서 어떤 基本的인 共通價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南北韓이 民族共同體를 形成해 나가는 過程에서 함께 堅持해야 할 共通的 價値란 具體的으로 어떤 것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一次的으로 “民族”이라는 概念에 規範的 重要性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시 留意되어야 할 것은 그 “民族”이 抽象的인 概念으로서의 民族이 아니라 具體的인 生活人으로서의 民族, 즉

民族構成員의 生活에 焦點을 둔 民族이어야 한다는 事實입니다.

요컨대 南北韓이 함께 形成해 나가는 民族共同體는 民族構成員 爲主의 單一生活圈 形成이라는 基本的인 觀點에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基本的 觀點을 民族共同體를 形成해 나가는 具體的인 過程에서 어떻게 展開해 나갈 것인가의 問題가 남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本人은 最近 蘇聯을 비롯한 東유럽 여러나라에서 展開되고 있는 世紀的 變革의 基本的 指向에 잠시 注目해 보고자 합니다.

이들 社會主義 國家들의 變革을 特徵짓는 核心的 指向은, 關係專門家들도 指摘하고 있듯이, 다음 세가지 概念으로 集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첫째는 “市場”의 概念이고, 둘째는 “多元主義”의 概念이며, 셋째는 “民主主義”의 概念입니다. 이 세가지 概念은 모두가 社會構成員 爲主의 價値指向을 가지고 있다는 點에서 우리가 追求하는 民族共同體 形成을 위한 基本的인 指向과 결코 無關할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로, 市場概念은 社會主義 體制에서의 이른바 市場社會主義(market socialism) 指向과 資本主意體制에서의 公正한 競爭秩序 指向에 共有되는 것으로서, 그것은 窮極的으로 社會構成員의 生活 實需要를 充實히 充足시키는 方向으로 經濟가 運營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多元主義 概念은 어떠한 形態의 體制에 있어서든지 獨善과 教條主義를 清算하고 社會內的 多樣한 欲求와 複雜한 利害關係의 存在를 認定하는 바탕위에서 社會가 調整되고 運營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민주主義 概念은 社會主義 體制에서의 이른바 스탈린主義的 全體主義 清算과 自由主義的 開發途上國家에 있어서의 權威主義的 獨裁清算이라는 共有된 價値指向을 含蓄하고 있는 말로서, 그것은 政治를 비롯한 社會의 모든 分野를 그 構成員들의 自律에 맡겨 管理하고 運營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고 할 것입니다.

以上에서 세가지 概念을 中心으로 民族共同體 形成의 理念的 指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우리는 여기에 한가지를 더 追加하여 國際的 次元의 相互理解와 協力을 통해 世界共同體 形成에 寄與하는 價値指向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理念的 指向은 假想的인 것이 아니라 이미 東·西유럽의 統合 움직임에서 確認되고 있는 重要的 時代精神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히 注目되는 것은 하나의 유럽共同體를 指向하는 큰 테두리의 統合을 위해 重要的 걸림돌이 되고 있는 東·西獨의 統合을 위하여 東·西유럽國家들이 慎重하게 協調的 氛圍氣를 造成하고 있는 事實입니다. 이런 脈絡에서 <파리-西베를린-東베를린-모스크바>로 連結되는 東西急行列車 (East - West Express)가 今年 4월에 開通·運行되고 있는 事實은 매우 뜻깊은 象徴性을 갖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事實에 비추어 볼 때, <파리-모스크바>를 잇는 東西急行列차가 <모스크바-平壤-서울-東京>을 連結하는 路線으로 延長 運行된다면 그것은 名實相符한 “東西急行列車”가 됨으로써, 世界共同體 形成에 크게 寄與

하는 象徵性을 갖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象徵性을 現實化 하는데 있어서 韓半島에서의 解氷이 必須的인 先決要件이 될 것임은 두말 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볼 때, 南北韓間의 經濟·社會統合 努力과 實績의 蓄積을 통해 民族共同體를 形成하는 일은 窮極的인 完全統一로 가는 굳건한 基盤의 構築인 同時에 必須的인 道程이 될 것입니다. 즉 이것은 半世紀에 걸쳐 南北韓間에 形成된 文化的·體制的·感情的 異質現象을 收斂하면서, 完全統一이 이룩되었을 때에 豫想해 볼 수 있는 衝擊과 混亂을 豫防 내지 最少化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道程은 또한 그 自體가 世界共同體를 指向한 國際平和와 人類共榮에 寄與하는 길이기도 할 것입니다.

제 2 부

동서화해와 한반도 평화구조

East-West Detente and Peace Framework
on the Korean Peninsula

蘇聯의 威脅減少와 韓半島 平和構造

벤자민 S. 램버스

(美, 랜드研究所)

소련군부는 1985년 고르바초프 대통령 집권 이래 전례없는 混亂을 겪고 있다. 사실 고위군부는 군창설 72년 동안에 가장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징표는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여기에는 蘇聯軍事路線의 보다 방어적 자세로의 전환, 아프카니스탄에의 군사개입 종식, 고르바초프가 발표한 蘇聯軍 50만의 일방적감축, 무기생산 감축을 위한 관련조치, 방위산업의 상당분야의 민간산업 분야로의 전환과 보다 화합적인 동서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전반적인 노력등이 포함되어 있다. 불과 몇페이지의 분량으로서 모든 군사적 관심분야를 다룬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신 본 논문에서는 소련군부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몇가지 문제점에 대해 짧게 언급하고자 한다.

危機의 蘇聯軍部

이러한 문제점중 가장 심각한 것 중의 하나는 1988년 12월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U.N. 연설에서 밝힌 소련군 50만명의 일방적 감축선언이다. 이 선언은 소련 고위간부들의 명백한 요구사항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사실 이 선언은 그러한 결정이 발표된 그날부터 군부의 적극적인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심지어 지금도 군부 지도자는 고르바초프의 정책 수행에 마지못해 따라가고 있다.

이 제안의 실제 운용상의 숨은 뜻은 제쳐두고라도 일방적인 감축선언은 소련군의 사기에 심각한 충격을 주었다. 우선 하나로, 보고에 의하면 동구로부터 돌아온 수천명의 장교들은 텐트생활을 하면서 병영에 거주하고 있

다. 그들의 배우자들에게는 일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자녀들에게 적절한 교육시설도 제공되지 않고 있다. 소련언론 보도에 의하면 소련군은 현재 귀국하고 있는 군인가족 7세대중 오직 1세대에게만 주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 하나는 군사동맹으로서의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와해이다. 이러한 사태 발전은 고르바초프가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군부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물론 그가 이러한 사태발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고르바초프가 이러한 사태발전을 主導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것은 40년동안 유지되어온 군사완충지대가 사라져 버렸으며 同盟勢力이 더 이상 蘇聯安保에 보탬이 될 수 없음을 뜻한다. 한가지 주요한 예를들면 東獨軍은 9개월전 17만에서 현재 9만으로 감축되었다. 사병들의 탈영은 거의 매일 이어지고 있으며, 동독공군은 더 이상 정규훈련 비행을 않고 있다. 군부와 마찬가지로 정치기구도 해체되고 있다. 사실 동독 군사편제는 이제 작전수행능력을 상실하고 있다. 동독 자체가 금년 10월 통일과정이 완료되면 독립국가로서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獨逸統一의 기대가 눈앞에 다가왔을 뿐만 아니라, 통일후의 NATO 잔류도 결정되었다. 통일독일의 NATO 잔류는 고르바초프가 기껏해야 할부판매 양도방법같은 것으로 9개월동안의 고민끝에 양보한 것이다. 총참모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결과는 소련이 불과 일년전 생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더 심각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난 수십년간 소련 국방 계획의 기본원리를 이루어 온 모든 전제들을 한꺼번에 내던져 버린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 소련서부지역의 방어가 바로 소련 국경에서, 소련지역

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태발전은 특히 소련의 군사적인 시각에서 전진 방어진역으로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 Baltic국가가 보이고 있는 현재의 不安定과 分離主義的 성향을 더욱 강렬하게 하고 있다. 이 점은 바로 왜 蘇聯軍部가 작년 '즈빌리시'에서 폭동진압기구로 불리웠을때 보였던 불쾌합과는 달리 리투아니아에서의 탈주병 검거에 서슴없이 무력을 동원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蘇聯軍部の 불만을 몇가지 더들면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한 군부의 지지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최고군부에 약속한 것을 잘 이행치 않고 있다는 軍部内の 霧圍氣이다. 또 아마 정당화할 이유가 있겠지만 보다 많은 예산감축이 있으리라는 우려이다. 게다가 최근에 밝혀진 軍士兵들의 생활수준의 급격한 악화이다. 두가지 예를들면 공군조종사는 모스크바 시내의 버스 운전사의 임금 절반수준 급료를 받고있다. 그리고 어떠한 基地내의 12명의 장교가족(통털어 60명의 가족으로 구성)의 주택시설에는 단지 화장실 2개, 샤워장 2개, 목욕탕 1개와 3개의 난로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여건은 아마 소장 장교들에게는 典型的인 것이다.

Glasnost에 의해 모든 사회악의 존재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으며, 이것은 고르바초프 집권 이래 군부에 가해진 거리낌없는 언론의 공격으로 시작되었다. 그밖에 이러한 점들이 軍部の 社會的 지위의 急轉直下를 조장하였다. 이제는 출퇴근시 사복착용을 요구하는 장교들에 관한, 또 군인들과 공공장소에 나타나기를 거부하는 여성들에 관한 보고를 자주 접하게 된다.

이러한 좋지못한 분위기가 사병들간의 뚜렷한 기강의 해이를 조장하였다. 이러한 상태는 고르바초프 정권의 167,000명의 대학생에 대한 징병면제라는

불공정한 결정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점차 증가하는 탈영병 즉, 작년의 6,600명의 수치로서 나타났으며, 이는 그 전해의 8배에 달한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공식적 발표일 뿐이다. 비공식 보고는 이 숫자의 2배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보고에 따르면 금년도 모병대상 인원의 25%만이 모병소에 나타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蘇聯軍部를 괴롭히는 병폐는 몇권의 책으로도 쓸수 있다. 여기에서 짚고 넘어갈 점은 지금이 소련군부에게는 특히 어려운 기간이란 점이다. 소련군이 보다 소규모의 지원병으로 구성되고 군에 대한 보다 나은 대우가 보장될 때까지 이러한 여건이 개선될 가망은 거의 없다.

소련 국방정책 결정의 변화

이 과정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우선 원인으로 개방(glasnost)을 들수 있다. 이것은 소련 일반대중이 군부를 다른 사회기관과 마찬가지로 공개적으로 비난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 이러한 비난은 가혹하게 되었으며 또 그 효과는 점점 커졌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조직적 위계질서 상하에 걸쳐 군부가 느끼는 이러한 압박감은 소련의 국방정책결정에 작용해온 광범위한 변화과정의 부산물이다. 이 과정은 고르바초프정권 등장 이래 蘇聯의 國家安保 부문에서 단일한 가장 중요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소련 안보의 필요성과 우선순위에 대한 소련군부의 최고위층의 생각과는 아주 다른 생각을 가진 집단의 등장과 함께 소련국방 정책에 관한 대중적 논쟁의 참여기반의 확대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의 핵심은 소련 안보계획입안과정의 꾸준한 근대화 와 소련

역사상 처음으로 서구적인 개념으로서의 국방정책의 등장이다. 고르바초프는 소련국방 계획에 있어 정치적 요인의 역할을 증대시키기로 결정하였다. 그는 군축문제에 대한 비중확대와 함께 안보분야에서 소외되어온 민간인층을 등용하여 정책결정 과정에 보다 깊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향의 세가지 측면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첫째, 외무부의 비중과 역할의 뚜렷한 증대이다. 적극적인 ‘세바르드나제’ 장관의 지도아래 국방과 안보문제가 관련된 경우 한계부서(marginal institution)로 존재하였던 것과는 달리 지금은 소련의 전략과 군축정책의 내용과 방향설정에 과단성 있고 점차 효과를 나타내는 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둘째로 초창기에는 다소 주춤거렸으나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발전과정에서 1989년 7월 최고회의안에 국방 및 국가안보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이 위원회는 소련국방정책에 대한 입법부 입장의 감시라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된 최고회의 참모를 돕기위해 설립되었다.

끝으로 ‘고르바초프’와 그의 동료들 ‘알렉산더 야코프레프’와 ‘예보게니 프리마코프’에 의해 소련 과학아카데미 산하의 여러 사회과학 연구소와 관련되어 있는 오랫동안 휴식상태에 있던 민간인 방위문제 전문가들의 정책참여가 시작되었다. 개방(glasnost)정책에 의해 개방된 전략의 넓혀진 선택여지에 이런 전문가들은 꾸준한 노력을 통해 점차 성공을 거두면서 국가안보 결정과정에 잠식해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들은 서구의 민간인 방위문제 전문가들의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역할을 소련제도내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소련 과학아카데미의 미·캐나다연구소의 ‘안드레이 코코신’같은 일단의 분

석가들은 閉鎖的이고 적대적인 집단인 軍士兵들간의 신뢰성과 지지를 얻기 위해 군을 공개적으로 키우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世界經濟 및 國際關係研究所의 Arabatov같은 사람들은 그 전략이 지닌 장기적인 모험적 성격을 이유로 최고 군부에 대한 반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예를들면 Arabatov는 극단적인 제안 중에서도 특히 소련 방공군의 즉각적인 해체와 소련해군이 본래적인 역할인 연안방위군으로서 돌아갈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말할 것도 없이 군부지도자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경향의 중요한 결과중의 하나는 종래 소련국방부와 최고군부에 의해 유지되어 왔던 방위논쟁과 방위정보의 독점에 대한 뚜렷한 退潮이다. 蘇聯國防路線과 국방정책은 실제로 同義語로 사용되어 왔다. 오늘날 疎外되었던 민간인들이 대거 참여함에 따라 군부의 견해는 보다 넓은 소련 국가안보 정책에 관한 견해중의 한 단면에 불과하고 이것은 민간참여의 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최고 소비에트회의 국방 및 국가안보위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것은 만일 이 위원회가 발판을 마련하고 실질적 권한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것은 잠재적으로 가장 흥미있고 영향력 있는 사태발전이기 때문이다. 이 위원회는 분명히 미하원 군사위원회를 본따 만들었으며 미하원 군사위원회와 많은 동일기능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는 예산심의, 업무감독, 군부주요인사에 대한 인준권, 조약비준권 등과 함께 심지어는 미 의회의 전쟁수행특권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이 새로운 형태의 입법기구는 소련 역사에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야심적인 것들을 실현하기까지에는 오랜시간이 걸릴 것이다. 무엇보다도 최근에 발족된 관계로 국방 관료기구의 일상활동에 영향을 주기에는 빈약한

조직을 갖추고 있다. 예를들면 이 위원회는 43명의 최고 소비에트 대표로 구성되어 있고 그들중의 대부분은 현역 장교이거나 군사·산업관료기구의 고급 공무원으로서 다른 직업을 보유하고 있다. 또 이 위원회에는 간혹 젊은 급진파들이 있으나 대체로 기성 안보체제의 광범위한 가치관을 신봉하는 보수 주류들로 구성되어 있다. 사실 국방관료들조차 공개적으로 이 위원회의 어울리지 않는 제도 '내부자'적 지위에 대해 비판적이다. 이러한 관료들에는 고르바초프의 국가안보자문인 Akhromeyev원수, Vitaly Shabanov, 군수담당국방차관보, 가장 최신형 전투기를 생산해온 Sukhoi계획국의 Mikhail Simonov 등이다. 소련언론들은 이러한 인사들이 국방의 감독적인 위치에 있는 것은 병아리를 보호하기 위해 여우를 키우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은 현재의 관행에 대한 영향력을 이 위원회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전에 변해야만 한다. 이 위원회는 실무능력을 갖춘 요원과 함께 상근요원등 현재 부족한 인원을 갖출 필요가 있고 감독 역할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군사계획에 대한 내부정보에 보다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실의 대부분을 인정하는 사람은 바로 이 위원회의 구성원들이다.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委員會의 존재와 이들이 보여주는 야심적인 의욕만으로도 - 물론 고르바초프와 세르바드나제의 열렬한 격려와 함께 - 군과 민간기구간의 관계에 새로운 막을 열게하고 있다. 최소한 군이 가지고 있던 국방정책에 대한 고유의 기득권은 이미 무너졌으며 새로운 참여자가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허락되어졌다.

마찬가지로 蘇聯전략의 전술적 측면에 관한 것 같은 금지되어 왔던 논

집에 관해 알게된 민간인 국방문제 전문가들에게도 같은것을 말할 수 있다. 이 전문가 집단은 브레즈네프집권 기간동안 정책주류로부터 철저히 소외되어 침묵을 지키거나 또는 선전가로서 당의 노선을 되풀이 하도록 강요되어졌으며 반면 브레즈네프 側近과 최고군부가 국방문제에 대해 전적인 통제를 하였다. 이에 반해 오늘날 그들은 -점차 신뢰성과 성공을 거두면서 -국제문제에 대한 단순한 학문적 해설가가 아니라 蘇聯安保政策에 관한 외부적 자문의 원천으로서 그들 자신의 역할을 추구하고 있다.

주요한 한 경우는 군사적 필요 요건의 정형화에 대한 논쟁의 대두이다. 이 논쟁은 군 참모부와 민간 분석가들을 소련의 군축정책과 무기조달 계획을 결정하는 주요위치에 대한 경쟁에서 서로 반대되는 두 집단으로 몰아넣고 있다. 최근까지 최고 군부가 군사력 평가의 기술적 전문집단으로서 유일한 존재였다. 또 전투준비에 있어 군사력 효율성에 대한 양적인 평가를 위한 기술을 도맡아 개발하는 입장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최고군부는 군사모형활동의 主據點이었으며 여기에는 외부 민간인의 참여는 배제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일단의 민간인 군사모형 研究所가 설립되어 고위정치층의 관심을 끄는데 경쟁을 하고 있다. 그 중 유명한 곳으로는 '미·캐나다연구소', '世界經濟 및 國際關係 研究所'등이 있다. 이 연구소의 젊은 인재들은 고르바초프의 안보문제에 대한 입장과 경쟁하는데 있어 소련국방의 요구조건에 대한 강한 대안적 견해를 가지고 나서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은 최고군부를 보다 수세적인 입장에 몰아넣을 만큼 勢와 힘으로 이것을 해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최고군부가 이러한 도전에 직면하여 얼마나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나타난 것으로 보아 대답은 아주 느리고 별로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고군부와 국방문제 전문가와의 관계를 보면 蘇聯國防問題圈은 1960년초 미국 國家安保問題圈에서 겪었던 경험을 踏襲하고 있는 것같이 보인다. 당시 'Whiz kid'라 불리는 국방장관 '백나마라'팀들과 RAND같은 기관들이 '비용-수익' 분석기술을 꾸준히 개발하면서 해당 관료기구가 정책 입안분야에서의 그들 주장의 타당성을 모두 다 인정할 수 있도록 강조하였다. 이 과정에서 미국군부는 민간분야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수준을 획득하고 분석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소련군부에는 이러한 접근의 조짐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대신 그들은 주위를 돌면서 방어적인 자세로 상대를 노리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특히 어느쪽이 더 잘 견디나를 지켜보는 게임을 하고 있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코르바초프가 정치적으로 견제하고 그의 개혁노력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한 이러한 접근방법은 보다 나은 논지와 보다 나은 해결 방안, 보다 강력한 後援者를 가진 民間人들로부터 軍部가 관료기구내에서 追越당하고 점점 밀려나도록 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하더라도 소련 국방정책 결정이 우리의 것을 踏襲하고 있다고 쉽게 결론짓는다는 신중하지 않으면 안된다. 소련의 몇몇 민간국방 분석가들은 이미 상당한 영향력있는 인사로 되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증거는 아직 미약하다. 중요한 점은 이 관계의 많은 사람들이 정보의 불균형에 대한 불평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서구의 분석가들은 소련의 무기와 군사력에 대한 자세한 테이타에 접할 수 있으나 반면 소련의 학자들은 유사한 정보에 대해서 외국의 자료에 의존해야하는 수모를 겪고 있다.

또한 외무부는 문호를 민간 전문가에게 개방하고 그들의 견해를 발표할 기회를 주고 있으나 국방부와 참모본부는 이러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이러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는 한 民間專門家들이 실제 정책에 接近할 수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연구소의 젊은 전문가들은 그들의 숫자가 정책의 뚜렷한 변화를 초래하기에는 너무 적으며 蘇聯 國防政策이 진정으로 文民化되기에는 요원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부류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것은 고르바초프와 그의 동료들이 강조해온 방향이다. 즉 정책 참여자를 늘리고, 민간인들에게 내부의 국방문제에 대한 토론에 발언권을 주고 결과적으로 내부적 국방논쟁에 입력의 폭을 넓히므로써 또, 제도적 政治的, 多元的主義를 불어넣으므로써 국방정책 결정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가 아직도 형성중이지만 이것은 동서관계에 대한 많은 기대를 갖게하는 경향으로 주목되고 있다. 만일 이것이 정착하게 되면 좁은 의미의 군사 기술적이고 군특수적인 이해 관계 이외의 어떤것이 소련의 군사력을 조직화하는 문제를 통제하게 될 가능성은 커질 것이다. 이것은 대신 소련의 국내의 정책에 군사계획을 철저히 통합시키도록 할 것이다.

이것이 동서관계의 경쟁상태의 종식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쟁을 보다 전통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緩和할 기회를 넓힐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미국과 그 동맹국의 지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피해야 할 함정은 소련 軍事問題에 대한 보다 큰 影響力을 행사하려는 민간인들의 未完成의 努力이 이미 現實化되었다고 성급하게 결론내림으로써 기정 사실화하는 것이다.

蘇聯 軍事力에 關한 懸案問題

蘇聯軍事現況에 대한 개괄적 묘사를 통해 소련과 소련이 직면하고 있는 군사적 도전에 관한 西歐社會의 論爭의 주제가 되고 있는 4가지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된다. 이것 중의 첫째는 소련군의 지속적인 전투 수행 능력 유지이다.

통계지표는 배치된 軍事力의 전반적인 수치에는 극적인 변화는 없지만 가장 주요한 範疇의 武器는 꾸준한 현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군은 혼란 속에 있으며 전진방위태세를 상실하고 기관으로서의 장래 운명에만 집착하여 있다. 또한 배치되어 있는 소련군장비들의 작전 수행상의 어려움이 보고되고 있다. 이 점에서 T-160 폭격기와 소련 잠수함 문제가 蘇聯言論에 주로 報道되어지고 있다. 이밖에 소련군이 어떤 상황아래서도 그들의 명령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 지에 대한 疑問도 提起되고 있다. 최근의 Dushanbe에서의 人種 暴動鎮壓에는 지역군이 동원되는 것을 거부하였으며 다른군 관구에서 동원된 군대로서 대신하였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보고를 쉽게 극적으로 만든다. 어떤 진지한 西歐의 國防問題 전문가는 소련의 핵 및 다목적군의 戰鬥能力에 대한 敬意의에는 갖고있지 않다. 문제는 소련의 군사능력이 어떻게 나타날지라도 외부적인 모험적 시도는 소련지도자의 選擇代案에서 그렇게 우선 순위가 아니며 막연한 미래에도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두째로는 軍部改革과 蘇聯軍의 支援兵化에 대한 展望이다. 그동안 상당한 고위급을 포함한 장교층내의 개혁구름으로부터 改革에 壓力이 가중되어 왔다. 최고군부, 특히 'Yazov'원수, 'Moiseyev'장군 및 최근 퇴역한 'Akhromeyev'장군등은 이

도전에 대해 既存의 制度를 포기한다는 것은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며 필요한 動員體制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이유에서 목소리를 높여 반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의 조짐은 이들에게 다른 代案이 없다는 점이다. Yazov원수는 최근야마지못해 이 점을 인정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군부개혁에 관한 논의에서 볼때 좋은 대우조건으로 지원병체제의 등장은 시간문제인 것같이 보인다. 이것은 현 최고군부가 일반참모진에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위해 옆으로 비켜나고 마찬가지로 민간인으로 참보진을 구성한 새로운 國防部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세째로 多元的인 挑戰에 직면해서 군부가 權威的이고, 特權的인 자세로 돌아갈것인가에 대한 疑問이다. 최근 미국언론은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있다. 'Omlichev'장군이 1990년 5월 각료급으로서 '베이커' 美 國務長官과 '세바르드나제' 蘇 外務長官과 함께 자리를 했다는 점, 유럽통상무기 軍縮協商에서의 소련의 주저, 그밖의 최근의 조짐들 즉 승전기념일 군 퍼레이드, 고르바초프가 평시에 군장성의 진급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했음에도 Yazov장군이 진급한 점등이다. 이러한 조짐들은 군부가 그들의 制度的 理解關係를 대변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있다. 또 이러한 점은 고르바초프가 최고군부를 전적으로 소외시킬 수는 없다는 점을 점차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도 고르바초프가 최고군부에 대한 統制를 상실했다고 결론내릴 수는 없다. 다음 국방장관은 민간인 출신일 수도 있다는 추측까지도 있으며 Yazov장군도 公開的으로 이것을 인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르바초프와 그의 추종자들을 권좌에서 몰아내고 페레스트로이카를 중단하며 서구와의 대결의 옛날로 돌아가게 할 군사 쿠데타의 可

能性에 대한 끊임없는 疑問이 있다. 이것은 쓸데없는 추측에 근거한 흥미 있는 의문이지만 이러한 사태의 발생은 실제로 非現實的인 것 같다. 우선 쿠데타라는 생각 자체가 소련군부의 전통과는 먼 것이다. 소련군 장교들은 社會的 責任을 痛感하는 고도의 직업군이며 보나파르트적 성향을 취한 적은 없다. 'Zhukov'장군도 그가 보여준 국내의 군부장악이라는 보다 넓은 위협에서보다는 후루시초프와의 성격적 차이로 해고되었다.

또 하나 지적할 것은 최고군부내에는 지도자로 나설수 있는 분명한 후보자가 없다는 점이다.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軍 撤收를 지휘한 카리스마적 사령관인 'Gromov'장군도 가끔 그러한 후보로 인용되었으나 그는 현재 Kiev군 관구를 맡고 있으므로 성향은 말할 것도 없고 심각한 기회를 잃고 있다. 사실 군부내의 완고한 집단은 당의 보수파와 제휴하여 고르바초프를 정치적으로 몰아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전면적 쿠데타나 強制的인 鎮壓도 군을 분열시킬 것이며 전국적으로 대규모의 暴力事態를 야기시킬 것이다. 蘇聯에서의 政治發展은 군사쿠데타가 실행가능한 선택 대안으로 고려되기에는 너무 앞서가 버렸다. 사실 어느 한가지 요인이라도 내전을 촉발할수 있다면 이것은 아마 확실한 촉매가 될 것이다. 군지도자들은 어느 누구보다 이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

世界的 安定的 傾向과 展望

歷史的 類推는 歪曲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중요한 의미중의 하나로 20세기는 시작되었을때 즉 러시아는 혁명의 와중이었으며 人種的 또는 宗教的 不滿에서 갈라진 小公國에 의해 둘러쌓여 있었던 때와 마찬가지로 끝나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작년의 政治的 激動과 소련 주도하의 기구로서

바르샤바동맹의 해체라는 와중에서 東歐諸國에 대해서도 같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 오늘날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루마니아등은 모두 낮은 발칸방식의 태도로 복귀하고 있으며 나머지 종래의 소련권 동구제국은 유럽의 일원으로 편입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발칸으로부터 트랜스코카사스, 중앙아시아 등에 걸쳐 나타나고있는 일단의 긴장속에서, 소련내에 진행되고 있는 改革이 점차적으로 지역적 민족주의의 대두와 폭력충돌을 포함한 정치분쟁의 재연을 촉발함에 따라 潛在的으로 地域的인 爆發 可能性을 높이고 있다. 한가지 예를들면 터어키와 아르메니아 사이 터어키와 불가리아 출신사이의 潛在的으로 地域化된 다툼과 이슬람이라는 명분아래 중앙아시아 공화국과 이란과의 결속등은 보다 큰 地域紛爭의 번 소지를 낳고 있으며 여기에는 強大國의 介入의 우려가 있다.

이러한 초기의 지역적 불안정을 없애는 것은 세계적 범위내에서 근본적으로 새로운 美·蘇關係의 定立이며 이것은 최근 페르샤만 위기에서 보여준 소련의 전혀 새로운, 과거와는 다른 행동양태에서 극적으로 표시되고 있다. 소련은 이 紛爭에서 오랜동안의 고객이었던 이라크를 지지하지도 않았으며 이라크를 봉쇄하는 책임을 부여받은 쪽에 公開的으로 서서 이라크의 쿠웨이트 強制併합이 하나의 전례가 되는 것을 용납치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소련지도층의 이기적인 利害關係와 함께 국내적 관심과 관련하여 미국을 포함한 외부로부터의 經濟的 技術的 도움에 대한 필요를 의식한 것이다. 소련은 지역으로 큰 전쟁이 발발하는 것은 원치 않고 있으며 그 이유는 그러한 전쟁은 고르바초프의 經濟 現代化 목표달성을 지원하는데 사용될지도 모를 미국의 지원을 소모시키게하기 때문이다. 소련의

이라크 封鎖를 支援하기 위한 무력 사용에 대한 유엔결의의 지지는 소련이 침략에 대한 原則的 反對라는 의미에서 그들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편협적인 소련의 이론적 근거를 반영하고 있다.

冷戰以後 첫번째 심각한 위기에서 소련지도층이 미국과 다른세계와 발맞추어 실질적인 봉쇄조치를 재빨리 취했다는 것은 팔목할 만한 일이다. 소련이 페르시아만에 '蘇聯의 利益을 保護'하기 위한 해상함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군사적인 조치에 연루되는 것을 망설여온 것은 이해할 만하다. 소련 정부대변인은 소련은 적절한 상황하에서 이라크에 대응키 위한 지상군을 미국의 작전통제하일지라도 파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런 발표에도 불구하고 소련군 폭격기나 전술전투기가 이라크 북쪽국경에 배치되어 전쟁발발시 이라크군과 교전할 태세가 되어 있다는 시나리오는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다.

그러나 소련이 최근의 이라크와의 난국을, 결과적으로 아무 소용없었지만, 외교적으로 피하려는 노력을 한 후에야 무력사용에 대한 유엔決議에 참여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만 한다. 또 주미 소련대사관 무관이 소련과 이라크와의 오랜동안 軍事援助 關係에서 나타난 이라크의 군사력에 관해 美國防省에 정기적인 브리핑을 했다는 것도 알려진 사실이다. 소련언론은 이것이 '秘密'성격의 情報의 이전이 포함된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 美대변인은 蘇聯側으로 부터의 協助에 대단한 만족을 표시했다.

무엇보다도 미국지도층이 핵전쟁으로의 확대에 대한 상존하는 두려움으로부터 압박받지 않고 소련의 대응에 대한 모든 代案을 마련해야 되는 義務感에서 벗어날때 위기관리가 얼마나 상대적으로 쉽게 이루어지느냐는 사실은 분명히 놀라운 사실이다. 페르시아만 위기에서의 蘇聯의 協助에 관련

된 일들은 단지 최근의 것이며, 고르바초프집권 이래 소련이 겪고있는 重大한 變革을 가장 강력하게 나타내는 표시이기도 하다. 소련은 이기적이고 그들의 계산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소련지도층은 과거 40년간 冷戰時代의 대결구조를 이끌어 왔던 이데올로기를 배경으로한 膨脹主義의 종식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고르바초프 정권아래서 소련은 對外關係에서 대내통치와 마찬가지로 ‘正常的’國家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흔적이 곳곳에서 엿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유럽의 政局에서, 그리고 美 國防計劃의 우선순위 변동에서 반응을 얻고 있다. 이것이 지속적인 潛在性을 지닌 發展으로 나타나는 한, 西歐國家들이 이를 강력하게 지원하는데 모든 관심을 표명하는 정향에 반영되게 될 것이다.

소련의 국제활동의 脫이데올로기화는 소련지도층이 점차 다민족국가로서의 장래문제와 씨름하고 내부 경제적 여건의 도전에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을 인식함에 따라 외부 개입을 줄이는 과정과 일치하고 있다. 일부 군부와 당 관료들은 최근에 와서 고르바초프가 동구를 ‘喪失’하고 독일의 통일과 NATO잔류를 허용했다고 비난하고 있지만, 제국의 와해는 소련 정치권의 보다 進步的 人事들에게 상당한 安堵感을 주고있다. 우선 하나로 이것은 소련이 더 이상 政治的으로 經濟的으로 취약한 우방국을 지속적으로 떠받칠 부담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소련이 그들의 자원을 내부적 긴박한 부문에 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 이것은 오랫동안의 미국과 그 우방에 대한 敵對政策을 종식시키도록 도울 것이며,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 비생산적인 무기개발 노력을 지속시킬 필요를 없애거나 극적으로 낮추게 할 것이다.

소련의 통일독일의 NATO잔류의 인정은 분명히 이러한 사태발전으로 소

련안보가 위협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으로 미국과 NATO맹방사이에 썩기를 막으려는 傳統的인 政策 대신에 유럽에서 정치 군사적인 미국의 존재에 의해 작용되어온 安定裝置로서의 役割에 關心을 보이고 있다.

외부개입의 축소과정에서 볼수있는 다음단계는 아마도 쿠바로부터의 소련의 漸進的인 經濟的 그리고 政治的 撤收일 것이다. 소련은 카스트로와의 관계를 해소하려는 다양한 이유를 갖고있다. 첫째 쿠바는 소련에 또 다른 經濟的 負擔을 주었지만 그러한 투자에 대한 정치적 이득은 극히 의심스러운 것이었다. 둘째 蘇聯·쿠바關係는 보다 중요한 美·蘇關係 안에서 말할 것도 없이 짜증스러운 것이었다. 셋째 Bush행정부는 소련이 그들의 자원을 쿠바를 버티게 하는데 낭비하는 한 소련에 대해 經濟的支援을 해줄 관심을 갖고있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은 소련이 對外關係에서 정상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合理的인 方法으로 소련을 도울 것이나 단 순히 소련으로 하여금 단호한 결정을 지체하고 군사분야에 투자를 계속하거나 분열적인 지역국가와의 安保關係를 유지하게 되는 과거의 악습을 유지하는 한 소련을 돕는데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르바초프 재직 기간 동안의 미국의 정책이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政策은 韓半島와 周邊地域에서의 安定에 대한 전망에 관한 문제로 귀착된다. 이 문제는 이 논문이 발표될 學術會議의 주제이기도하다. 본인은 이 주제의 주요문제, 변수와 역학등에 여기 참가한 다른 참가자들이 훨씬 정통하다고 생각하며 이 주제에 대한 評價를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의 국제정치관측자들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한 가지를 강조하려고 한다. 이 점은 최근 진행중인 '獨逸問題'의 解決方式에

대해 소련이 한반도 분단의 궁극적 해결방식의 전형으로 당연하게 간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우선 이 점은 최근 소련이 북한에 대해 政治적으로 거리를 두어왔다는 여러가지 충분한 징표로부터 볼때 분명하다. 단지 북한 소련간의 軍事關係가 어떻게 발전할지를 지켜보는 것만이 남아있다. 그러나 오늘날 소련의 주요 무기거래의 관심은 상당히 발전된 硬貨市場에 쫓점을 두고있다. 이 점에 있어서 소련이 쿠바의 경우에서 처럼 단지 정치적인 이득—점차적으로 주로 經濟的 形편에서 의문스러운 利得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을 위해 계속하여 북한을 지원하는데 따른 손실 부분을 얼마나 더 감내해 나갈 의향이 있는가 하는데 대해 疑問을 가지는것은 타당한 것일 것이다. 관련된 이야기로서 이것은 단지 지금의 潮流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RAND 동료학자 한명이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國際會議에서 겪은 일로서 앞으로의 사태진전에 대한 흥미있는 예상을 할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 회의에서 소련의 어떤 기관의 전문가가 북한대표에게 독일방식의 統一方案을 한반도 분단상황에 적용시킴으로서 南北韓이—다른세계국가들과 함께 21세기를 지향할 새로운 世界安保 秩序形成을 진척시킬 시기가 점차 다가온 것으로 보인다고 제의하였다. 이 제의를 들은 북한대표들은 즉각 방을 박차고 나가 버렸다.

여기에서 지나치게 단순적인 비교를 하지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은 결코 동독이 아니며, 民主主義를 成就하기 위해 동독으로 하여금 장벽을 무너뜨리게 한 大衆的 熱望이 반드시 북한에서도 나타날 것이라고 믿을, 이유도 없고 또 그렇다손치더라도 북한지도자들이 동독지도자들이 한 것처럼 쉽게 권력의 고삐를 놓을 것이라고 믿을 아무런 뚜렷한 이유가

없다.

더우기 북한은 동독만큼 소련이 地域政權과 勢力을 유지하기 위해 제공하는 정치군사 원조에 의존하고 있지는 않다. 사실 향후의 소련의 對北 원조삭감이나 중단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머지 共產圈國家들이 서구 민주국가에 편승하기 위해 그들의 과거노선을 비판한 것과는 달리 北韓政權이 중국·베트남과 함께 마지막 삼각 저항선을 펼칠 것도 생각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유럽의 解決方式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지역적 긴장의 부활과 시대착오적이고 궁지에 몰린 공산권의 버림받은 국가들에 의한 분쟁에 직면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소련이 북한에 대한 무기공급을 중단하고 地域安全에 대한 保障이 없어진 상황에서 지역적 충돌의 防止를 위해 美·蘇가 協助해야 한다는 상호인식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産業化된 民主主義의 교화된 힘이 그러한 지역적 분쟁을 仰止하거나 조정하고 궁극적으로는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南北間의 提携속에서 과거의 대립된 강대국간에서도 진정한 安保의 共感帶가 形成될 것이라고 期待할 수 있을 것이다.

Soviet Threat Disappearing and Peace—framework on the Korean Peninsula

Benjamin S. Lambeth
(RAND Corp. U.S.A.)

— THE WANING SOVIET THREAT: IMPLICATIONS FOR DETENTE —

The Soviet military has experienced unprecedented turmoil since Gorbachev entered office in March 1985. Indeed, it is fair to say that the High Command is facing its most profound institutional crisis in the 72 years of its existence. The indicators of this change are well known to any attentive reader of the newspaper. They include a shift to a more defensive orientation in the USSR's military doctrine; an end to the Soviet military involvement in Afghanistan; Gorbachev's announced unilateral cut of a half-million Soviet troops; associated moves to scale back weapons production and shift a sizeable portion of the defense industry to the civilian sector; and a general effort across a broad front to forge a more agreeable East-West relationship. It would be impossible to cover the whole spectrum of military concerns in the space of just a few pages. Let me instead offer a brief snapshot of the headaches that currently confront the Soviet military leadership.

THE SOVIET MILITARY IN CRISIS

High on the list of these headaches has been the unilateral reduction of a half-million Soviet troops declared by Gorbachev at the United Nations in December 1988. This initiative went against the express wishes of the Soviet High Command. Indeed, it faced active military resistance right down to the day the decision was announced. Even now, the military leadership continues to drag its heels in the implementation of Gorbachev's policy.

Apart from its operational implications, the unilateral troop cut dealt a severe blow to Soviet military morale. For one thing, many of the thousands of officers now coming home from Eastern Europe are reportedly living on army garrisons in tents. No jobs are available for their spouses, nor are there adequate schools for their children. According to reports in the Soviet press, the army can currently house only about one returning family in seven.

Added to this has been the collapse of the Warsaw Pact as a military alliance. This development is something the military holds Gorbachev personally accountable for, since it was he who presided over it, even though there may have been little he could do to prevent it. In practical terms, it means that a military buffer zone of forty years has now disappeared and that a network of allied forces no longer figures in the Soviet security calculus. To cite just one case in point, the East German Army is now down to 90,000 troops from some 170,000 only nine months ago. Desertions among the ranks are occurring daily. The East German Air Force is no longer flying regular training sorties. There, as well as in the army, political organs have folded. In effect, the East German military establishment has become devoid of any operational capability. East Germany itself will cease to exist as a separate state once the unification process is completed in October.

Not only is there the imminent prospect of German unification, but of unification within NATO, a settlement to which Gorbachev finally acceded after many months of what can best be described in hindsight as a policy of surrender on the installment pla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eneral Staff, this outcome is worse than even the worst-case nightmare scenario the Soviet military harbored only a year ago, for it means that all the assumptions that have provided the bedrock of Soviet defense planning for decades have been summarily tossed out the window. It also means that any defense of the Soviet Union's western flank will henceforth have to begin at the border and be mounted from Soviet territory.

This development has added an especially acute edge to the current unrest and separatism in the Baltic states, which bear great strategic importance in Soviet military eyes as a forward defense zone. It also partly explains why the Soviet military was so willing to weigh in with a show of force in rounding up deserters in Lithuania, in marked contrast to its distinct unhappiness over being called in as a riot control agency in Tbilisi last year.

Finally, just to list a few other Soviet military grievances, there is a feeling that Gorbachev has not made good on his promise to the High Command to vindicate its support of perestroika. There is also a fear, probably justified, that more budget cuts are coming. On top of that have been recent revelations of a sharp decline in the quality of life within the ranks. To cite two illustrations, a military pilot draws only half the pay a bus driver in Moscow can command. And housing for twelve officer families (comprising some 60 people altogether) at one base is reported to have only two toilets, two showers, one bathtub, and three stoves. This situation is probably not untypical for junior officers.

There has been a whole gamut of perceived social ills made possible by glasnost, starting with the unrestrained media abuse that has been heaped upon the armed forces since Gorbachev entered office. Among other things, this has prompted a plummeting social standing for the military as an institution. One now hears recurrent reports of officers requesting permission to wear civilian clothes to and from work, and of women refusing to be seen in public with men in uniform.

These harsh trends have stimulated a marked erosion of discipline within the ranks, a process that has been further aggravated by the perceived unfairness of Gorbachev's decision to allow a draft exemption for some 176,000 college students. There have been increasing desertions as a result, with some 6600 last year, up eightfold from the previous year. And this is only the official figure. Unofficial reports put the number at twice as high or more. Worse yet, recent reports indicate that only 25 percent of this year's inductees have thus far presented themselves to be sworn in for duty.

One could write volumes about the current malaise that has come to afflict the Soviet armed forces. It need only be noted here that the current period is a distinctly unhappy one for the military. There seems to be little prospect that things will improve until the USSR converts to a smaller, all-volunteer force and provides better compensation for its uniformed personnel.

CHANGES IN SOVIET DEFENSE DECISIONMAKING

What accounts for this trend? In the first place, it can be traced to glasnost, which has empowered Soviet rank-and-file citizens to criticize the military, as well as all other social institutions, openly. This they have done with a vengeance--and with increasing effect.

More fundamentally, however, this sense of beleagurement felt by the armed forces up and down the organizational hierarchy is a byproduct of a broader process of change that has been at work in Soviet defense decisionmaking. This process constitutes the single most important development on the Soviet national security scene since Gorbachev's advent. It involves a major expansion of the base of participation in public debate over Soviet defense policy, along with an emergence of new players with decidedly different notions about the needs and priorities of Soviet security than those of the High Command.

At the core of this trend has been a steady civilianization of Soviet security planning and a related emergence, for the first time in Soviet history, of true defense politics as that term has long been understood in the West. Gorbachev is determined to increase the role of the political factor in Soviet defense planning. That, plus his heightened reliance on arms control, has empowered the civilian side of the security community to come in from the cold and reach out for greater involvement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Three dimensions of this trend stand out in particular.

First, there has been a marked increase in the role and importance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Under the aggressive leadership of Eduard Shevardnadze, what was once a marginal institution where defense

and security were concerned is now making a determined, and increasingly successful, bid for greater influence over the direction and content of Soviet strategy and arms control policy.

Second, in a development that has shown a faltering start but that could have momentous implications, there was the creation in July 1989 of a Defense and State Security Committee within the Supreme Soviet. This committee was expressly established to help staff the Supreme Soviet in its newly-assigned role of providing legislative oversight to Soviet defense policy.

Finally, there has been the enfranchisement by Gorbachev and his closest allies, notably Aleksandr Yakovlev and Yevgeny Primakov, of a long-dormant community of civilian defense intellectuals associated with various social-science institutes of the Soviet Academy of Sciences. As a result of the expanded room for maneuver opened up by glasnost, these people have shown steady efforts, likewise with increasing success, to carve inroads into the national security process. They are well aware of the role played by their counterparts in the West and are eagerly seeking comparable involvement in the Soviet system.

Some of these analysts, like Andrei Kokoshin of the USA and Canada Institute, have pursued a strategy of openly cultivating the military in the hope of establishing credibility and acceptance among the ranks of that traditionally closed and hostile community. Others, like Alexei Arbatov of the Institute of World Econom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have staked out a more confrontational posture against the High Command, with all the long-term risks which that strategy entails. For example, Arbatov has called for an outright disestablishment of Soviet air defense forces and a return of the Soviet Navy to its original role as a coastal defense agency, among other radical proposals. Needless to say, none of them have been taken well by the military leadership.

One important result of these trends has been a marked erosion of the monopoly over defense discussions--and defense information--which was formerly maintained by the Defense Ministry and the High Command. It used to be that Soviet military doctrine and Soviet defense policy were, for all practical purposes, synonymous. Today, with the

heightened involvement of civilian outsiders, the military viewpoint is but one aspect of what appears to be a broader Soviet national security policy, which shows a growing involvement of participants out of uniform.

A bit more should be said about the Supreme Soviet's Committee on Defense and State Security, since this is potentially the most interesting and influential development if it can manage to establish its footing and gain some real authority. The committee has been expressly modeled after the American House Armed Services Committee and is seeking many of the same functions as those exercised by its American Congressional counterpart. These include budget review, program oversight, confirmation powers for key leaders in the defense sector, treaty ratification rights, and even something like the U.S. Congress's war powers privileges.

There is no question that this new legislative institution has a long way to go before it can realize any of these ambitions, not least of all because it has absolutely no precedent in Soviet history. Beyond that, as currently constituted, it is poorly equipped to have much impact on the day-to-day activities of the defense bureaucracy. For example, the committee is made up of 43 Supreme Soviet deputies, most of whom are either active-duty officers or senior officials in the military-industrial bureaucracy with full-time responsibilities elsewhere. Also, while there is a scattering of younger radicals on the committee, the organization is largely composed of mainstream conservatives who can be counted on to share the broad values of the entrenched security establishment.

Indeed, even members of the defense bureaucracy have been openly critical of what is widely regarded as the committee's disproportionate "insider" status. For example, the membership includes Marshal Akhromeyev, Gorbachev's national security adviser; General Vitaly Shabanov, the deputy minister of defense for armament production; and Mikhail Simonov, the head of the Sukhoi Design Bureau, which has created one of the Soviet Union's finest current fighters. Soviet press articles have repeatedly noted that having people like these in a

supervisory role over the defense sector is not far removed from installing a fox to guard the chicken coop. This situation will need to change before the committee can mobilize any real leverage aimed at altering existing practices. The committee will also need to acquire a technically competent staff, which it now lacks, as well as something like full-time membership, plus greater access to inside information on military programs if it is to be truly effective in an oversight role.

As one might expect, the committee members themselves have been the first to recognize much of this. Yet despite the uphill climb they face, the mere existence of the committee and the ambitions it has shown--with Gorbachev's and Shevardnadze's active encouragement--have thrus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rmed forces and the civilian apparatus into a new era. At a minimum, the military's former stranglehold over defense policy has been decisively broken, and new participants have been licensed to compete for a piece of the action in the policy process.

Much the same can be said about the civilian defense intellectuals who have begun to be heard from on once-forbidden subjects, such as the operational dimensions of Soviet strategy. These people were totally locked out of the policy mainstream throughout the Brezhnev era and were forced either to remain silent or to parrot the party line as propagandists, while the Brezhnev Politburo and the High Command maintained total control over the defense agenda. Today, by contrast, they are seeking--and with increasing credibility and success--to stake out a role for themselves as a source of external counsel on Soviet security policy, and not just as academic commentators on international affairs.

One case in point is the emerging debate over the modeling of military force requirements. This controversy has put the General Staff and the civilian analysts into opposing camps in a struggle for the high ground in determining Soviet procurement programs and arms control policy. Until recently, the High Command was the sole source of technical expertise on military capability assessment. It was also the designated developer of techniques for the quantitative evaluation of

force effectiveness in a combat setting. In this respect, it was the main center of military modeling activity, and one that was clearly off limits to civilian outsiders.

Today, however, a number of nonmilitary modeling centers have arisen to compete for the attention of the political leadership. Prominent among them are the Institute of the USA and Canada and the Institute of World Econom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mentioned above. Some of the brightest young lights at these institutes have begun to come forward with strong alternative views on Soviet defense requirements in the competition for Gorbachev's ear on security matters. And they have done so with enough bravado and clout to put the High Command more and more on the defensive.

This raises the question of how well the High Command is adapting itself in the face of this challenge. The burden of evidence to date suggests that the answer is slowly and without great success. Just to tak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igh Command and the defense intellectuals, the Soviet defense community seems to be entering an experience much like the U.S. national security community underwent in the early 1960s, as Defense Secretary McNamara's "whiz kids" in the Pentagon and other systems analysts at institutions like RAND began to develop rigorous techniques of cost-benefit analysis, forcing the services to come up with equally convincing ways of justifying their bureaucratic stances in the policy arena. In time, the U.S. military got the message, acquired the needed technical skills, and built an analytical capacity to compete very effectively with their civilian challengers.

So far, the Soviet military has not appeared to see the light of this approach. Instead, it has circled the wagons and hunkered down in a defensive crouch, essentially playing a waiting game to see which side can outlast the other. Although one can hardly say for sure, it seems probable that as long as Gorbachev endures politically, or at least his reform effort remains on track, this approach will leave the military increasingly watching from the sidelines as it finds itself more and more outflanked bureaucratically by civilians with better arguments, or at least more right answers--and more powerful patrons.

Having said this, we should be careful not to conclude too quickly that Soviet defense politics have yet become a mirror image of our own. Some of Moscow's civilian defense analysts claim to be influential players already. Convincing proof of this remains thin, however. As a telling point, many of these same people continue to complain about the asymmetry of information, in which Western analysts enjoy access to detailed data on Soviet weapons and forces, whereas Soviet scholars must suffer the comparative humiliation of having to rely on foreign materials for similar information.

Also, while the Foreign Ministry has opened its doors to the civilian analysts and given them a forum for airing their views, the Defense Ministry and the General Staff have not been so forthcoming. It will not be until that happens that we can say the civilian analysts enjoy real policy access and influence. The best of the younger institute specialists are among the first to concede, at least in private, that their numbers remain too few to make a significant difference yet, and that Soviet defense policy has a long way to go before it can be considered truly "civilianized."

Yet this clearly seems to be the direction in which Gorbachev and his allies are pointed. By expanding the number of players, the license for civilians to speak out on controversial defense issues, and the resulting breadth of inputs into the internal defense debate, he appears to be striving to bring about a fundamental change in the structure of defense decisionmaking by imbuing it with real institutional, and even political, pluralism. Although this process is still formative, it bears watching as a trend with great promise for the East-West relationship. If it takes root, it will increase the likelihood that other than narrow military-technical and service-specific concerns might begin to govern how the Soviet Union structures its military forces. This, in turn, would allow for a more thorough integration of military planning into Soviet domestic and foreign policy.

Although this would not necessarily mean an end to the East-West competition in and of itself, it would definitely raise the chances for a moderation of the competition along more traditional, and even

reasonable, lines. To that extent, it is a trend that should be encouraged by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The main pitfall we must avoid is conjuring up in our own minds a fait accompli by concluding prematurely that what remains, at best, only an unfinished civilian quest for greater influence over Soviet defense matters has already become a fact of life.

CURRENT ISSUES REGARDING THE SOVIET ARMED FORCES

This thumbnail sketch of the Soviet military scene brings us to four issues that currently dominate the Western debate over the Soviet Union and the military challenge it presents. The first of these pertains to the Soviet Union's continued warfighting capability. Here, the static indicators all point to a steady modernization in most major weapons categories, with no dramatic changes in the overall numbers of deployed forces. That fact notwithstanding, however, the Soviet army is in disarray, has lost its forward defense posture, and is mainly preoccupied with its own fate as an institution. Also, there are increasing reports of operational difficulties with deployed Soviet equipment. The Tu-160 bomber and Soviet submarines have been prominently mentioned in the Soviet press in this regard. Beyond that, there is a question as to whether Soviet troops can be counted on to follow their orders in all circumstances. In this regard, it has been noted that local forces refused to participate in quelling a recent ethnic uprising in Dushanbe and had to be supplanted by troops summoned from another military region.

One can easily overdramatize reports of this sort. No serious defense analyst in the West has anything but respect for the combat capabilities of Soviet nuclear and general-purpose forces. The point, however, is that whatever Soviet military capability may look like on paper today, external adventures are not high on the leadership's list of priorities and probably will continue not to be for the indefinite future.

Second, there is the issue of military reform and the prospects for an all-volunteer Soviet army. Here, there have been mounting pressures for change from reformist elements within the officer ranks, including at fairly senior levels. The High Command, notably Marshal Yazov and General Moiseyev, along with now-retired Marshal Akhromeyev, have vocally resisted this challenge on the grounds that abandoning the draft would be excessively expensive and would deprive the military of a much-needed mobilization base. Nevertheless, the handwriting is on the wall because these leaders have little other choice. Marshal Yazov himself has lately conceded this, albeit grudgingly. It now appears only a matter of time before a better-compensated all-volunteer Soviet military establishment emerges from the ongoing controversy over military reform. It may even come at a price of the existing High Command's having to step aside for a new generation of leaders on the General Staff, as well as a new Defense Ministry increasingly staffed by (and definitely headed by) appointed civilians.

Third, there has been a question as to whether the military is "resurging" in the face of these multiple challenges to its prerogatives and authority. Recent American press speculation along these lines has cited such examples as General Omelichev's presence at the May 1990 ministerial in Moscow between Secretary of State Baker and Foreign Minister Shevardnadze; Soviet military heel-dragging in the Conventional Forces in Europe negotiations; and related indicators like the recent Victory Day military parade (the first public display of Soviet military hardware in five years) and General Yazov's promotion to Marshal after Gorbachev had earlier insisted that this exalted rank would no longer be awarded to Soviet commanders in peacetime. These and related indicators certainly bear witness to the military's increasing inclination to speak out on behalf of its institutional interests. They also suggest that Gorbachev has increasingly come to appreciate that he cannot afford to alienate the High Command altogether. In no way, though, do they add up to a conclusion that Gorbachev has lost any of his authority over the High Command. It remains an even bet that the next Soviet Defense Minister will be a civilian. Even Marshal Yazov has openly conceded this.

Finally, there is a persistent question about the possibility of a military coup that would put Gorbachev and his associates out of office, bring a halt to perestroika, and turn the clock back to the old days of confrontational politics toward the West. This is an interesting question for idle speculation, but the likelihood of any such occurrence in practice seems remote. To begin with, even the thought of a coup would be alien to the Soviet military tradition. The Soviet officer corps is highly professional in its perceived social responsibility and has never harbored Bonapartist tendencies. Even Marshal Zhukov was sacked mainly because of a personality conflict he had with Khrushchev, rather than for any broader threat he presented to lead a domestic military takeover.

More to the point, there is no obvious candidate within the ranks of the High Command to be the man on horseback. General Gromov, the charismatic commander who presided over the Soviet military withdrawal from Afghanistan, is often cited as such a candidate, but he is currently heads the Kiev Military District and thus lacks a serious opportunity, to say nothing of the inclination. True, some diehards within the military could ally themselves with party conservatives in an effort to overthrow Gorbachev politically. But any full-scale military coup, or even a forcible crackdown short of that, would split the army and trigger nationwide violence on a massive scale. Political developments have gone too far in the Soviet Union for a military takeover to be a workable option any more. Indeed, if any single factor could spark a civil war, this is probably the one sure catalyst. Nobody appreciates this more than the military leaders themselves.

TRENDS AND PROSPECTS FOR GLOBAL STABILITY

Historical analogies are bound to be misleading. However, it can be argued that in one important sense, the 20th century is ending much as it started, with Russia in the grips of an ongoing revolution and surrounded by fractious principalities riven by ethnic or religious discontent.

Much the same can be said about Eastern Europe in the wake of the past year's political upheavals and the collapse of the Warsaw Pact as an instrument of Soviet hegemony. Today, Yugoslavia, Bulgaria, Albania, and Rumania all appear to be reverting to familiar Balkan patterns of behavior, while the rest of Moscow's former East European empire is busily engaged in rejoining Europe as a whole. This raises the possibility of a potentially explosive regional situation, as the ongoing transformation of the Soviet Union has increasingly prompted a resurgence of local nationalism and renewed political conflict, including violent conflict, in a band of tension stretching from the Balkans through Transcaucasia to Central Asia and beyond. To cite just one example, the potential for localized strife between Turkish and Armenian or Turkish and Bulgarian elements, like that for growing ties between the Soviet Central Asian republics and Iran cemented by a common Islamic bond, conjures up at least a remote opportunity for larger regional conflicts that could threaten to draw in the major powers.

Offsetting this incipient regional instability, however, has been the emergence of a fundamentally new Soviet-American relationship at the global level, most recently dramatized by the refreshingly uncharacteristic pattern of Soviet behavior in the Persian Gulf crisis. Not only has Moscow *not* elected to support its long-time Iraqi client in this confrontation, it has openly sided with the forces of responsibility in seeking to contain Saddam Hussein and assure that his forceful annexation of Kuwait not be allowed to stand as a precedent.

Granted, the Soviet leadership has a self-interest here, not least of which is a preoccupation with domestic concerns and an associated need for outside--including American--economic and technical assistance. Moscow is not eager to see a major war erupt in the region, since any such war would tie up American resources that might otherwise be called upon to support Gorbachev's economic modernization goals. There can be no doubt that Gorbachev's support of the U.N. resolution on the use of force to backstop the blockade of Iraq reflects an abidingly parochial Soviet rationale, however much Moscow may couch its position in terms of principled opposition to aggression.

Yet this is neither here nor there as far as the ultimate consequence of the Soviet position is concerned. In this first serious crisis of the post-Cold War era, it has been nothing short of remarkable that the Soviet leadership has so quickly taken up a stance in virtual lockstep with that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broader international community. There has been an understandable reluctance on the part of the Soviet leadership to become involved militarily, even though there is a Soviet naval surface combatant in the Gulf to "protect Soviet interests." Soviet spokesmen have intimated that the USSR might, in the right circumstances, be prepared to commit forces on the ground against Iraq--even under U.S. operational control. Despite such intimations, however, the world is nowhere near a scenario, at least yet, in which Soviet bombers and tactical fighters might find themselves poised along a northern front and prepared to engage Iraqi forces should war occur. That is more than a bit fanciful as matters now stand.

Yet one cannot escape the fact of Moscow's recent accession to the U.N. resolution on the use of force after having first sought, without avail, a diplomatic escape from the current impasse with Saddam Hussein. There is also the reported fact that the Soviet defense attache in Washington has offered periodic briefings in the Pentagon on Iraqi capabilities stemming from Moscow's long-standing military aid relationship with Baghdad. Although the Soviet press has denied that this has involved any information transfer of a "classified" nature, senior American spokesmen have voiced great satisfaction with the cooperation they have been receiving from their Soviet counterparts.

All in all, it is downright amazing how relatively easy crisis management appears to have become when the U.S. leadership has not been obliged to weigh every option against a possible Soviet response and to feel continuously constrained by an ever-present fear of nuclear escalation. The ongoing saga of Soviet cooperation in the Gulf crisis is only the latest and most powerful sign of the profound transformation the USSR has undergone since Gorbachev's arrival in office. Although the Soviet Union remains, as one should expect, self-interested and continues to march to its own drummer, its current leadership seems

determined to end the ideologically-motivated expansionism that largely accounted for four decades of Cold War confrontation. Under Gorbachev, Moscow gives every indication of striving to become a "normal" country in its international dealings as well as in its domestic makeup. This trend has already had profound reverberations both in the political complexion of Europe and in the shifting priorities of American defense planning. Insofar as this is a development with lasting potential, it reflects a trend that the West has every interest in encouraging strongly.

This de-ideologization of Soviet international conduct is consistent with a more general process of retrenchment in Soviet foreign involvement as the Kremlin leadership has found itself increasingly beset with the challenges of sorting out its domestic economic situation--and, indeed, wrestling with the USSR's very future as a multinational state. Although there are conservatives in both the armed forces and the party bureaucracy who have lately come to berate Gorbachev for having "lost" Eastern Europe and permitted a unification of the two Germanys within NATO, the end of empire has come as a perceptible relief to the more progressive elements in the Soviet political arena. For one thing, it means that the USSR is no longer burdened by a need for continuously shoring up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decrepit client regimes. This has allowed Moscow to free up attention and resources that might better be directed toward more pressing Soviet domestic concerns. For another thing, it has helped draw to a close a long-standing confrontational policy toward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and thus eliminate, or at least dramatically reduce, the associated need to sustain a costly and ultimately unproductive arms development effort.

Moscow's accession to a united Germany within NATO no doubt reflects an underlying recognition that Soviet security will not be threatened by this development. Just to be sure, however, in place of its traditional policy of seeking to drive a wedg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its NATO allies, the Soviet Union now appears to see a stabilizing role to be played by a continued American presence--military as well as political--on the European continent.

Probably the next step we will see in this ongoing process of retrenchment will be a gradual Soviet economic, and then political, disentanglement from Cuba. Moscow has diverse incentives to begin undoing its ties with Castro. First, Cuba constitutes for the Kremlin yet another economic burden of empire that offers increasingly dubious political returns on that investment. Second, the Soviet-Cuban connection represents a needless source of irritation in the far more important Soviet-American relationship. Third, and not insignificantly, the Bush Administration has made it clear that Washington will have little interest in providing economic support to the Soviet Union as long as the Kremlin continues to squander its own resources on shoring up its Cuban client. It has been a standing American policy throughout much of Gorbachev's incumbency that the United States will help in any reasonable way to nurture Moscow's advance toward normalcy in its external dealings, but that it will not be a party to any aid arrangement that would, in effect, simply allow the Soviets to postpone hard decisions and persist in their bad habits, whether this entails continuing to feed the military machine or sustaining security relations with disruptive regional clients.

This brings us, finally, to the question of prospects for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ts environs--the primary subject of the conference for which this paper was written, yet one on which the present author is anything but sufficiently informed to go beyond broad generalities. I will not presume to pass judgment on a subject on which other participants here are far better acquainted with the key issues, players, and dynamics. I would, however, stress one point that has surely not escaped the attention of either South or North Korean international observers. This point is that the recent and ongoing resolution of the "German question" may well be regarded by the Soviets as an appropriate paradigm for any ultimate settlement of the division of Korea.

For one thing, it is clear from an abundance of indicators that the USSR has lately been distancing itself from North Korea politically. It remains to be seen how the arms relationship between those two countries

will ultimately evolve. It bears noting, however, that the principal Soviet arms trade interest today is focused on fairly sophisticated hard currency markets. To that extent, it may be a valid question how much longer Moscow will feel inclined to bear, as in the case of Cuba, the losing proposition of continuing to support North Korea for purely political gain--and increasingly questionable gain at that--largely out of its own pocketbook.

Relatedly, although it is only a straw in the wind, a RAND colleague recently experienced an event at an international conference in Washington that may reflect an interesting forecast of things to come. At that conference, a Soviet institute expert suggested to a North Korean delegate that it seemed increasingly high time for the Koreans to work out a German-type solution to their national division so that they--and the rest of the world--might get on with building a new global security order for the 21st century. Upon hearing this proposition, the North Korean delegate promptly stormed out of the room.

One must take care not to be drawn into overly facile comparisons in this regard. North Korea is not East Germany, and there is no obvious reason to believe that the popular yearning that drove East Germany to bring down the wall in its reach for democracy would necessarily find a counterpart reflection in North Korea--or that if it did, the North Korean leadership would let slip of the reins of power as easily as the East German rulers did.

Furthermore, North Korea is less dependent than was East Germany on Soviet military and political largesse for assuring its own regional power and authority. Indeed, it is conceivable that in response to any future reduction or withdrawal of Soviet support to North Korea, the Pyongyang leadership might seek to join ranks with China and North Vietnam in a last-ditch troika of holdouts, as the rest of the communist world continues to renounce its former bad ways in favor of joining the democratic states of the West. Should this occur, one might encounter, in sharp contrast to the European solution, a prospect for resurgent local tension and even conflict at the hands of these increasingly anachronistic and beleaguered communist pariah states.

However, in the absence of Soviet arms support and associated security guarantees to North Korea and a high likelihood that there would be a shared Soviet and American incentive to cooperate against any such regional misbehavior, we could also see the emergence of a truly shared community of security interests between the former superpower adversaries in a new North vs. South alignment, in which the enlightened forces of the industrialized democracies could either deter or manage any such regional conflict and ultimately prevail.

데탕트와 韓半島 통일전망

미하일 G. 노소브
(蘇, 미·카나다연구소)

많은 學者들은 最近까지도 韓半島의 평화통일전망을 論하면서 또 獨逸에서의 與件과 韓半島의 여건을 비교하면서 한반도에서의 統一興望이 獨逸에서보다 더 강하다고 지적해 왔다. 왜냐하면 비스마르크시대에서 히틀러時代까지 불과 70년에 불과한 統一國家의 歷史를 가진 獨逸과는 달리 韓國은 1945년까지 거의 단일국가로 存在해 왔으며 또한 獨逸에서의 통일과정에서 美·蘇양국의 利害관계는 물론이고 전체 유럽 國家들, 그리고 世界양대 군사불력의 이해관계와도 密接하게 聯關되어 있어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때는 韓國이 獨逸보다 더욱 많은 統一에의 기회를 가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最近까지의 國際政治에 있어서 일련의 變化들은 蘇聯 外交政策 概念의 급격한 再檢討와 무엇보다도 진부한 이데올로기 교조의 배경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것은 유럽정치사회의 엄청난 變化를 招來하였으며 美·蘇 양국간의 상호 理解의 새로운 장을 열게 하였다.

獨逸統一은 가장 合理的인 예견과 소위 상식적 檢討에도 되돌아 올 수 없는 길로 나아가고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和解의 물결은 太平洋地域 특히 韓半島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韓半島의 平和統一에 關聯한 問題와 이것과 불가분의 전제조건 즉 韓半島에서의 安保問題는 직접적으로는 南北韓 全體 國民 뿐만아니라 人類 전체의 利害와도 關聯 되어 있다. 오늘날 이 地域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地域 및 世界全體의 安保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地域으로 되어 있다.

南北韓 뿐만 아니라 美國, 蘇聯, 中國도 직접 간접으로 이 지역의 冷戰的

군사대치상황에 연루되어 있고 韓半島에서의 戰爭 발발시에는 日本도 어느 정도는 휩싸이게 될 것이다. 世界的인 데탕트의 霧圍氣가 이미 制限的인 정도이긴 하지만 韓半島 狀況에도 影響을 미쳐왔다. 蘇聯은 韓國政府의 存在를 무시하는 政策을 배격했으며 양국은 貿易 및 領事關係를 樹立하고 정식 외교관계수립을 準備하고 있다.

실제로 모든 東歐圈 國家들이 한국정부와 외교관계를 樹立하였고 예상한 바대로 韓國과의 外交關係樹立이 北韓과의 외교관계 단절을 초래하지는 않았다. 군사적 긴장상태를 緩和하려는 소련의 措置에 相應해서 美國도 韓國에서의 군사력수준을 減縮시킬 計劃을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統一에로의 길을 활짝 연 韓半島 狀況의 극적인 變化나 南北對話의 실질적인 再開에 관해 論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다. 이러한 사실은 세계적인 데탕트 조류의 結果와 展望을 한반도 긴장완화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可能性을 분석해볼 必要性을 느끼게 한다.

統一은 南北韓 兩側의 妥協 및 친선과 함께 關聯利害當事國의 同意를 요한다. 남북한 양측의 정치지도자들은 公式的으로는 統一을 지지하며 보다 실제적인 표현으로서는 남북한 양측의 國民들은 統一韓國을 그들의 國家目標로 생각하고 있다. 南北간 갈등의 외부관여자 어느 누구도 統一韓國에 대한 反對者로서 立場을 취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南北對話는 매우 낮은 水準에 머물러 있으며 南北韓 어느 쪽도 깊은 관심을 기울일 만한 상호 관계를 갖지 못하면서 停滯의 責任에 대해 상대방을 비난하고 있다. 1990年 7月末 이 論文을 쓰면서 9月中에 있을 南北韓間 對話의 展望에 관해 밝게 평가하지 못하는데 대해 비난받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南北對話가 무산되고 7월에 있을 南北韓간 합의가 다시 깨뜨려질지도 모

른다는 事實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韓國의 통일에 대한 나의 判斷이 잘못되었기를 바란다.

오늘날 東西和解의 눈에 드러난 가장 重要한 結果中的의 하나는 獨逸의 統一이며 이것은 韓半島에 있어서 統一問題의 平和的 解決可能性에 대한 實質的인 希望을 가져왔다. ‘레오 톨스토이’는 그의 소설 ‘안나 카레니나’에서 ‘모든 행복한 가정은 그들의 행복에 있어 비슷하다. 그러나 모든 불행한 가정은 제 각각의 모습으로 불행하다’고 말하고 있다. 南北韓과 東西獨逸의 統一過程의 모든 차이를 認識하면서 獨逸의 統一過程과 韓半島에 있어 統일의 展望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南北韓간과 東西獨逸간의 여건을 비교해 볼 때 공통적인 사항은

- 民族的 여망의 차원에서 存在하고 있는 民族統一의 安定的 指向
- 資本主義社會의 社會주의사회에 대한 경제적 우위
- 統一問題의 美·蘇 양국의 연루

동시에 더 많은 차이점이 있다. 즉

- 韓國에는 美軍이 주둔하고 있으나 북한에는 외국군이 없고
- 南北韓 어느쪽도 세계적 군사불력에 參與하지 않고 있으며
- 韓國은 政治的 安定과 國際的인 役割面에서 西獨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으며
- 韓國戰爭以後 北韓은 社會主義圈에 參與하고 있으면서도 이북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 초보적인 예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韓半島問題의 해결에 대해 외부적으로 影響力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흐름으로부터 고립되어 왔었다.

統一獨逸의 成立은 外部 및 內部要因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 과정에 있

어 重要한 부문은 소련에 있어 ‘브레즈네프 독트린’의 포기이다. ‘브레즈네프 독트린’의 요점은 당시의 表現을 빌리면 ‘社會主義國家 및 그들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해 다른 社會主義國家 內部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蘇聯의 權利’를 의미하는 것이다.

‘브레즈네프 독트린’의 포기와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이 그들의 發展方式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權利에 대한 認識은 東歐圈에서의 전제주의 정권의 沒落을 가져왔다. 그러나 동시에 분단독일의 象徴이었던 베를린장벽의 崩壞는 兩獨간의 지속적이고 다방면이었던 關係에서 이룩되었으며 이러한 關係는 1972년에 조인된 양독간의 關係를 조정하는 基本條約에 근거하고 있다.

이 기본조약은 兩獨간 ‘현존국경의 불변성’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兩獨간의 국경의 崩壞를 유도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兩獨간의 關係정상화의 시작은 兩獨간을 보다 安定되고 개화된 關係로 진입시키고 內部的 군사충돌의 可能性을 最少化 시키며 군사적수단에 의한 統一의 可能性을 배제시켰기 때문이다.

韓半島에 있어 平和的統一의 展望에 대해 이야기 할 때 특히 平壤側에서는 교차승인 즉, 蘇聯, 中國 양국이 한국과 外交關係를 樹立하고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外交關係를 樹立하는것은 한반도 분단상황을 고착화하고 사실상 의제로부터 統一問題는 배제되는것이라고 강조되었었다. 오랫동안의 獨逸의 경험을 볼 때 이 論理의 진위는 판명되었다.

東西獨은 國際機構에 加入하였고 외교사절을 交換하였으며 世界多數國家들로부터 동시에 承認을 얻었으며, 統一問題는 거론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가지 다른 水準의 對話가 進行되었고, 인적교류

가 增加되고, 이산가족의 재결합이 이루어지고, 내부교역, 문화 및 과학 방면의 協력이 增進되었다.

兩獨間에 進行되어온 關係가 이상적이었는가 현실적이었는가 또, 蘇聯의 페레스트로이카 政策이 獨逸統一의 觸媒作用을 하였는가에 대해 確言할 수는 없더라도 본인은 獨逸統一이 그렇게 빠르게 또 相對적으로 부드럽게 이루어진 것은 兩獨間의 內部적으로 이루어진 協力에서 얻어진 經驗 즉, 實質적인 교차승인의 하나의 전제조건이 된 경험이었다면 不可能하였을 것이라고 強調하고 싶다.

교차승인에 대한 蘇聯의 가장 중대한 措置중의 하나는 1989年 4월에 있는 韓·蘇間의 直接的인 關係 樹立이었으며 이것은 正常的인 外交關係 發展으로의 길을 닦아놓았다. 이러한 決定은 北韓에 대한 蘇聯의 公약과 상치되지 않으며 이것은 軍事的, 政治的, 經濟的 觀點에서 뿐만아니라 地域에서의 安정을 維持하는데 있어서도 重要하다.

南北韓의 政治指導者들과의 直接的인 接觸은 南北韓 지도층과 密接한 人間적 유대를 갖는 좋은기회를 蘇聯에 주고있다. 나는 이러한 기회가 南北 대화를 促進하는데 適切히 이용되기를 바란다.

韓半島 狀況의 正常化는 주로 南北間 關係 發展에 依存하고 있다. 물론 歷史적으로 한반도문제에 개입되어 있던 國家들 즉, 美國, 蘇聯, 中國들도 韓半島 問題의 平和的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만일 美國이 韓國에 그들이 駐屯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분쟁에 直接개입 한다면 蘇聯과 中國은 北韓의 법적인 同盟으로서 間接적으로 개입할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노골적인 軍事的 충돌로 발전될 韓半島에서의 政治的 대결을 분명히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오늘날 韓半島 問題의 많은 부분은 美·蘇關係에 내포되어 依存되고 있다. 韓半島에서의 긴장완화라는 目標을 두고 美·蘇間의 협조가능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必要한 것은 南北韓과 동시에 緊密한 關係를 維持해야 한다는 事實의 중요성에 대한 美·蘇兩國의 입장에서의 인식에서 부터 南北韓이 각기 독특한 사실접근을 決定하게될 客觀的 與件에 대한 計算에서 評價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蘇聯은 北韓과 同盟關係를 위태롭게 할지도 모르는 水準에까지 이르면서 美國과 행동을 같이하지는 않을 것이다. 蘇聯이 北韓의 政策을 보다 예견 가능하고 韓半島狀況을 보다 덜 일촉즉발적으로 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있음직 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事實로 볼때 美國이 韓國政府의 政策에 대한 影響力과 비교하여 볼때 이 地域에서의 軍事政治的 狀況의 具體的 問題들과 關聯하여 蘇聯이 北韓에 대해 가진 影響力은 크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것이다.

美·蘇兩國은 客觀적으로 韓半島 狀況의 安定과 安定的인 平和保障에 관심을 갖고있다. 그리고 이러한 兩國의 目標은 상호부합하기 어려운 이지역 國家들의 政治的, 經濟的, 思想的 여망으로부터 표면화 되고 있는 모든 다른 問題點들과 關聯하여 볼때 최우선권을 가져야 한다. 이제 韓半島에 있어서 美·蘇兩國의 여러다른 形態의 軍事活動의 緩和에 대해 이야기해 볼때가 온것 같다. 여기에는 軍事演習에의 參與, 南北韓에 대한 군사원조의 상호제한 또는 더 나아가서 군사원조의 중지, 韓半島에서의 어떤 形態의 도발 행위도 배격할 조치에 대한 협약, 이러한 협약의 結果에 대해 南北韓 指導者에 통보하기 위한 조치들이 包含되어있고 韓半島 問題에 관한 美·蘇兩國의 의견합치의 과시는 美蘇兩國의 南北韓 指導層과의 대화에서의 입장을

강화해 줄 것이다. 전술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韓半島 狀況安定과 關聯된 美蘇兩國의 장기적 목표의 유사성은 양국간 쌍무적 상호작용의 形態를 추구하는데 客觀的인 근거를 제공해 줄 것이다. 그러한 相互作用으로의 發展은 세가지 측면에서 可能하다.

첫째로 南北韓과 關聯하여 또 南北韓을 통틀어 韓半島 地域을 全體로 하여 美・蘇兩國이 독자적인 행동을 자제하는 것이다. 이것은 南北韓의 특정이해집단을 전체 인류의 이해관계와 韓半島에서의 平和定着問題에 귀속시킬 必要性에 대한 美・蘇兩國의 입장의 公同인하고 명백한 해석을 의미하여야 한다.

美・蘇兩國의 공동목표에 대한 理解는 특정 소수 전문가집단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南北韓과 美・蘇兩國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많은 다른 國家들 특히 中國 및 ASEAN 國家들도 韓半島 狀況의 안정에 觀心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韓半島 狀況의 안정을 위한 美・蘇兩國의 客觀的 여망의 실현은 南北韓 政府의 政治的 행위에 대한 責任感을 고양하고 양국 정부에 대한 壓力의 근원이 될 것이다.

政治心理學的 견지에서 볼때 韓國에 관한 蘇聯의 태도를 反美적으로 수용하고 美國의 北韓에 대한 주장을 反蘇적으로 받아들이는 습관적 고정관념의 배격이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지역의 與件을 正常化하는 데 있어 利害에 따라 뭉치며 항상 합치하지는 않는 여러가지 세력들의 非公式的 연합을 만들게 하는 선결조건을 용이케 만들 것이다.

둘째, 美・蘇間의 相互作用은 평행적 행동의 양태로 現實化 될 수 있다. 상시 活動하는 실무진을 창설하는 것도 유용한 것이며 이 실무그룹은 蘇聯-北韓, 美國-韓國間의 相應하는 부서들의 專門家들과 代表者들로 構成될 것이다.

이 집단의 공식 목적은 韓半島 및 주변지역의 狀況에 대한 檢討일것이나 實際目的은 南北韓間의 여러가지 形態의 直接對話의 進行에 대한 可能性을 摸索하는 것일 것이다. 아마 이 計劃에 있어 美·蘇 兩國의 外務當局은 서로 독자적으로 그러한 그룹의 형성을 예견하였거나 中國과 정기적인 實務 協議도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美·蘇協議機構와 유사한 機構의 창설을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다.

세번째로 보다 效果的이지만 美蘇間의 협조형태에 관한 협약으로 이루어 複雜한 것은 韓半島問題와 關聯한 政治的 進전을 直接 調整하는 것이다.

만일 최근 고르바초프 蘇聯大統領의 美國 訪問중에 言及된것처럼 蘇聯이 극동의 安全保障問題에 美國과 보조를 맞출 準備가 되어 있으며 極동 및 韓國問題도 그러한 協約에 우선순서로 包含되어야만 한다. 亞·太地域에서 的 美國의 軍事力 存在에 대한 現實的 接近으로서 우리는 워싱턴 黨국이 태평양지역에서의 軍축회담과 信賴構築措置에 관한 會談을 시작하도록 설득 하려는 중이다. 이러한 問題에 관해 토의하기를 계속 주장하면서 蘇聯은 美國이 낮은 水準의 軍事活動과 적은 規模의 하부구조로서 軍事力 存在의 안정된 性格을 維持할 수 있다는 事實에서 出發하고자 한다. 동시에 이러한 方向으로의 美國의 움직임은 蘇聯의 동부지역에 대한 軍事力 配置 水準에 대한 蘇聯의 內部的 政治的 고려를 보다 쉽게 할 것이다.

蘇聯이 이러한 方向으로 일방적으로 조치를 취할때의 어려움과 潛在的인 닷가에 대해 美國이 理解를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할 수도 있다. 太平洋 地域의 소련 군사력은 주로 소련 국경의 안쪽에 배치되어 있다. 美國의 군사력은 동지역에서 海外 美軍基地와 광범위한 海軍력에 의해 결정지워지고 있다. 미국은 海軍력에 소련은 지상병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과 太平洋地域에서 美·蘇 양국의 군사력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실질 經濟的 利害의 정도가 비교될 수 없다는 점도 認識하고 있다. 다른 각도에서 問題를 考察하기로 하자.

소련이 단기간에 걸쳐 태평양지역 군사력을 철수시키는 일방적 결정을 했다고 가정하자. 이로써 이 지역의 政治的 배경 국면이 급격히 개선될 것인가?

우선 北韓과의 정치 군사적 연계를 통한 한반도 상황에 대한 傳統的 영향력의 통로가 縮小될 것같이 보인다. 또 北韓의 정치 상황이 보다 더 예견 가능해지거나 합리적 구조 배후의 狀況에 美國의 개입의 증대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美國의 군사적 영향력에 대한 蘇聯의 상쇄력의 제거는 태평양지역의 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다. 中國 내부의 정치상황 때문에 중국의 행동을 예측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어느정도 동북아 지역의 공백을 메꾸려는 중국의 점증하는 의도를 배제할 수 없다.

세째 이지역의 힘의 均衡의 이러한 변화에 대한 모든 가능한 日本의 반응을 예측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蘇聯의 위협’ ‘安保條約’ 과 日·蘇 양국간의 경제적 모순간에는 강한 연계가 있다. 이러한 요인의 급작스런 제거는 美·日 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지도 모른다.

네째 美國은 이미 태평양지역에 있어서 反美主義에 의해 배격되고 있다. 蘇聯의 태평양 군사구조로부터의 철수는 대립하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보다 獨自的인 存在感을 느낀다는 이유로 두 勢力間의 균형을 원하고 있는 제 3세계 국가들로부터 美國의 의도에 대한 우려와 의구심을 새롭게 자아내게 할 것이다. 여기에서 본인은 동북아지역에서 蘇聯의 군사력은 동결되

거나 감축되어야 하는것이 확실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어려움은 동결 또는 감축의 어느 단계이후에는 소련의 일방적인 이러한 조치가 취약한 地域均衡을 깨뜨릴 수 있고 소련이 아시아로부터 도망간다는 모습을 보일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소련의 軍事的 영향력을 經濟 영향력과 政治影響力으로 단계적으로, 비례적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보다 현명할 것이다. 이지역에서의 소련의 경제적 위치의 제고가 첫째는 소련 내부 문제이긴 하지만 국내적 관심의 차원을 넘어선 것이다.

太平洋地域에서의 군축문제는 이지역에서 군비축소에 관한 어떤 구체적이고 뚜렷한 결과가 없이는 포괄적인 해결책을 얻기는 어렵다. 그러한 협약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한 근거가 政治問題 뿐만아니라 군사문제이기도한 韓半島問題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 그밖에 美蘇兩國은 이지역에서의 충돌을 야기시키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이지역에 배치한 군사력이 순수한 국지적 역할을 수행하게 즉 한반도 지역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의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반도로부터 局地的 범위를 넘어서 사용가능한 무기를 철수하는 문제는 이지역에서 새로운 형태의 군축을 추구하는 것을 보다 용이케 할 것이다. 만일 이점에 관해 相互 받아들일 수 있는 합치점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美·蘇兩國의 방위공약의 수준을 緩和시키는 과정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한반도 危機의 해결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軍縮에 관한 지역적 협상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신뢰구축 방안은 미·소간의 대화와 多國間 협상의 주제가 되고 있다. 소련은 아무런 유보 없이 태평양지역에서의 核, 미사일, 化學武器 비확산에 관한 문제에 대한 진지한 會談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있다.

미·소간의 相互作用은 한반도에서의 核 非擴散을 위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문제는 1989年 9月 와이오밍주에서 있는 美國무장관 베이커와 소련 외무장관 세바르드나제간의 회담동안 의제가 되었었다. 당시 美國무장관 베이커는 소련 외무장관에게 평양당국이 國際原子力機構(IAEA)의 統制協約을 준수하도록 설득하여 주기를 요청했다.

北韓도 1985年 12月에 調印한바 있는 核 非擴散 의무규정에 의하면 국제 원자력기구의 監事관이 60年代 소련으로부터 도입한 2기의 원자로를 監事할 수 있도록 방문이 許諾되어져야 한다. 美國이 인공위성으로부터 北韓이 60-MW Calder Hall Magnox타입의 원자로를 1956年 英國型을 본따 설치한후 평양에서 60 km 떨어진 영변에서 가동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했음에도 불구하고 國際原子力機構 대표는 북한내의 어떤 다른 핵시설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美國의 정보에 따르면 체처리시설이 원자로 근처에 건설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형태의 원자로는 에너지를 생산할 뿐만아니라 방위산업을 위한 原料를 생산할 수 있다(Nuclear Fuel, April 3, 1989, p.5).

한반도에서는 핵확산이 없다는(이 점에서는 美·蘇間의 의견일치가 있었다) 충분한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볼때 핵 통제 문제는 美國이 韓國으로부터 核武器를 철수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점은 분명하다. 한반도 지역에서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어떤 합치점으로 이끌수도 있는 동서화해 추세의 발전은 한반도에 있어 核武器의 역할을 분명히 감소시킬 것이다. 순수한 군사적 건지에서 볼때 작고 인구가 密集한 지역에서의 핵무기의 사용은 자살행위이다. 한미간에 한국에서의 핵무기의 철수결정을 내릴 경

우 한반도에서의 신뢰구축조치 이행에 대한 많은 論難을 불식시킬 것이며 소련이 북한으로 하여금 화해의 물결에 동참하도록 설득하는 강한 논거를 줄 것이다.

蘇聯과 北韓은 同盟國이며 우리는 항상 1961년에 조인된 友好條約에 집착해 왔다. 오늘날 평양에서의 문제에 대한 우리의 평가는 변화하고 있지만 우리의 북한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한반도에서의 安定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蘇聯政府는 북한에 의해 제기된 건설적인 제안들 즉 한반도의 非核地帶化, 1988 ~ 1992 간에 한국내 핵무기철수, 주한미군철수와 함께 南北韓 군사력의 10萬으로 縮小, 한국 북한 미국간의 3者協商, 남북 최고위급 회담에서의 군사정치협상등을 지지한다. 이러한 제안들이 실행될 수 있는 주요 선결조건은 모든 이해당사국들이 진지하고 관심있는 태도로 이 문제들을 討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美國의 北韓과의 對話拒否는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를 증진하지 않을 것이다. 韓國人の 統一에의 열망을 같이하면서 蘇聯은—미국과 함께 韓半島 분단의 歷史的 責任을 지고있는—平和的이고 現實的인 方法으로 統一이 진전되도록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統計에 따르면 北韓 蘇聯과의 關係는 成功的으로 발전되고 있다. 蘇聯은 北韓對外貿易 總額의 3분의 1을 점하고 있다. 蘇聯은 현재 北韓의 10개 건설프로젝트에 技術援助를 提供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北韓의 70여개 施設이 蘇聯의 원조하에 建設되고 있다. 合作事業, 直接的 産業紐帶와 相互 産業間 協調를 진전시키고, 이 방면에서 상호 지불문제에 따른 자국 화폐 사용을 위한 다수의 協定이 締結되었다.

北韓에서의 産業施設建設과 蘇聯의 石炭鑛山開發에서의 相互協力을 進전시키기 위한 몇가지 措置들이 1990년 4월 經濟科學問題에 관한 北韓 蘇聯政府間 協力委員會 會談에서 채택되었다. 2000년까지 北韓 蘇聯間의 經濟科學分野의 協力을 進전시킬 長期計劃도 조인될 準備過程에 있다. 文化關係는 1988~1990간 文化分野協調 計劃에 근거 成功的으로 進전되고 있다. 동시에 北韓 蘇聯 兩國의 經濟的 어려움때문에 相互經濟分野協力에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 蘇聯과 北韓과의 經濟分野協力の 經驗과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韓國과의 접촉에서 축적된 經驗을 통해서 南北韓 交流의 요인들을 이러한 協力形態에 적용시킬 수 있는 可能性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온것 같다. 즉 蘇聯과 南北韓이 經濟計劃에 같이 참여함으로써 소련과 남북한 국민간의 文化的 協力の 새로운 形態를 찾아낼 可能性을 의미한다.

보다 具體的 제안으로서 板門店을 향하여 平壤과 서울을 각각 출발하는 비무장지대에서 統一과 平和의 집회를 갖는 國際的 平和行進을 提議한다. 이 提議가 韓國側에 의해 받아들여질 경우 蘇聯平和委員會는 이 提議를 우리의 동지인 平壤側에 提議할 준비가 되어있다.

蘇聯과 北韓間의 國家間政治關係에 대해 언급한다면 상호간 內政問題에 대한 불간섭의 원칙에 의한 友好關係로 특징지을 수 있으나 그러나 最近 北韓 內部에서 進行되고 있는 懸案들이 蘇聯國民의 비난을 자아내고 있기도 하다. 東歐事態 以後로 만일 北韓 指導者들의 현재의 정책이 蘇聯의 支援과 關係되어 있다면 장래에는 이 정책에 대해 韓國民의 견지에서 蘇聯이 도덕적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北韓과의 公式的인 관계는 '政治的 統一體'의 수준에 고착되어 있으며 이것은 平壤指導層의 안이한 예측에서 뿐만 아니라 蘇聯이 北韓에서 일어나고 있는 事態

에 대한 客關的인 評價를 어느 정도 보류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說明될 수 있다. 우리 신문편집인들에게는 平壤에서 發刊된 新聞에 掲載된 기사를 转载하는 것도 開放政策의 새로운 산물이지만 ‘敬愛하는 偉大한’ 指導者의 정책에 대해서 蘇聯의 모든 사람이 또 항상 지지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事實을 고백하고자 한다.

본인은 韓國과의 對話를 시작하는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그러나 韓國과의 대화는 北韓과의 關係發展에서의 새로운 조치들과 均衡이 맞아야 된다고 確信한다. 外部世界로부터의 고립은 北韓社會를 民主化로 誘導하고 人間價値에 重點을 두는 社會로 복귀시키는 政治社會的 變化에의 길에 가장 분명한 障礙를 造成할 것이다. 이점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韓半島問題에 대한 이해당사국들이 北韓指導層과 人民들이 文明화된 國際關係 體系에 參與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노력해야만 하는 이유이다. 오직 對話만이 安定과 統一의 길을 열것이다.

* * *

이번 여름 우리는 民族的 非劇과 아직도 韓國人 사이에 남아있는 후유증을 가져온 韓國戰爭의 40주년을 기념하였다. 오늘날까지 韓國戰爭 勃發의 책임에 관한 논란이 繼續되고 있다. 韓國戰爭期間 北韓軍 副參謀總長이었으며 板門店 休戰會談 北側代表였던 李相朝씨에 의하면 “韓國戰爭은 北韓軍에 의해 철저히 準備된 侵略이었다. 적대행위의 개시직전에 主要攻擊部隊은 軍事訓練의 가장하에 전면 전투태세에 들어갔으며 동원된 사단들은 ‘남쪽’이라는 正確한 攻擊方向이 下達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1956년 駐蘇大使로 있던중 蘇聯에 망명하여 현재 민스크에 居住하고 있는 李相朝씨는 ‘모스크바뉴스’紙에 게재한 ‘스탈린이 金一成

의 指示에 동의하였다.’ 라는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金一成은 朝國解放戰爭의 實質的 主모자이며 實際로 스탈린과 戰爭에 關하여 商의하였다.” (Moscow News N.27,1990).

한편 이승만政府가 北韓側에 대한 戰爭을 準備하였다는 사실을 證明하는 증거도 있다. 1950년 6월 19일 당시 서울을 訪問하였던 Dulles가 미국무부의 소수 참모진들의 앞에서 이승만은 다음달 그가 38선을 넘어 北韓을 攻擊할 경우 支援을 약속할 것을 要請한 것으로 알려졌다.(FRVS 1950, Vo1. 7, pp.107 ~ 109).

당시 韓半島에 있어 긴장은 고조되어있었고 兩側은 戰爭을 始作할 準備가 되어 있었다. 이 점이 민족화해를 위해 당시의 기록을 공개하고 戰爭의 責任이 누구에게 어느정도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이다. 實質的인 이점에 관한 사실규명이 없는 한 새로운 역사의 始作은 不可能한 것이며 獨逸의 사례가 이를 證明하고 있다.

南北韓을 갈라놓고 있는 장벽은 무너진 베를린 장벽보다 더 길고 더 높다. 그러나 이러한 240 km의 장벽을 쌓는데 소요된 800,000톤의 시멘트와 200,000톤의 강철도 南北韓의 國民들의 의사에 부합되는 형태의 統一을 방해하지는 못할 것이다. 韓半島 統一問題와 政治軍事的 緊張緩和問題는 太平洋地域에서의 데탕트의 적극적인 추세와 함께 南北韓間의 다방면적인 접촉의 진진의 토대위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화해에 대한 유럽의 經驗, 國際的 緊張의 緩和, 政治軍事 經濟的 安定을 위한 太平洋地域 獨특한 체계의 확립, 美蘇會談議題에서 太平洋地域의 安定 등에 대한 創造的인 再評價가 要求된다.

아시아地域과 韓半島에서의 安定없이 진정한 데탕트와 世界的 平和에 대해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DETENTE AND PROSPECTS OF KOREAN REUNIFICATION

Michael G. Nossov

(US & Canada Studies Institute , U.S.S.R.)

Many scholars even quite recently, speaking about prospects of peaceful reunification of Korea and comparing the situation there with one existing in Germany, pointed out that reunification tendency in Korea was much stronger than in Germany because until 1945 Korea- unlike Germany, which was united only within 70 years period beginning from Bismark to Hitler - was always one country, that unification process in Germany is tightly connected with interests not only of the USSR and the US, but of the whole Europe and of two major world military blocks, and therefore in historical perspective Korea has more chances for unification than Germany. Those changes in the world, which were started by the radical reconsideration of Soviet foreign policy concepts and first of all by the rejection of outdated ideological dogmas, has led to enormous shifts in european political life, to the new level of the Soviet-American understanding. Germany unification in spite of the most rational predictions and so called common sense considerations is in the process with no way back.

Regretfully, detante spread less to the Pacific and to Korea in particular. The problem of peaceful unification of Korea and its inalienable precondition - preserving security on the peninsula - is in direct connection not only with the interests

of Korean people, but of the whole mankind as well. Today this particular region, because of well known reasons, is the most dangerous to regional and global security.

Not only two Koreas, but the US, the USSR and China are involved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cold war military confrontation here, and in case of hot military conflict on the peninsula Japan would be also involved to this or that extent. The global detante has already rather sufficiently -though in limited scale - influenced the situation in Korea. The USSR has rejected its policy of ignoring the existence of Korean Republic, two countries established trade and consular contacts, preparing the establishing of diplomatic relations. Practically all Eastern European countries has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with Korean Republic, what did not led - as was expected - to the severance of their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DPRK. Responding to the Soviet steps toward decreasing military tension, the US declared its plans to reduce level of its military presence in Korea. Nevertheless, it is to early to speak of radical changes on the peninsula or about real start of interkorean dialogue, which opens way to the unification. This brings the necessity to analyze the possibilities of applying the results and perspectives of global detante for the easing of tensions in Korea.

Unification demands compromise and good will of both parts of Korea plus concensus of all states involved. Political leaders both in Seoul and Phyongyang officially stand for unification and in practical terms - peoples on both sides of 38 parallel consider united Korea as their national goal. None of the

external participants in this conflict is standing as an opponent to the united Korea. But practically interkorean dialogue still remains on a very low level, both sides of Korea have no relations deserving any serious attention, blaming each other for the deadlock. Writing this paper at the end of July 1990, I hope to be accused of underestimating the prospects of dialogue between two parts of Korea in the middle of September. But I am afraid it will not happen and agreement signed in July will be violated again. But for the sake of Korean unification I should like to be wrong.

One of the most tangible results of detente process between East and West today is the unification of Germany, that brings actual hopes for the peaceful solution of unification problem in Korea. Famous Leo Tolstoi has written in his novel "Anna Karenina" that "all happy families are alike in their happiness, but each unhappy family is unhappy in its own way" and so realizing all the differences in the unification process in Germany and in Korea, let's try to compare the process of unification in Germany and prospects of unification in Korea.

Comparing the situation in Germany and in Korea, one could immediately determine common points and differences. Common features are:

-stable tendency to national unity, existing on a level of national aspirations;

-economic domination of capitalist part over the socialist;

-involvement of the US and the USSR in the unification problems.

At the same time there are much more differences:

- American forces are deployed in the South, but there are no foreign troops in the North;
- Neither DPRK, nor ROK are participating in the global military blocks;
- the political stability and international role of the ROK today is lower than of the FRG;
- after Korean war the DPRK in spite of joining socialist camp was and continues to be in isolation from the processes, going on in the world what determines low level of prediction on what is happening to the north from 38 parallel and limits the possibilities to influence the settlement of Korean situation from the outside.

Creation of the united Germany was determined by external and internal factors. The important place in this process belongs to the rejection of "Brezhnev's doctrine" in the USSR. The essence of this doctrine, putting it in those years wording, was "the right of the USSR to interfere military into other socialist countries' affairs for the sake of preserving socialist community and its gains". Failure of the doctrine in combination with the realized right of all socialist countries to determine freely its way of development, led to the fall of the authoritarian regimes in Eastern Europe. But at the same time the destruction of the divided Germany symbol- Berlin wall - was determined by the relations between two parts of Germany and first of all by the existence of the multi-layered and protracted dialogue between two parts of the country, based on the Treaty, regulating relations between two Germanies, signed in 1972. Though the treaty fixed "inviolability of existing frontiers"

between two parts of the country, practically it led to their destruction, because the beginning of normalization of relations between two parts of the country led to more stable and civilized relations between them, minimized the opportunity of internal military confrontation and excluded the prospect of unification by military means.

When speaking on the prospects of peaceful unification in Korea it is often stressed, especially in Phyongyang, that cross recognition, which means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of the USSR and the PRC with the ROK and the US and Japan with the DPRK lead to the fixation of divided status of Korea and in fact put away from the agenda the problem of unification. German experience for long time was proving that thesis: both parts of the country joined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xchanged diplomatic missions, simultaneously were recognized by the majority countries of the world and the unification question seemed not to be raised. But at the same time dialogue on different levels was going on, the exchange of peoples increased, families reunited, internal trade, cultural and scientific cooperation developed. Not saying that what is going on between two Germanies is ideal and realizing, that perestroika in the Soviet Union catalyze the unification, I want to stress, that so rapid and relatively smooth creation of the united Germany would have been impossible without experience, gained in the internal cooperation between two German states, one of preconditions of which was defacto cross recognition.

One of the most significant Soviet steps to the cross recognition, was the establishment of direct relations between Seoul and Moscow in April 1989, that opened path to its transformation into normal diplomatic relations. This decision doesn't interfere with Soviet obligations before the DPRK, which are significant not only from military, political and economic points of view, but for maintaining stability in the region as well. Direct contacts with political leaders in Phyongyang and Seoul provide the Soviet Union with the unique opportunity for the close personal contacts with the leadership of both Koreas. I hope that this opportunity will be properly used for promoting dialogue between two parts of the country.

Normalization of the situation on the peninsula depends mostly on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though countries, historically involved in Korean affairs could play significant role in peaceful settlement of the problem: first of all -the US, the USSR and China. Though, if the US are involved in conflict directly because of their presence in the South, the USSR and the PRC, being a legal ally of the DPRK, are involved only indirectly, but all of them definitely are not interested in political confrontation in Korea being transformed into an open military clash.

Today very much depends on the place, which Korean problem occupies in the Soviet-American relations. In the evaluation of the possibilities of Soviet-American cooperation with the goal of reducing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it is necessary to proceed from the calculation of objective circumstances, which determine the particular approach of each side, beginning with the

understanding on the part of the Soviet Union and the United States of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close relations simultaneously with the DPRK and the ROK. The USSR will not be able to interact with the US to such an extent, where it would threaten to break the alliance with Pyongyang. It is unlikely that the latter would make the policy of the DPRK more predictable and the situation on the peninsula less explosive. Whith this, it is necessary to keep in mind that the Soviet Union has at its disposal, as compared to the US influence on the policy of Seoul, fewer leverages on the DPRK concerning the concrete problems of the military-political situation in the region.

The USSR and the US are objectively interested in stabilizing the situation in Korea, ensuring there a stable peace. And this goal should be the priority in relation to all other problems, surfacing from political, economic, and ideological aspirations of the countries in the region, which are far from coinciding. Time has come to discuss such problems as reduction of different forms of military activity of the USSR and the US in Korea, including their participation in military manoeuvres, mutual limitation and further cessation of military assistance rendered to the Korean states, agreement on measures, taken to reject any form of aggression on the peninsula, and measures, taken to inform South and North leadership about the results of such agreement. Demonstration of Soviet-American consensus on Korean problem would sufficiently strengthen soviet and american positions in their dialogue with Korean leaders. In spite of tactical divergencies, the similarity of Soviet and American

long-term goals in relation to stabilizing the situation creates objective grounds toward searching for forms of bilateral interaction. Advancement to such interaction is possible through three directions.

First of all, along the lines of refusing direct opposition of unilateral actions of the USSR and the US regarding the DPRK and the ROK, and also regarding the region as a whole. This certainly should mean an open and clear account of Moscow's and Washington's opinion about the necessity of the subordination of particular interest groups in Pyongyang and in Seoul, to the interests of humanity as a whole and to the establishment of peace in Korea. The understanding of the joint goals of the USSR and the US should not only belong to a narrow group of specialists. In the end, not only Pyongyang and Seoul, the USSR and the US, but many other countries in East Asia are interested in the stability of the situation - above all, China and the countries of the ASEAN. At the same time, the realization of the objective aspiration of the Soviet Union and the United States toward the stabilization of the situation will strengthen the feeling of responsibility on the part of the governments of the DPRK and the ROK for their political actions and will be the source of pressure on them.

From the point of political psychology, the rejection of the habitual stereotypes of perceiving any Soviet action toward Korea as anti-American, and American initiatives as anti-Soviet, will allow to avoid unnecessary conflicts and will facilitate

preconditions for the creation of informal coalition of different forces, which aren't always in agreement, united by their interest to normalize the conditions in the region.

Second of all, Soviet-American interaction could be realized in the form of parallel actions. It would be useful to create constantly acting working groups, which would consist of experts and representatives of the corresponding departments of the USSR and the DPRK, as well as the US and the ROK. The formal goal of such groups could be the discussion of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area surrounding it, but the actual goal would be search for possibilities for conducting in this or that form direct dialogue between the North and South. Perhaps in their plans, the Soviet and American foreign policy departments, independently of each other, could foresee the formation of such groups or conduct regular working consultations with China. In perspective, it is not worth it to reject the creation of a body for analogous Soviet-American consultations.

Third of all, more effective, however complicated for an agreement in the form of cooperation between the USSR and the US could be the direct coordination of political courses in relation to Korea. If the USSR is ready, as it was stated during recent president Gorbachev visit to the US, to work with the US on the security guarantees for the Near East, then also Far East and Korea in particular should be included in the priority list of such agreements.

Taking realistic approach to the American military presence in the APR we are trying to persuade Washington to start arms control and confidence measures talks in the Pacific. Being

insistent on discussing these problems, the USSR proceeds from the fact that the USA could preserve the stabilizing character of American military presence on a lower level of military activity and lower scale of infrastructure as well. At the same time the US movement in this direction could sufficiently ease the Soviet domestic political considerations on the level of military deployment in the Eastern part of the country.

Though it's possible to expect that the USA will show also the understanding of difficulties and potential expenses of one-side Soviet actions in this direction. Soviet military presence in the Pacific - is first of all deployment within its national borders. American military presence is much more determined by the military bases abroad and broad naval presence in the Pacific. The USSR admits that the USA are primarily naval power, while the USSR - the land one, and that the scales of real economic interests of both countries in APR, which the military power protects, are incomparable.

Let's try to look at the problem from the other side. Suppose the USSR has made the one-side decision to withdraw its military presence in the APR in short terms. Will it improve radically the state of regional political environment?

First, it could appear that the traditional channel of influence on the Korean situation through military and political ties with the DPRK would be diminished. It's unlikely that its politics and status would be more predictable, and that growing American involvement in the situation behind rational frames would be less possible.

Second, elimination of the Soviet counterbalance to American military influence could cause the growth of anxiety in the PRC. It's difficult to predict its actions because of the political situation in this country, but at any rate one can't exclude the growth of willingness of the PRC to fill the vacuum in north-eastern regional subsystem.

Third, it's difficult to foresee all possible reactions of Japan to this shift in regional balance of power. There is a strong connection between "Soviet threat", "security treaty", and economic contradictions between two countries. Sudden elimination of one of these elements could cause serious problems in the American-Japanese relations.

At last, fourth. The USA are being already opposed by anti-Americanism in the APR. The Soviet withdraw from Pacific military structure could provide new rise of worries and doubts about American intentions in so called third world, which more or less prefers to balance between confronting powers feeling themselves more independent because of that.

I wish to stress that it's definitely desirable that Soviet military presence in North-East Asia should be frozen and reduced. The difficulty is that after some stage this process couldn't remain unilateral, without producing the image of our escape from Asia, capable to explode all fragile regional balance. It would be more wise to speak about step-by-step and proportional replacement of Soviet military presence by economic and political one. And though the improvement of our economic positions in the region is at the first place Soviet domestic problem, it goes beyond the framework of national concerns.

We couldn't find out more general solutions on disarmament issues in the APR without any concrete and palpable achievements in arms reduction in the region. The possible ground for searching such agreements could become the settlement of Korean problem, that has not only political, but military dimension as well. Besides, both the USSR and the US aren't interested in splashing the conflict in this area, and one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that most of the forces located here have pure subregional role, i.e. they are designed only for the use on the Korean peninsula. In connection with this, withdrawal from the peninsula any types of weapons, that could be used outside subregional theatre, would sufficiently ease the search of new forms of arms control here. If it would be possible to find out mutually acceptable consensus on that, the process of reducing level of Soviet and American military obligations should start. It will be important not only for the settlement of the Korean crisis, but also for regional negotiations on arms control. Confidence-building measures could become the subject of Soviet-American dialogue and multilateral negotiations as well. The USSR without any kind of reservations is ready to start serious talks on the problems of nuclear, missile and chemical non-proliferation in the APR.

The Soviet-American interaction could be very important for the sake of nuclear nonprolife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issue was on the agenda of the Soviet-American negotiations during Shevarnadze-Baker meeting on September 1989 in Wyoming. The US Secretary of State asked his Soviet counterpart to persuade Phyongyang to join the IAEA' control mechanism. In accordance

with its NPT obligations, which the DPRK signed in December 1985, the IAEA inspectors were permitted to visit two nuclear reactors, which had been bought from the USSR in the 60-s. The IAEA representative stated that they had no information about any other nuclear installations, though the US possesses some information from the satellite that 60-MW Calder Hall magnox type reactor, which was built by the DPRK after British version of 1956, is already operating in Yongbyon (60 kilometers from Phyongyang). In accordance with the American information, the reprocessing plant is under construction in the vicinity of the reactor. Such type reactors produce not only energy, but raw materials for defence industry as well (Nuclear Fuel, April 3, 1989, p.5).

With a deep understanding of the necessity to have sufficient evidences that there is no nuclear prolife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re is Soviet-American consensus on that) it is obvious that any problems of nuclear control could be solved much more effectively if the USA withdraw its nuclear weapons from Korea. Development of detente trends which may lead to the certain consensus on preserving stability in this region will definitely diminish the role of the nuclear weapons in Korea. Even from the pure military view it is obvious that the use of nuclear weapons in such small and dense populated area seems to be suicidal. In case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will make decision to withdraw nuclear arms from Korea it will eliminate many arguments against confidence bulding measures implementation

on the peninsula and will give to the Soviet Union strong argument for its efforts to persuade North to join detante process.

The USSR and the DPRK are allies and we always adhere to the treaty signed in the 1961. Today our evaluation of the events in Pyongyang is changing but we are sure that our' normal relations with the DPRK will help to preserve stability on the peninsula. The USSR supports such positive proposals, initiated by the DPRK leaders, as transforming the Korean peninsula into a non-nuclear zone, limiting in the years 1988-1992 the armies of the North and the South to one-hundred thousand persons, with the corresponding gradual evacuation from South of American troops and their nuclear arsenals, conducting trilateral negotiations between the US and both sides of Korea, military and political consultations of the North and South leadership. The main precondi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se ideas should be the willingness of all countries concerned to discuss them in sincere and interested manner. The US' rejection to develop dialogue with the North won't promote easing of tension on Korean peninsula. Sharing the aspirations of Korean people for the unification, the USSR - who is together with the US historically responsible for the split of the country - should do it's best to ensure the development of unification in peaceful and realistic way.

According to the statistics the relations between Moscow and Phyonyang continue to develop successfully. The USSR occupies one third of the DPRK' external trade turnover. The USSR now provides technical assistance for 10 construction projects, and in a whole the DPRK has more than 70 installations built with the

Soviet help. Some agreements were also signed to develop joint ventures, direct industrial ties and industrial cooperation, and to use national currencies for payments within this sphere. Specific measures for the development of cooperation in construction industrial installations in the DPRK and in developing coal deposits in the USSR were adopted on the 24-th meeting of Intergovernmental Soviet-Korean consultative commission on economic and scientific issues in April 1990. Longtermed program for developing economic and scientific cooperation between the USSR and the DPRK till year 2000 is prepared for signing. Cultural relations, based on a plan of cultural cooperation for 1988-1990, are developing successfully. At the same time there are a lot of serious problems in our economic cooperation due to the difficulties in both economies.

Using our experience of the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DPRK and that accumulated from our short contacts with the South it's high time to start thinking about the possibilities of applying transkorean elements to these forms of cooperation. I mean the possibilities for the USSR and both Koreas to participate in economic projects, to find new forms of cultural cooperation between the peoples of the USSR and Korea. As a concrete proposal I would suggest to organize the international peace marsh from Phyongyang and from Seoul to Panmunjom, finishing it by a rally of unity and peace in the DMZ. In case this idea will be supported by South, the Soviet Peace Committee, is ready to propose this idea to our colleagues in Phyongyang.

Speaking about political interstate relations between the USSR and the DPRK, they could be characterized as friendly with non-interference into internal affairs of each other, but much of what is going on in the DPRK evokes critics from Soviet public. It is becoming obvious after the events in Eastern Europe that if the policy of the DPRK leaders is associated with Soviet support, than in future the USSR would become morally responsible for some of the aspects of this policy from the point of view of Korean public. Regretfully, our official relations with the DPRK froze at the level of "monolith unity", which is explained not only by the stable outlooks of Phyongyang leaders, but by preserving in the USSR some kind of embargo on objective estimates of what is going on in the DPRK. Up to our press editors, reprinting of the articles published in Phyongyang papers proves the new achievements of our glasnost, though it's high time now to confess, that not everyone in the USSR and not always approve the politics of "great and beloved" leaders.

I am very glad that we started dialogue with the South, but at the same time I am quite sure that it should be balanced by the new steps in the development of our relations with the people of the North. Isolation from the outside world is the most sufficient obstacle on a way of any political and social changes in the DPRK, which could lead toward democratization of the society and return it to the human values. That is why in spite of all difficulties all parties concerned with the Korean affairs should try all chances to involve the DPRK leaders and its people in the system of civilaized international relations. Only dialogue will open way to stability and to unification.

*

This summer we commemorate the fortieth anniversary of the start of Korean war which brought national tragedy and consequences of which are still alive among people of Korea. Even today there are some discussions about the responsibility for the outbreak of the war. It is more or less clear who made the first shot. According to the Li Sang Cho, who during the Korean War was deputy Chief of General Staff and headed North delegation at the armistice negotiations in Panmunjom "it was a well-prepared invasion by the North Korean army. Shortly before the start of hostilities, the main strike force was put on full combat alert, under disguise of military manoeuvres, and the mobilized divisions were given precise direction of onslaught: South". Li Sang Cho, who in December 1956 defected to the USSR being DPRK ambassador in Moscow and now lives in Minsk, in the article published in "Moscow News" and titled "Stalin Approved Ki Il Sung's Order" is saying that "Kim Il Sung was the actual mastermind behind the war of "national liberation" and he indeed consulted Stalin about it".(Moscow News N.27,1990)

At the same time there are evidences proving that Singman Rhee was preparing for the war against North. On June 19, 1950 in the presence of John Foster Dulles and small group of State Department aides who visited Seoul he asked the Americans for promises of support should he strike North across the thirty-eighth parallel in the coming months.(FRUS 1950, Vol. 7, pp.107-109.)

It is more or less clear that the tension on the peninsula was very high and both sides were ready to start the war. That is why it is very important for the sake of national reconciliation to publish all documents of that period and to show who and to what extent were responsible for the war. Without real confession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to start new period of history and example of Germany clearly shows it.

Wall dividing two parts of Korea is longer and higher than fallen Berlin wall, but today it is clear that even 800 thousand tons of cement and 200 thousand tons of steel used to erect this 240 km. wall will never prevent the unification of Korea in the form suitable for people in the North and in the South. The problem of unification and of easing military and political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could be solved on a basis of developing broad spectrum of contacts between two parts of Korea, going along with positive tendencies of detante in the APR. These demands creative reevaluation of european experience in detante and easing international tension; creating specific Pacific structures for political, military and economic security; including Pacific security issues in the agenda of the Soviet-American talks. We couldn't speak about genuine detante and global peace without providing security in Asia and on the Korean peninsula.

東西和解와 韓半島 統一展望

다케사다·히데시
(日本 防衛廳 防衛研究所)

1. 相互不信

蘇聯·東歐의 變化後 歐洲가 獨逸統一을 향하여 초읽기에 들어간 지금 韓半島에서는 南北對話가 시작되었다.

南北韓 사이에서는 7월 3일 南北總理會談을 위한 豫備會談이 5個月만에 開催되었다. 그 후, 總理級會談, 汎民族大會, 國會會談의 開催에 대하여 活潑한 움직임이 있어, 한때는 急速히 南北對話가 進展될 것인가에 視線이 集中되었다.

總理級會談에 대해서는 7月 26日 雙方이 板門店에서 열린 豫備會談에서 合意書를 交換했다. 會談의 名稱을 南北高位級會談으로 하고, 議題는 「남북간의 政治·軍事的 對決狀態의 解消와 多角的인 交流·協力の 實施問題」로 하며, 代表團은 總理, 參謀總長을 包含하는 2人以內的 軍代表, 長·次官級の 合計 7人으로 構成되게 된다. 日程은 9月 4日 서울, 10月 16日 平壤으로 잡혀있다. 이것이 실현되면 總理會談은 45年間の 分斷史上 처음 있는 일이 될 것이다.

한반도가 통일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는 이유는 많이 지적되어 왔다.

예를 들면, ① 相互不信이 크다. ② 軍事力이 強大하다. ③ 韓國動亂을 經驗했다. ④ 過去 45年間に 體制가 完全히 다르게 되어버렸다는 것 등이었다.

그러나 한반도의 特殊한 構造를 考察하면, 한반도통일을 위한 基本的 條件은 의외로 동서독 이상으로 갖추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된다.

첫번째로, 相互不信에 관한 문제인데, 韓國과 北韓 사이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불신감이 정말 있는 것일까?

돌이켜보면, 南北對話의 歷史는 외국인들에게 있어서는 생각지 못한 事態의 連續이었다. 1972 月 7 月의 「7·4 共同聲明」에 이르는 70년대 초기의 對話開始와 中斷의 過程을 생각하면, 쌍방의 생각에서 確實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 이후의 南北對話의 歷史는 외부에서 보면 不可思議한 일의 연속이었다. 1983년 10월 비마의 량군에서 韓國大統領이 테러에 直面한 事件이 발생하여 남북관계는 일거에 冷却되었지만 겨우 6개월후인 84년 4월 로스엔젤레스 올림픽의 南北單一팀 構成協議를 위한 남북회담이 개최되었다. 그 후, 1984년 9월 북한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水害援助物資가 보내졌다. 이때의 救護米는 品質이 나빠서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변통한 쌀인 것처럼 보였지만, 한국의 일부에서는 「어려운 가운데서 마련하여 한국에 보내 주었다」는 북한에 대한 동정심마저 있었는데, 이것은 외국인인 나에게 新鮮한 것이었다. 우리들과는 다른 부분이 남북한간에는 있다고 하는 一例일 것이다. 1987년 11월 大韓航空機가 爆破되었을 때, 북한에 대한 한국의 여론은 惡化되었지만, 이듬해 8월에는 2년 8개월만의 南北會談인 南北國會豫備會談이 판문점에서 개최되었다. 그러한 變化의 速度는 남북 모두 대단한 것이었다. 韓國에서는 最近 數年동안 젊은이들과 학생층을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關心이 增大하여, 북한붐이라고도 할 수 있는 狀況이 일어났다. 1989년 3월부터 6월에 걸쳐 한국의 牧師와 카톨릭神父, 여대생이 북한에 들어갔을 때, 한국의 북한붐은 最高潮에 달했다. 이러한 붐에 대하여, 나는 日本에서 「왜, 한국보다 북한이 좋다고 생각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자주 받았다. 한국인의 동족의식의 情念的 側面을 보여주는 면이었다. 한국의 북한붐을 보고 있으면, 韓國人의 북한에 대한 감정이 非難, 批判, 嫌惡感이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북한에 拉致되었던 한국의 映畫監督夫婦가 북한에서의 생활을 그린 手記가 2년전에 출판되어 話題가 되었다. 그 手記 중에는 북한의 幹部가 모인 파티에서 북한사람들이 한국의 가요곡인 「동백아가씨」를 부르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러한 에피소드는 「북한의 한국에 대한 嫌惡感과 不信感」이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또한, 中國 吉林省의 朝鮮族自治州은 수 년전까지는 북한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음이 당연할 것이나 이 지역의 학자들은 한국에의 關心을 增大시키고 있다. 朝鮮族住民들이 한국의 생활과 노래, 상품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여러차례 報道되고 있다. 이 地域의 朝鮮족이 脫이데올로기의인 점은 南北對立의 樣相이 이데올로기의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暗視하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남북간에는 불신감이라고 하기 보다는 같은 同族인 相對의 實情에 대한 호기심과 아집적인 競爭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떨까? 북한의 主體思想도, 한국의 近代化路線도, 30년정도의 歷史이며 한민족의 동족의식은 한민족의 역사만큼이나 길다.

東西獨의 경우 書信交換이나 親戚訪問, 제한된 형태의 여행 등 1970년 이후의 교류에서 쌓여진 국민대화의 역사가 있었다. 相互不信이 없었던 점은 동서독이 統一로까지 나아가는 基礎的 條件의 하나였던 것이다.

韓半島의 경우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남북간에 교환되는 말투는 嚴格하지만, 그 근처에 불신감이 없다고 한다면, 독일과 똑같은 조건이 한반도에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血緣關係를 重視하는 儒敎文化에 익숙한 민족이기 때문에 離散家族의 存在는 남북 모두 중요한 국내적 문제라는 점에서 共通點이 있다. 이런 점에서 통일로의 에너지는 독일보다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로, 國際環境을 생각한다면, 한반도통일의 「潛在的 條件」은 독일보다도 많다. 獨逸은 第2次 世界大戰 開始에 대한 懲罰的인 의미로서 分斷되었지만 한반도는 冷戰이라고 하는 周邊諸國의 정치역학과 한반도 내부의 分裂에 의해 分斷되고 말았다. 이러한 역사를 생각하면, 「통일」이라고 하는 대의명분 앞에서는 한반도의 周邊諸國은 침묵할 수 밖에 없으며 한반도내에도 한반도문제는 독일과 다르기때문에 周邊諸國과의 상단같은 것은 必要없다는 생각이 있다. 일단 鐵道가 놓여지면 그 다음은 超特急이 된다. 한국이 韓·蘇關係進展에 보였던 것 이상으로 통일로 나아갈 것이다.

7월 12일 남북은 9월 上旬과 10월 中旬에 南北總理會談을 할 것에 示意했다. 남북총리회담때에 航空機를 사용하기로 합의한 것만 보아도, 韓國觀察者에게는 「어어하는 사이에」라고 하는 느낌이 든다. 남북간 대화는 독일통일의 움직임에 자극받은 남북의 統一民族主義의 에너지가 분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계속 膠着되고 있는 對話

한국의 反政府組織과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8월 15일을 전후로 개최예정하고 있는 汎民族大會와 관련하여 7월 20일 한국정부는 「南北民族大交流를 위한 特別聲明」을 발표하여 8월 15일을 낀 5일간 남북 쌍방의 사람들이 板門店을 통해 쌍방 어떤 지역에도 자유롭게 訪問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하여 북한은 同日 8월 15일 이전에 한국이 國家保安法을 철폐하고, 한국의 반정부조직인 全民聯과 全大協의 범민족대회참가를 보장할 것을 주장했다. 그리고 7월 26일 북한은 범민족대회의 개최준비를 위하여 관분점에 대표단을 파견했지만, 서울 회담장으로서의

이동과 숙박장소 등을 둘러싼 쌍방의 이견으로 인해 회담은 실현되지 못한 채 끝났다.

7월 19일 예정되어 있었던 國會會談 豫備會談은 북한이 한국내의 情勢를 이유로 잠시 연기할 것을 통고하여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事態展開를 보면, 1980년대의 남북대화와는 다른 점들이 있다. 첫째, 범민족대회에 한국민의 참가를 허가하는 南北自由往來를 提案할 정도로 한국 정부가 유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이 남북간의 軍事問題를 다루어도 좋다고 한 것도 한국의 變化인 것이다. 둘째, 북한측이 「開放」을 강조하게 되었다는 점인데, 이미 북한은 금년 1월 김일성주석의 新年辭에서 「南北間의 全面開放·自由往來」제안을 하고 있다. 셋째, 남북간의 대화제안을 보면, 어떤 제안에서 새로운 내용의 제안이 나오기까지의 시간이 짧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과연 南北對話는 진정으로 계속되고 있는 것인가?

이전부터 북한은 南北當局, 政黨, 社會團體가 참가하는 「連席會議」를 실현하여 한국정부가 빠진 한국의 反體制運動과의 공동행동을 주장해 왔다. 범민족대회는 그 중 하나이다. 그러나 한국은 한국정부가 빠진 대회를 경계한다. 범민족대회준비를 위한 평양에서의 제3차예비회담에 전민련이 참가하려는 計劃에 대하여 한국정부가 광범위한 단체가 참가할 경우에만 訪北을 許容한다는 方針을 명확히 한것도 그 때문이었다. 汎民族大會에 대한 南北雙方의 생각은 기본적인 점에서 처음부터 달랐다.

국회회담에 대해서도 북한은 연기통보를 하면서 「한국내에서 發生한 위기적 상황을 앞에 두고, 南北國會議員 사이에 정상적인 만남은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그 직전, 한국에서는 전체의원의 3/4을 점하는 與黨

民自黨이 臨時國會에서 法案을 단독으로 採擇한 것 때문에 혼란이 擴散되어, 全野黨議員의 사표제출문제까지 발전되었다. 북한이 국회회담 제의를 한국내의 與·野黨의 대립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을 북한 자신이 認定하고 있는 점은 중요한 것이다. 총리회담에 대해서 북한은 「8월의 범민족대회가 복잡하게 되면, 南北關係는 더욱 악화되어, 총리회담의 開催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평양방송」 7월 26일)고 하는 입장이었다. 9월의 총리회담은 남북간의 대립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범민족대회가 북한과 한국내 反政府組織의 共同開催라고 하는 形態로 실현된다고 하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었다. 실제로 남북대회는 膠着狀態에 빠져있다. 이러한 事態의 背景에 있는 쌍방의 생각은 어떻게 說明하면 좋을까?

3. 韓國의 樂觀主義와 對北韓 認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화가 再開되었다는 것과 구체적조건에서 쌍방이 合意한다는 것과는 당연히 별개라고 하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 이르면 韓國問題는 獨逸問題와 完全히 달라진다. 8월 15일 板門店에서 열리기로 豫定되어 있었던 범민족대회에 대한 여러가지 방식에 그러한 것이 나타나 있다. 총리회담에 거는 기대에 있어서도 南北은 상당히 다르다. 軍事問題 즉 駐韓美軍의 철수를 論議할 것을 주안점으로 하는 북한과, 최근 韓蘇關係의 進展과 國際的地位의 向上에 따라 자신감을 갖게 되어 북한에 군사문제를 論議해도 좋다고 하는 한국이 접근한 결과, 會談開催에 合의를 보게 된 것이다. 한국은 국제적인 軍縮무드를 活用하여 북한의 「핵」에 대한 牽制를 하고, 相互信賴造成을 위한 조치를 도입하려는 생각이므로 駐韓美軍問題는 피하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과 다르다. 南北對話에 臨하는

알맹이는 그다지 변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번대화의 경과를 보고 있어도 쌍방이 현재까지의 政策을 계속하려는 執念을 엿볼 수 있다. 각각의 事情이 있기 때문이지만, 우선 한국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한국은 「상대는 이런 중에 양보할 것이다」고 생각하는 樂觀主義者다. 최후까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것이 한국인의 美德이다. 그것은 한국內 政治鬭爭 속에도 있다. 우리는 韓半島를 「어둡다」고 하는 이미지로 보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한반도라고 하면 김대중事件, 랭군事件, 大韓航空機事件등을 연상시켜 버린다. 과거에는 이러한 사건들 밖에 報道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었는지 모르지만, 사실 韓半島는 상대방이 양보할 때까지 活潑하게 自己主張을 하는 樂觀主義者들이 서로 겨루는 場所이다.

한국은 「먼저 建設하고, 南北體制間 競爭을 통해 體制의 결말을 짓고 나서 統一問題를 議論하자」고 하는 정책을 취한다. 현재 한국은 「體制의 결말이 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對話에 적극적이다.

이러한 한국의 樂觀論의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對北認識이 있다. 첫째, 한국에는 南北對話가 시작되면 북한은 곤란해질 것이라는 判斷이 있다. 현재 한국은 “북한이 이제 세계의 緊張緩和의 趨勢나 一黨獨裁拋棄의 흐름을 거역하는 것은 不可能하며 改革, 開放의 파도에 저항할 수 없다. 한국과의 交流, 外國의 協力을 받아 들어서 經濟再建에 着手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간다. 북한은 한국의 「先建設, 後統一」 政策에 舍流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국의 낙관주의는 한국의 對北觀에 일관하여 흐르고 있다. 이번에 북한이 對話攻勢를 하는 의도에 대해서 한국정부의 고위층이 “김정일서거에로의 權力移讓을 위한 環境을 만들기 위하여 緊張緩和를 실현하고, 건설을 이제 바로하기 위

함이다.”고 말한 것은 그 한 예일 것이다. “權力承繼를 위한 것이라면 더욱 통일우선을 선명히 하여, 이제까지의 政策의 정확한 계승지리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본적 비관주의일지도 모르겠다.

둘째, 최근 한국의 對北政策의 근거에는 對北 자신감이 있다.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은 北方政策에 성공했으며, 東歐諸國과는 차례차례로 國交樹立을 실현했다. 소련과의 관계도 잘 進行되고 있으며 中國과의 관계는 더더기는 하지만 진전되고 있다. 國內적으로 民主化는 뿌리내리고 있다. 이러한 「한국은 成功했다」고 하는 自信心 때문에, 「북한은 곤란해 하고 있다」는 생각들이 增幅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북한은 힘(力)의 信奉者이지만 한국은 바람(風)에 대한 믿음이 있다. 바람이란 붐(boom)의 의미가 있는데, 한국민은 바람으로 韓蘇頂上會談을 실현시키고, 중국과의 관계도 개선하고 싶어하며, 나아가 일거에 북한의 開放을 재촉하려 하고 있다. 이는 한국내의 離散家族再會를 기대하고 統一을 바라는 輿論에 대치하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것이 현재의 한국의 생각일 것이다.

4. 北韓 - 힘의 信仰과 樂觀主義

北韓은 「우선 統一問題를 論議하고, 이를 위하여 統一에 방해가 되는 것을 제거하며, 그 다음에 建設을 하자」고 하는 方針이다. 이와 같이 統一을 우선시 하는 스타일(Style)은 이산가족 問題를 빨리 解決하고 싶은 韓國民의 심정에 깊이 反映되기 때문에 「우선 統一」이라고 하는 北韓의 政策은 때때로 그대로 韓國輿論에 反映된다. 北韓의 對南政策의 幅

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統一優先이라고 하는 政策에 더욱더 기우는 것은 그 때문인 것이다.

北韓의 軍事力도 이 점에서 說明이 可能할 것이다. 北韓은 힘의 신봉자이다. 힘의 核心에는 군대가 있다. 그러므로 北韓이 統一을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군대는 강대하게 된다. 그러나 군대를 實際로 使用할 것인가, 아니면 「緊張이 增大되고 있으므로, 統一에 곧 연결되는 對話를 서두르자」고 하는 바와 같이 心理적으로 活用할 것인가는 그때 그때의 조건에 따른다.

最近 北韓의 核 問題도 이런 점에서 說明可能할 것이다. 北韓의 軍事力이나 核에 관한 이야기는 두터운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이것이 事實인가 어떤가 하는 것 보다도 現在 北韓은 核을 가질만한 동기가 充分히 있다고 하는 것이 重要한 問題이다. 北韓이 왜 獨自의 核을 가질 동기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첫째, 北韓이 獨自의 核을 가지는 것은 主體라고 하는 民族主義에 어울린다. 둘째, 獨自의 核을 가짐으로써 蘇聯과 中國에 妨害받지 않고 對南政策 軍事戰略을 진전시킬 수 있다. 셋째, 核을 가지면 韓國民은 공포감을 가지게 된다. 즉 「이제 緊張狀態보다 對話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韓國의 輿論이 바뀔지도 모른다고 하는 心理的 效果가 있다. 넷째, 많은 공표자료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통상병력의 分野에서 北韓의 韓國에 대한 우위는 계속 縮小되어 이윽고 90年代 중반에는 대등하게 된다. 이때에 北韓이 對韓우위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주변諸國, 특히 蘇聯으로부터의 무기도입에 한계가 보이기 시작한 지금 核兵器에 의한 優위를 維持하고 싶다는 생각을 北韓이 갖는 것도 이상스러운 것은 아니다. 다섯째, 한국내의 輿論에 變化가 일

어나 방위체제에 틈이 생기고 美國의 對韓國지원이 지하된다면 核을 實際로 使用하여 統一을 하는 것도 可能하다. 여섯째, 北韓의 國內的 조건을 생각하면, 統一優先政策을 선명히 하고 있는 北韓의 現體制로서는 強力한 병기의 보유에 의해 「統一優先」政策을 國內的으로 合理化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일곱째, 軍事費를 절감하고 싶은 中小國은 核을 가짐으로써 통상병기에 지출되는 費用을 절약할 수 있는 利點이 있다. 일전의 휴스턴 정상회담에서도 北韓의 核燃料 再處理 施設의 調査에 관한 意見이 나왔다. 現在 「核」의 事實關係보다도 韓半島의 대립구조를 생각할 때, 그 동기라고 하는 점을 들어 核의 存在를 否定하기 보다는 肯定하는 材料가 더 많다고 하는 點이 世界가 염려스럽게 보는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北韓의 그랜드 디자인(Grand Design)은 南朝鮮革命을 통한, 主體思想에 의한 韓半島의 統一이다. 그러나 駐韓美軍이 있는 現在는 조건이 무르익지 않았고, 韓國軍의 近代化計劃도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北韓은 交渉에 의한 統一이라는 어프로치(Approach)에 重點을 두고 있다. 그러면 交渉에 의한 統一이라는 接近의 조건은 그렇게 好轉되어 있는 것일까?

여기서 北韓의 獨特한 對南인식에 대해 살펴볼 必要가 있을 것이다. 北韓의 韓國에 대한 見解에는 다음 3가지의 特徵이 있다.

첫째, 北韓이 「韓國의 政治는 變化하기 쉽다」고 하는 認識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日本人들에게 있어서도, 1987年의 大統領選舉 以後 韓國政治의 전개를 보면 變化가 심하다고 생각한다. 北韓은 어떤 때는 韓國政府를 交渉相對로 認定하고, 어떤 때는 否定하곤 하여 北韓의 韓國에 대한 태도의 變化는 劇甚하다. 이는 北韓政策의 變化가 심해서가 아니고, 北韓의 政策은 「韓國이 急變하여 北韓쪽으로 變할 것이다」고 하는 判斷에 根據

하고 있기 때문에 北韓이 韓國政府에 대해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對韓인식에 편견이 있다는 점인데, 北韓은 「南朝鮮 革命」의 기대를 갖고 韓國內 反體制勢力의 동정을 주시해 온 결과, 이러한 反體制運動을 實際 이상으로 擴大 解釋하는 傾向이 있다. 韓國의 輿論分裂이나 여야당의 대립, 여당내의 不協和音, 韓美間의 摩擦, 韓日間의 論爭이 擴大되고 있다고 보는 점은 거의 매일 「노동신문」이나 「평양방송」에서 보도되고 있다. 韓國이 基本的으로는 不安定하다고 北韓은 생각하고 있으며, 現在의 安定도 臨時的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번만 더 찌르면 부푼 풍선이 팽하고 터지는 것과 같이 한국도 과열할 可能性이 있다고 北韓은 보고 있는 것이다. 즉 北韓도 樂觀論者인 것이다.

셋째, 北韓은 「正統性」이라고 하는 점에서의 韓國에 대한 自信心을 가지고 있다. 韓半島는 유교문화지역이며, 이산가족을 解消하는 것이 南北共通의 과제이다. 그리하여 「統一을 우선적으로 論議하는 側이 韓半島에서는 正統派다」라는 주장이 北韓의 공식보도에 자주 登場한다. 北韓도 統一論議에 관한 한, 對韓國관계에서는 우위에 서 있다고 하는 樂觀主義的인 發想이 있는 것 같다. 論理的으로 우위에 있다고 하는 생각이 北韓側에 있기 때문에 韓國에 대한 지위가 불리하게 될수록 점점 統一優先政策으로 경도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北韓이 軍事力을 一貫하여 계속 증강시켜 온 것도 이러한 樂觀主義的인 統一優先政策과 關係가 있을 것이다.

現在 北韓은 「韓國內가 混亂스럽고, 反政府行動은 擴大되어 있고, 國會도 混亂스럽다. 美蘇對話무드와 軍縮무드에 의해 주한미군철수문제는 생각보다 더 빨리 실현될지도 모르겠다」고 보고 있을 可能性이 있다. 最近 北韓의 對話姿勢는

韓國內情勢와 韓美關係에 주목한 것이며, 南北對話에서 主導權을 잡기 위한 攻勢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南北雙方의 樂觀主義를 계속시킬 조건이 南北雙方에 갖추어져 있다. 韓國의 政治不安定과 北韓의 「安定」이 그것이다.

韓國內의 분위기가 急變하는 것은 最近 1~2年間 韓國內의 動向에 나타난 그대로이다. 韓國의 學生運動, 勞使紛糾나 駐韓美軍의 問題, 韓日關係의 動向은 北韓의 樂觀主義를 떠받치는 데 充分한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韓國이 民主化하면 할수록 韓國內의 政治抗爭이 熾熱하게 되어 北韓의 對南인식에 합치하는 材料가 韓國內에서 增加되어 가게 되는 것이다.

北韓은 主體思想으로 굳어져 있는 반면, 近代化 이데올로기의 洗禮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主體를 기조로 한 체제는 獨特한 個人崇拜를 수반한 종교적인 色彩를 띤 것으로 되었다. 이는 많은 北韓報告書에서 明白하게 나타난 그대로이다. 이러한 종교적 체질과 主體思想의 浸透는 異質적인 것을 排除하는 체질을 만들어 내게 되었다. 歐洲의 變化는 東歐諸國이 異質적인 것을 그 속에 包含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났다. (소수민족의 存在나 外部에서 東歐諸國에 들어오는 전파 등의 媒介를 통하여 輿論이 다양해 졌다.) 이러한 것은 北韓의 노선을 생각하는 데 重要的 것이다.

北韓은 異質적인 것과 만나도 東歐諸國처럼 危險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強大한 軍事力도 이러한 「安定」에 기여하고 있을 것이다. 主體體制와 情報統制를 생각하면, 北韓의 體制는 外部에서 보는 이상으로 「安定」되어 있다.

5. 固定化에 作用하는 周邊諸國의 政策

최근의 國際環境은 실제로 남북쌍방의 낙관주의를 돕는 결과가 되어 있다. 소련이 일전의 韓蘇非公式 頂上會談에 응했지만 이는 소련이 북한으로부터 한국으로 기울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소접근으로 소련은 對日카드, 經濟利益, 對美관계에서의 잇점, 韓美관계의 龜裂 그리고 북한의 開放化 등등의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소련은 시베리아 개발을 서둘러 그 성과를 국내에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한국의 풍요로움은 충분히 매력적인 것이다. 그러한 소련이 主體思想을 좋아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소련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히 손을 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1980년대 후반의 對北軍事援助를 통하여 영향력을 강화시킨 소련은 이번에는 부품의 공급을 통하여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계속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미그 29가 대표적이지만, 제공한 병기가 고도로 복잡하면 할수록 소련의 對北영향력은 계속된다. 1961년 7월에 체결된 朝蘇友好協力相互援助條約은 지난 7월 5일까지 쌍방으로부터 별다른 통고도 없어서 5년간 자동연장되었다. 이는 소련의 對北배려의 한 예이다.

또한 8월에는 소련의 군함이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며, 양국의 공식적인 軍事交流관계에서 변화는 볼 수 없다.

고르바쵸프 서기장이 1988년 9월 그라스노알스크연설에서 「韓半島情勢는 복잡하다」고 말한 것은, 이러한 남북쌍방에 대한 리스크(risk)를 고려한 즉 선택폭이 좁은 정책의 어려움을 토로한 것이다.

이후 북한의 동향은, ①김일성주석체제가 개방도 하지않은 채로 계속된다. ②김정일서기에 이르러 변화하여 개방을 한다. ③힘에 의한 정권의 교대에 의해 개방한다. 이는 루마니아의 형태이다. ④김일성주석이 집권한 현

재, 계속하여 개방쪽으로 향한다. ⑤김정일서기의 시대에도 변화는 없다. ⑥평화롭게 김정일서기에로의 政權移讓한다는 것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어찌 되었건 소련으로서는 蘇聯依存的, 蘇聯離脫的이라는 양쪽의 가능성이 모두 있기 때문에 당분간 (한국과 북한 사이의) 「양다리외교(二股外交)」라고 하는 것이 본심일 것이다. 이러한 소련의 신중한 자세는 한반도의 膠着狀態가 계속되도록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韓蘇頂上會談의 실현에 깊숙히 관련되어 있다고 전해지지만 그 신의는 무엇인가? ①韓蘇會談을 성사시켜 開放政策으로 전환치 않고 있는 북한을 牽制한다. ②소련이 바라는 한소접근에 협력함으로써 소련측에 미국의 신세를 지게 한다. ③전체적으로 緊張緩和에 기여하여 비용이 적게 드는 동아시아의 安全保障體制를 구축한다. ④코콤(Cocom) 문제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한때는 한국의 北方政策을 둘러싸고 한미간에 摩擦이 있었지만, 그러한 한국의 北方政策에 협조하면서 진척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⑤한·미·소 3국의 連帶플레이를 가능케 하여 일본만이 이 지역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을 견제한다, 등의 여러 견해가 나오고 있다. 어쨌든 미국의 행동은 한국의 北方政策의 기반을 강화시키는 것이 되었다.

중국은 한소접근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지켜보아 왔다. 중소가 한반도를 둘러싸고 이해가 일치되어 있으면, 이러한 경계심은 불필요하지만, 북한을 둘러싼 중국의 이해관계는 소련과는 다르다. 중국은 동북부의 工業地帶를 갖고 있으며, 과거 朝蘇軍事協力관계의 진전에 의해 중국은 손해를 입은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소련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시켜 왔다. 작년 10월 김일성주석의 訪中, 올해 3월의 강택민총서기의 북한방문에 의해 양자의 관계는 개선되었다. 중

국에게 있어서 북한은 중요하며, 중국식의 開放政策을 北韓指導部の 崩壞없이
진척시키고 싶다는 것이 중국의 본심일 것이다. 따라서 한소접근에 대한 북
한의 反撥의 결과, 중국은 한층 북한 쪽으로 기울 수 밖에 없을 것이며
韓中관계도 한계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전개는 북한의 政策을 떠받치
고 있는 기반인 것이다.

즉, 韓蘇관계의 진전이 70년대의 構造(朝中緊密化)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금년 유엔總會를 앞두고 남북한의 유엔加入問題가 論議되고 있는데, 이것
은 한국의 北方政策과 結付된 문제다. 만약 한국이 單獨加入을 申請하면,
이것은 중국에게 한국과 북한중 兩者擇一을 강요하는 것이 된다. 중국은
拒否權을 행사할 수 밖에 없으며, 중국은 困難해질 것이나 한국의 對中貿
易에도 惡影響이 생길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加盟申請을 하지 않
을 것이며, 현재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申請하지 않는다는 暗默的인 이해
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韓中관계는 현상유지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韓蘇接近이라는 國際環境의 변화를 앞에 두고도 동구의
경우와 같이 소련을 괴롭힐수는 없을 것이다. 當面의 세계적 軍縮무드속
에서 북한은 軍縮에 역점을 두어 주한미군의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때마침 한국은 軍縮問題를 다루게 되어 있다. 여기에 북한의 樂觀主義가
계속될 根據가 있는 것이다. 베를린의 壁이 무너지면 김일성주석의 新年辭
에 38線의 障壁撤去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고, 緊張緩和무드가 擴大되면
緊張緩和에 중점을 두는 것과 같이 북한은 巧妙한 對南政策을 전개해 왔
다. 이같이 북한의 對南政策은 한국을 모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一点集中型
이며, 기민하고도 집중적인 매우 한국적인 스타일(style)이다. 이에 는 소

런이나 중국의 간섭이 끼어들 여지가 적다. 북한의 政策이 계속되는 것은 中蘇의 對北 영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6. 相互誤認

南北對話가 이번에 진척되는듯 하다가 도중에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확실하게 드러났다. 對話가 여기까지 진전된 것은 한국이 북한의 제안을 大幅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과거 한국의 水害에 대하여 救護物資를 북한이 한국에 제안하여 한국이 이를 수락하여 받아들인 적이 있었다. 그때의 狀況과 비슷하다. 북한은 한국이 수락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으나 한국은 수락했다. 한국은 수락함으로써 북한에 일보 더 다가가서 북한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汎民族大會豫備會談 經過에 나타나고 있듯이, 이번에는 북한이 일보 물러섰다. 이러한 북한측의 對應이 한국의 豫想밖이었던 것은 한국자신이 변모했기 때문이다. 한국이 「여러가지 條件을 생각해서 이번에는 북한도 양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樂觀하는 것은, 한국이 近代的인 經濟合理性에 根據한 關係組織을 갖고, 國際輿論을 주시하면서 政策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가진 한국은 「종래의 딱딱했던 대화자세는 이제 끝났다.」고 南北自由往來를 대담히 끄집어 내었던 것이다. 1960년대 이후 박정희의 近代化路線(先建設·後統一)의 마무리 시기라고 하는 생각이 한국측에 있었을 것이다.

한편, 북한은 최근 수년간 한국내의 「統一을 서두르자」고 하는 여론을 주시하여 政策을 세워왔다. 북한은 血緣再會를 강조한다고 하는 한반도의

전통적인 가치에 근거하여 民族感情에 호소하는 스타일이다. 감정의 힘을 빌어 駐韓美軍撤收의 환경을 만들고, 힘의 밀반침이 없어진 한국과 대화를 진전시켜 한국의 輿論을 統一優先支持로 誘導하면서 勞動黨規約에 있는 「主體思想에 의한 統一」로 나아가려는 政策이다. 이것은 한국이 변화하기 전 (國防近代化, 國際社會에서의 上昇, 經濟發展을 완료해 버리기 전)에 서둘러 해버린다는 생각이다. 최근 한국의 狀況을 보면서 북한도 한발을 들이민 격이지만, 이는 북한의 눈에는 「한국은 國內輿論에 밀려서 북한에 양보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는 생각과 어우러진 결과였던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誤認은 傳統主義에 선 북한이 변화한 한국의 政策을 끝까지 읽지 못했던 결과였다.

그리고 쌍방은 서로의 政策上的 核心部分을 볼때까지 서로 다가갔다가는 다시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기를 계속했던 것이다.

쌍방이 상대를 일시적으로 잘못 읽는 事例가 반복되면서 南北對話의 과정은 복잡성을 증대시키고 있지만, 남북간 膠着狀態의 構圖는 아무 것도 변하지 않았다. 이는 이번의 대화에서 더욱 확실히 드러난 게 아닐까?

이상과 같이 볼 때 서두에 말한 바와 같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만큼 統一의 障礙는 크지 않다. 한반도가 統一로 나아가는 條件은 獨逸과 비교해도 의외로 갖추어져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러하다. 이번의 南北對話가 象徵하고 있는 바와 같이, 當面한 韓半島 情勢는 의외로 膠着狀態이고, 本質的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반도의 변화는 1990년대 중반 이후, 北韓內的 변화와 함께 일어날 것이라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을 것이다.

DETENTE AND KOREAN REUNIFICATION

Hideshi Takesada
(The National Institute for
Defense Studies, Japan)

Mutual distrust

After the changes of the Soviet and East European situations, the schedule of German reunification sped up. In the Korean Peninsula the South-North dialogue was reopened. On July 1, preliminary contact for the prime ministers' talk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started after five months' interruption. After that several proposals were exchanged between the two Koreas on the prime ministers' talks, the pan national rally and Diet members' talks. Among them, on July 26, both Koreas agreed with each other on the schedules of the prime ministers' talks. The highest-ever level of official talk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as held in Seoul for two days from September 5. The second talk is scheduled for October 16 in Pyongyang.

Up to now many reasons why the South-North dialogue has not developed have been pointed out. For example, (1) they fought both fought each other in the Korean war. (2) There are many differences between them because of their long divided history, political systems, sense of values and economic conditions. (3) Both have strong military forces. The differences cannot be reconciled easily. (4) Surrounding countries have taken advantage of the Korean division and hostile rel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have been fixed.

But we need examine the mutual distrust between them. Is there as much mutual distrust as we think? The process of the South-North dialogue was a series of unexpected occurrences. In the early 1970s the dialogue started.

In July, 1972, the so-called 7.4 Joint Statement was issued. But in 1973 the dialogue was suddenly interrupted when the Kim De Jung incident occurred.

In October, 1983, the President of the South and his staff encountered terrorism in Rangoon. The relations of the two Koreas immediately became cool. But after that unexpected exchanges happened between them. In April, 1984, only six months after the Rangoon incident, the South-North talks for forming a unified team for the Los Angeles Olympic Games. In September, 1984 relief goods for the South were sent by the North. For foreign Korea watchers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stream of the dialogue for this period.

When the Korean Air Line incident occurred in November, 1987, the South Korean feeling toward North Korea became worse immediately. But not long after the incident, the preliminary contact for the Diet members' talks was held in August, 1988, after an interruption of two years and eight months. Why did both sides decide to start a dialogue then?

In South Korea in recent years interests in North Korea's actual conditions increased among South Korean young generations. A year ago suddenly there emerged a North Korea boom on campuses of South Korea. When a South Korean priest and a female student entered into North Korea from March to June, 1989, this North Korea boom in the South reached its climax. Why have wealthy South Korean people come to have a yearning for the North?

Considering this process of dialogue and development, there may be a specific dimension in the South-North dialogue. At least we can say what lies between the two Koreas is rivalry and curiosity rather than mutual distrust.

Since the 1970s the two Germanies have promoted interchange, e.g. exchange of letters, visiting of relatives, travel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re is

a long history of exchanges between the two Germanies. So in fact there did not exist mutual distrust when they started to talk about German reunification.

As I mentioned earlier, if there does not exist such strong mutual distrust between the two Koreas, there is in fact the same condition for reunification as in Germany. In addition to that, both are of the same Korean race which has a Confucian tradition which places great value on loyalty to blood relations. *Juche* thought ("self-reliance" or "self-identity") of North Korea and the philosophy of modernization as the ideology of South Korea have only been around thirty years. Confucianism has a much longer history. Both Koreas have common interests to end the division and to reunite the divided family. The potential energy for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vast.

In addition to it, considering the international circumstances, there is a more hopeful condition for the reunification of Korea than Germany. Germany was divided by surrounding countries which feared survival of a unified strong Germany after the second World War. On the other hand, the Korean peninsula was divided when the Cold War was intensified and inner disintegration became severe. In the German case, in order to promote the discussion on the reunification, the two Germanies needed an adjustment with the superpowers. But different from the German case, the surrounding countries will keep silent when the South-North dialogue on reunification begins.

Now we need to examine if the two Koreas are moving toward a reunification.

Optimism—South Korean stance

In July, South Korea proposed to let people in the South and North visit each other freely for five days around August 15. North Korea insisted on

holding a pan-national rally then. But it wasn't realized. Examining the South-North contacts which were held in July and August, we notice the following new elements which we couldn't see in the 1980s. (1) As shown by the fact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permitted its people to visit North Korea and allowed discussion of military issue with the North, South Korea became flexible, running the risk of stimulating 'North Korean boom' domestically. (2) North Korea began referring to the 'open door policy.' in January, 1990, Chairman Kim Il Sung made a proposal to promote the open door policy and free passage between the two Koreas. (3) Both Koreas made new proposals in a short time.

But every attempt at a dialogue shows that it is difficult to reach the concrete agreement between them. The South puts emphasis on confidence building and accumulation of exchange between them. This policy can be called the 'construction first policy' which was started by the late President Park Chung Hee. On the other hand the North puts emphasis on disarmament, withdrawal of U.S. troops from Korea and establishing the Democratic Confederated Republic of Koryo. Why does the dialogue have such a rough passage in this way?

South Korean is rather optimistic. They think that North Korea will finally make a concession. This optimism stems from the following three characteristics in relation to South-North relations.

(1) When the dialogue began, South Korea was apt to think that North Korea was at a turning point. That is because North Korea faces difficulties on all sides: the North Korean economy is in crisis, the country is internationally isolated, there are difficulties in domestic politics, and North Korea cannot

hold out against detente and perestroika anymore. And North Korea is seeking to perform a historic turnabout. North Korea has begun to join in the 'construction first, unification second' or 'confidence building first, unification second' policy, South Korea thinks.

This optimism lies in the South Korean image of the North. For example, when the South started the dialogue this time a South Korean high official said North Korea might decide to have a dialogue with the South to make a smooth transfer of leadership.

(2) The recent South Korean attitude stems from South Korean self-confidence. South Korea succeeded in opening official relations with East European nations. The South Korean image that North Korea is changing was strengthened by this self image that the South succeeded.

(3) South Korea believes in a *Palam*, a strong wind. It implies that she has power when she promotes Northern diplomacy, reforms relations with the PRC and the Soviet Union and establishes official relations with East European countries. Recent success in Northern diplomacy made South Koreans more optimistic in reforming South-North relations.

North Korean intention

The North Korean unification policy is the unification first policy. It means to discuss the unification issue and to get rid of the obstacles at first. This policy to hasten reunion of the divided families can appeal to Koreans.

In Korean society, because of the Confucian tradition, reunion of the divided family is important. The North Korean policy to appeal to end the present divided situation easily penetrates into South Korean public opinion. North Korea may think the unification first policy gives them an advantage over the South. So the fewer North Korea's policy options became, the more North Korea became inclined to be unification-oriented. The North showed a tendency to hasten discussion of military issues, especially the withdrawal of the U.S. troops.

The North Korean military can be explained in relation to this. In parallel with North Korea's inclination to be unification-oriented, the North Korean military became larger and larger. As the tension increased South Korean public opinion sometimes became flexible toward the North to reduce the tension. This power-oriented strategy that utilizes the military to hasten South-North dialogue can often be seen in North Korean unification policy.

The so-called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can be explained in this way. The numbers and actual conditions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hidden in a veil of mystery. But let me speak about the motivation of nuclearization of the North rather than its actual existence.

(1) Having nuclear weapons, the North can promote *juche* diplomacy without any interference from abroad, including the PRC and the Soviet Union. Nuclear independence gives North Korea the benefit militarily and politically.

(2) It also encourages nationalistic sentiment as does nuclearization in the Third World countries.

(3) North Korea can expect a psychological effect on the South. Massive weapons may stimulate South Korean public opinion to wish for a flexible stance

to North Korea. If so, North Korea may gain an advantageous position in South-North talks.

(4) As many experts pointed out in the field of conventional forces, South Korea is beginning to catch up with North Korea. In the mid-1990's the power balance of conventional forces may shift because of South Korea's rapid modernization of its military. North Korea will have to prepare to offset the foreseeable South Korean advantage in conventional forces.

(5) If the North acquired nuclear weapons, this strong weapon will contribute to maintain the domestic political stability, because it will rationalize the unification-oriented policy.

(6) Because of recent international circumstances and Soviet policy change, North Korea is finding it difficult to obtain weapons from the Soviet Union.

(7) Generally speaking one of the options to save on military spending for middle-power nations is acquisition of nuclear weapons, because nuclear weapons are cheaper than huge conventional weapons.

North Korea has not accepted inspection of its nuclear reactor. This has widened concern among the rest of the world about North Korea's nuclearization.

What is the reason why the North is unchangeable and keeps its unification first policy sustained by a strong military? Now let me point out the three North Korean perceptions of the South.

(1) On the South, North Korea has the perception that South Korean politics is changeable. The North often reports through its media that the atmosphere in the South can change as conditions change. For us it seemed to be most changeable especially after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1987.

(2) The North has a tendency to stretch the South Korean domestic

circumstance in her favor, because the North has continued to anticipate the revolution in the South and has fixed her eyes on anti-government activities in the South. *Rodong Shinmun* and *Pyongyang Broadcasting* often exaggerate the confrontations betwee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anti-government groups. This misjudgment has caused North Korea to continue its unification-first policy.

(3) North Korea seems to think that her policy to hasten the end the divided situation and to reunite the divided families is orthodox in the Korean peninsula, with its Confucian culture. In the official media of the North there often appears the term "people's orthodoxy."

Considering these, both Koreas are optimistic in relation to continuing their unification policies.

International circumstances

Recent policies of surrounding countries let both Koreas continue their optimistic policy.

In June, the Soviet Union agreed to hold a ROK-USSR unofficial summit talk. By approaching the South the Soviets might get (1) a South Korean card toward Japan, (2) economic benefit from the South through Siberian development, and (3) a South Korean card toward the North.

But after the talks, the Soviet Union noticeably consideration for the North. The Soviet media reported that there is no contradiction between

Soviet-ROK contacts and Soviet-DPRK friendship. In August, Soviet and North Korean warships held mutual friendship port calls. The other day when Soviet Foreign Minister Eduard Shevardnadze visited Pyongyang, he explicitly supported the North Korean unification policy.

In fact, the Soviet Union will continue to keep its influence over the North by supplying military parts which cannot be replaced by other nations, including the PRC.

We can expect one of various scenarios in North Korea's future. (1) The present political system will continue in the post-Kim Il Sun era, and there will be no change in North Korean policy. (2) The North Korea will adopt a reform policy under the Kim Il Sun regime. (3) She will adopt a reform policy under the next leader, possibly the son, Kim Jong Il. (4) A leader rather than the son will take over as Kim Il Sun's successor. In all case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North Korea will move away from the Soviet Union. So the Soviets may try to appease both South and North Korea for the time being. This Soviet realistic policy maintains the Korean situation's status quo.

The United States was said to be deeply concerned with realization of ROK-USSR summit talk. The real intentions of the US are (1) to pressure the North toward reforming. This can be called a South Korean card to the North. (2) To give an advantage to the Soviet Union, which wants to improve relations with the South. (3) To support South Korea's northern policy and South-North cooperation. The US supports a strengthened South Korean position vis-a-vis North Korea.

The PRC has been cautiously watching the ROK-USSR *rapprochement*. The interest of the PRC in the Korean peninsula differs from those of the USSR.

The northeast area of China close to the peninsula is strategically important for the PRC because of its rich resources. China cannot allow its close relations with the North to worsen. In recent years the Soviet military activitie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greatly influenced the PRC. So the PRC has been supporting North Korea. In fact China-North Korea relation is becoming closer as in the 1970s. In this sense the PRC has a limitation in developing the PRC-ROK relation. The ROK's United Nations entry issue is being argued. This is closely related to the South Korea's China policy. If South Korea tries to enter the UN, China would surely exercise its veto. The South Korea's trial would put China in a difficult position. At present therefore, there may be a tacit understanding between the South and China that the South will not try to enter the UN.

PRC-ROK relations are moderate and there doesn't appear to be a conflict between PRC-ROK relations and PRC-DPRK relations.

North Korea cannot blame the USSR for the development of ROK-USSR relations as it blamed East European countries when they normalized relations with the ROK. Now the South is coming to be positive about talking about arms control in Korea. For the time being, North Korea will focus on the issue of the withdrawal of US troops from Korea, appealing to the world that it is making an effort to bring disarmament to the Korean peninsula.

Considering these international circumstances, there are several reasons why South and North Korea remain optimistic about their own unification policies.

Mutual misperception

Why has the recent South-North dialogue advanced? The mutual relations which I mentioned above show the reason. South Korea approached substantially nearer to North Korean position, permitting discussion of the military issue, including arms control. North Korea, noticing the anti-government movement in the South, seems not to respect this flexible response of the South.

The South approached the North thinking that this time the North might make a concession. Because the South has a policy-making system governed by technocrats, the South analyzed 'rationally' the North Korean policy. Considering the international circumstances, the fall of the Berlin wall, Soviet perestroika, South Korean success in economic and diplomatic fields and so on, the North could not help approach the South, the South might think. By making a concession to the North, South Korea tried to persuade the North into starting talks on step-by-step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This can be called the 'confidence building first, unification second' policy. This means the South Korean unification policy has entered into the finishing stage of Park Chong Hee's 'construction first, unification second' policy, which has been followed since the 1960s.

But the North continued to insist on the same conditions, that is, to start direct DPRK-US talks, withdrawal of US troops and release of South Koreans who were arrested after returning from the North. As I mentioned earlier, the North seems to have an expectation that public opinion in the South is eager for direct contact with the North. The North might think that South Korea made a concession because it faces the offensive of 'unification first'

opinion domestically. This 'misperception' on the part of the North is because the North, which has been appealing to solve the divided family issue first based on the traditional values of Korea could not read South Korea's real intention.

Both have approached the point where they can see the real intention of the other side. After that both sides realized the difficulties in reaching an agreement.

Paradoxically, the recent South-North dialogue partly proceeded because of mutual misperceptions. In the long run, there are more advantageous conditions for unification in Korea than in Germany. But at present there are more difficult conditions in Korea than in Germany.

제 3 부

한민족공동체 회복과 남북협력

Restoration of the Korean National Community and
South-North Mutual Cooperation

韓半島 統一：現實主義와 理想主義

조지 F. 쿠나제
(蘇,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

I

韓國問題에 관한 諸般 分析中에 外國人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문은 역시 韓半島 統一에 관련된 問題이다. 첫째로 統一問題 自體가 다소 모호하고 어떤 意味에서는 이상하게도 共產主義 概念과도 類似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어느 누구도 問題에 대한 실체를 전혀 把握하지 못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진지한 態度로 이에 대해 言及할것을 고집해왔고 이에 따라 統一問題와 共產主義問題는 最近에 와서 무언가 열매를 맺는것 같이 보이기 시작했다. 분명히 어느 누구도 一般概念으로서의 그럴듯함에 의문을 가질 수는 없다. 각자의 判斷에 맡겨진 것은 統一의 正確한 方式에 관한 討論이다. 일단 이 討論의 場에 들어오게 되면 풍부한 美辭麗句와 論理, 이성은 副次的인 重要성을 가졌을 뿐인 오직 希望事項에 立脚한 思考로 이루어진 非合理的인 世界에 들어와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統一問題가 극도로 政治問題化 되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統一問題에 대한 接近은 항상 어느 一方에 편협되는 危險負擔을 가져야 한다. 심지어는 統一國家의 명칭역시도 廣範圍한 政治的 조작에 左右되고 있다. 一般的으로 편향된 結論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正常的인 方法은 어떠한 價值評價를 피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價值評價가 아니라) 나타나 있는 어느 사실을 整理하는 것만으로서도 非難받겠끔 되어 있다. 왜냐하면 全部는 아니더라도 사실의 상당부분이 政治的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慣例上 다듬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實際로 우리가 여기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은 극히 制限되어있다. 유일한 活路는 統一問題에 대해 전혀 言及치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바로 이 方法은 實際적으로 考慮될 수 없다.

南北韓 兩側의 統一에 대한 남치는 감정을 충분히 認識하면서 本人의 立場을 說明하고자 한다. 本人은 韓國國民의 統一에 대한 열망을 진심으로 尊敬한다. 그리고 이러한 韓國國民의 統一에 대한 열망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믿는다. 本人이 실제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은 一連의 實質的인 問題들을 무시한채 統一問題를 唯一의 問題로 생각하는 극단주의적인 見解이다.

現實적으로 지붕부터 建築을 시작할 수 있겠는가? 만약 우리가 단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이 可能하다고, 즉 그 경우와 그 建物は 絶對적으로 독특한 性格의 것이므로 그것이 可能하다고 主張한다면, 그말이 지성적으로 들릴것인가? 이 世上의 어떤 것도 자연스럽지 못한 일의 순서를 正當化시킬 수 있는 만큼 독특할 수는 없으므로, 나는 要求의 전부를 관철시키려는 政策이나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람들의 의도, 혹은 틀다에 있어서 어떤 것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DPRK : 이하 北韓으로 통일)의 基本的 立場에 同意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불행히도 韓國(ROK)의 立場 역시(北韓의 그것보다) 훨씬 더 說得力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물론 여기에서는 統一과 결부된 엄청난 어려움들이 더 잘 理解되고 있기는 하다. 그 결과 段階的 基礎위에서 統一에 接近하고, 또 조심스럽게 진척시키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분명히 나타나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비록 하룻밤 사이는 아니더라도 가까운 미래에 統一이 可能하다고 생각하는 똑같은 非合理的인 기식을 여전히 감지할 수

있다. 물론 政治는 미리 결정된 規則에 의해 벌어지는 일종의 게임이다. 그리고 統一에 대한 최소한의 입에 발린말을 하는 것이 韓半島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임규칙인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요컨대 두 개의 國家가 서로에 대해 단지 한걸음 더 가까워질 어떠한 蓋然的 전망도 없는 상태에서 統一된 韓國의 憲法을 立案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現實主義的인가?

나는 韓國의 國土統一院으로부터 이 세미나에 參加하도록 招請을 받고는 기뻐했다. 그러나 나는 진정으로 이 政府機關의 責任領域이 무엇인지를 把握하기는 어려웠다. 이 論文의 서두에 言及된 비유로 되돌아가 본다면,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도 共產主義省 (ministry of communism)의 設立을 考慮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농담은 미루어 두고, 우리가 여기에서 직면하는 것은 知的이면서도 同時에 政治的인 現實의 도전이다.

II.

그러한 도전의 知的인 部分은 統一된 한 國家의 現實的 形態의 開發로 나타난다. 그것은 그저 하나의 民族國家일 수도 있고, 아니면 두 國家의 聯邦形態일 수도 있다. 前者는 明白히 하나의 中央政府下에서 垂直的인 構造를 가진 경직된 形態를 나타낼 것이다. 물론 그 경우는 상상할 수 없다. 後者는 수평적 連繫를 지닌 보다 柔軟한 形態이다. 그러므로 實質的인 側面에서 수평적 連繫의 정도와 범위를 달리하는 아주 많은 聯邦 形態들이 있을 수 있다. 南쪽과 北쪽에 存在하는 두개의 相互 葛藤的이고, 실제로 兩立할 수 없는 體制들을 受容하기 위해서는 假設的인 聯邦形態가 다소 느슨해야 한다는 것은 충분히 理解可能한 것이다. 明白히 韓國의 경우에 있어서 提案되는 聯邦形態는 실제로 느슨해야 한다.

다른 한편, 아무리 느슨하더라도 聯邦은 하나로써 維持되어야 한다는 점

이指摘되어야 한다. 간단하게 말해서 한 聯邦國家의 두개 構成團體 사이의 連繫는 두개의 獨立的인 國家들 사이의 日常的 接觸 水準을 증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못할 때 그것은 결코 하나의 聯邦이 될 수 없을 것이다. 文明화된 世界에는 여러 連繫 形態들 — 經濟的, 政治的, 理念的 連繫 등 — 이 存在한다. 그러므로 하나의 聯邦에는 반드시 어떤 中央機關들 — 즉 政府, 立法機關이나 偉大한 指導者를 求心點으로 하지는 않더라도 聯邦의 創設趣旨가 되어있는 보편적인 事實을 中心으로한 다른 어떤 것 — 이 必要하다는 것은 當然하다.

이러한 事實을 銘心하면서 統一의 可能性을 면밀히 檢討하는 것이 實質的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第2次 世界大戰 後 韓國의 南北地域은 서로 아주 다른 方向으로 나아가도록 強요받았었다. 北쪽이 南쪽을 解放시키려 했던 悲劇的 試圖였던 韓國戰爭은 分단을 극도의 敵對感으로까지 尖銳化시키는데 一助했다. 그와같은 初期의 斷絶이 빚어낸 결과는 韓半島 內部와 주위 어디에서나 느껴 질 수 있다.

經濟發展의 領域에 있어서 北韓과 南韓은 전혀 별개의 世界이다. 活力的인 南韓과 停滯狀態의 北韓 사이의 간격은 날이 갈수록 擴大되고 있다. 從來의 一般論理에 立脚해 볼 때, 이 사실은 相對的으로 發展된 나라가 自身の 富裕한 同伴者가 축적한 技術, 資本力, 經營技術을 利用하고자 하는 當然스러운 희망만 생각한다면, 이것은 統一의 進도를 밝게하는 根據로 看做될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그것은 東獨人들이 西獨과 結合하는 것에 대해 그토록 熱狂的인 가장 큰 理由인 것이다. 솔직이 말해서 經濟적으로 不均等한 兩國間의 統一은 물론 弱小國에게 특히 有益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弱者의 劣勢와 縱屬性을 固定시키고 公式化할 것

이다. 이제 만약 이러한 經濟的 連繫 形態, 즉 不均衡과 結局에는 救護의 形態로 發展될 連繫形態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물론 그때는 經濟的 統合을 위한 現實的 展望이 存在하게 된다. 하지만 그것은 北쪽의 自矜心과 南쪽의 經濟的, 財政的 能力 모두에 相當한 負擔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現實的인 問題는 北韓과 南韓이 그러한 負擔을 감수할 準備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 대답은 否定的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事實은 經濟的 統合의 展望이 결코 순탄치 않다는 것을 明白하게 意味한다.

결국 수십년동안의 격렬한 競爭은 南·北韓 모두에 影響을 미쳤다. 그 자신이 競爭者(同伴者가 아니라)보다 삶의 모든 側面에서 優越하고 더 강하다는 것을 立證하려는 目標은 兩者 모두에게 있어서 적어도 統一이라는 目標만큼이나 重要的 것이었다.

다음으로는 政治的 連繫로 들어가 보자. 무엇보다도 우선, 어떤 公式的인 問題들, 예를들어 聯邦의 統合立法機關을 設置하는 問題에 集中해 보자. 물론 統一以後에도 北과 南에 獨自的인 政府들을 維持시키는 問題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 되더라도, 그들의 最高統合立法機關이 양쪽의 獨自的인 機關들보다 더욱 많은 權限을 行使해야 하며, 아울러 더욱 높은 地位와 尊重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 인식되어야 한다. 이와같은 條件이 遵守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不安定하고 自然스럽지 못한 聯邦의 產物로서 나타나는 遠心的 傾向들을 극복할 길이 없다.

그러므로 또다시 問題는 北과 南이 그들의 主權中 一部를 聯邦最高機關에 기꺼이 委任하려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물론 그 대답은 역시 否定的이다. 왜냐하면 심지어 그러한 機關을 選出하는 實現可能的한 방식조차 實質的으로 存在하지 않기 때문이다. 南韓의 人口 규모는 北韓보다 두배나 크

다. '1人 1票'의 公正한 원칙이 適用될 경우, 南韓은 北韓보다 두배나 많은 代議員들을 갖게 될 것이다. 南韓쪽 代議員들 전부가 韓國政府를 支持하는 立場을 견지하지는 않는 것이 確實하더라도 그러나 여하튼 南韓의 이러한 初期의 利點은 北韓側의 競爭意識을 감안할 때, 그들이 감내하기에 는 너무나 큰 것이 될 것이다. 물론 이와같은 교착狀態를 打開할 수 있는 어떤 方式이 提示될 수도 있다. 그것은 양쪽의 모든 政黨들이 자유스럽게 北과 南에서 選舉運動을 전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은 이데올로기의 자유로운 交換으로 歸結될 것이다. 아주 公正하게 볼 때 北韓이 그러한 競爭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南韓은 그와같은 일에 보다 준비가 잘 되어 있다. 물론 이말이 南韓이 이미 民主主義의 진정한 樂園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南韓은 黨과 政府가 여전히 모든 것을 統制하고 있는 北韓보다는 훨씬 더 多元적이고 民主적이다. 만약 北韓의 鐵拳統治가 현저하게 緩和되지 않는다면, 均等한 기회를 保障하는 選舉運動이 展開되도록 허용될 可能性은 어떤 식으로라도 存在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形態의 政治的 連繫들에 대해 논한다면 外交政策을 言及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假設적인 聯邦이 최소한 어떤 基本的인 外交政策 指針들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한 原則들 중 하나는 中立性이 될 것이 거의 確實하다. 中立이라는 것은 아주 有用하지만 또한 아주 모호한 것이다. 결국 그것은 단지 定義의 問題가 아니라 內容의 問題이다. 中立이 의미하는 바는 결코 明確하지 않다. 그리고 그동안에 北韓側으로부터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大韓民國이 共同으로 유엔 單一會員國이 되자는 새로운 提案이 있었다. 어느 때와 같이 그 提案은 사람들이 아주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으면, 매우 有益하고 實現possible한 方案처럼 들린다. 자, 이 論文

을 읽는 讀者들 중 누구라도 유엔에서의 單一投票權에 대한 北韓과 南韓의 合意를 誘導해 낼 수 있을 만큼 中立的인 問題들 중의 최소한 하나라도 생각해 낼 수 있는가?

假設的인 韓國〔朝鮮〕聯邦의 두 (構成)部分들사이의 政治的 連繫에 대해서는 이쯤 해두자. 그러나 考慮되어야 할 점은 훨씬 더 많다. 統一의 궁극적 열쇠는 물론 理念의 問題이다.

오늘날의 與件속에서 自由, 民主主義, 正義, 平等등 人類共通의 價値들은 여러 國家들에 의해 점차로 共有되고 있고, 진정으로 普遍化되고 있다. 어떤 統治體制, 人種, 그리고 宗教와는 상관없이 단지 하나의 自由, 하나의 民主主義만이 있을 뿐이다. 또한 그 위에는 오직 하나의 보편적인 福祉基準과 나아가 궁극적으로 未來를 향한 唯一한 길, 즉 人類文明의 進歩만이 存在할 따름이다. 國家들간의 진정한 차이는 基本的으로 統治形態나 理念의 차이에 있는 것이다. 理念路線에 따라 世界를 明確하게 구분짓는 方式은 점점 진부해져가고 있으며 또한 우리들이 바라는 바이지만 언젠가는 소멸되어 버릴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理解可能한 일이다. 그리하여 언제나 가장자리에서 운 좋게 存在했던 수렴의 傾向은, 다가올 未來에는 世界發展의 主流가 될 것이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이미 現實이 된 이러한 傾向이 韓半島에서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社會主義와 資本主義의 相互 認識에 있어서 낡은 形態의 제로섬게임을 볼 수 있다. 이것은 統合은 말할 것도 없고 北과 南의 和解를 향한 有用한 土壤로도 看做될 수 없는 영원한 敵對感의 基本的 源泉이다. 두말할 必要도 없이 스탈린主義的 社會主義 形態는 破産했다. 또한 效率的이면서 동시에 흔히 資本主義와 同一視되어온 것과는 本質的으로 다른 어떤 새로운 社會主義모델을 開發하는것

이 조금이라도 可能한 일인지의 與否는 물론 明確하지 않다. 따라서 적어도 오늘날 보여지고 있듯이 社會主義와 資本主義의 수렴이 均衡的일 것 같지는 않다. 두개의 社會體制는 서로에 보다 가깝게 接近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文明화된 基準들을 充足시키기 위해서는 社會主義가 훨씬 더 멀리 움직여야 할 것이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論理를 韓半島에서의 理念的 競爭에 適用시킨다면, 우리는 統一을 促進시키기 위해 훨씬 더 劇적인 변화를 겪어야 할 쪽이 北韓이라고 結論짓는 것 以外에 다른 어떤 代案도 갖지 못할 것이다. 한편으로 이 말은 實質적으로 統一이 北과 南 양쪽의 진정한 變化가 없이는 不可能하다는 말이다. 그러나 南쪽에서는 變化가 基本的으로 정도의 問題인 반면, 北쪽에서는 그것이 새로운 始作의 問題이다. 後者쪽이 훨씬 더 어렵고 時間이 걸리는 일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要約하자면, 가까운 未來에는 統一의 現實的 展望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韓國의 두 部分이 人種的 同質性外에는 어떤 形態의 連繫마저도 가질 수 없을 만큼 異質적이기 때문이다. 人種的 同質性도 결코 現存하는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은 아니다. 筆者는 韓國인들의 感情과 나아가 韓半島와 그 周邊에서 나타나는 輿論 形態들을 직접하게 考慮할 때, 이 냉혹한 現實을 정면으로 또 솔직하게 對處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

III

實質적으로는 政治的 側面인 統一問題의 知的 側面은 훨씬 더 복잡해 보인다. 우선 세가지 基本的인 問題들이 考慮되어야 한다. 첫번째 문제는 위

에서 記述된 條件下에서 統一의 政治的 可能性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이다. 두번째 문제는 兩側의 動機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세번째 문제는 당면한 未來에 무엇이 행해져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統一의 可能性은 여러가지 시나리오로 提示될 수 있다. 그 시나리오 가운데 軍事的 選擇의 可能性도 무시할 수는 없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격렬했던 北韓과 南韓 사이의 競爭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의 가설적 可能性이었다. 공정하게 볼 때 北韓의 非妥協的 修辭로 미루어 判斷컨데, 그들이 南韓의 '解放'에 대한 집착은 40年前에 비해서 덜 확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事實이 認定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北韓은 그와같은 모험이 成功할 機會가 거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北韓은 알려진 술한 政治的, 物質的 理由들 때문에 결코 南韓에 대한 全面攻擊을 開始할 立場에 있지 못하다. 또 蘇聯이나 中國이 그와같은 行動方式을 고무하거나 歡迎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明白하다고 確信할 수 있다. 그 점은 별도로 하고서라도, 經濟力과 技術力의 側面에서 南韓이 누리고 있는 優越성은 北韓으로 하여금 그러한 種類의 어떤 모험도 생각하지 못하게 할 만큼 확고하다.

또한 北韓에서 進行中인 核計劃에 대한 廣範圍한 추측도 存在하고 있다. 물론 여기서 어떠한 추측도 의심을 正當化시키기에는 충분하나 어떤 客觀的인 豫測을 뒷받침하기에는 그다지 충분하지 못하다. 여하튼 北韓이 國際 原子力機構(IAEO)의 規程을 遵守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北韓側의 軍事的 모험주의가 全般的으로 實行不可能하다는 것은 쉽게 豫測될 수 있다. 미치광이가 아니라면 누구도 아무런 所得없는 곳에 모든 것을 걸만큼 광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資本主義나 혹은 自由市場 社

會가 가르치는 가장 훌륭한 것 중 한가지는 어떤 行動方式의 이해특실에 대한 現實主義的 評價이다.

東歐의 政治的 與件의 극적인 轉換은 明白히 또하나의 統一 시나리오의 可能性을 提示하고 있다. 즉 獨逸問題와 유사한 어떤 事件이 있을 수도 있다. 獨逸의 統一은 오랫동안 전혀 不可能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그후 東歐에서의 共產主義體制의 붕괴와 함께 그것은 전혀 無에서부터 갑자기 實現되었다. 그러한 일이 韓半島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최소한 한가지의 差異는 있다. 基本的으로 北韓과 東獨의 體制를 단지 共產主義라고 해서 똑같은 식으로 規定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들을 獨裁體制라고 부르는 것도 역시 적당하지 않다. 우리는 北韓의 жест된 全體主義體制와 東獨의 다소간 보다 유연한 全體主義 體制를 구별해야 한다. 民主主義와 全體主義 사이에는 엄청난 差異가 있다. 또한 最終的 目標地點까지에는 獨裁的 統治라는 中間段階를 거쳐야 한다. 하나의 낡은 形態의 共產主義體制가 平和的이고 秩序整然하게 解체되도록 促進시키기 위해서는 優先 그것을 어떻게든지 獨裁政治(autocracy)의 狀態로 가져가야 한다.〔譯註：원자는 獨裁政治를 全體主義와 民主主義 사이에 位置시킬 수 있는, 全體主義보다 느슨한 政體로 把握하는 듯하나〕. 만약 이러한 事態展開가 東獨의 경우처럼 始作되지 않는다면 그 이행은 暴力的 蜂起의 形態로 나타날 것이 거의 確實하다. 이러한 移行形態는 루마니아에서 목격할 수 있었다.

北韓體制가 그 성격상 호네커體制보다 末期의 차우셰스쿠體制에 훨씬 가깝다는 事實은 두말할 必要가 없다. 그래서 北韓 體制의 붕괴가 가까운 未來에 發生한다면 그것은 暴力的이고 混亂스러운 것이라는 것이 나의 추측이다.

그와같은 붕괴의 結果는 確實하게 豫測될 수 없으며, 따라서 어떤 댓가를 치르더라도 회피되어야 한다.

中間結論을 내려보자면, 政治的으로는 그들의 既存 政治體制와 政策들을 그대로 維持하는 基礎 위에서는 南北統一의 機會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武力으로나 갑작스러운 變化의 結果로서 統一을 얻는 것은 不可能하거나 아주 달갑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다.

IV

그렇다면 兩側이 實現 가능한 問題로서 統一論議를 持續시키는 진정한 動機는 무엇인가? 이 論文의 以後 部分에서 나는 北과 南에서 明白히 고조되고 있는 大衆의인 感情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한 感情들은 차치하고서라도 끊임없이 統一을 호소하는데에는 내포된 수많은 政治的 計算이 있는 것 같다. 北韓에 관한 한, 즉각적인 統一을 主張하는 것이 人民의 모든 고난과 社會에 대한 엄격한 統制體制를 正當化시키기 위한 것임은 자명하다. 그것은 또한 南韓에 대한 北韓의 道德的 優越성을 主張하는 手段으로서도 寄與한다. 확실히 物質的 領域에서보다는 言語的 領域에서 競爭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 마치 北韓指導者들이 “우리는 더 가난하다. 그러나 훨씬 더 愛國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韓國의 動機에 관해서는, 나는 전혀 確信을 갖고 있지 못하다. 내가 할 수 있는 唯一한 解釋은 韓國政府가 이상하게도 韓國人들의 福祉와 결부된 것이 아니라 술한 言語遊戲와 결부되어 있는 愛國心 競爭의 함정에 빠져 버렸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물론 韓國의 立場에서도 어떤 實質的인 計算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전혀 不可能한 일은 아니다. 아마도 그

것은 北韓의 오랜 本能 및 韓國內에서의 潛在的 影響力을 抑制하려는 計劃과 어떤 關聯이 있을 것이다.

모든 關聯 當事者들이 韓半島의 극히 緊張된 狀況에 對處할 수 있는 效率的인 案을 決定하는 것은 물론 대단히 重要하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選擇들을 검토해야 한다. 過去의 낡은 시나리오 즉, 北과 南사이의 完강한 競爭의 單純한 持續이 더이상 可能하지 않음은 지금 當장 明白한 事實이다. 北韓은 지금 여러면에서 深刻한 危機에 처해 있다. 經濟는 停滯되고 있으며 理念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진부해지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北韓體制는 끊임없이 孤立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것은 단지 北韓의 同盟國들이 韓國과의 關係를 樹立하는데 아주 열중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러한 孤立의 훨씬 더 重要的 要因은 北韓의 스탈린主義的 社會主義 形態와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改革主義的 社會主義의 形態 사이의 接觸하는 間극이다. 확실히 이 後者의 社會主義의 形態는 그것의 國家別 類型上의 差異가 무엇이든지간에 낡은 도그마를 中心으로 하고 있지 않고, 實際로 名目上으로도 福祉國家, 自由市場, 그리고 民主主義라는 西歐的 모델들에 아주 가깝다. 그러므로 北韓 쪽에서 본다면 狀況은 매우 絶望的이다.

나는 北韓 體制보다 훨씬 더 온건한 體制라도 궁지에 몰렸을 때는 오히려 豫測할 수 없게 反應할 수도 있다는 事實을 指摘하고 싶다. 明白히 現實的 難題는 北韓을 어떻게 회유하고, 또 그들이 最終的인 孤立으로 빠져드는 것을 어떻게 防止하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한 目的을 위하여 일종의 이중적 接近이 提起될 수도 있다.

그것의 첫번째 意圖는 北韓으로 하여금 가능한 限 廣範圍한 모든 類型의 接觸에 持續的으로 參與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올해 7月 7日에는 蘇

聯과 北韓사이의 友好條約이 自動적으로 延長되었다. 이 條約은 直接的인 폐기通知가 없을 때 또다시 5年間 效力을 갖도록 되어 있다. 나는 個人的으로는 北韓의 政策과 理念에 대해 그다지 同調하는 편이 아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나는 이 條約을 維持하는 것이 蘇聯政府가 취해야 할 올바른 立場이라고 確信한다.

盧泰愚大統領이 천명한 北方政策도 北韓으로 하여금 孤立과 絶望에 벗어 나게끔 하는데 아주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물론 美國, 中國, 그리고 日本과 다른 모든 나라들도 北韓과의 모든 形態의 接觸을 維持함으로써 많은 役割을 遂行할 수 있다.

分明히 北韓은 적어도 適切하게 合理的인 편이 安全한 길이라고 느껴야 한다. 그것이 北韓이 가야 할 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單純히 北韓 體制가 오래갈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것이 窮極的인 目標은 아니다. 北韓이 變化하도록 자극하여야 한다. 이 특별한 目的은 軍事的 意味에서가 아니라 道德的 意味에서 강해짐으로서만, 그리고 北韓의 과도한 要求들에 屈服함으로써가 아니라 窮極적으로 그 體制에 眞實을 말해줌으로써만 달성될 수 있다.

또한 간단한 眞理는, 만약 北韓과 韓國 사이에 現在의 相互敵對感 대신 確固하게 자리잡은 健全한 平和的 共存이 없다면 統一이란 것도 단지 꿈에 불과하다는 事實이다. 蘇聯이 平和的 共存의 原則을 社會主義와 資本主義 國家들간의 關係에 適用될 수 있는 最高, 最上の 方式이라고 闡明했던 때들이 있었다. 그러나 基本的으로 그것은 眞實이 아니다. 實際에 있어서 平和的 共存은 國家 對 國家關係의 가장 低級한 形態이다. 그것은 보다 廣範圍하고 發展된 다른 모든 形態의 關係가 不可能한 것으로 입증될 때에만 適用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適用될 때도 關係가 停滯化되도록 容

認되어서는 아니된다. 정반대로 그것은 發展되고 풍요로와져야 하며, 窮極的으로는 모든 種類의 協力으로 充滿되어야 한다. 그 要領(trick)은 그저 서로의 存在를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相互 意思疏通하는 方法을 배우는 것이다. 實際로 平和的 共存은 그 自體로서 하나의 目標가 아니라 과도기의 實行可能한 手段으로 간주 되어야 한다.

統一은 現實 그대로, 卽 어떤 卽刻的인 行動보다는 인내심 있게 서로 再適應하는 長期的인 과정으로 看做되어야 한다. 再適應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前提條件은 相對方의 主權에 대한 南·北韓의 相互 認定이라는 點은 明確하다. 그러므로 어떤 意味에서 統一을 向한 旅程은 既存의 基準에서 볼 때는 一步 후퇴로 여겨질 수 있는 段階에서부터 出發해야 한다. 南北韓은 常識과 政治는 論理를 基準으로 해서 위에 敘述된 대로, 어떻게 統合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어떻게 平和的으로 共存할 것인가를 배워야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效率的인 共存方式은 獨自的인 主權國家로서 共存하는 것이다.

統一의 展望에 대한 이러한 理解가 正確하다면, 第3國들이 南北韓의 主權的 地位를 確認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措置들을 考慮하는 것도 권할만한 일이다.

筆者는 正確히 말해서 이와같은 考慮가 韓國과의 關係를 正常化하려는 蘇聯의 希望뒤에 있는 主要한 動機들 중의 하나를 대변하고 있다고 굳게 믿는다. 蘇聯과 韓國關係의 正常化는 韓半島에서의 平和와 安定을 促進시키는데 이바지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重要한 것은 冷戰的 關係 形態들과 最終的으로 결별하는데 있다. 또한 明白히 이것만이 現實에 있어서 그 過程이 아무리 길고 고통스럽더라도 韓國이 統一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UNIFICATION OF KOREA : REALISM VERSUS UTOPIANISM

George F. Kunadze

(Institute of World Economy &
International Relations, U.S.S.R.)

I

The most difficult part of any analysis of the Korean problems especially when presented by a non-Korean is of course an issue of unification. To start with, the issue itself appears to be rather vague and in a sense somehow strangely resembles that of communism: nobody understands what it is all about, but everybody insists on addressing it in a no-nonsense manner, so that both the unification and communism begin to look attainable just one of these days. Apparently nobody is expected to question the feasibility of the general idea. All is left to one's discretion is a discussion over the exact formula of unification. And once you entered this discussion you find yourself in an irrational world of ample rhetoric and wishfull thinking where logic and reason seem to be of secondary importance.

Also it should be pointed out that an issue of unification is extremely politicized. There is always a risk of being suspected of taking sides. Even a name of a unified Korean state is subject to extensive political manipulation. Generally speaking a regular way of avoiding the risk of biased conclusion is to shy away from any evaluations. But on the other hand one is sure to be condemned even by arranging whatever available facts, since many if not all of them are customarily trimmed to meet political standards.

So actually what we have here is a perfect catch-22 situation. The only winning move is not to touch upon the issue

at all, and that very move is practically not allowed. Being well aware of excess emotions on both sides I would like to explain my position. I deeply respect Korean people's desire for the unification. I am also convinced that this desire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permanently. What I really doubt is extremist position which singles out an issue of unification as the only one that matters, ignoring totally a whole set of real problems.

Can we realistically hope to erect a building starting from the roof? Will it be intellectually sound if we claim that it may be possible in just one case, since this case and this building are of an absolutely unique nature. Since nothing in this world is unique enough to justify an unnatural order of things, I suggest that something is seriously wrong with the maximalist policy or with the intentions of its backers or with both. That is to say that I do not agree with the basic position of the DPRK.

Unfortunately the position of the ROK does not look much more convincing. Here of course the tremendous difficulties associated with the unification are understood better. Consequently there is a declared readiness to proceed cautiously, to approach the unification on a step by step basis. But still one can not fail to notice the same irrational pretension of the possibility of the unification, maybe not overnight, but in the near future. Of course politics is a game played by predetermined rules, and to pay at least lip service to the unification seems to be the most important rule in the Korean peninsula. But is it realistic after all to try drafting a constitution of a unified Korean state in the absence of any feasible prospects for the two Korean states to come just one step closer to each other.

I was glad to receive an invitation from the National Unification Board of the ROK to take part in this seminar. But I really find it hard to grasp what is the field of responsibility of this government agency. Coming back to the comparison used in the beginning of this paper maybe in my country we should also think about setting up a ministry of communism. But jokes aside, what we face here is a real challenge, both intellectual and political.

II

The intellectual part of this challenge suggests a development of a realistic pattern of a unified state. It can be just a nation state, or a federation of two states. Apparently the former will represent an rigid pattern of vertical or upright structure under one central government, which is of course unimaginable. The latter is a more flexible pattern of horizontal connections. So in practical terms there can be quite a lot of federal patterns differing in the degree and scope of horizontal connections. Understandably enough a pattern of the hypothetical Korean federation should be somewhat loose to accommodate two conflicting and indeed mutually incompatible regimes existing in the North and in the South. Evidently in the case of Korea the proposed federation should be really loose.

On the other hand it should be pointed out that whatever loose the federation should be kept together. That is simply to say that a connection between the two parts of a federal state should exceed the level of normal contacts between two separate

countries. Otherwise it will not be a federation at all. In a civilized world there are different types of connections: economic, political, ideological etc. And it goes without saying that there must be some central organs of a federation - government, legislative body and others, united not necessarily around a figure of a great leader, but at least around a general idea of what is the purpose of this federation.

Keeping that in mind it is indeed helpful to scrutinize possibilities for the unification. After the World War 2 two parts of Korea have been forced to go into two distinctively different directions. The Korean war, this tragic attempt by the North to "liberate" the South, served to sharpen the division to the point of utmost hostility. The results of this initial separation can be felt anywhere in and around Korean peninsula.

In the field of economic development the North and the South are worlds apart. The gap between the dynamic South and the stagnating North wideness with every day. Under conventional logic it can be considered as a promising basis for the unification if only due to the natural desire of a less developed country to make use of technology, financial might, management skills accumulated by its wealthy partner. Incidentally that is the biggest reason why East Germans are so enthusiastic about joining hands with their brethren from the West. Put plainly the unification between economically unequal partners is of course especially beneficial for the weaker. But it doubtlessly serve to fix and formalize its inferiority and dependence. Now, if that pattern of economic connection, a pattern of inequality and in the final analysis of charity, is what is being envisaged, then of

course there are real prospects for economic integration. However it is going to be a terrible strain both on the North's pride and on the South's economic and financial potential. So the real question is whether the North and the South are ready to bear this strain. The answer seems to be negative. And that apparently means that the prospects of economic integration are not good at all.

After all long decades of severe competition have put their impact on both parts of Korea. The purpose of proving itself better and stronger than the rival (and not the partner) in all aspects of life is at least as important as the purpose of unification for both the DPRK and the ROK.

Next comes political connection. First of all let us concentrate on some formal problems, for example a problem of establishing joint legislative body of the federation. And of course it should be understood that whatever is said about keeping separate governments in the North and in the South even after the unification, their supreme joint legislative body should exercise more power, have more status and respect than separate organs of both parts. If that condition is not observed, there is no way to overcome natural centrifugal tendencies, a product of this uneasy and unnatural federation.

So once again the question is whether the North and the South are ready to delegate some of their sovereign rights to the supreme organ of their federation. And of course the answer is negative again if only because a feasible formula of even electing such an organ is virtually nonexistent. The size of population in the South is two times bigger than in the North. In case a fair principle "one person - one vote" is applied, the

South will have two times as many representatives as the North. To be sure not all of deputies from the South will stand to support the ROK government, but in any case the initial advantage of the South will be too much for the North to bear, given its rivalry spirit. A certain way out of this deadlock can be suggested. That is to give all political parties from both parts of Korea a free hand in running their election campaign in the North and in the South. That will lead to a free exchange of ideas. In all fairness it is unlikely that the North can win such a competition. The South is just better equipped for it. That is not of course to suggest that the South is already a true paradise of democracy, but it is much more pluralistic and democratic than the North, where the Party and the government still control everything. Unless this iron grip is loosened considerably there is no chance whatsoever that an equal opportunity election campaign may be allowed to happen.

Speaking about other types of political connection it is advisable to touch upon the foreign policy. Naturally enough a hypothetical federation should have at least some basic foreign policy guidelines. One of the principles is almost certain to be neutrality, which is very good, but very evasive. After all it is a problem of substance not just of definition. What is meant by neutrality is not at all clear. And in the meantime there is a new proposal fresh from the North, providing for the DPRK and the ROK to hold joint UN membership. And like usual it sounds very good and flexible unless one considers it in all seriousness. Now, can anyone of the readers of this paper think about at least

one issue neutral enough to facilitate the North and the South agreement on their Joint UN vote.

So much for the political connection between the two parts of a hypothetic Korean federation. But much more is to be considered. The ultimate key for the unification is of course the issue of ideology.

In present days conditions common human values of freedom, democracy, justice, equality are being gradually shared by nations, are becoming truly universal. Irrespective of a system of government, race and religion, there is only one freedom, one democracy. On top of that there is only one universal standard of well being and finally only one way to the future - the advance of human civilization. The real difference between nations is basically not in a form of government or ideology, but in the degree of freedom, democracy and prosperity they enjoy. Quite understandably a sharp division of the world along the lines of ideology is getting obsolete and, one may hope, is destined to disappear one day. So the tendency of convergence which has always been on the sidelines with good luck will become a mainstream of world development in the years to come. Unfortunately this tendency which is already reality elsewhere is not to be noticed in the Korean peninsula. Here we have an old fashion zero sum game of socialist and capitalist mutual perceptions. This is the basic source of permanent hostility which can not be considered promising foundation for the North and the South rapprochement not to speak about the merger. Needless to say stalinist type of socialism is bankrupt. And of course it is not clear whether it is at all possible to develop a certain

new model of socialism which can be both efficient and different in nature from what is customarily identified as capitalism. Consequently the convergence of socialism and capitalism at least as it is understood nowadays is not going to be symmetrical. Two social systems will have to move closer to each other. But socialism will doubtlessly have to travel much longer to meet civilized standards.

If we apply this logic to the ideological rivalry in the Korean peninsula we will have no other alternative but to conclude that it is the North which must experience much more dramatic reforms to facilitate the unification. Actually that is to say that the unification is not feasible unless there are real changes both in the North and in the South. But while in the South it is basically a problem of degree, in the North it is a problem of a new start. Evidently the latter is much more difficult and time consuming.

To sum up, there seem to be no real prospects for the unification in the near future simply because the two parts of Korea are too different to have just about any type of connection apart from ethnic identity, which is not at all enough to outweigh the existing difficulties. With due respect to the feelings of Korean people, and furthermore with due consideration to public opinion patterns developed i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this author is positively sure that the grim realities must be faced squarely and honestly.

III

The intellectual side of a problem of unification being as it is the political side appears to be even more complicated. There are three basic questions to be considered. The first one is what are the political possibilities of unification under the conditions stated above. The second one - is about the motives of both sides. And the last one, which is the most important of all - what is to be done in the immediate future.

1. The possibilities of unification can be presented in several scenarios. By doing so there is no way to ignore a military option, which is always a hypothetical possibility with the rivalry between the DPRK and the ROK as bitter as ever before.

In all fairness it must be admitted that when judged by its uncompromising rethorics the DPRK does not appear less committed to the "liberation" of the South than forty years ago. Nevertheless it is of course well aware that the chances for the success of such an adventure are close to zero. The DPRK simply is not in a position to launch an all-out attack on the ROK due to many well known political and material reasons. Sure enough it is absolutely clear that neither the USSR nor the PRC will encourage or welcome such course of action. And apart from that the superiority enjoyed by the ROK in terms of economic and technological might are solid enough to discourage the DPRK from any adventure of that kind.

There is also an extensive speculation about the nuclear program underway in the DPRK. Here of course any guess is good

enough to justify the suspicion and not good enough to back up any objective predictions. Any way it is most desirable that the DPRK comply with the regulations of the IAEA.

The total improbability of military adventurism on part of the ROK can be easily predicted. Nobody but a maniac is crazy enough to risk everything for nothing. And one thing which capitalism or just free market society teaches the best is the realistic evaluation of pro and con of any course of action.

Dramatic transformation of the East European political landscape apparently makes yet another scenario of unification a certain possibility. There can be some parallel drawn with the German issue. The unification of Germany has been considered absolutely impossible for many years and then with the collapse of the communist regime in the East it suddenly materialized seemingly from nowhere. For all we know that can also be the case in the Korean peninsula.

But there is at least one difference. Basically it is misleading to define North Korean and East German regimes in the same fashion only as communist. It is not also enough to call them dictatorships. We should distinguish between the brutal totalitarian regime in North Korea and somewhat more flexible totalitarian regime in East Germany.

There is a long distance between totalitarianism and democracy. And the journey to the final destination goes through the intermediate stop of autocratic government. To facilitate the peaceful and orderly departure of an old fashioned communist regime you have to somehow bring it to the state of autocracy first. Unless this development has already began as it was the case in East Germany the transition is almost certain to be in a

form of violent uprisal. This type of transition could have been witnessed in Romania.

Needless to say that the North Korean regime is much closer in character to the late Causescu regime than to the Honnecker regime. So my guess is that the collapse of the North Korean regime were it to occur in the near future can be violent and messy. The outcome of such a collapse can not be confidently predicted and consequently should be avoided almost at all costs.

The intermediate conclusion is that politically there are not much chances of the unification of two part of Korea on the basis of maintaining their existing political systems and policies. It is also impossible and (or) highly unwelcome to have a unification by force or as a result of a sudden explosion.

IV

What are the real motives then of both sides to keep insisting on discussing the unification as a plausible issue. In that portion of my paper I am not going to touch upon public emotions which evidently run high both in the North and in the South. Apart from the emotions there seem to be quite a number of practical calculations involved in the appeal for the instantaneous unification. Clearly as far as the DPRK is concerned the insistence on the immediate unification is designed to justify all the hardship of the people and also a system of rigid control over the society. It also serves as an instrument of claiming North Korea moral superiority over the South. Surely it is much easier to compete in rethorics than in the material field. It is as if the North Korea leaders were just saying: "We are more poor, but much more patriotic".

As for the ROK motives I am not sure at all. My only explanation is that the ROK government has fallen into the trap of competition in patriotism strangely associated not with the well being of Koreans but with the ample rethorics. On the other hand it is of course not totally improbable that there is also some practical calculation to the South stance. May be it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scheme of restraining the North old instincts and also its potential influence in the South.

It is of course of crucial importance for all parties concerned to determine what can be an efficient way of dealing with the extremely tense situ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To do so we must once again identify our options. It is immediately clear that the simple continuation of an old fashion scenario, that of rigid rivalry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practically is not available any more. The DPRK is in a grave multifacet crisis, its economy is stagnating, ideology is becoming more and more obsolete with every coming day. And on top of that the North Korean regime is constantly drifting to the isolation not simply because its allies are quite eager to establish relations with the ROK. Much more important ingredient of this isolation is the growing gap between the stalinist type of socialism in the DPRK and the reformist type of the socialism which is emerging just about everywhere. To be sure this latter form of socialism whatever the differences between its national types is not centered around the old dogmas and is in fact even by definition quite close to the western models of welfare state, free market and democracy. So the situation if viewed from the North is quite desperate.

I would suggest that when cornered any regime even much more lenient than that in the DPRK may react rather unpredictably. Apparently the real challenge is how to placate the North, how to preclude it from drifting into final isolation.

To that end a certain double track approach may be proposed.

Its first purpose will be to keep the North engaged in all types of contacts as extensive as possible. July 7 this year marked the automatic prolongation of a treaty between the USSR and the DPRK. With no abrogation notification in sight this treaty is going to be in force for another five years. Personally I am not very happy with the North Korean policy and ideology. Nevertheless I am sure that to keep this treaty is a correct thing to do for the USSR government.

The Northern policy as proclaimed by President Roh Tae Woo can also be very helpful to keep the North from isolation and despair.

And of course all other countries - the USA, China and Japan can accomplish quite a lot by maintaining all types of contacts with the DPRK.

Evidently the DPRK must feel secure to be at least modestly reasonable. That is the way it is.

But on the other hand the ultimate purpose is not simply to help the North Korean regime to drag on. It should be encouraged to change. And this particular purpose can be accomplished only by being strong not in a military but in a moral sense, by not bending to the North Korean excessive demands, and finally by telling this regime the truth.

And the simple truth is that the unification will be nothing but dream unless there is a sound peaceful coexistence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firmly installed in place of their present mutual hostility. There have been times when the USSR proclaimed the principle of peaceful coexistence as the best and highest formula to be applied to the relations between socialist and capitalist countries. Basically it is not true. In reality a peaceful coexistence is a lowest form of state to state relations. It should be applied only when all other more comprehensive and advanced forms are proved to be impossible. But even when applied it should not be allowed to stagnate. Quite on the contrary it should be developed and enriched, in the final analysis it should be filled with all kinds of cooperation. The trick is not just to bear each other existence, it is to learn to communicate. Actually a peaceful coexistence can be viewed as a plausible instrument of transition period and not as an end in itself.

The unification should be viewed as it really is - as a long process of patient mutual readjustment rather than as an immediate act. It is obvious that the absolutely indispensable prerequisite for the process of readjustment is the mutual recognition by both Korean states of the sovereign rights of each other. So in a sense a journey towards the unification should start with the step which can be identified as a step back by established standards of rhetorics. But as it has been stated above by the standards of common sense and political logic two Korean states should learn how to coexist peacefully before

thinking how to merge. And the most efficient way to coexist for them is to coexist as sovereign independent states.

If this understanding of the prospects of unification is correct it is advisable for the third countries to consider steps which can be instrumental in confirming sovereign status of both Korean states.

This author is firmly convinced that exactly this consideration represents one of the main motives behind the USSR desire to normalize relations with the ROK. The USSR-ROK normalization will be instrumental in promoting peace and stability in the Korean peninsula and what is most important in departing finally from the cold war pattern of relations. And obviously this is the only way to the unification of Korea whatever long and painful this process may be in reality.

軍事問題와 한민족공동체 形成

케빈 N. 루이스
(美, 랜드研究所)

제 2 차 세계대전후 남북한이 理想路線에 따라 분단되고 1950 ~ 53년의 한국전쟁을 통해 그 분단이 暴力으로 표시된 이래 한민족공동체의 회복은 남북한의 최우선 목표가 되어왔다. 이 목표는 한국전쟁에서 처럼 失敗로 끝났지만 侵略的인 북한의 試圖의 재판을 挫折시키기 위해 유감스럽게도 필요한 잘 武裝된 그리고 緊張된 경계태세와 共存해 왔다. 적어도 두가지 요인 - 적절한 抑止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들과 북한의 政治體制에서 비롯되는 非妥協的 태도와 의심의 분위기 - 이 대부분의 冷戰期間동안 통합과 나아가서는 통일로 향한 의미있는 단계에 도달하는 것을 妨害해 왔다. 그러나 최근의 한국의 政治·經濟的 노력과 북한의 고립의 심화, 韓國分斷이 歸屬하고 있는 세계적 冷戰의 退潮, 동서독의 통일로 향한 역사적 진전 등을 미루어볼 때 한민족공동체로의 현실적이고 의미있는 진전이 가능할 것 같은 희망이 보이고 있다.

한민족공동체 문제는 - 의미, 목적, 사회경제 기दार구조등 - 廣範하고 복잡한 것이다. 더우기 한민족공동체는 軍事的, 戰略的 그리고 相關문제들이 총체적 방정식에 하나의 변수로 되어있는 論題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본 論文에서는 이 변수를 보다 큰 脈絡에서 본 문제들에 관해 論하고자 한다. 또 본 論文은 필요에 따라 많은 문제를 提起하고 몇가지에만 답하고자 한다. 그러나 한민족공동체 문제에 관한 전반적 論題의 발전에서는 이것들은 매우 유용할 것이다. 이 論題를 구성하고자하기 이전에 문제의 範圍가 檢討되어져야만 한다. 여기에는

몇가지 論理的 小論題로 분류될 것 같다. 즉

1. 전쟁을 防止하기 위한 적절한 억지 /방어 局面의 유지, 이것은 한민족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어떤 다른 절차가 進行되든지 간에 목표가 될 것이다.

뒤따를 特定政策들은 매우 특화된 形態를 띠게 될 것이며 한민족공동체 戰略의 나머지 부분에 依存하게 될 것이다. 덧붙여 한국 미국간의 政治的 軍事的 關係의 자연스러운 발전에 적절한 현실적인 調整이 어느 경우에도 발생하게 될 것이다.

2. 戰爭의 비용 /위험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조치의 추구 ;평시의 적극적인 軍備競爭에 부수되는 危險과 부담의 緩和, 이 목적은 주로 세가지로 나뉜다. 첫째 최소비용으로 가장 安定되고 적절한 국민적 支持를 얻는 적당한 억지력의 유지, 둘째 紛爭이나 위기의 발생시에 對應하기 위한 보다나은 立場의 유지, 셋째 歷史的으로 남북한 關係를 특징지워온 障礙를 뚫을 수 있는 展望을 보일 다른 가능성이나 軍縮問題를 신속히 活用할 수 있는 극적인 발전에 대한 대비와 동북아시아를 緊張緩和와 協力促進이라는 보다 큰 세계적 範疇로 보다더 완전한 接近

3. 窮極的으로 북한의 政治的 상속(김일성 死後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의 損益 展望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對策樹立

4. 國家的, 同盟的인 배경에서 韓·美 兩國이 壓力과 강제와 對抗해 나가고 그들의 範圍 및 보다 큰 構造下에서 다른 戰略的 선택을 합리화할 수 있도록 許諾하는 것. 다른 政府機關 및 사회기관들과 함

계 움직이는 軍事制度가 한민족 共同體로 향한 운동을 促進시키는데 있어서의 역할의 고양

6. 統一韓國의 한민족공동체 이후 展望과 필요충분적인 軍事能力이 부합되도록 形態가 무엇 이든간에 단기간 軍事選擇의 樹立. 예를 들자면 통일로의 과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질때 統一韓國의 안보적 要求는 무엇인가? 統一된 韓半島에서의 군사역할은 무엇인가? 통일한국이 가지는 즉각적인 자위 이외의 公約은 무엇인가? 통일한국과 他國間의 특히 強大國間의 관계는 어떤것인가 등이다.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고 최소한의 問題點을 발생시킬 방식으로서 한민족공동체 形成을 향한 적절한 진전의 展望은 모든 이러한 문제에 관한 우리들의 최상의 생각을 反映시킬 필요가 있다. 명백히 이것은 다소과장된 주문이다. 예를들면 몇가지 목표는 상충된다. 또 다른것들은 政治的인 결단이나 다른 문제들에 依存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 다른곳의 어떤 발전이 敎訓이 된다면 운명이라는 것이 의미있는 한민족공동체로 향한 길에서 스케줄, 순서, 조치들의 本質들을 構想하는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것 같다. 사실 매우 다른 下部의 軍事編制, 態勢, 概念들을 創出할 다양한 한민족공동체 시나리오의 등장에 많은 잠재적 분기점이 있다.

예를 들면 統一韓國이 강한 中立的 성향에서 통일이후 최소한으로 武裝된 國家防衛體制를 健全한다면 한민족공동체 발전의 다른 특징에도 불구하고 다음은 주요 軍縮構想에 대한 강조가 論理의 순서일 것이다.

만일 統一韓國이 한민족공동체 形成이후보다 包括的인 군사체제를 원한다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종래의 軍縮過程을

복잡하게 하거나 그것과 모순될지도 모르는 어떤 能力을 維持하는 作業을 어떻게 균형있게 할 것인가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다.

관심있는 문제에 대한 짧은 概要는 이 論文과 같은 짧은 概括的인 檢討의 범위를 넘어선 주제를 한정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 몇章에서 論議를 일정한 한계를 따라 한정코자 한다. 이에따라 다음의 論點에 대해 이야기하고 또 특정한 문제에 대해 論議하고자 한다. 처음 몇개의 章에서 관련된 역사를 檢討하고 확실한 한민족공동체의 形成의 展望을 위해 冷戰 이후시대의 다양한 초기역사에 대해 몇가지 言及하고자 한다. 다음은 다양한 軍縮構想과 目標 그리고 한민족공동체의 기대를 높이기 위한 一般目標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마지막 주요 章에서는 남북한간의 軍事問題와 상호작용에 대해서 그리고 한민족공동체 形成의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의 가능한 均衡과 해결책에 대해 論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軍事, 軍縮, 그리고 다른 構想間의 시기에 관련된 몇가지 문제에 대해 論議할 것이다. 예를들면 한민족공동체 문제에 관한 政治的인 문제가 效果的으로 論議되기 전에 軍事問題가 해결되어야 하는가, 또는 그 반대가 옳은가, 또는 두가지 즉 政治問題와 軍事問題가 함께 해결되어야 하는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내려질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모든 문제들의 남김없는 目錄이 아니지만 이 심포지엄은 다른 討議過程에서 유용하게 檢討되어 질수 있는 몇가지 論點을 포착해 줄 것이다.

戰略的, 군사적 狀況에서 本 側面

한民族共同體로 지향한 政體구상의 選擇이 기초되어져야 할 현재의 與件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韓半島에 있어서 戰略的 狀況의 進退를 密接히 반영할 必要가 있다. 분명히 이러한 歷史의 政治 軍事적 측면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어 여기에서 세삼스럽게 설명할 必要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토론을 위해서 세세한 것에는 論하지 않으면서 남북한간 競爭의 歷史적 유산에서 向後 한民族共同體 형성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하는 두가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한民族共同體 발전문제에 관해 점진적인 接近의 추구를 위해 이루어져야 할 문제가 있다. 아마 욕심같아서는 보다 극적인 措置를 요구할 지도 모르지만 앞에서 말한 유산이라는 관점에서 볼때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게 점진적인 節次를 따르고 安保問題를 확인하고 한民族共同體 형성 과정을 이탈시킬 潛在的인 複雜과 齟齬를 피하고 다른 이해관계국들과의 衝突을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을 피할 義務가 주어지는 것이다.

둘째 한民族共同體 指向의 운동은 평행노선을 추구해야 된다는 必要條件이 있다. 분명히 歷史的인 韓國 冷戰構造의 軍事적 측면의 상대적 중요성은 다른 경우(예를 들면 獨逸 경우)보다 크다. 유럽에서 冷戰이 최고조에 있을 때도 兩獨間의 접촉과 情報交流의 양은 고립된 사회의 北韓의 경우보다 훨씬 많았다. 괄목할 만한 能力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東獨의 군사력은 蘇聯 주도의 군사구조하에 存在하였으며 東獨政府가 西獨에 대한 일방적 공격을 위한 생각을 품고 있었는지, 北韓政府의 策略이 特徵이 아니었던 그러한 조건을 누리고 있었는지는 의심스러운 것이다. 사

실 특히 北韓의 군사적 能力과 야심에 주요 變化가 없이는 어떤 韓民族 共同體 問題의 해결도 생각하기 어렵다. 여기에서 포괄적인 차원의 군축을 必要로 하고 군사문제와 다른 形態의 상호 작용간의 연계가 가장 조심스럽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다시 이 두가지 論點에 짧게 언급하려고 한다. 그러나 지금 이 두가지 논점 사이에 놓여 있는 본질에 대해 언급하는 것도 必要할 것이다.

배치된 強大國 블럭간의 상호관계가 冷戰이 장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進行되는 동안 군사·정치·경제·사상·사회 기타 다른 결정요인에 의해 강하게 조건지워졌다는 사실은 부정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世界的 軍事競爭에 의해 수행되는 역할에 관해서 볼 때 국지적 地域的 군사적 이해와 다른 형태의 相互作用(동서독, 南北韓 등 분단국의 통일열망 등)간의 연계는 국지적 지역적 均衡間的 연계에 의해 형태가 정해진다. 양강대국간의 억지적 대등관계는 많은 다른 사실들을 직접 간접으로 지배하고 있다. 말하자면 많은 국지화된 狀況의 주요 측면이 그러한 目的을 위한 努力과 강대국의 관련 당사국에 관련된 드러난 또는 은밀한 公約들과의 緊密한 관계를 反映하는 것이다. 이것은 주요 핵 강대국 利害關係 사이에 주요한 不均衡이 존재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韓國에 있어서 美國과 韓國사이의 연계가 北韓과 소련 중국보다 더 일관되고 의미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不均衡에도 불구하고 地域的·世界的 이해간의 密接한 연계는 지역적 發展의 전개에 어떤 역할을 해 왔다. 여기에서 世界的인 冷戰이 歷史의 페이지 속으로 退色하는 이 시점에서 그러한 지배적인 影響力이 전개되어 왔고, 또 전개해 나갈 것인가 라는데 대해 자문해 보아야만

인 調整이 고려되어야만 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유럽에서의 군축의 肯定的인 경험을 염두에 두고 東北亞의 국면을 지켜본 사람들은 만일 그러한 진전(유럽에서의 통상무기 減縮會談에서 뿐만 아니라 START 등에 있어서)이 현실화 된다면 동일한 결과가 韓半島에서 일어난다고 기대할 수 있지 않은가? 確實히 최근의 유럽에서의 군축의 진전은 長期的인 정체가 어떻게 갑자기 活性化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놀라운 진전은 15년이상 계속되는 동안 아무런 실질적 所得을 인지 못한 복잡하고 좌절된 協商으로부터 의미있고 극적인 결과가 나오기는 불가능하다는 비관주의자들의 見解를 무색케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의 군비감축 협상에서 본 것처럼 그러한 진전은 사실 독특한 진전과정으로서 예상불허의 그리고 매우 중대한 發展을 막고 있는 동북아에서 實現되기는 어렵다. 더욱이 軍縮過程이 進行될 동북아의 주위상황이 군사균형을 特徵짓는 여건과는 完全히 다른 포괄적인 전략여건과 불가분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最近의 다른 地域이나 다른 여건의하의 군비축소 역사로부터 東北亞의 독특한 安保問題에 해결책을 추정하려고 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다.

물론 그러한 推定이 可能하다고 믿는 사람도 있다. 그들 중에는 유럽에서나 다른 地域에서의 事件으로부터의 希望을 그들 자신의 다른 戰略的 목적에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東北亞에서의 상호적이고 論證可能한 군비축소 문제에 있어서 可能한 미래의 진전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근거를 開發하고자 하는 努力에 대한 論爭으로 보아야 한다. 최근 유럽에서 보아 왔듯이 진전이 느린기간에는 군사력 감축의 결실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도 최근 몇달동안 동구권과 소련을 풍미했던 극적인 發展을 서구권이 活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다고

主張할 수도 있다. 초기의 협상이 아무런 실질적 所得을 거두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지금 빠른 速度로 進行되고 좋은 效果를 내기 시작하고 있는 기구, 구조, 이론을 만드는데 根據를 만들어 주었다. 이전의 군비 감축 努力이 유용한 결과를 낳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다른 진전이 주요 군축과정의 潛在性을 열어 놓으면 뜻있는 협상결과를 보다 성공적으로 추구하도록 만들었다. 이점은 매우 중요하다. 東北아시아와 韓半島의 경우 진실로 의미있는 군축에 대한 潛在性은—적어도 한동안— 그렇게 전도가 밝은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래의 발전이 實質的 감축을 위한 어떤 유망한 수단을 열어 놓을지도 모른다. 미래의 어떤 時點에는 보다 重要하게 될지도 모르는 概念的 구조, 제도, 정책 등을 위한 基礎를 마련하는 한 강화하는 外交的 努力은 정당화될 것이다. 유럽의 경우처럼 전형적으로 군축의 ‘의제’에 올라있는 것이 아닌 진전에 의해 可能할지도 모르는 軍事力 감축이나 긴장완화에 중대한 變化를 줄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도 可能하다. 한편으로는 너무 빠른 진전에는 몇가지의 함정이 따를 지도 모른다. 예를 들면 한미관계에 불편을 超來하거나 또는 양 國民에게 지나치게 낙관적인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본인의 見解로는 이점과 關聯된 潛在的인 하향추세와 다른 예측불허의 事件이 存在 하더라도 당분간 동북아시아의 軍縮問題에서는 느리지만 잘 計劃된 接近에 대해 후회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밖에 軍縮問題 進전의 포괄적인 목표를 이러한 원칙을 어떻게 實行하는가에 대해 축적되어 온 慣習과 傳統에 대해서와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동북아시아가 유럽의 상당기간동안의 전략 핵 협상 환경과는 다른 여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인용된 기본 원칙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당사국과 懸案 問題에 의존하는 軍縮協商의 다양한 목표의 상대적 중요성은 크거나 작거나간에 실질적 상징적 중요성이 될 수 있다. 더우기 이 범주에는 상당한 중복이 있으며 어떤 목표 추구가 때때로 다른 목표와의 절충에 모순되거나 또는 필수적일 수가 있다. 다음 목록은 項目別로 同等性, 補充性, 個別的 主觀性을 가지며 문제의 범위를 특정 짓는다. 특별히 軍縮過程의 8개의 目標은 다음과 같다.

1. 親善의 促進과 政治적접촉의 확대
2. 관련군사 戰略情勢에 대한 호혜적으로 進전된 理解의 促進
3. 軍備競爭의 비용 및 속도의 완화
4. 불안정의 原因除去 및 進行중인 軍備競爭의 예측성 제고
5. 戰略的, 軍事的 요구와 수단에 관한 상호 인식의 成文化
6. 발전과정의 역행시 結果의 완화 (예를 들면 위기로 이끄는 오해, 우연적 사고, 오판의 가능성의 축소, 만일 위기로 발전하게 될 경우 확대로의 압력방지, 만일 전쟁 발발시 파괴정도의 완화, 유리한 조건하에 전투의 가능한 빠른시일내 종식)
7. 軍備競爭의 Spill over 잠재성 감소
8. 다양한 國家的 聯合의 목표의 일방적 달성, 상대방의 능력에 대한 국가적 연합적 열세에 대한 방호설치

이러한 목적이 주어졌을때 軍縮의 實行에 관련되는 어떤 原則, 慣例, 提議 등을 제언하는 것도 가능하다. 여기서의 목적은 이전의 다른 協商過程에서의 軍축사례와 한반도 상황을 상호대비하고 차이점을 밝히는 것이다.

- 檢證性 : 지난 기간동안 檢證性은 主要軍縮 協定の 성공에 관한 국내적, 국제적 전망을 결정짓는 주요한 이슈로 등장해 왔다. 역사적 기록을 볼때 軍비축소 계획에 대한 의미있는 검증은 심층적인 南北協商의 障礙가 되어왔다. 북한의 정치적 군사적행태를 특징짓는 秘密主義가 오랜동안 “최악의 경우 논리”와 의구심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주요 역할을 하였다. 요약하면 실현가능한 檢證制度의 樹立은 과거 40여년간의 경험을 통해 볼때 동북아시아에서는 전례없는 정치적인 공약을 요구할 것이다.
- 相互性 / 同等性 / 平行性 : 이것은 쉽게 요약되기 어려운 다소 광범위하고 가꿈은 모호한 일련의 이슈이다. 근본적으로 軍備縮小 軍事行動의 제한등은 관련당사국에 동일한 형태로 적용되어야만 하고 또는 協商 이전에 그러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등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문제된 軍事的 均衡를 어떻게 規定하고 評價하느냐에 따라 군사계획 입안자의 전망에서 보면 이것은 별로 유용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政治的 外交的 전망에서 볼때 과정이나 결과에서의 同等性和 類似性은 흔히 우선순위의 무시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북한의 10만 수준으로의 兵力減縮이라는 입장의 집착은 남북한의 상황과 다양한 군사목표를 간과한 것이다.
- 協商에서의 명백성과 형식주의 : 軍축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일시적 조치로서는 안된다. 즉 規則, 條件, 規則遵守를 감시하기 위한 수단등이 아

주 상세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빠져나갈 구멍,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발전(예를 들면 技術的인分野). 그리고 많은 다른 불확실성이 예상되어져야만 한다. 協定의 運用을 위한 규칙과 조직적 하부구조가 고안되고 규정되고 모든 당사국사이에서 받아들여져야 한다. 상당히 한정된 전문문제를 보는 당사자들이 이를 발견했다라도 이것이 쉽게 이루어 질 수는 없다. 韓半島의 경우 특정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역사적인 疑心과 不信이 남북관계를 특징짓는다는 사실과 이전의 相互關係의 뒤뜰린 본질을 감안할때 相互交流에 대한 과거로부터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남북한의 상당한 헌신적 노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 軍縮의 累積的 概念 : 軍縮의 전망을 좌우하는 주요 교훈은 진실로의 미있고 장기적인 진전으로의 최선의 길은 점진적이고 누적적이라는 것이다. 당연히 어떤 사람들에게는 극적인 결과를 짧은 기간에 바라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軍縮을 이룩해 나갈 충분한 바탕이 존재할 경우에도 그러한 기대는 실망과 그보다 더 나쁜 결과로 이끌 수 있다. 가능한 것을 달성시키고 보다 장기적인 것, 복잡한 대안은 다음의 協商으로 유예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런 提議는 현명하게도 韓國側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경우에 따라 다양한 정도로 극적인 제의를 선호하고 있다. (특히 南北韓軍事力의 10 만으로의 감축과 駐韓美軍의 즉각撤收, 核武器 撤去등)

여기에서 漸進主義的 접근의 장점은 이것이 분명하게도 눈에 나타나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라는 점이다. 이 점진주의 접근에의 집착의 단점은 정치적이고 선전적인 인기영합적 면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준비되지 않고 무모한 감축을 서두르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國內 一部에서는 사려깊고 모험을 싫어하는 政府를 완고하고 軍縮問題에 本질적 진전에 흥미를 갖지 못한 것으로 오해할 우려도 있다.

軍事問題와 韓民族共同體 形成과의 關係

南北韓의 軍事力이 궁극적인 韓民族共同體 형성에 어떠한 관계를 가지느냐 하는 문제에서 주요한 관심사는 軍縮問題와 관련 外交問題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중요한 이와같은 문제에는 여러가지 측면이 있으나 우선 여기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끄는 몇가지 문제만 고려하기로 한다. 여기에는 軍縮問題가 함축되어 있다. 그러나 엄밀한 軍縮 關聯 問題를 넘어서서 일방적 전략적 근거 위에서 해결될 필요가 있는 몇가지 문제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

- ① 안정에 대한 어떠한 보장이 필요한가. 그것은 야심적인 政治的 目標을 追求하고자 하는 南北韓의 의도의 선결조건으로서 받아들일 것인가?
- ② 이 과정에서 外部의 軍事 및 戰略 關係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만 할 것인가?
- ③ 남북한 관계 여건이 改善된다고 가정했을때 軍事均衡에 影響을 줄 수 있는 조건과 기대가 향후의 진전을 촉진하기 위해 어떻게 조절

되어야 하는가?

④ 政治 軍事의 단계적 조치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의미있는 것인가. 즉 軍事措置들이 정치적 표석을 선도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政治的 發展이 지역의 전략적 均衡에 影響을 미칠 군사적 문제를 선도하여야 하는가?

⑤ 현존의 긴장과 정치적 차이의 성공적 해결을 향한 장기적 움직임이 존재하고 한민족 共同體의 달성은 점진적으로 相互利益되는 方向으로 달성되며 어떠한 극단적인 事態發展도 이러한 진전을 궤도에서 이탈하게 하거나 이 진전의 본질을 극적으로 변하게 하지는 못한다고 가정했을 때 무엇이 장기적인 군사적 요구이며 統一韓國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韓國의 政治的 統合의 社會的 大衆的要因의 결과를 고려할 때 이러한 군사적 요구는 어떻게 형상화될 것인가? 또 남북한이 統一韓國의 군사적 위상에 대한 기여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가. 政治的 發展의 先決條件으로 軍事的 安定的 保障

앞에서 軍縮問題 論議에서 언급했듯이 군축문제의 발전은 國家間的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위해 극적일 필요는 없다. 사실 강대국간의 냉전 시대에서는 軍縮問題는 강대국간의 다른 競爭的 측면이 계속되고 있을 때 관계발전의 과시용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軍備縮小의 정치적 심리적 의미가 상호간 생산적인 政治交流를 促進하는 주요한 디딤돌을 뜻한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군축은 통신을 촉진하고 兩側의 공유의 規則과 言語를 만들고, 긴장을 완화하며 불안정의 원인을 제거한다. 불행히도 심각하게 軍

事化 되어있는 오늘날의 한반도의 교착상태의 본질때문에 이러한 방안만으로서 다른 종류의 접촉을 확대해 나갈 여건을 만들 수 있느냐는 것은 의문이다. 여기에서 나의 견해로는 단계적으로 조심스럽게 조정된 軍事政治 軍縮問題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나. 外部의 軍事 戰略的關係의 役割

동북 아시아에 팽배하고 있는 零團氣 즉, 戰爭의 遺産, 繼續되는 긴장 국면, 의심, 비타협 가운데서도 安定指向的인 한민족共同體로의 전진이 바로 그러한 方向으로의 성공적 措置에 대한 展望을 밝게 하고 있다. 여기에서 南北韓間에 거북한 불균형이 存在함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전망을 밝게 하도록 與件을 調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韓半島에서의 安定에 대한 地域的 接近에 필요한 것은 아마 한민족共同體로 向한 성공적 움직임이 必須條件이 될 것이다.

美國과의 긴밀한 관계 덕분에 한국은 상당한 軍事的 억지적 혜택과 긴장완화와 軍事準備에 쏟는 努力의 평준화를 最終目標로하는 세계적 정치 趨勢에 발맞추는데 따르는 혜택을 누려왔다. 이러한 과정은 북한에서는 진행되지 않았으나 이것은 구도상에서 많은 問題點을 초래하였다. 독립행위자로서 북한은 방위력 증강의 결과 많은 負擔을 겪었으며 그것은 한편 북한의 정치사회 體制를 심각하고 그렇게 유망하지 못한 상태로 만들었다. 달리말해 北韓의 孤立主義的 경향은 시간이 갈수록 자기만족, 자기강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正常的인 세계적 相互作用에 벗어난 北韓의 태도는 세계사회에 參與함으로써 오는 혜택을 박탈하고 대신 北韓內의 자기희생과 침체에 따른 要求를 강화시켰다.

유럽과 다른지역에서의 발전에서 나타나는 敎訓은 이러한 孤立된 병영 국가적 정신상태가 영원히 갈 수는 없다는 점이다. 한국정부는 이러한 점을 ‘북방정책’을 통해 현명하게도 認識하고 있다. 미래에는 더욱 平和인 동북아시아 共同體와 모든 당사국간의 상호작용이 모든관련 국가에 혜택을 줄 것임을 믿는다. 또한 北韓의 오랜 우방으로부터의 壓力은 훌륭하게 調整되다면, 正常的인 地域 政治體制로 北韓을 의미있게 통합시키는 첫번째 段階로 이끌게 될 것이다. 이 첫번째 段階는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는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한민족共同體를 향한 長期的 成功的 움직임에 대한 必須性을 감안한다면 어디에선가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美國뿐만 아니라 蘇聯도 한민족共同體의 초기단계에 중추로서 연루되어 있다. 동북아시아의 독특한 多極化로 인해 日本과 中國의 參與 역시 全體的 과정이 진전될수록 중요하게 될 것이다. 이 점을 남북한 일방이 認定하는 한 - 韓國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 마지못해 하는 북한을 동승하게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다. 軍事的 均衡의 漸增하는 修正과 調整

韓半島에서의 군사균형의 특수한 본질에 대한 어떤 修正에 관한 問題는 앞서 논의한 바 있다. 여기에는 宣言的 또는 實質的 措置로서 신뢰 기반 구축이 包含되어 있고, 이것은 軍事力 구조 수정 문제로 擴大할 수 있다. (即 가장 위협적이고 공격적 무기인 장갑편제의 제거, 특수군과 같은 불안정한 군사구조의 제거, 낮은 水準의 비상대기상태, 민감한 전진 지역으로 부터의 後退). 덧붙여 革新的인 軍事 전략의 진전이 한민족共

同體로 향한 운동의 일부로서 考慮되어야 한다. 군축문제를 떠나서 이러한 진전은 대부분이 일방이나 쌍방에 의해 이룩되어서는 안되는 그러한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무기 증강이라는 問題 - 특히 대량 살상무기, 전략적 攻擊手段인 무기 - 가 일단 떠올려진다.

사실 사담후세인의 야만성에 대한 각국 反應뒤의 長期的인 計算의 하나는 이라크에 의한 화학무기의 선제사용 또는 獲得과 이 무서운 무기의 이 地域 聯合國 側에 대한 使用威脅, 核 能力을 確保하기 위한 치열한 努力 등과 관련 되어 있다. 페르시아만 위기로부터 나오는 교훈은 그러한 무기의 증강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독재자에 의한 그러한 武器獲得, 특히 공격적 성향을 보이고 있고 安定的인 聯合體制의 일원이 아닌 독재자의 그러한 무기의 獲得은 결코 許容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똑같은 것은 그러한 무기를 獲得하려고 시도하는 北韓에 대해서도 이야기 할 수 있다.

라. 軍事的 및 다른 措置의 連續性

앞에서도 말한바 있지만 韓半島에서 부각된 問題에 대한 바람직한 미래의 해결책으로서 논리정연하고 확실하며 迅速한 措置들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관련분야의 政策들이 緊密히 連繫되어 있어야 한다는 事實이 중요하다.

특정의 어떤분야가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措置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相對的으로 어렵게도 보이지만 전체안보 與件의 다른 구성요소들

이 다른 대안과 措置들사이의 均衡에 대한 필요성을 앞질러서는 안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다양한 政策을 追求하는데 있어 相互間 불균형을 도출할 때는 狀況을 混亂스럽게 하고 국민들에게 政府政策의 合理化와 정당화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 것이며 한민족공동체로의 길에 난관의 原因을 제공할 것이다. 최악의 경우 南北韓間 政策 모든 選擇間의 불균형은 비타협 이중성을 조장할 것이고 심지어 한민족共同體를 추구하는 과정의 진지한 분위기를 심각한 정도로 해칠지도 모를 약하고 優柔不斷한 이미지를 남게 할 것이다. 덧붙여 이러한 불균형은 南北韓과 다른 國家와의 관계를 複雜하게 할지도 모른다. 여러가지 이유에서 한민족共同體에 대한 政治, 軍事的 政策에 대해 조정되고 포괄적인 接近이 필요할 것이다. 南北韓 관계사가 심각한 軍事的 競爭과 같은 것으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신과 의심의 해소가 政治, 經濟, 社會 문제에 관한 다른 段階에 必須的인 선결조건이라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南北韓은 세계적인 냉전 구조속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冷戰構造를 가져 왔으며 이 韓國版 冷戰構造는 韓國戰爭과 같은 몇가지 事實에 의해 세계적 冷戰構造 보다 더욱 複雜한 양상을 띄고 있었다. 1953年 以後의 사건들은 단순히 韓國戰爭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물론 韓國戰爭에 비해 보다 낮고 直接的인 대치 狀況이라는 점이긴 하지만 이러한 論理에 의하면 의미있고 持續的인 政治發展을 위한 첫번째 段階는 지금같은 지속적인 적대행위의 중단과 南北韓 競爭關係의 형태와 내용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나의 견해로는 繼續的인 긴장과 간헐적인 事件들이 정전회담 이후 37年間의 南北韓 관계를 점철해 왔지만 한미간에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온 軍事力이 平和를 維持해 오며 불필요한 충돌을 단절시켜 왔다.

최근 수십년간 동북아를 풍미해 왔던 다변적인 충돌속에서 북한은 그들의 정통성 유지의 도구로서 軍事力以外 어떤것도 대안으로 거의 갖지 못하고 있다. 北韓은 持續的이고 방대한 軍事力 우위에도 불구하고 韓國이 앞서있는 分野에서는 거의 아무것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

韓半島에서의 불안정한 균형이 어렵고 비싼 대가와 긴장의 연속이지만 韓國은 주한미군의 存在와 함께 적절한 軍事的 均衡을 維持하면서 劃期的인 經濟的 業績을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北韓은 政治體制의 결합때문에 經濟的 社會的 條件을 改善시킬 대안을 拋棄했다. 北韓은 그들의 GNP의 너무 많은 부분을 소모하고 그들의 인민들을 억압하고 한국이 重要하게 간주하는 目標를 추진하기 위해 必要한 政治社會로 發展되는 것을 막고 있다.

오랫동안 北韓에 의해 추구되고 있는 정책은 北韓體制의 모든면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항상 끊임없이 경계적인 군사주의 상태의 유지 는 북한의 진부한 모델에 기초한 것과는 다른 통일 한국의 어떤 형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전진적인 단계를 희생하게 만들고 있다. 실행가능한 統 合民族共同體의 정확한 본질과 형태의 결정은 복잡하고 불확실한 가정으로 남아있다. 물론 한국으로서는 그들의 체제를 그대로 북한에 옮겨 놓는다는 조건을 제시한 적은 없다. 사실 오늘날 북한의 사회와 경제가 어떻게 비취 지고 있느냐는 점을 고려할때 원론적으로도 이것은 達成될 수 없는 것이다. 의미있는 달성가능한 한민족공동체는 南北韓 역사의 특별한 면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진전을 구체화할 요인의 混雜을 결정하는데 있어 南北韓이 한민족공동체 形成節次에 선택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항상 인식할 필요가 있다. 北韓은 그들이 지금까지 집착해 왔던 것 외의 방식을

받아들이거나 또는 構想하는것조차도 거부해왔다. 사실 그러한 의향의 표시는 북한의 指導層에게는 그들 체제에 대한 받아들일 수 없는 위협으로 보일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남북한 競爭에서 북한이 앞서있는 분야, 즉, 군사적인 분야에서의 조화가 북한 정치체제의 주요변화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렵다. 북한의 軍事的準備의 태세가 역사적으로 그들 정치체제의 구조와 뒤엉켜 연계되어 왔고 정부체제는 극단적인 군사화 과정에 의존하고 있으며 북한체제의 일면이나 다른 면에서의 변화, 정부의 변화, 또 현정부가 현저히 다른 군사적 태세를 갖추도록 결정하는 것을 막으므로 장기적으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短期的으로 이러한 발전을 바라기엔 너무 무리가 따른다. 아마 이것은 극단적인 비관주의 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北韓 政府構造와 북한에 의해 자행되는 군사위협을 동시에 조금씩 천천히 변화시키려는 뚜렷한 진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러한 진전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主觀的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고 또 취해져야만 하는 충분히 價値있는 목표를 나타내고 있다. 일찌기 나타난 군축제의도 이러한 가치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덧붙여 그러한 조치들은 다른 종류의 댓가를 치루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떻게 정치적 군사적 조치들이 이어져야하는 일반적 질문에 답하자면 만일 軍事的 조지들이 政治的인 조지를 선도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 절차를 시작할 의무는 北韓에게 지워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점에 관한 발전에 그들이 善意的 公약을 하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제의를 조성할 수 있도록 政治的 여건을 수정할 많은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의 전체로서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발전의

군사적 先決條件이나 군사적 발전의 정치적 선결조건 또는 다른 규칙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 근본적 原則이 해결될 때까지 억지력을 유지할 필요성을 볼때 한민족공동체구상의 최소한 초기단계에는 정치적 군사적 조치들이 緊密히 연계되어야만 한다.

마. 統一韓國을 위한 戰略的 軍事的 條件

한민족공동체의 군사정책은 어떠한 戰略 原則下에 수립되어야 하며, 어떠한 군사태세와 豫算 수준에 이러한 조건이 내포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구상해 오는것도 그렇게 이른 것만은 아니다. 분명히 어느누구도 한민족공동체가 어떤 형태로 전개될지 모르고 어떠한 사건이 이 전개과정에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統一韓國의 미래 防衛戰略도 불투명할 것임은 분명하다.

南北韓의 노력의 많은 부분은 다른분야를 향한 준비에 投資되어 왔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寄與는 북한의 공격에 대한 억지와 방위에 초점을 두고 있다. 남북한의 窮極的 통일은 전반적인 방위노력의 전망에 실질적인 수정을 요구할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미국과 또 다른 국가와의 남북한과의 또 그중 하나의 관계는 극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한편 이것은 또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美國은 한반도에서 적절한 均衡의 유지 이외의 다른 군사적 목적은 없다. 몇몇의 주장과는 달리 미국의 주둔이 소련이나 지역의 국가를 향한 공격적 실재는 아니다. 그러나 동시에 동북아에 있어서 미국의 존재는 한반도에서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해상 또는 그밖에서의 존재는 직접적인 防衛問題를 넘어서는 중요성을 가진다. 분명히 한반도에서의 기본적 安保關係의 근본적 수정은 미국 역할의 변화를 포함할

것이고, 이것은 地域安保의 중요성이라는 側面에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실현가능한 한민족공동체로의 이행과정에서 남북한의 영향력, 계획 능력이 어떤 주요한 변화를 겪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통일한국의 軍事態勢를 단순히 현재의 남북한의 군사태세의 혼합으로 보는 것은 부리일 것이다. 남북한 통일이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그들 군사태세를 재구성하고 군사력을 감축하는 등 다양한 조정을 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 어떤 군사능력이 잔존할 것인가를 豫測하고 여기에 어떤 다른 요소가 작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단지 推定으로만 가능하다. 이러한 점을 떠나서 통일한국의 國防의 요구나 그 어떤 다른 요구가 무엇이며 어떻게 그런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최소한 개념으로 구성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할 것이다. 獨逸統一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서독은 동독의 經濟의 회복과 재편성을 돕는데 많은 財政的 부담을 떠안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남북한은 군사력 유지 수준의 감소로 군사목적의 資源配分을 전용할 수 있을 것이나 다른 자원배분의 결정과 일치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들면 얼마나 빨리 北韓經濟의 현대화가 추구되고, 하부구조 수용력, 훈련등에 대한 投資라는 관점에서 비용은 얼마나 들 것이며, 그러한 필요성이 또 다른 우선 순위와 어떻게 競爭이 될 것인가 하는 등의 문제이다. 또 지역의 다른 勢力들이 그들의 안보라는 側面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어떻게 평가하고 여기에 대한 반응이 한민족공동체의 안보필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문제, 어떤 계속되는 또는 새로운 軍事的 지원등이 존재할 것인가, 또 이것은 고유의 군사력과 어떻게 바뀌어질 것인가? 확정되지 않는 형태로서의 한민족공동체의 한반도 외부

에서의 국가적 利益은 무엇이며, 이것은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들은 본 論文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지만 한민족공동체 형성과정에서 추구될지도 모르는 정책들과 최소한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들은 사전에 주의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結 論

전실하고 의미있는 한민족공동체의 추구는 매우 중요하다. 이 論文에서 언급되거나 또는 다른 곳에서 언급된 여러 이유에서 한민족공동체 개념에 대한 없어서, 안될 조건은 전반적 計劃 중 軍縮問題 및 軍事戰略 차원 문제에 대한 적절한 취급이다. 만일 다음 原則이 준수된다면 성공가능성은 최고이며 潛在的 위험은 최저일 것이다.

첫째 軍縮과 軍事的 조정에 대한 擴大主義的 (incrementalist) 接近, 둘째 한민족공동체 형성과정에서의 모든 요소간의 가능한 가장 가까운 연계, 셋째 상황의 어느 분야도 다른 분야의 선결조건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한민족공동체 형성 구상의 모든 요인들의 동시 진전, 분명히 관련역사와 현재의 여건을 고려할 때 이러한 모든 것은 미래에 엄청난 과제로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유에서 이러한 原則은 꾸준히 추구되어야 한다.

현재의 政策에 관한한 한국이 추구해 온 接近方式, 확대적 발전의 강조, 北方政策을 통한 정치적 접촉의 확대 등은 매우 건실한 것이다. 이러한 토의에 뒤따른 두번째 주요한 결론은 韓美 軍事關係의 본질과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美군사력의 현재의 그리고 窮極的인 지위에 관해서이다. 만일 북한이 순리대로 하개 된다면 이 복잡한 문제는 신속히 해결되고 美國은 떠나게 될 것이며, 모든 분제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이기적 특성의 추론은 차지하고 이러한 전망은 엄청난 과도적이고 이행기적인 문제들을 제기할 것이다. 軍縮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큰 댓가를 지불하고 엄청난 모험을 무릅쓰면서 할 것은 아니다. 美國의 한반도주둔 군사력은 향후 몇년간 더욱 감축될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한반도상의 다른 狀況發展과는 관계없는 주로 經濟的 이유에서 실행되는 것이다. 1953년 이후의 역사에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지만—특히 1977년 카터대통령의 사실상의 失敗한 사건으로 나타난 미제 2사단 철수결정 과정에서—美國은 韓半島에서 매우 중요한 抑止力을 행사하고 있다. 적절한 운용을 통해서 적은 병력의 철수가 있더라도 이러한 역할이 萎縮되지는 않을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현재의 抑止的 均衡을 유지하는데 덧붙여 남북대화에서 軍備縮小 또는 다른 가능한 대안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을 뿐더러 전반적인 협상 논의에 다른 당사자 특히 소련을 초대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다. 北韓이 남북간의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게 문호를 開放하도록 깨달을때까지 북한이 國際的인 조류에 맞는 행동을 유도하게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目的에 다른 당사자(소련이나 중국)를 끌어들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본인이 말했듯이 이러한 計劃에는 소련이 그들 자신의 政治的 目的으로 그러한 구상을 하고 또는 어떤 다루기 어려운 문제가 論爭의 주요골격이 될지도 모르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균형상 충분한 계획을 세우면 위험은 적절히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TOWARD A KOREAN NATIONAL COMMUNITY : SELECTED STRATEGIC, MILITARY, AND ARMS CONTROL ISSUES

Kevin N. Lewis
(The RAND Corporation, U.S.A.)

INTRODUCTION

Since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long ideological lines in the aftermath of World War II, and the violent codification of that split in the Korean War of 1950-53, the ultimate restoration of a Korean National Community has been a high priority on both sides of the DMZ. This objective has, of course, coexisted with the state of well-armed and often tense vigilance which has unfortunately been necessary to frustrate a replay of the North's aggressive but unsuccessful attempt to unify the peninsula on its terms in June 1950. At least two factors-- the steps required to maintain a proper deterrent balance and the intransigent behavior and atmosphere of suspicion following chiefly from the political structure in evidence in the North--have throughout most of the Cold War thwarted the achievement of any meaningful steps toward integration and ultimate unification. However, with recent political and economic strides in the South, the increasing isolation of Pyongyang, the waning of the global "Cold War" within which the division of the Koreas has resided, and recent dramatic progress toward reunification of the two Germanies, there is hope that realistic and meaningful progress toward a Korean National Community might now be possible.

This paper was prepared for a conference on *The New Order in Northeast Asia and the Korean Commonwealth*, sponsored by the Korean National Unification Board, and held in Seoul on 5-6 September 1990. The views expressed here are the author's and do not reflect those of The RAND Corporation or any of its sponsors.

The question of a Korean National Community--its meaning, its objectives, its social, economic, and other structures--is a vast and complicated one. Moreover, this community would have to evolve out of a proposition in which military, strategic, and related considerations are but one variable in the overall equation. Nonetheless, it is an important variable. In this paper, I will address certain questions which place that variable in a larger context. The paper will by necessity raise many questions and answer few, but perhaps these can be useful in the development of an overall agenda for the issue of a Korean National Community.¹

Before attempting to build this agenda, the full scope of the problem must be examined. There are, it seems to me, several logical subsections to this problem. These include:

1. *The problem of maintaining an adequate state of deterrence/defense to prevent war.* This would be a goal no matter what other processes in support of a KNC were under way. Specific policies to be followed would have to take on highly specialized forms, depending on rest of one's KNC strategy. In addition, fact-of-life adjustments pertinent to the natural evolution of, particularly, the U.S./ROK political and military relationship (for example, reorganization of the Southern military command structure, resolving questions of allocating military and other burdens, consolidation and moving of U.S. facilities in the ROK, etc.) would all be pursued in any event.
2. *Pursuit of various measures to reduce costs/risks of war; easing of the burden and risks attendant upon a vigorous peacetime arms competition.* The goal here is, essentially, three-fold: (a) to preserve adequate deterrence at least cost, with most stability, and with adequate popular support; (b) to be better situated to respond to trouble and crises should they occur; and (c) as I have outlined elsewhere², to be ready should dramatic developments to permit the rapid exploitation

¹Subsequently, I refer to the larger concept of Korean National Community as the "KNC." In what follows, I also deliberately do not define what I mean by "integration," "unification," etc., since such matters are better addressed in other papers prepared for the conference. This paper focuses on the military dimensions of the current and possible future Korean situation and their applicability to a whole range of possible KNC futures.

²See Kevin N. Lewis, *Arms Control in Korea: Issues for the 1990s*, Paper P-7662, The RAND Corporation, June 1990.

of arms control and other possibilities that might hold out some prospect of breaking the historical logjam that has characterized Korean relations historically, and to bring Northeast Asia more fully into a larger global agenda of reducing tensions and enhancing cooperation at lower costs where possible.

3. *Develop a proper foundation for coping with "plus and minus" aspects of eventual DPRK political devolution (most notably, that which might occur following the death of Kim Il Sung).*
4. *With both national and coalitional perspectives, to permit both the ROK and the U.S. to contend with an array of constraints and pressures and to rationalize their defense and other strategic choices in a larger framework (that is, a framework that looks beyond the immediate local requirements of the military balance).*
5. *To enhance the role that military institutions, acting in concert with the rest of government and with social institutions, can play in enhancing the movement toward a KNC.*
6. *To configure near-term military choices so that, no matter what forms it may take, the post-KNC prospects of a unified Korea (or an alternative to the present situation) are matched with necessary and sufficient military capabilities. For example, if a smooth process to unification takes place, what would the security needs of a unified Korea be? What would be the role of the military in a unified Korean peninsula? What commitments might a unified or integrated Korea have outside of immediate self-defense? What would be relationship of unified Korea with others, especially the superpowers?*

It seems to me that the prospects for adequate progress toward the attainment of KNC on terms acceptable to all, and with minimum potential for trouble, need to reflect our best thinking on all of these points. To be sure, this is a tall order: For instance, some of the goals conflict. Others depend on the resolution of political and other questions (whose ultimate form we can now only guess about). And it seems, if developments elsewhere in the world are any lesson, that Fate may play a role in configuring the schedule, sequence, and nature of steps along a path toward a meaningful KNC. Indeed, there are many potential branching points in the evolution of various KNC scenarios that might yield very different downstream military establishments, postures, and concepts.

For example, should a unified Korea decide on a minimally armed national defense establishment post-unification with a strong neutralist orientation, then it would seem logical to stress major arms control initiatives, regardless of other specifics of the KNC process. If a unified Korea were to desire a more comprehensive military establishment post-KNC, it would have to know to what ends and how to configure, and how to balance the task of maintaining certain capabilities that might contraindicate or complicate traditional arms control processes.³

This short resume of interesting issues obviously defines a topic that is quite beyond the scope of a short overview treatment such as this one. In the next few sections, therefore, I am obliged to restrict my discussion along certain lines. Accordingly, I will address the following points and discuss the following specific matters. The first couple of sections review the pertinent history, and offer some comments on the various early lessons of the "post-Cold War" era for the prospects for construction of a robust KNC. Next are presented certain relationships of various arms control initiatives and objectives and the general objective of enhancing the prospects for a KNC. The final major section discusses certain military affairs and interactions between the Koreas, and the possible balancing and resolution of these matters en route to a KNC. Included in this discussion are certain points relating to the timing of military, arms control, and other initiatives: for instance, whether military issues require resolution before political aspects of the KNC question can be fruitfully addressed, whether the reverse is true, or whether (as I will suggest) these two must go hand in hand. Finally, some concluding observations are given.

³For instance, suppose that we knew in advance that the process of unification would come without crisis and that a unified Korea would desire a nationally self-sufficient, balanced, and comprehensive post-unification military establishment. Under such circumstances, there would be comparative advantages possessed by each Korea that should be blended for in order to achieve a future Korean military posture of optimum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e.g., the South has superior technological base, whereas the North has traditionally enjoyed quantitative advantages. This would call for specialization, but maintenance of this "potential" would fly in the face of traditional way of viewing arms control which usually encompasses some doctrine of symmetry.

Although this is by no means an exhaustive inventory of possible issues, it does capture some leading points that might be usefully considered in the course of other discussions at this Conference.

ASPECTS OF THE STRATEGIC AND MILITARY SITUATION

The present environment, within which options for the design of policies for movement toward a KNC will be crafted, will need to reflect closely the evolution of the strategic situation in Korea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Obviously, the military and political aspects of this history are well-known to this audience, and there is no need to belabor them here. For the sake of our discussion, and without going into detail, the historical legacy of the competition among the Koreas seems to call for two recommendations about how one might handle KNC-building policies in the future.

First, I think there is a strong case to be made for the pursuit of *an incremental (and cautious) approach to the problem of KNC development*. Perhaps the ambitions of some might lead them to call for more dramatic steps, but in view of the legacy just noted--the modern manifestation of which is a stable but potentially volatile condition of deterrence--it behooves all concerned to follow a gradual course, to ensure security, to avoid potential frustrations and pitfalls that may derail the course of KNC-building, and to avoid irredeemable problems with other interested parties.

Second, one has *the requirement that movement toward a KNC must follow parallel tracks*. Obviously,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military side of the historical Korean standoff is greater than is the case in other situations (e.g., that of the two Germanies). Even at the height of the Cold War in Europe, the degree of contact between the two Germanies and the amount of information flowing between them were considerably greater than has been the case given North Korea's severely isolated society. Although possessing considerable capability, the military forces of the DDR existed within a Soviet-led military framework: it is doubtful whether the Communist government in Berlin ever entertained any idea of unilateral aggression against the West,

again, a condition that has not been characteristic of the machinations of the Pyongyang government. In fact, it is quite difficult to contemplate the resolution of any KNC question without major changes in the military capabilities and aspirations of, in particular, the DPRK. This calls for arms control of sweeping dimensions and also argues that the linkage among military and other forms of interaction be most carefully crafted.

We will return to both of these points shortly, but for now, it is worth noting that the nature of the overlay between these points requires some comment. There is no gainsaying the fact that the interrelationships among the opposing superpower blocs have, over the extended and constantly evolving course of the so-called "Cold War," been strongly conditioned by a broad array of military, political, economic, ideological, social, and other determinants. But when it has come to the role played by the global military competition, the linkage both of local and regional military concerns and of other forms of interaction (e.g., economic interactions, local concerns--the desire for reunification in the divided countries of Germany, Korea--etc.) has been strongly shaped by the linkage of local and regional balances. And the overarching deterrent standoff between the two superpowers has dominated directly or indirectly many other considerations.⁴ That is to say, key aspects of many localized situations (such as the desire to reconcile on acceptable terms the forcibl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have reflected the close connection of efforts toward such ends with the implicit and explicit commitments of superpower associates to the parties involved. This has been true even when major asymmetries have existed between the interests of the major nuclear superpowers. Thus, in Korea, the connec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have been far more consistent and profound than, say, the relationships of the DPRK with the USSR, PRC, or both.

Despite such asymmetries, however, the close connection of regional and global concerns has played a role in the evolution of local

⁴Such as the political interplay with other regional powers.

developments.⁵ It is thus incumbent upon us to ask how such overarching (and sometimes, dominating) influences have evolved and might continue to evolve now that the global Cold War is receding into the pages of history. Should pursuit of measures in support of an integrated KNC proceed on an entirely local foundation? That is to say, can such efforts be effectively divorced from the larger regional and international constellation of influences that has been active over the years?

A central hallmark of the post-World War II strategic context around the world has been the tendency of local controversies to exist in the context of a global alignment of various local parties into blocs that have been aligned to various degrees with the premier superpowers who have themselves been locked in a large-scale competition. This competition has, with certain exceptions, been rather universal in its scope, means, and consequences. For example, the ways in which this competition have manifested itself have ranged from ideological, political, and other symbolic forms, to a whole spectrum of military preparations and counterpreparations. The latter have, of course, ranged all along the notional "spectrum of conflict," from terrorism, insurgency, and other "low-level" confrontations, on up to preparations for global warfare involving heavy employment of all means at the superblocs' disposal (including central nuclear forces).

Moreover, the all-encompassing nature of the superpower-led bloc competition has, in combination with various other historical precedents,⁶ meant that particular standoffs have had a tendency to be cast not in local but in regional or even world-wide terms. The Korean War of 1950-53 is a classic case-in-point. Coming as it did on the heels of aggressive and threatening Communist Bloc behavior in Europe,

⁵For just two cases in point, we need to consider the notorious "tree-trimming" incident in which a substantial U.S. show of force, implying the linkage of U.S. capabilities up to and including nuclear forces, and the heightened vigilance of U.S. military units, including aircraft carrier strike forces, at the time of the Seoul Olympic Games.

⁶Including the legacy of World Wars I and II, and the decolonialization process, to name just two.

the Middle East, and elsewhere, many in the West saw the North Korean invasion of the South as a harbinger of Communist Bloc attacks in other locales--some even saw the invasion as a strategic "feint" intended to divert U.S. attention away from NATO (rendering it more vulnerable to a Soviet assault).

Finally, the dimensionless characteristic of the global standoff meant that ordinary developments and crises, and routine policy and the resolution of crises, had to be conceived in terms of a competition that, as accountants say, had to be viewed as a "going concern." In other words, resolution or precipitation of problems was not restricted in terms of the means, locale, or specific issues involved; they were also not restricted in terms of time. A choice taken or not taken today might have enormous significance as a precedent for each sides' future options.

This characterizes certain key properties of the Bloc vs. Bloc competition in simplistic terms, but terms which nonetheless seemed to lie at the heart of much contemporary deliberation about policy. Now as historians of the "Cold War" and others have persuasively argued, the situation was not so straightforward. Not all interests at stake were opposed (a particular example of a shared interest was the mutual and universal desire to avoid a nuclear war). Indeed, it was this complex balancing act among escalatory fears, local military standoffs, and a host of other factors that determined the nature of rivalry both in the short-term and the long-term.

IMPLICATIONS OF GLOBAL STRATEGIC CHANGES

Analyses and assessments of possible future options, risks, and developments determining the ultimate fate of movement toward a KNC have recently taken on some dramatic characteristics on account of developments around the world. Earlier, we considered just a few of the ongoing processes at work in the NEA regional environment that have significance for attainment of the ultimate goal of a unified Korea. For the most part, these have been *evolutionary* processes. Although punctuated by occasional internal developments and Pyongyang-generated

crises, the importance of a variety of continuing forces has dominated the situation in the local region.⁷ Although tense, costly, and often at the risk of an abrupt worsening, the precarious balance on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maintained by prudent and resolute steps taken by the Southern axis in maintaining an atmosphere of workable stability.

Such a stable if difficult situation, however, is subject to a range of external influences that have recently been anything but evolutionary. In particular, global developments in the last couple of years have led to an abrupt worldwide reconfiguration of the global standoff between the various formal and informal members of the Soviet-led bloc and Western and other democratic-capitalist systems. These groups have pursued a productive course while acting in concert to check possible Communist expansion without, through the present, major disruptive war or deterioration of the global balance that has recently occurred. Obviously, the collapse of a deteriorating Soviet bloc has meant that the global strategic calculus that has determined the nature of the overall worldwide competition and the specific configurations of local balances has changed substantially.

This has been most clear in Europe, where the breakup of the Warsaw Pact as a coherent military force, ongoing arms limitation efforts and unilateral military withdrawals, dramatic shifts in many Eastern European politics, the impending full unification of Germany, continuing movement toward European economic and political integration, and a new kind of Soviet interactional style have all translated into a "brave new world" of political and military planning. For the most part, observers have hailed these developments as extremely positive. By removing the post-World War II confrontational structure between NATO and the USSR and its reluctant allies, many commentators are willing to predict a new era of peace and cooperation, one in which the looming shadow of unremitting antagonism, possible world war, and even nuclear holocaust, and the abolition of the "zero sum" dimensions of East-West interactions

⁷As noted, this could all change with certain developments, for instance, the demise of Kim Il Sung, or an outbreak of war, but such possibilities are beyond the scope of the present discussion.

should readily give way to a productive, generally beneficial reorientation of internal and diplomatic processes.

Others are not so sanguine about the long run, arguing that despite its constant risks and high costs, the profound and deadly nature of the East/West standoff, which has been most pronounced in the cockpit of Europe, the situation has been relatively stable. Such more pessimistically inclined observers have suggested that the individual political entities of Europe (and elsewhere) may resort increasingly to violence or confrontation to settle more traditional kinds of disputes, particularly now that superpower constraints on and supervisory prohibitions against such behavior have been relaxed, and the threat of horrendous escalation has paled.

Given the truly millennial character of these developments, many in Northeast Asia have asked what import such developments have for the region, and, more specifically, the possible satisfactory resolution of the long-standing North/South Korean standoff. This is indeed a crucial question, and it has many policy implications that must be carefully evaluated.

Some observers might argue that to further the possibilities for KNC-building, both sides can and should effect such a "divorce." Here, some have cited the case of German reunification. Nowhere has the global strategic rivalry dominated the outcome of local events more than in Central Europe. Arguably, it has been this tight connection that has kept the peace over the 1945-90 period, albeit at a high cost and not without considerable risks and periodic flareups of tension. But now that progress toward German reunification is proceeding apace, and now that the tangible and political elements of the traditional deterrent balance are either deteriorating (as with Warsaw Pact cohesion as an offensively capable offensive force) or being dismantled (as with the forward force deployments by outside powers in the two Germanies, or as with the strategic superpower nuclear arsenals within the framework of SALT and START), many observers have come to see the relationship of old and inchoate structures of security as anachronistic, if not downright irrelevant (or even harmful). Many people are now wondering what, if

any, future NATO might have, whether U.S. forces of any kind will be based in Europe in a few years, and so on.

Although there is considerable uncertainty about how various processes will evolve in Central Europe in the future,⁸ these have not appreciably retarded the pace of change, and many seem to be concerns with roots in the past if not the future. The present policy debate is a combination of self-serving policies,⁹ diffuse anxieties, attempts to extend past models and procedures, and the like. That such forces are not, individually or in combination, sufficient to affect the course of events suggests that they are unlikely to be very fundamental ones. In short, there is a case to be made that simply having liberated the Central European standoff from its superpower context has made it possible--despite the historical importance of that standoff in assuring the stability if not the harmony of the region--to move in an orderly if uncertain and trepidatious way, toward a more peaceable, less costly, and ultimately beneficial global environment.

The same process of deregulation can be observed in other locations, although the situation is by no means universally positive. The liberation of many local situations from the overarching influence of the global superpower rivalry has eased the situation in some cases, had a less significant effect in others, and in still others has not addressed local problems at all (though some local conflicts and problems, once removed from their relevance to the superpower rivalry, come to be of less interest to the superpowers, which in turn may make such regional situations more turbulent and uncontrollable).

⁸For instance, with anxieties over power of a reunified Germany, the relationship of German unification and democraticization in East-Central Europe, the implications of various developments for European political and economic integration, the nature of NATO's or some other new European security system's roles, and any the management of military responsibilities residing outside of the traditional NATO area of interest.

⁹For instance, what financial assistance (both direct and of other sorts) the Soviets might obtain from Germany as they proceed with the removal of their forces.

In this sense, what can be said about Korea? Here neither analogue (the German one, or the developing world one) applies. This is a consequence of several unique aspects of the Korean and Northeast Asian balance to date, which have already been cited. But three factors above all make Korea a special case, and, together with the other points just listed, should strongly inform the policies of Seoul, Washington, and others when it comes to KNC-related initiatives. The first of these follows from the nature of Pyongyang's government and the social, political and military structures that flow from that system. The second concerns the history of the two Koreas' relationships with other powers with Northeast Asian interests. The third, in my opinion, follows from the terrible legacy of the Cold War. These points are self-evident, and in the space allotted me, I cannot discuss them in more detail here. But suffice it to say that in Korea, the special conditions that have shaped developments through the present are sufficiently unique that a special approach to KNC-building is mandated.

Nonetheless, the allure of some recent developments--notably the great easing in military tensions in Central Europe--will remain a beacon and an inspiration to many. As a roadmap or cookbook for possible progress in Northeast Asia, I believe that the lessons of the recent European experience do not strongly apply here. As a source of motivation, however, they are a worthy example. Indeed, recent history also provides some cautionary notes on any attempt to lift a page directly from European experience. Indeed, the ongoing situation in the Persian Gulf provides another parallel of considerable (possibly greater) relevance to the present balance within the Korean situation. Although once again the analogies are not perfect, there are some warning flags among them we would do well to heed.

Thus, in Iraq, we find a nation that has maintained few close relationships with any superpower (though it has interacted with some of them, notably the USSR, for various purposes, e.g., the acquisition of military capabilities). We also find a nation that, under a system that has developed a cult of personality in the form of Saddam Hussein, has embarked on a path of violence both abroad and at home as a seemingly

preferred instrument of policy. There are other alarming parallels between Iraq and the DPRK as well: proliferationist tendencies, skillful use of propaganda (including efforts to maintain a U.S.-oriented "threat" conducive to a domestic siege mentality), willingness to persevere in antisocial courses in the face of overwhelming global censure and opprobrium, and so on. Now that the Persian Gulf situation has taken some particularly bad turns, we see that a system that operates under such conditions is disinclined to choose a course of discretion, willing to push crisis events to the brink, willing to make threats that violate all civilized codes of international conduct, and the like. Indeed, while some have labeled Saddam Hussein a "shrewd" politician, there is much evidence supporting an alternative thesis--that Iraq's government is not fully rational.

This is not to suggest that this model applies exactly to the situation in the DPRK: there are, after all, some big differences in both the context and the cast of characters. But in view of the suggestive possibilities, it should argue against opting uncritically for the more positive kinds of parallels with, say, the German case.

THE ROLE OF ARMS CONTROL IN PROGRESS TOWARD A KOREAN NATIONAL COMMUNITY

I have suggested that arms control will be an important component of any comprehensive KNC-building initiative, as will be various other military and strategic adjustments. Here, we review the prospects for arms control, and in the subsequent section we turn to other military and political points.

What possibilities for arms control exist, and what should these be expected to accomplish? How should arms control initiatives be linked with other diplomatic, political, and military steps intended to accomplish the dual goals of (1) furtherance of the KNC; and (2) maintenance of an appropriate degree of deterrence, security, and stability pending a fundamental change in the political and strategic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How much risk should be accepted in possible arms control initiatives? For instance, should certain

unilateral accommodations be considered prior to the attainment of more desirable (but probably more difficult and problematic) outcomes? If so, what might these be?

With the positive experience of arms control in Europe in mind, many observers of the Northeast Asian scene are beginning to ask, if such progress (not only in the conventional forces in Europe [CFE] reduction talks, but also in START and other forums) has been realized, then why not hope for similar payoffs in Korea? Certainly, recent developments in Europe suggest how abruptly long-standing logjams can be broken: such striking developments would seem to invalidate the pessimistic views held by many that meaningful, even dramatic, results were unlikely to emerge from a complex and frustrating negotiating process that over the course of more than a decade and a half had yielded relatively little.

However, as I have argued elsewhere,¹⁰ such progress as we have seen in the European arms reduction arena is in fact the result of unique developments not likely to be replicated in Northeast Asia--barring certain unpredictable and highly significant developments. Moreover, the context in which arms control proceedings in Northeast Asia should be viewed cannot be divorced from the overall strategic environment which, again, is quite different from an environment characterizing other military balances. Therefore, it would be unwise to attempt any simplistic extrapolation from the recent history of arms limitation efforts in other regions and under other circumstances to the unique and demanding security problems of Northeast Asia. No doubt there will be some who will choose to believe that such extrapolation is possible. Among that group there will be some who may attempt to exploit the hopes raised by events in Europe and elsewhere to pursue other strategic aims of their own.

However, this caveat should be taken as an argument against striving to develop a more concrete basis for possible future progress in mutual and verifiable arms limitations in Northeast Asia. As we have

¹⁰K.N. Lewis, *op. cit.*

recently seen in Europe, years of slow progress yielded little in the way of fruitful force reductions. But it can be argued that this record nonetheless helped the Western Powers exploit the dramatic developments that have swept across Eastern Europe and the USSR in the past many months. Although earlier negotiations may not have produced much of real consequence, they did provide a foundation for the creation of institutions, frameworks, and rationales that have now been put to work speedily and to good effect. In essence, previous arms limitation efforts did not produce useful results, but they may have made relatively more likely the successful pursuit of meaningful negotiated outcomes *once other developments unlocked the potential for major arms control progress.*

This point is an important one. While the potential for truly meaningful arms control in the case of Korea and Northeast Asia may not-- for the moment at least--be very promising, it is nonetheless possible that future developments (most notably, some kind of reconfiguration of the DPRK government once Kim Il Sung departs the scene) may open up some promising avenues for real reductions. To the extent that we can lay the groundwork for the institutions, policies, and conceptual frameworks that may become more important at some point in the future, increased diplomatic efforts may be justified. As in the case of Europe, it may be possible to prepare the terrain, as it were, for significant movement in force limitations or tension reductions that might be enabled by developments not typically thought of as being on the arms control "agenda." On the other hand, a number of pitfalls might follow from proceeding too quickly, such as creating an adverse environment for ROK/U.S. relations or stimulating overly optimistic expectations in domestic audiences on both sides of the Pacific. In my view, the potential downside associated with these and other eventualities is sufficiently great that we will not regret a slow but well-conceived approach to Northeast Asian arms control for the time being.

Elsewhere, I have reviewed certain generic aims of the arms control process, along with certain conventions and traditions that have grown up about how to practice these principles. Although Northeast Asia

presents some circumstances very different from those that have marked the European or strategic nuclear negotiating milieus over the years, the basic principles cited below seem nonetheless valid. Depending on the parties involved and the issues at stake,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various goals of arms negotiations can be of greater or lesser practical or symbolic significance, of course. Moreover, considerable overlap exists among these categories, and pursuit of some aims can sometimes lead to contradictions or requirements to compromise on others. Even so, the following list, with entries given as equal, complementary, and discrete objectives, satisfactorily characterizes the scope of the matter. Specifically, eight objectives for an arms control process are:

1. Further Goodwill and Enhance Political Contacts
2. Further a Mutually Beneficial Improved Understanding of the Pertinent Military and Strategic Context.
3. Reduce the Costs and Pace of Arms Competitions.
4. Alleviate Sources of Instability and Enhance the Predictability of an Ongoing Military Competition.¹¹
5. Codify Mutually Held Views About Strategic and Military Requirements and Means.
6. Mitigate the Consequences of Adverse Developments (that is, to reduce the probability of misunderstandings, accidents, or miscalculations leading to a critical point; if a crisis does develop, to limit pressures on escalation; and if war comes, to reduce its destructiveness and achieve the earliest possible cessation of fighting on favorable terms).

¹¹A major objective of arms control (including such protocols as Confidence Building Measures--CBM, nautical "rules of engagement," etc.) is the reduction of possible sources of tension, instability, and uncertainty that might lead to heightened competitive pressures in peacetime and various adverse developments in crisis and wartime. Of course, prudent military planners need to think about such measures in terms of their reliability, as well as desirability. Consequently, the verification, definitional, and institutional checks intended to enforce such terms--not to mention the maintenance of an adequate resume of "sanctions" to be invoked should an adversary defect from such a regime--are vital considerations.

7. Reduce the Spill-Over Potential of Arms Competitions.
8. Achieve Various National and Coalition Aims Unilaterally, and Hedge against National and Coalitional Disadvantages vis-a-vis an Adversary's Capabilities.

Given these objectives, it is also possible to restate certain principles, conventions, and propositions that concern the implementation of any arms control regime. Here again, the aim is to draw parallels and identifying dissimilarities between previous experience in other forums and the situation in Korea.

- **Verifiability.** Over the years, verifiability has emerged as a crucial issue shaping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prospects for the success of major arms control agreements. Given the historical record, it is possible that meaningful verification of arms limitation schemes could become a stumbling block in any in-depth Korean negotiations. The secrecy characterizing Northern political and military behavior has been one major contributor to an atmosphere of suspicion and "worst casing" over the years. In short, working out a viable verification regime will require a political commitment to arms control that would be unprecedented in Northeast Asia given the experience of the last four decades.
- **Mutuality/Parity/Parallelism.** This is a rather broad and occasionally vague set of issues that are difficult to summarize easily. Basically, there is a proposition that arms limitations, restrictions on conduct, and so on, should apply to the concerned parties in a generally equal fashion, or should give rise to a state of equality if such a thing does not exist in advance of negotiations. Depending on how one defines and measures the military balance in question, from a military planner's perspective, this can lead to not very useful results. Nonetheless, from a political and diplomatic perspective, the appearance of parity or symmetry in either cuts or results is frequently an overriding priority. Hence, the rigid nature of the DPRK position on equal, post-cut force levels on the order of 100,000--a consideration that overlooks the widely varying military objectives and situations of the two sides.
- **Explicitness and Formalism in Negotiations.** To be useful, arms control cannot be casual: the rules, conditions, and means for monitoring compliance must be spelled out in great detail. Loopholes, possible unforeseen future developments (e.g., in technological areas), and many other such uncertainties need to be anticipated. Rules and an organizational infrastructure for

the management of a treaty must be devised, spelled out, and fully accepted by all parties. As negotiators looking at even fairly narrow problems (e.g., the U.S./Soviet strategic nuclear balance) have discovered, this is often not easily accomplished. In the case of Korea, particular uncertainties exist. Given the historical suspicion and distrust characterizing relations in this region, and the tortuous nature of previous North-South interactions, it would take considerable dedication on both sides to overcome past hurdles to communications.¹²

The Cumulative Concept of Arms Control. A major lesson governing the prospects of arms control is that the best path to truly meaningful long-term progress is a gradual and cumulative one. Naturally, there is a tendency in some quarters to aspire to dramatic results, ideally in short order. However, even in cases where there exists a significant foundation upon which to build, such an expectation is likely to lead to disappointment or worse. It makes more sense to instead accomplish what is possible, deferring longer-term and more complex choices to subsequent rounds of negotiation. This proposition, of course, has been wisely recognized by the government in Seoul. But the North has tended, with varying degrees of specificity, to endorse somewhat radical initiatives (notably, those involving reductions on both sides to 100,000 troops or less, along with the immediate withdrawal of U.S. forces and nuclear weapons).

Thus, the advantage of an incrementalist approach is that it is undeniably the best way to achieve tangible, positive outcomes: should some unforeseen bit of serendipity come our way, moreover, we would have in place the diplomatic, analytic, and other systems and frameworks needed to exploit whatever developments arise. The disadvantage of adhering to this incremental approach, of course, is that it renders one

¹²Any agreement to work seriously and practically toward some kind of negotiating framework should improve North/South dialogue, but many rules of conduct would have to be observed during the course of any such developmental talks. As befits any negotiatory process, both sides would have to exercise considerable discipline in confining interactions to proper forums. Going outside of formal negotiating channels (e.g., to propagandize one's rival's domestic populace) would undermine any serious discussions. Such discipline would require an appreciable modification in DPRK behavior: failure of the North to exhibit proper sobriety and commitment would reveal their lack of true commitment to the objective of tension reduction.

vulnerable to political and propagandistic "grandstanding." By declining to rush into ill-conceived and reckless reductions, the risk exists that domestic factions might come to perceive a sensible and risk-averse government as obstinate and disinterested in making a real commitment to arms control. In my view, this is yet another argument to be made in favor of widespread education of domestic audiences on the nature, aims, and methods of arms control.

Arms Control Lessons From Europe, 1989-90: How Applicable to Northeast Asia?

In terms of their significance, events of the last year or so have eclipsed those of the entire preceding epoch of European-oriented arms control. Observing a long-standing stalemate being broken up so rapidly in Europe raises a number of questions. Could the same kind of dramatic breakthroughs be hoped for in Northeast Asia? If so, how might progress in arms and tension reduction be facilitated? If not, what are the special circumstances of the modern Korean rivalry that demand special accommodation? Finally, regardless of the answer to these points, what can we say in general about the nature of "dramatic" developments in arms control: the causes, and the factors contributing to their ultimately successful implementation, ratification, and integration with other security and diplomatic requirements?

As suggested above, although the Northeast Asian negotiating environment has many unique features, basic principles of arms control seem widely applicable. Looking beyond such principles, what specific issues might we want to consider as we entertain the prospects for possible practical initiatives? In my view, the factors that have led to the apparent millennial developments in Europe are highly unique, special, and the result of a very complex combination of fortuitous events. Even so, nothing magic happened here. In light of the dazzling nature of developments, it is easy to forget that many key processes and trends--Western European economic and political integration, increasing economic interdependence, relaxation of military tensions--have been unfolding and gaining in strength for years.

Given the allegations by some that arms control techniques and objectives might be transplanted wholesale from the European theater into Northeast Asia, it is worthwhile noting certain major differences that may effectively prohibit such a scheme.

Bipolarity vs. Multipolarity. The most obvious difference between the European and East Asian strategic settings concerns the loci of the relative centers of strategic gravity in both theaters--that is, the number and capabilities of the various sides that can be said at any given point in time to be following major independent policy courses, distinct from those with whom they might nominally consider to be aligned. Both NATO and the Warsaw Pact have had their share of internal difficulties, but even at the height of such problems, the overall situation has remained bipolar. In contrast, the situation in Northeast Asia has been far more complex over time. The democratic "axis" in Northeast Asia (the United States, ROK, Japan, and, indirectly, various others) has remained fairly steadfast over the years, albeit with some significant adjustments. But the corresponding situation north of the 38th parallel has been far more fluid and unpredictable.

Not since the early 1960s (if then) has anything resembling a "united bloc" Communist front existed. Obviously, the more independent parties exist in any set of discussions, and the more singular their relationships to both friends and adversaries, the more complex the situation becomes. Resolving the circumstances for a multipolar arms limitation system in Northeast Asia will pose an array of challenges.

Fully Integrated, Bipolar Superpower Participation. A related factor on which key strategic circumstances in Northeast Asia differ from those in Europe concerns the roles played by nuclear-armed superpowers not only as members of defense and deterrence-oriented coalitions, but as the political leaders of those organizations. In the NATO/Warsaw Pact standoff, the deeply integrated and central participa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Soviet Union has meant certain risks (e.g., of serious escalation should conflict occur), but on the positive side of the ledger, that involvement has tended overall to have a stabilizing and dampening effect on the behavior of the counterposed

coalitions. This has occurred for many reasons, one of which involves the historical primacy of the European defense problem in the strategic calculus of the superpowers. The stakes in Europe are so high, and the commitments so deeply ingrained, that it is impossible to imagine any major crisis or conflict in Europe not having worldwide repercussions (for instance, U.S. planning for war in Europe typically takes place in the context of a presumed global war, and possibly a global nuclear conflict). In Northeast Asia, this is far less the case for both superpowers (but especially the USSR).

The Role of the Status Quo. The political agenda in Northeast Asia differs significantly from that in Europe chiefly because the latter has been generally devoted to the concept of assuring the continuation of a well-defined *status quo*, whereas the former ultimately seeks fundamental shifts in the strategic context--notably unification. This invites a number of complications into the picture. Blending arms reductions with the ongoing goal of unification (and a major shift in the strategic situation in Northeast Asia) requires all concerned to address two major issues at the same time: the arms reduction part of the equation in its own right, and the dynamic peninsular political agenda (notably reunification). Since a major reduction in military capability on both sides in the Korean peninsula implies a fundamental chang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any major progress in this direction would raise new and complex questions (for instance, possibly new Japanese and Chinese security requirements given such a shift, and so on).

Strategic Geographical Aspects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

Another major set of differences pertinent to the prospects for arms control in Northeast Asia follow from the strategic geography of the Korean defense problem. To be sure, there are major similarities. But many key dissimilarities can be cited in the cases of Western Europe and Northeast Asia. Just one among these comes from the defense strategy adopted by the Allied forces in the South, which follows the lines of a classic barrier defense. Another dissimilarity--the presence of the relatively small, routinely forward U.S. conventional forces raises additional strategic questions. Most important of all, perhaps, is the

much more central role of maritime power played by the Northeast Asian region.

Historical Experience. From time to time, there have been enormous tensions in Europe, and until recently the Warsaw Pact has maintained a menacing, fully offensively-oriented military posture. However, in spite of the peregrinations of the military balance, the effects of episodes outside metropolitan Europe, the periodically bellicose nature of Soviet policy, occasional crises (Berlin, various Soviet invasions of its allies), and so forth, the fact remains that no war has actually begun in Europe. This result no doubt follows from many things, including the theater military balance, the deliberately close linkage of European theater defense with the U.S. strategic nuclear posture, the existence of other nuclear players (UK and France), and so on. But it may also follow from the fact that, longer-term aspirations aside, the Soviets have apparently never viewed the military option as a sufficiently attractive one to justify the potential gains of aggression.

The same has been manifestly untrue in the case of Korea. We have just observed the 40th anniversary of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a climactic event that continues to this day to add various unique characteristics to planning for both deterrence in the present, and for the possible transition to a more peaceful future. The issues involved are far beyond the scope of this brief assessment, but suffice it to say that taken together they represent a great dissimilarity between the two major land theaters in which Communist and Free World forces have been opposed continuously throughout the Cold War.

Prerequisites to Successful Arms Control: Implications for Northeast Asia

What makes for success in conventional arms control? Paradoxical as it may seem, we do not really know, largely because we have not yet witnessed a completed "success." In the near future, we may indeed see the signing of a treaty in Europe, followed by its speedy and permanent implementation, but this result remains to be formalized. Yet if this

happy result does obtain, as most expect, we would probably be justified in attributing the success of this process to several factors.

1. Unilateral Economic and Domestic Political Self-Interest. The steadily worsening social, political, economic, and other problems which the Soviets and their Eastern European allies have faced over time require no elaboration here. Suffice it to say that with their economies teetering on the brink of collapse, reform for the sake of national survival--and not for the sake of improved external relationships--has become essential. This reform has meant the relaxation of Soviet controls in Eastern Europe and the imposition of major cost-cutting efforts in the Soviet and Eastern Europe military establishments. Taken together, this erosion of capabilities in the traditional Warsaw Pact structure has done far more to promote meaningful, negotiated reductions than any amount of good faith or desire to reduce inter-bloc tensions. The DPRK certainly labors under enormous burdens, many of them attributable to the massive scale of its military enterprise and the "garrison state mentality" with which it is associated. How long the citizens of the DPRK will continue to tolerate this oppressive state of affairs cannot be said, though historically the tolerance of that population seems remarkably high.¹³

2. Momentum and Legacy of Other Major Arms Control Efforts. The events of 1989 in Europe came on the heels of more than a decade of often mixed, but frequently vigorous, arms-control-oriented interactions. Beginning with the signing of the CSCE Helsinki Final Act, we can trace the evolution of various theater, nuclear, and other arms limitation schemes and initiatives. Some of these may not have been very productive or even very sincere, but they certainly produced a climate within which the speedy adjustment of arms control proceedings to reflect new developments has been possible. One should not underestimate the advantage of having more or less in place a tested

¹³It is undeniably true that this "tolerance" derives from, among other things, the unique political circumstances in the DPRK, notably the ability of Pyongyang to maintain the national illusion of aggressive U.S./ROK intentions. Whether such tolerance could long survive the easing of government controls in the North remains to be seen.

negotiating system--even if that system has not yielded much in the way of positive results to date.

3. Arms Control Requires Sustained, Multilateral Political

Commitment. To succeed, arms control requires a sincere commitment not to only the process but also to the ultimate objectives being pursued. Arms control must also be a "going concern": the possibility that the ground rules could be changed dramatically (imagine the disruptive effects of a substantially different government assembling in Pyongyang after the death of Kim Il Sung--one that had no interest in ongoing force reductions, perhaps out of a need to consolidate its position at home by the usual technique of threat-mongering). A government, moreover, must be able to require the support of those internal constituencies whose acceptance of treaty terms would be essential-- notably the military. In the South, at least, the domestic politics are also critical.

4. Existence of Adequate "Fallback" Positions For Both Sides. No reasonable party to an arms control process puts oneself in the position of having to rely ultimately on trust or goodwill as the final assurance of one's security situation. In the case of developments in Europe since the summer of 1989, all concerned parties have been able (though with many dislocations and uncertainties) to continue to rely on specific unilateral security arrangements. For instance, the party facing the most dramatic shift in its security situation in the short run--the USSR--will, regardless of the resolution of CFE or the German reunification process, remain the most formidable military power in Europe (and a nuclear superpower as well). Although the Kremlin may be most displeased with the way certain events are unfolding, they will not allow themselves to be caught in anything resembling a militarily vulnerable position.

5. Compatibility With Other Political Realities. This of course represents a different sort of enlightened self-interest, particularly on the part of the Soviet Union. As the Soviet presence in Eastern Europe was increasingly undermined, pressures on the USSR to withdraw its forces were quite literally inevitable. In keeping with the larger

elements of *perestroika*, the USSR found itself more limited in terms of its options than had been the case, say, in Poland in 1980-81 or in Czechoslovakia in 1968. Given the intensifying pressures on the USSR to go home, it only stands to reason that the USSR should try to put the best possible spin on this development, casting what might otherwise have been a set of painful, unilateral arms reductions in the context of a progressive, voluntary arms-reduction scheme.

How do these particular circumstances square with the contemporary case of the Koreans? A short survey reveals some areas of coincidence, but also some of significant divergence. Obviously, it would be in the interests of all involved in the Northeast Asian balance today to reduce their economic and social burdens of defense in the region. It is also in everyone's interest to do anything possible to reduce the probability of a catastrophic and costly conflict. Also, although many approaches might be followed in pursuit of these goals, presumably everyone agrees on the advantages of the ultimate reunification of the Koreans and the removal of the need for external security guarantees. At this point, however, the similarities to the recent European context end.

Although all governments are interested in maintaining sufficient popular support for their defense efforts, the DPRK government has a particularly vested interest in maintaining in the minds of its population the image of a bellicose U.S.-inspired and supported threat. This distracting and distorted image seems the best means for thwarting any serious aspirations toward a more sound economy or movement toward political reform. This could all change abruptly in the future, but for the time being, much evolution in this situation seems unlikely. Moreover, there is very little in the way of an existing framework of previous serious negotiation on which to build. Also worth noting is the fact that the future for consolidating the gains begun in Europe may not be as entirely bright as some now imagine it to be. In other words, there is liable to emerge a growing gap between the potential for accomplishments in Europe and actual results. We would therefore be wise to inspect closely the proposals of those who believe that "dramatic progress of the European sort" can be readily transposed onto

Northeast Asia, for there is a chance, perhaps a small one, that the ultimate results of CFE, at least in the near term, will not live up to the expectations held by many. Finally, certain special problems of Northeast Asian arms control exist that will require special solutions and approaches. These include various aspect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between those nations and the Japanese, and between Japanese and Chinese military responses, the need to reconcile the Northern and Southern approaches toward arms control so far, the need to resolve the connection of arms control on the peninsula with maritime arms limitation possibilities, and above all, the need to configure arms control so that it complements adequate the total KNC-building agenda, and as well maintains sound relationships, e.g., with the United States.

THE RELATIONSHIP OF MILITARY MATTERS AND THE PROBLEM OF BUILDING A KNC

Closely related to the question of arms control and related diplomatic initiatives is the vital concern of how the military preparations of both Koreas (on their own, in combination with the direct and indirect support provided by other nations, and in the context of a larger regional balance) relate to the furtherance of an ultimate KNC. There are many aspects to this important point, but let me consider in this section a few questions of particular interest. To some extent, these involve the arms control issues just raised. However, in this section, I look beyond the strictly arms control-related aspects of the point to address a number of issues that need be resolved on a unilateral strategic basis. These include the following:

- A. What guarantees for stability are necessary, and would be acceptable to both sides, as a prior condition to their willingness to pursue ambitious political goals?
- B. What role should external military and strategic relationships and guarantees play in this process?
- C. Assuming that the atmosphere of inter-Korean relations improves, how should expectations and conditions affecting the military balance be adjusted to encourage and promote subsequent progress?

- D. Is it meaningful to think in terms of a sequencing of political and military steps--that is, should military steps (in conjunction with arms control progress and other developments) be configured so as to precede political milestones, or is it more desirable to require political progress as a prelude to military and other adjustments affecting the local and regional strategic balance?
- E. Assuming that long-term movement toward a successful resolution of existing tensions and political differences exists, that the attainment of a KNC becomes increasingly likely on mutually favorable terms, and that no dire developments intercede to throw this process off track or change dramatically the nature of this progress, what might be the long-term military requirements and relationships of a unified Korea? How might these requirements be configured in light of the outcomes of Korean political unification, social and popular factors, and the relative contributions both sides might make toward a unified Korean military posture?

I now briefly consider each of these points.

A. Guaranteeing Military Stability as a Prerequisite of Political Progress

As I noted in the arms control discussion above, progress in arms control need not be dramatic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national relations. Indeed, in the darker days of the superpower standoff, arms control was held out as a "showcase" forum for progress even as other aspects of the global rivalry continued *en train*. It is undeniable that the political and psychological meaning of arms limitation--even the willingness to undertake in a serious manner arms control even when the prospects for immediate progress seem dim--can be an important stepping stone to furtherance of productive political intercourse of other sorts. Arms control, along with certain unilateralist and military-to-military interactions, facilitate communications, establish some shared rules and vocabulary for both sides, relieve tensions, remove sources of instability, and so forth. Unfortunately, because of the heavily militarized nature of the Korean standoff to date, it is doubtful whether such steps can by themselves be made to create an atmosphere for furthering other kinds of contacts. This calls, in my view, for a

phased, carefully coordinated approach to military, political, and arms control initiatives (see point D *infra*.)

B. The Role of External Military and Strategic Relationships

In an atmosphere such as that prevailing in Northeast Asia--with its complex multipolar interactions, its legacy of "hot" warfare, its enduring state of tension, suspicion, and intransigence, etc.--the role to be played in furthering stability, and in turn, progress toward a KNC--is very central to the prospects for successful steps in such directions. Here we find certain vexing asymmetries between the two Koreas, but it may be possible to adjust the situation nonetheless to enhance other prospects. Indeed, the requirement for a larger regional approach to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is probably a necessary condition for successful movement toward a KNC, particularly in the early phases of such movement.

By virtue of its close ties with the United States, the ROK has enjoyed a meaningful military and deterrent contribution, and also the benefits that come from affiliation with a global political process whose ultimate aim is the reduction of tensions and level of effort devoted to military preparations. This process is not paralleled in the North, however, and that invites many problems into the picture. As an independent (albeit increasingly isolated) actor, the DPRK has suffered a larger burden as a consequence of its defense preparations, which in turn has shaped the nature of its political and social system in profound and not very favorable ways. In other words, the North's isolationist tendencies have become over time a self-fulfilling prophesy and self-reinforcing phenomenon. Its behavior outside the pale of normal global interactions deprives it of any benefits of participation in that larger community, which in turn reinforces the requirement for more sacrifice and repression at home.

One "lesson" or at least indication from developments in Europe and elsewhere is that this sort of isolated, garrison state mentality cannot endure forever. The Seoul government has wisely recognized this with its "Northern Policy." I believe that in a future, more peaceable

Northeast Asian community (not to mention a KNC), interactions among all the parties (including ROK interactions with the socialist governments) cannot help but work to the benefit of all concerned. Similarly, pressures from historical associates of the Pyongyang governments could, if handled skillfully (and if carried out with the expectation that the road will be difficult), lead to at least the first steps toward more meaningful integration of the DPRK into a normalized regional political system. These first steps may not be very willingly taken, but given their necessity for the long-term successful movement toward a KNC, one must start somewhere. In this respect, not only the U.S. but Soviet Union must be centrally involved in the initial configuration of the KNC system. And because of the unique multipolarity of Northeast Asian politics, the participation of Japan and China will also be important as the entire process proceeds. So long as one of the Koreas recognizes this, as the Seoul government seems to have done, then it may be possible by subtle maneuvering to get an unwilling Pyongyang on board as well.

C. Incremental Modifications and Adjustments of the Military Balance

Some issues of certain kinds of modifications to the specific nature of the military balance on the Korean peninsula were discussed earlier in the arms control section. These included, for instance, so-calle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which can involve either declaratory or operational policies, and which can also extend to force structure modifications (disposal of the most threatening, offensively oriented weapons such as armored formations, removal of destabilizing force structure elements such as special forces commandos, maintenance of lower levels of alerting or redeployment of forces away from sensitive or forward areas, and so on). In addition, certain evolutionary military and strategic processes should be considered as part of the question of movement toward a KNC. Looking beyond the arms control points just discussed, these for the most part immediately present themselves as things which should *not* be done by either or both

sides. The issue of weapons proliferation--particularly involv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but also means for strategic attack (e.g., ballistic missiles)--comes immediately to mind.

Indeed, part of the longer-range calculus of the Allied response to the barbarities of Saddam Hussein involves the acquisition and prior use of chemical weapons by Iraq (including such use against domestic populations), the threatened use of these horrible instruments of war against Allied forces in the region, and the feverish attempts to acquire a nuclear capability.¹⁴ The message which apparently is emerging from the ongoing Persian Gulf crisis is that while further proliferation in such weapons is undesirable (and, moreover, given that the maintenance of such large inventories of both nuclear and chemical weapons by established powers is unacceptable--a conclusion which has led to dramatic U.S./Soviet arms control progress along such lines), the acquisition of such forces by despots, especially ones who have demonstrated aggressive tendencies and who are not part of any stabilizing coalition system, cannot be allowed. The same can be said of rumored North Korean attempts to acquire such weapons.

D. The Sequencing of Military and Other Steps

As I suggested earlier in my discussion of various arms control points, it is very important that *all* pertinent areas of policy remain closely linked in order to assure a coherent, safe, and speedy movement to a desirable future resolution of outstanding problems on the Korean peninsula. As appealing as some aspects of the equation may be (e.g., the perceived possibilities for arms control or unilateralist measures), and as relatively difficult as other steps might seem to many (e.g., the continued devotion of substantial resources toward the maintenance of a state of adequate security, the continuation, albeit in an evolutionary form, of the ROK/U.S. relationship, etc.), it is essential that the different components of the entire security situation not be allowed to outrun the need for balance among all options and measures.

¹⁴Previous efforts along these lines led to the successful Israeli attack against the Osirak production reactor.

At best, the creation of a state of imbalance in the pursuit of various policies may confuse the situation, make the rationalization and justification of government policies before one's citizenry more difficult (and here an enormous asymmetry and, some might say, vulnerability exists when comparing the situations in the South and North), and sow the seeds for stumbling blocks further along the road to a KNC. At worst, imbalance among the full menu of policy choices on both sides may stimulate intransigence, duplicity, or worse, might even create an image of weakness or irresoluteness which might be exploited or which might undermine in some serious way the cooperative nature of KNC-related efforts. In addition, imbalances might also complicate the relationships of the Koreas with others outside the peninsula. For a variety of reasons, then, maintenance of a coordinated and comprehensive approach to a full political/military policy on KNC-building is necessary.

In principle, the argument might be made by some that, because the histor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has been marked with such an intense military rivalry, the removal of such sources of distrust and suspicion is a necessary prerequisite to other steps of a political, economic, or social nature. In effect, the two Koreas have had, within the context of the global "Cold War," their own special version of the Cold War, one made more complex than the global version by a number of historical facts, most notably, the Korean War of 1950-53. One could argue that events since 1953 have merely perpetuated the conflict of 1950-53, albeit at a lower and more direct level of confrontation. According to this line of thought, the first step toward any meaningful and enduring political progress must be the cessation of those continuing hostilities, and this would seem to imply a dramatic reduction and reformation of the style and content of the continuing Korean rivalry.

On the other hand, it might be argued, with considerably more justification in my view, that, despite the continuing tensions and occasional incidents which have marked inter-Korean relations for the 37 years since the Armistice, in fact, the military preparations that have

been made and steadfastly maintained by the ROK/U.S. alliance have in fact maintained the peace, and not perpetuated a state of otherwise unnecessary conflict. In the multidimensional conflict which has prevailed in Northeast Asia in recent decades, North Korea has had few alternatives to military force as an instrument of legitimacy. Pyongyang, despite its unceasing and formidable military initiatives, has accomplished little in those areas in which the South has excelled. Thus, while the uneasy balance in Korea has been difficult, costly, and tense, the South has shown that it can, for instance, make dramatic accomplishments economically even while maintaining, in conjunction with the armed forces of the United States, a condition of adequate military balance. By dint of its political system, the North has foreclosed the option to improve its economic and social circumstances: it has devoted too much of its GNP, suppressed its people too much, and prevented exactly those kinds of political and social structures from growing that are necessary to the furtherance of those goals which the ROK--not to mention the rest of the modern, industrialized world--holds as important.

The policy followed by Pyongyang over the years has fundamentally influenced all aspects of the North Korean system: the maintenance of a state of constant and unremitting vigilant militarism has come at the expense of--and in fact works decisively against--the very sorts of progressive steps that are necessary for the maintenance of *any* sort of unified Korea other than one based entirely on Pyongyang's tired model. The determination of the exact nature and workings of a viable, integrated Korean community remains a complex and uncertain proposition. There is, of course, no condition on the part of the South that it impose its system exactly upon the North: indeed, when one considers what North Korea's society and economy looks like today, this is probably an unattainable goal even in principle. A meaningful and feasible KNC will need to take into account the special aspects of the histories of both Koreas.

But in determining the admixture of forces that should shape this evolution, one need be constantly aware of the *options* which both sides could bring to the Korean Community-building process. North Korea has demonstrated neither the inclination nor even the willingness to contemplate formulae other than the one to which it is rigidly held for all these years. Indeed, such willingness might even be seen in the eyes of Pyongyang's leadership to pose an unacceptable threat to its regime. For this reason, it is hard to imagine that any accommodation in the one area of the Korean competition in which the North has excelled--the military dimension--would be forthcoming short of some major change in the political system in the North. Indeed, if one accepts the proposition that the state of military preparations in the North have been inextricably linked historically with the constitution of its political system, and that that system of government in turn relies on the continuing context of extreme militarization, then there seems little to hope for over the long run, barring a change in one aspect or the other of the North Korean system: a major change in its government, or a decision by the current government to adopt a considerably different military posture--a development that is probably too much to hope for in the short run, at least.

Perhaps this seems like an excessively pessimistic view. And perhaps there are prospects that an orderly process that moves slowly toward modifying simultaneously and in small pieces both the governmental structure and the military threat posed by the North can be arranged. Despite one's subjective estimates of the odds of success of such a process, it represents a worthwhile enough goal that such steps can and should be taken. The arms control initiatives described earlier represent one way to accomplish this meritorious goal. In addition, as also noted, such steps may pay other kinds of dividends. However, to answer the general question of how military and political steps should be sequenced, it seems to me that if there is a case for military steps to precede political ones, it should be incumbent upon Pyongyang to begin the process, since there is no other way of establishing their *bona fide* commitment to progress in this respect. There is also much

room for modification of the political environment to facilitate other initiatives (e.g., arms control). But so far as the process as a whole is concerned, it does not seem desirable to think in terms of military prerequisites to political progress, or political prerequisites to military progress, or any other rules for conduct. Given the requirement to maintain deterrence until some basic principles are resolved, it seems that political and military steps should be linked tightly throughout at least the initial stages of an orderly KNC initiative.

E. The Strategic and Military Requirements of a Unified Korea

It is not too early to at least begin to speculate on what strategic principles should guide the military policy of a more integrated Korean national community, and what military posture and level of budgetary effort these requirements seem to imply. Obviously, because no one knows how a Korean National Community might evolve, and what events might transpire during the course of this evolution, it stands to reason that the future defense doctrine of a unified or integrated Korea must be similarly unclear. To be sure, the vast majority of Korean efforts have been invested in preparations aimed at the other side. The contributions by the United States to the South have similarly been focused on the deterrence of a North Korean attack, and defense against it should it occur. By definition, then, it follows that an ultimate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would require a substantial modification in the scope of the overall Korean defense effort.

Similarly, the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and, less directly, with others by one or both Koreas, would also change dramatically. In turn, this has other implications. The United States has no military goal in South Korea other than the maintenance of an adequate state of balance on the peninsula: contrary to the allegations of some, the U.S. presence is not some offensively inclined entity aimed at the USSR or any other regional power. But at the same time, the presence of the United States in Northeast Asia, not just in Korea, but

in Japan, at sea, and elsewhere, does have significance that goes beyond the immediate defense problem at hand. Clearly, a fundamental revamping of basic security relationships on the peninsula would involve a change in that U.S. role, and this would have to be assessed in terms of its regional security consequences.

Finally, in the course of movement toward a viable Korean national community, the forces and plans and capabilities of both sides would have to undergo some kind of major transformation. I suppose that it is theoretically possible to do so, but it does not seem likely that one should envision the military posture of a unified Korea as simply a combination of the military posture of the two sides as they exist today. Presumably, both sides would make various adjustments e.g., reducing the size and modifying the configuration of their military postures as they moved toward a situation in which unification became possible. Predicting what military capabilities might be "left over" at the end of this process, and saying how other factors (e.g., a residual U.S. presence) would influence these is a matter on which one could only speculate.

But looking beyond such points, it would pay some dividends to at least conceptually frame the issue of what a unified Korea's defense and other needs might be and how these could be met. As we are beginning to see in the case of German reunification, for example,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will need to assume many financial burdens to assist in the rehabilitation and reordering of the economy of the DDR. Obviously, the reduction in the level of military effort on both sides will free up some resources for such purposes, but other resource allocation decisions will have to be met. For instance, how fast might the modernization of the North Korean economy be pursued, what would that cost in terms of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capacity, training, etc., and how might such demands compete with other (including national security) priorities? How might other regional powers view the unification of Korea in terms of their own security needs, and how might any reactions to this prospect affect a Korean Community's security needs? What continuing or new sources of military and other assistance

might exist, and how would these trade off with indigenous military preparations? What national interests might a Korean Community of as yet undetermined form have outside the peninsula, and how might these be underwritten? All of these points are beyond the scope of this paper, but they relate at least indirectly to the policies that might be pursued during the course of a KNC movement, and they therefore should merit some careful thought beforehand.

CONCLUDING REMARKS

The pursuit of a sound and meaningful Korean National Community is a vital one. For the reasons outlined in this paper, among others, we see that a prerequisite to any KNC-building concept must be adequate treatment of the arms control and military-strategic dimensions of an overall plan. I have suggested throughout that the probability for success is highest, and the potential risks probably lowest, if the following principles are observed: (1) an incrementalist approach to arms control and military adjustments; (2) the closest possible linkage among all elements (including the military and arms control dimensions) of a KNC-building process; and (3) the synchronized forward movement of all elements of a KNC-building initiative with no one part of the situation becoming a prerequisite for any others. Obviously, when the pertinent history and present circumstances are taken into account, this all adds up to a very daunting task for the future. Nonetheless, such principles should be steadfastly followed for many reasons.

As far as present policy is concerned, I believe that the approach followed to date by the government in Seoul--its emphasis on incremental progress, its expansion of political contacts through its "Northern Policy," and so on--is a sound one. A second major conclusion that follows from this discussion concerns the nature of the U.S./ROK military relationship, and the present and ultimate status of U.S. military forces in South Korea. If Pyongyang were to have its way, this complicated question would be swiftly settled: the U.S. would depart the scene, and all problems would go away. But putting aside the self-serving quality of such reasoning, this prospect raises enormous

#

transitional and implementational questions. Arms control is desirable, but not arms control at too high a price, or with too much risk. The U.S. presence in Korea might decline further in the next few years, but this will be for largely economic reasons that would tend to apply regardless of other developments. As we have seen at repeated points in post-1953 history--and especially in the wake of President Carter's 1977 abortive decision to withdraw the Second Infantry Division--U.S. forces play a very important deterrent role on the peninsula. With proper management, however, this role would not be diluted, even with minor force cuts.

In addition to maintaining the present deterrence equilibrium in Korea, it also makes good sense to place no restrictions on arms-reduction or other possible options to any Seoul/Pyongyang dialogue, but to do what is possible to invite others into the overall negotiating forum--notably the Soviets. Pending a major shakeup of the government in the North that would unlock the door to a possibly speedy resolution of intra-Korean difficulties, it might be necessary to involve others (the Soviets especially, but perhaps also the PRC) with the aim of applying indirect influence to Pyongyang to induce it to behave in a more internationalist fashion. As I have noted, there are risks involved in such a scheme--for instance, that the Soviets might exploit such initiatives for their own political purposes, or that certain intractable problems (e.g., those concerning naval arms control) might become major bones of contention. But in balance, with sufficient planning, these risks can be managed adequately.

南北協力を 통한 한민족공동체 形成

任 鏞 淳

(成均館大學校)

I

오늘날 共產主義 政權의 浮沈은 세계적으로 걸쳐 정치적 討議에 활력을 불어넣는 事件이 되고 있다. 共產主義는 오랜역사의 資本主義 정치제도에 도전해 왔고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걸쳐 제국을 아주 成功的으로 건설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빨리 일으킨 제국이 또 그렇게 빨리 허물어짐으로써 가장 날카로운 專門家들에게조차 이러한 政治發展은 가장 당혹스러운 事件으로 看做되고있다. 특히 東西獨 사이에서 展開된 政治的 事件은 세계 인류 전체에 하나의 드라마가 되고있다. 理解할 수 있겠지만 모든 한 국민들은 이러한 사건이 韓半島에서도 可能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獨逸의 統一過程과는 달리 韓半島의 統一의 展望은 그렇게 밝지 못하다. 많은 韓國人들은 이에 초조하게 되어 보다 큰소리로 統一을 要求하게 되었다.

韓半島의 統一이 가장 절박한 問題라면 그것은 平和的인 방법으로 달성되어야만 한다. 과거 北韓에 의해 자행되었던 것처럼 戰爭에 의한 統一의 시도는 人類에 미치는 被害라는 점에서 볼때 너무나 엄청난 댓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만일 南北韓이 眞正으로 平和統一을 희구한다면 몇가지 일들이 정연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새로운 共同體를 形成하는데 있어 南北韓 政府 사이에 妥協이 있어야 한다. 또는 적어도 南北韓 政府가 기꺼이 상대편의 提議에 귀를 기울여야만 한다. 둘째 南北韓 指導層 사이에 합치가 있어야 한다. 兩 指導層 사이의 합치에 도달하지 않고서는 아무

것도 이룩될 수 없다. 셋째 指導層間的 合議가 무엇일지라도 그러한 合議는 南北韓 국민들이 그 解決策을 수용할 수 있는 어느 정도까지 正統성을 隨伴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 解決策은 국민들의 政治意識과 政治文化와도 比例되어야만 한다. 일단 의견 합치에 도달하게 되면 세가지 統一方案을 構想할 수 있다. 첫째 최근 東西獨이 試圖해온 것처럼 일방 사회의 다른 사회로의 합병으로 統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相對的으로 앞서 있거나 일방이 他方을 合議에 의해 단순히 吸收하게 될 것이다. 두번째 方法은 兩方의 실체를 包含하는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形成하는 것이다. 세번째 方法은 傳統的 體系를 復元하는 방법이다. 韓半島 統一方案으로서 아마 唯一하게 수용할 수 있는 方案은 南北韓 각각의 制度의 장점을 保有한 새로운 民族共同體를 形成하는 것이다. 여기에 본 論文은 한민족 공동체 形成 方案을 摸索해 보고자 한다.

II

두개의 韓國을 하나로 統攝하고자 하는 수많은 方案과 提議들이 전세계적으로 걸쳐 많은 學者들에 의해 檢討되어 왔었다. 그러나 韓國政治 專門家들에 의해 提議되어온 그러한 모델들의 理論의 대부분이 概念的으로 종래의 知識水準을 뛰어 넘지 못하고 있다. 종래의 國家統合理論은 聯邦主義, 通信理論, 機能主義, 新機能主義 등을 包含하고 있다. 聯邦主義는 統一된 政治組織을 創出할 수 있는 주요한 정치 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聯邦主義者들은 憲法을 기초하고 憲法範圍內的 다양한 기관에 權利와 義務

를 分配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들은 현실적 條件과 權限의 공식적 위상간의 一致가 연방을 성공적으로 誘導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있다. 通信理論主義者들은 國家間的 고도의 通信 및 거래가 統合社會의 형성을 조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國家間 국민사이의 널리 퍼져있고 頻繁한 통신이 兩社會의 엘리트 계급과 일반 시민사이에 공유되고 있는 상호 認識과 경험의 場을 넓히고 情報의 交換을 促進시킬 것이다. 國家間的 집중하는 통신의 흐름과 경제재 및 써비스의 交換은 그 이상의 교환에 대비한 兩國間 共同으로 行政的 措置를 취하도록 조장할 것이다. 이것은 결국 Deutsch教授가 말하는 ‘安保社會’ (Security Community)라고 불리는 形態의 것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²⁾ David Mitrany에 의해 발전된 機能主義는 供給이 식량, 숙소, 안전보장 등의 人間基本欲求를 充足시키려는 要求에 맞아야 한다고 추정한다.⁽³⁾ 집중된 생산의 분화와 다른 社會間的 폭넓은 人的 物的交流는 窮極的으로 다른 민족간의 人的交流와 민족통합의 要求와 상호 필요성을 創出할 것이다. 이것은 순수한 非政治的 接近이며 주로 환경변화에 依存하고 있다. 이 환경변화는 窮極的으로 각 政府로 하여금 현재의 현실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할 것이다. 新機能主義는 機能主義 見解의 약간 변형된 接近이다.⁽⁴⁾ 新機能主義는 機能主義 理論과 통신이론이 混合된 것이다. 동시에 新機能主義는 統合過程을 促進하기 위해 現存 政治制度를 이용한다. 특히 共同市場이나 經濟協定等과 連繫하여 國家間的 協約에 의해 創設된 政治 및 기타 單位가 그들 자신의 권한을 強化시키도록 協力을 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新機能主義의 立場은 窮極的 統合을 위해 擴張된 國家間 機構를 위한 要求를 創出하기 위해서는 機能主義에 의해 주장된 環境變化에만 依存하고 있지는 않다. 그들은 統合된

國家間 機構의 擴張을 위한 壓力을 넣기 위해서는 政治活動을 포함한 現存 組織의 활동에 依存하고 있다. 新機能主義 立場은 당사국내의 多方面的으로 충분한 經濟的 影響을 미칠 수 있도록 一括的 制度를 구상하고 있다. 이러한 一括的 制度는 國家內의 로비단체 및 壓力團體의 관심의 새로운 焦點을 넣을 수 있다. 이 團體들은 다른 國家內의 團體들과 공동의 利益을 確保하기 위한 聯合으로 발전시키려고 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溢出 效果는 國際水準에서 거래절차의 展望을 擴大시킬 效果를 넣을 것이다.

本 論文에서 本人은 많은 理論 중에서 新機能主義 立場이 새로운 민족 공동체의 形成을 조장시키는데 概念的으로 적절한 接近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새로운 민족 공동체 形成 過程을 促進하기 위해서 南北韓 指導者들은 南北韓 國民 전체에 經濟的 社會的 및 다른 分野의 惠澤을 가져올 政治 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반대로 選擇的인 政治 决단에 의해 惠澤을 경험 한 人들은 장래의 政府에 南北韓間 상호교류를 擴大할 기회를 더욱 넓 힐 수 있도록 壓力을 가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新機能主義 理論의 統合 節次를 應用하기 위해서는 상호간 對話가 바람직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공동체를 형성하는 절차를 促進하기 위해서는 指導者와 國民들이 같이 選擇해야할 몇가지 일들이 있다. 新機能主義者들도 政治指導者들의 목적 에 합치하는 행동없이는 그들의 目的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南北韓에 있어 政治體系는 社會의 다른 分野도 접하고 있고 각각의 政府는 엘리트 와 함께 다음과 같은 것들을 促進해야 할 것이다.

첫째 南北韓 政府의 지도자들은 공동의 이데올로기적 象徴을 개발해야 한 다. 때때로 指導者들과 조직화된 단체들은 潛在的인 이데올로기 象徴을 통

합절차에서의 특정 수단을 조장하기 위해 慎重히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이데올로기적 差異를 초월하는 공동의 象徴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民族主義’, ‘檀君神話’, ‘弘益人間’, ‘共同運命體意識’ 기타 남북한을 대표할 수 있는 다른 象徴들을 남북한 전체에 걸쳐 광범위하게 조장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相互反應과 尊敬이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形成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사이에 回復되어야 한다. 다른 행위주체의 민감성에 대한 反應은 엘리트계급간의 가치 補完성과 信賴助長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남북한간의 협상절차를 음미해 보면 그러한 反應의 부족을 증명해 보이게 된다. 남북한은 각각 특히 北韓은 상대 사회내에서 混亂과 무질서를 招來하려고 시도해 왔다.

北韓은 빈번히 韓國을 해치기 위한 일방적 行動을 취해왔다. 이런 形態의 한국에 대한 북한이 무례와 나아가서는 輕蔑의 태도는 통일 韓國을 위한 向後 협상에 障礙가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무엇보다도 政治的 재통일을 위해서는 Karl Deutsch 교수가 말한 安保社會 (Security Community)가 요구된다. 이 안보사회는 비폭력적 관계에 대한 信賴할 만한 기대로 이루어진 社會이다. 이러한 脈絡에서 남북한이 해야 할 한가지 일은 통일의 窮極的 수단으로서 상호 戰爭이나 어떤 폭력 수단을 회피하고 배격하는 것이다. 더우기 안보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남북한간의 긴장완화가 바람직할 것이다. 남북한 國民은 이데올로기적 信念과는 관계없이 함께 살아가는 方法을 배워야 하며 이것은 南北韓 상호존재의 인정을 必要로 한다.

두번째 국면에서는 오랜 협상기간 후에 남북한의 몇개 機關間에 기능적 통합이 있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적은 分野는 經濟交流

와 이산가족재결합이나 전업질환의 방지 같은 人道主義的 부문일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南北韓間의 기초적이고 공유할 수 있는 制度的 組織을 창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부분적으로 통합된 기능적 기관은 조직의 다음과 같은 決定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① 離散家族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情報蒐集, 分析, 配分
- ② 기관의 窮極的이고 完全한 통합에 관한 국가행동의 평가
- ③ 向後 採擇된 국가법과 행동의 推薦
- ④ 행정 規則의 制定
- ⑤ 남북한간 洪水被害地域 보상 또는 전업질환방지등 기금의 지출에 관련된 特定措置의 시행

이러한 기능적 기관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南北韓間에 어느정도 기초 수준의 政策統合이 있어야만 한다. 통합과정의 초기에는 남북한은 상호 협의하고 窮極的으로는 자연환경보호, 언어의 표준화, 자유기업지대관리, 國際競技에의 공동참가, 공동관세제등과 같은 문제를 取扱할 공동 정책을 樹立해야 할 것이다.

세번째 국면에서는 기능적통합의 相當한 統合以後 기초적 수준의 연합형식의 통합이 될 것이다. Etzioni의 統合理論은 연합이 효용주의적 論點에 근거하여 統合될 것이라고 主張한다. 더욱기 연합은 대체로 통합된 共同體의 일원으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象徵的 能力이라는 規範的 가치를 보유할 것이다. 만일 어떤 機關의 기능적 統合이 남북한에 惠澤을 준다면 더 이상의 진전 국면은 論理的으로 연합 형태일 것이다. 韓半島 統一은 모든 한국인들에게 매우 높은 象徵的 가치를 가지고 있다. 동시에 연합은 강제

적인 힘에 의해 통합되지는 않는다.

다음 段階는 물론 Confederation이나 Federation이며 혹은 더 나아가 Union의 形態가 될 것이다. 만일 組織體制가 전적으로 통합되지 않더라도 그들의 구성원이 廣範圍한 영역에서 일치하여 행동할 수 있으며 이것은 연방·연합(Confederation, Federation, Union) 등으로 불리울 수 있을 것이다. 完全한 統合體는 공동체로 呼稱될 것이다.

III

民族統合 과정이나 민족공동체 形成에는 무엇보다도 상호대화가 必要하다. 인간의 상호작용은 항상 相互間의 대화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對話는 상호이해를 의미하고 또는 雙方間의 불신을 허무는 것을 의미한다. 또 相互對話는 서로의 토의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商品을 販賣하기 위한 경제적 협상에는 상호대화를 必要로 한다. 이러한 原則에 정치적 협상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우리들이 연합을 創設하거나 연방 또는 공동체를 설립하더라도 상호대화는 당연하다.

對話없이 어떻게 무엇이든 이룩할 수 있는가? 아마 이 規則을 염두에 두고 남북한은 대화를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南北韓의 對話 빈도의 範圍는 南北韓이 통일방안을 발견하기 위해 끊임없이 努力을 하고 있는가와 민족분단에서 나오는 고통을 경감시키려는 國民의 요구에 부응하려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南北韓은 統合節次를 수용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 왔다. 그 중 첫째는 다양한 政治會談이다. 아마 이 중 가장 드러난 사건은 1972년 5월 평양에서 있던 한국의 李厚洛씨와 북한 金英柱 사이의 會談일 것이다. 그러나 이전에 11차례에 걸친 韓國側의 정홍진(鄭洪

鎭)씨와 북한측의 김덕현(金德鉉) 사이의 非密接觸이 이-김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前年 11月 20日부터 3月 20日까지 판문점에서 있었다. 이후 1972年 7月 4日 한국 中央情報部長 이후락과 북한 노동당 조직부장 김영주 사이에 공동성명이 發表되었으며 여기에는 南北韓 사이에 7개항의 합의 事項이 나타나 있었다.

- ①統一의 3대원칙-外部勢力으로부터의 자주, 평화적 方法에 의한 統一, 사상과 체제를 超越한 민족대단결
- ②상호간의 무력도발 및 비방금지
- ③다방면적인 交流實現
- ④적십자 會談의 支援
- ⑤서울-平壤間의 직통 전화선 가설
- ⑥남북 조절위원회 설치
- ⑦合意事項의 성실한 이행

이 공동성명의 발표에 이어 李厚洛과 朴成哲의 서울 평양 交換訪問과 수차례의 고위급 會談을 통해 남북조절위원회가 設置되었고 남북한을 잇는 직통전화 가설되었다. 그러나 南北調節委員會와 수차례의 회담은 두사회를 개방시킬 아무런 의미있는 結果를 남지 못했다. 엄청난 기대와 언론열기에도 불구하고 남북조절위원회는 險路를 달리다가 결국은 1970년대말 組織活動을 中斷하였다. 1980年 1月 11日 北韓은 總理會談을 위한 실무회담을 提議하였다. 北韓 정무원 총리 이종옥은 당시 國務總理였던 신현확에게 서신을 傳達하였다. 한편 1980年 1月 24日 신현확 총리는 ‘兩側의 실무 대표들 사이의 準備會談’ 開催를 제의 하였다. 北韓側의 肯定的인 반응에 따라 兩側은 1980年 2月 6日 板門店에서 첫번째 실무급 회담을 갖는 것

에 合議하였다. 실제로 남북조절위원회는 政治會談을 再開하기위한 예비회담으로 대체되었다. 남북조절위원회와 마찬가지로 總理會談 예비회담 역시 교착과 중단 다른 政治的 이용을 經驗하였다.

가장 최근인 1990년 7월 12일 南北韓은 1990년 9월 南北韓 總理間의 會談開催에 합의하였다.

南北韓이 相互概念을 위해 광범위하게 이용한 두번째 채널은 남북간에 빈번히 개최된 赤十字會談이다. 1971년 8월 12일 당시 한국 적십자사 총재였던 최두선은 북한 적십자사에 南北間의 離散家族의 아픔의 덜어주고 궁극적으로 재결합을 주선해 주기 위해 南北赤十字 會談을 개최할 것을 북측에 提議하였다. 歷史的인 남북적십자 회담은 1971년 9월에 개최되었다.

1972년 7월 4일 서울과 平壤에서 동시에 발표된 역사적인 南北 共同聲明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이산가족 재결합을 달성하기 위한 具體的 措置에 대한 合意에는 실패하였다.

1973년 7월 10~13일간 平壤에서 열린 7次 赤十字 本 會談 이후 赤十字會談은 실제로 북측에 의해 중단되었다. 南北 赤十字 會談의 實務級 會談은 1974년 7월 10일 시작되었다. 그러나 實務會談은 1978년 3월 19일 韓美軍事合同演習을 이유로 북측에 의해 다시 중단되었다. 이러한 간헐적인 형태의 회담은 수시로 開催되었으나 1985년까지는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1985년 북한 적십자사는 한국의 洪水 罹災民에게 225,950부셀의 쌀과 500,000미터의 천, 100,000톤의 시멘트 및 다양한 藥品을 提供하겠다고 제의하였다.

韓國側은 수차례에 걸친 북한측과의 협상끝에 북측 제의를 받아들이기로

決定하였다. 1985년 9월 팔복한 반한 事件이 일어났다. 즉 南北 赤十字社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합의하였다.

해방 40주년을 기념한 離散家族 故鄉 訪問團과 藝術公演團의 交換, 離散家族 故鄉訪問團의 규모는 서울과 平壤을 고향으로 한 50명규모, 예술단의 구성은 50명 정도로 하며 서울과 平壤에서 公演함. 동시에 30명의 記者團의 隨行 取材許容.

마침내 이 합의는 平壤과 서울에서 실현되었다. 그러나 극적이고 역사적인 이 사건이후 적십자회담은 전처럼 다시 膠着狀態에 빠졌다. 최근 1989년 5월 31일 북한은 남북한이 두번째로 故鄉訪問團과 藝術團을 교환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韓國赤十字社 김상협 총재는 고향방문단과 예술단 교환문제를 討議하기 위해 平壤에서 南北赤十字會談을 재개할 것을 제의하였다.

세번째 南北韓이 이용한 對話通路는 南北經濟會談이다. 북한은 1984년 10월 15일 南北交易과 經濟協力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측과 즉각적인 會談을 갖는 것에 동의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따라 1984년 11월 15일 南北韓은 처음으로 經濟會談을 開催하였다. 1次會談에서는 다양한 의제가 토의되었다. 즉 共同漁撈區域의 설정, 南北鐵路의 연결, 南北經濟協力委員會 설치, 自然資源의 개발등에 의견접근을 보였다. 이후 板門店에서 수차의 회담이 열렸으며 1985년 11월 5차 회담이 열렸으나 아무런 소득은 없었다.

1986년 1월 20일 北韓은 南北會談의 일방적종결을 선언하였고 이유는 똑같은 한국의 ทัพ스피리트 훈련이었다. 북한은 이의 중지를 요구하면서 이는 北侵準備를 위한 것이라 주장하였다. 한국은 이에 대해 ทัพ스피리트는 目的

에서나 內容에서 防禦演習이며 經濟會談 中斷의 政治的 이유로 이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네번째는 채널은 國會會談이다. 1985년 9월 북한은 ‘相互不可侵宣言’을 채택하는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南北國會會談을 개최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국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양측 입법기관이 統一憲法の 기초를 입안할 가능성에 대해 토의할 것을 주장하였다.

1985년 7월 25일 1次豫備會談에서는 회담의 구성, 대표단구성, 회담장소등 절차적인 문제에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2次會談에서 實質問題 討議에서 난관에 봉착하였다. 북한은 상호 불가침 선언문제가 우선적으로 토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팀스피리트 中止를 요구하였다. 韓國側은 國會會談에서는 統一憲法の 制定問題와 이를 위한 協議機構 構成問題가 論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은 그간 남북한 당국 最高責任者 會談을 열어 긴장완화와 戰爭再發 防止를 위해 토의할 것을 주장해온 점을 상기시켰다. 한국은 불가침 협정은 政府當國間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측은 ‘南北사이의 긴장을 완화하며 祖國統一을 촉진시키는 데 대하여’로 의제를 수정 제의하였다. 國會會談 역시 1986년 1월 20일 팀스피리트를 이유로 중단되었다.

相互對話를 촉진하기 위한 다섯번째 채널은 體育會談이다. 북한은 1979년 2월 20일, 4월에 平壤에서 개최되는 第35會 世界卓球選手權 大會에 南北韓이 單一팀을 구성하여 출전할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쌍방 卓球協會 代表들이 板門店에서 만날 것을 제의하였다. 한국측이 이에 찬성함으로써 첫번째 會談이 1979년 2월 27일 板門店에서 열렸으며 이후 3차례에 걸쳐 회담이 계속되었지만 북한측의 ‘南北單一팀 構成原則에 무조건 合意’주장을

한국측이 거부함으로써 결렬되었다.

북한은 1984년 3월 30일 동년 7월 로스엔젤레스에서 개최되는 第23회 올림픽競技大會와 그 이후에 있게 될 아시아 및 世界選手權大會에 單一팀을 구성 출전하는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의하였다. 이 협상은 시작부터 버마테러事件, 최은희·신상옥 납치사건등으로 전망이 어두웠으며 6월 2일 북한은 로스엔젤레스올림픽 거부를 발표하였다. 또 다른 對話通路는 IOC 주재하에 개최된 로잔느 體育會談이었다. 북한측은 4차에 걸친 會談에서 第24회 올림픽 共同主催와 관련 그들의 주장이 관철되기 어렵다고 判斷되자 1987년 10월 23일 답화를 발표하고 現 韓國 政府가 存在하는 한 올림픽공동주최 문제는 실현될 수 없다고 主張하고 會談의 事實上 중단을 宣言하였다.

여섯번째 대화채널은 相互政府代表나 公務員이 아닌 민간인 간의 접촉이다. 최근 문익환목사와 작가 황석영이 平壤을 訪問 金一成을 面談하였고 당시 野黨이던 김영삼총재가 모스크바에서 허담과 만났었다. 그들은 南北間의 懸案問題에 대해 討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平民黨 서경원 의원이 平壤을 訪問 金一成을 訪問하였고 최근에는 汎民族大會推進協議會 構成員들이 판문점을 통한 회담을 시도하였으나 무산되었다.

IV

南北對話를 역사적으로 고찰해 볼때 統一問題에 관해서 南北間에는 분명히 또다른 見解差異가 存在해왔다.

南北間의 대화와 會談에서 南北韓은 統一問題나 다른의제에 接近하는 방법에서 根本的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대체로 韓半島의 통일이나

解決될 다른 問題가 漸進的인 단계적 방법으로만 達成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實質的인 理念的 經濟的 차이로 인하여 그 차이를 克服하고 적응 할 시간적 여유가 必要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첫번째로 할 것은 相互信賴感과 南北韓 및 美·蘇·中·日에서 安保觀念의 조성이다. 韓國戰爭과 이후의 亂군사건등으로 비롯된 적대감정이 南北間에 存在하고 있다는 사실은 平和統一을 위한 어떤 진지한 討議가 시도되기 이전에 南北間에 평화공존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絕對的이다. 그러므로 南北韓의 평화공존은 必須的인 첫번째 段階로서 認定되어야만 할 것이다. 여기에서 韓國은 統一問題를 包含한 懸案을 정면으로 다루려고 점차 試도를 하고 있다.

한편, 北韓은 統一問題에 ‘한번에 전부’라는 接近方式을 취하면서 분단이 길어질수록 統一은 어렵게 될 것이며, 또 南北韓이 현재의 두개 실체로서의 ‘교차승인’은 韓半島 분단을 항구적으로 고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北韓은 南北韓의 統一을 促進할 즉각적인 政治會談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행태는 모든 會談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北韓은 會談의 性格과 관계없이 항상 미군철수같은 根本的인 問題로 귀착시키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赤十字會談이나 體育會談 등에서조차 北韓은 會談과 關聯없는 근본적 政治問題로 돌아가고 있다. 여기에서 北韓은 聯邦主義를 선호하고 韓國은 통일에 대한 接近에서 기능주의적인 原則에서 있는 것이 분명한 것처럼 보인다. 南北對話의 歷史를 고찰해 볼때 나타나는 또 한가지는 協商期間 중 北韓은 아주 단순하거나 또는 國際的

協商의 原則이나 韓國의 實情을 理解하는 면에서 非合理的인 것처럼 보인다. 北韓은 會談議題와 關係없이 韓國側에 그들의 要求 條件만을 들어 줄 것을 계속 고집해 왔다. 만일 그것이 北韓이 要求하는 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그들은 적절치 못한 이유로 會談을 一方的으로 결렬시켰다. 이러한 事實은 北韓이 우물안 개구리일뿐 아니라 그들의 方式을 타방에 강요하려고 하는 인상과 北韓의 態度가 극히 미숙한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는 認識을 주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對話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南北韓은 몇가지 基本的인 것에 합의를 보고있다. 첫째 南北韓은 統一이 가장 重要한 國家 目標임을 밝히고 있다. 韓國指導層은 계속해서 統一이 韓國民의 지상 과제임을 천명하고 있다. 北韓指導者들도 統一이 가장 重大한 民族的 義務이자 革命的 課業이라는 점을 表示해 왔다. 둘째 南北韓은 統一問題가 내정문제이지만 근본적 동의를 하고있다. 韓國은 통일이 南北韓 사이의 문제이며 어떤 國家도 南北韓의 統一努力에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北韓도 계속해서 통일은 근본적으로 朝鮮人民의 내부 問題임을 言明하고 있다. 他國의 간섭, 특히 美國의 간섭은 許容되어서는 안된다. 南北韓은 이러한 불간섭 政策을 지지하고 있다. 韓國은 공개적으로 北韓의 內政問題에 간섭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있다. 北韓도 각자의 내정문제에 불간섭의 原則을 고수할 것을 주장해 오고 있다.

셋째 南北韓은 統一이 平和적 手段에 의하여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北韓은 韓國戰爭이라는 軍事手段에 의한 통일기도를 한 바 있지만 現在 그들의 公式的인 政策은 多樣한 政策發表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이 平和的인 것이다.

韓國도 이승만 정권시절 北進統一을 主張한 바 있지만 平和的 手段만 이 통일을 達成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南北韓은 그들의 現代化된 軍事力이 戰爭이 勃發할 경우 相互 치명적이라는 事實을 인정하고 상대측에 韓半島에서의 또다른 재앙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네번째 南北韓은 깊은 상호불신과 오해가 存在함을 認定하고 동시에 그러한 상호불신과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 相互 많은 인내가 必要함을 認定하고 있다. 이에 北韓 指導者들은 일정 條件이 성숙되어져야 하며 統一을 위해서는 미확정의 기간이 必要하다고 보는 반면 韓國指導層은 統一을 위한 準備를 完了하는데 實質的인 기간이 要求된다고 보고 있다.

만일 南北韓이 韓半島 統一過程에 관한 근본적인 전제에 공감한다면 어떻게 어떤 具體的 結果를 얻는데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가? 過去에 南北韓 사이의 수차례의 會談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故鄉 訪問團 및 藝術團 교환같은 미미한 성공만이 統一政治의 歷史에 記錄되어 있다. 平和統一에 관한 南北韓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南北間에는 오직 敵對, 不信, 欺瞞이 存在하고 있다. 이것은 南北會談에 隨時로 반영되어 왔다. 왜 그런가, 대답은 政治의 本質이란 것이다. 수많은 다루기 힘든 政治問題들이 南北會談의 진지한 努力을 방해해왔다. 그러한 問題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1) 理念的 體制的 차이
- 2) 韓國 戰爭의 기억
- 3) 南北韓 政治 指導者의 개성
- 4) 상호간의 열등감과 安保觀念
- 5) 大規模 軍事力

- 6) 敵이라 일단 간주한 相對와의 協商을 어렵게 하는 韓國 政治, 文化
- 7) 協商過程과 窮極的 통합을 가변게임 (variable - sun)이 아닌 zero-sun 게임으로 보는 態度
- 8) 相互不信
- 9) 社會化 과정의 차이
- 10) 외세와의 이원적 연계
- 11) 集團的 사고

우리들이 南北對話 過程에서 보아온 것은 南北間 對話 過程에서 政治的인 요소가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명백한 事實이다. 물론 다른 두 政治體制 사이의 協商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政治的인 것이다. 그러나 두 國家間的 協商의 모든 發生 可能한 問題나 분야에 대한 정치적 개입은 協商의 內容이나 目的이 전적으로 부위로 돌아갈 정도로 역기능일 수 있다. 그러므로 역설적으로 南北韓間的 政治的으로 민감한 統合過程을 促進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개입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問題인 것이다. 아마 政治的 개입을 줄이고 협상과정을 促進해도 가장 潛在的이고 결으로 드러나는 方法은 政治統合 이전에 經濟統合을 이룩하는 것이다. 統合事業에서는 協力關係로부터 南北韓이 期待할 수 있는 利益은 충분히 南北韓의 행태에 影響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重要한 것은 政策決定者들의 經濟協力이 惠澤을 줄 것이라는 인식이 통합을 促進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問題는 政治的인 것을 包含해서 豫想되는 損失의 可能性이 實質的 이득을 상쇄시킬 지도 모르고 특히 統合을 위한 措置가 특정 개인이나 集團의 經濟的,

政治的 기반을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 즉 經濟的 요소가 統合에 대한 中
요한 촉진제이긴 하지만 政治的 이해득실 역시 현저하고 특히 國內政治
關聯部門에서 그러하다.

韓半島의 現在 經濟的 環境은 불행히도 南北韓의 經濟協力을 조장하는
데 그렇게 유리하지만은 않다. 北韓이 經濟 活動이라는 점에서 外部世界
와 고립되어 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1970年 이전 北韓의 國際
的 活動은 주로 公産권 國家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후 北韓은 비공産권
과의 교역량을 늘렸다. 심지어 金日成도 北韓이 비공産권과의 교역량을 배
가해야 한다고 言明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北韓은 1984年9月 舍營法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꾸준
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貿易量은 한국과 비교해 볼때 엄청나게 뒤
떨어져 있다. 불행히도 南北韓의 격차는 향후 더욱 벌어질 展望이다. 더우
기 한국의 GNP는 북한의 몇배에 달하고 있다. 이것 역시 격차가 더욱
벌어질 展望이다. 문제는 이러한 벌어지는 격차가 북한의 열등감을 더욱
固着시킨다는 점이다. 깊은 열등감에 사로잡힌 당사자와 協商을 한다는 것
은 대단히 어렵다. 이러한 열등감의 심화는 남북간 經濟交流에 더욱 어려
운 難關을 만들어 놓고 있다. 北韓은 북한사회에 개방이 指導層에게는 정
치적으로 得보다는 失이 클 것이라고 계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악조건 하에서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강한 政治的 의지로서 다음과 같은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南北間의 상당한 交流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1) 정경분리

2) 한국과 함께 또는 별도로 북한의 國際交易에의 同參誘導

3) 제3 자를 이용한 협상전략

- 4) 다방면적 접근을 통한 협상
- 5) 빈번한 秘密 協商 이용
- 6) 自由貿易地帶 설치
- 7) 자연자원의 공동개발
- 8) 經濟交流活性化를 위한 공동경제위원회설치, 경제학자 및 경제전문가로 구성
- 9) 정규적인 사업단 교환
- 10) 南北韓 經濟交流를 감독할 상설기구설치

經濟 및 貿易交流는 다방면의 개인들이 사회적으로 상호 접촉하게 만들 것이다. 반대로 다국적 사회로의 성장은 국제여행 및 통신의 증가를 수반하게 된다. 여행과 통신이 증가함에 따라 南北間의 다양한 그룹이 相互利益되는 방법으로 연계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다 중요하게는 다국적 연계가 기능주의 입장에서 형성될 것이다. 특정 産業製品의 생산에 남북한의 企業, 勞動者, 販賣施設들의 협력을 요하게 될때 税金, 所得등 기타에 관한 공동체제에 대한 요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남북한 간의 合作投資는 지의 당국의 권한범위와 정도를 고양시키게끔하는 결과를 낳을 간접적 연계를 강화할 것이다. 이러한 기능적 연계의 新機能主義者들이 말하는 ‘Spillover’ 효과이다. 이 ‘Spillover’ 효과는 비경제 분야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직접사회담의 전망이 커짐에 따라 남북한의 관리들의 相互接觸이 빈번해질 것이다. 이산가족 고향방문단이 증가할수록 南北當局은 시민과의 간접적 연계를 더욱 긴밀히 할 것이다. 예술단의 여행 및 상호교류에 따라 南北間 예술가의 기능적 相互依存은 더욱 협력과 계획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것은 다른분야 즉 학술 문화등의 교류를 더욱 촉진할 것이다. 국민간의

빈번한 接觸은 점차적으로 엘리트 계급과 일반시민 사이에 社會化 과정과 학문의 공동기구를 설치하게 될 것이다. 통합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은 상호간 적대감, 편견, 부정적인 시각을 불식하는 것이다. 나타난 利益, 交流와 상호의존의 증가등은 공동의 이해 경험으로 인해 상호 심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끔 할 것이다. 더우기 남북간의 긍정적인 경험은 상호 동질성과 엘리트 가치의 補完性을 촉진하게 할 것이며, 결국 그것은 전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사회적 학습과 목적적 행동은 엘리트 및 시민들의 南北交流協力の 가치에 관해 얻은 것에 대응한 태도와 행동에 변화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결론적으로 民族共同體·형성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동시에 지속적인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개화된 전망을 가진 정치지도자의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단순한 세월의 흐름이나 지도자의 용기만으로 민족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南北韓 정부와 국민은 통일 문제 같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심스럽고 조직적으로 계획된 일정한 단계를 따라야만 한다. 상호 수용할 수 있는 民族共同體 형성을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쌓여온 나쁜 감정, 心理的 社會的 두려움 적대감, 정치적으로 다루기 힘든 문제등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그러면 南北韓의 相互信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相互信賴가 일단 회복되면 남북간의 협력을 기대하는 것이 한결 용이해 질 것이다. 역설적으로 신뢰회복과 상호협력이 남북한 정부간 다양한 수준의 대화를 요구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형태의 대화는 노태우대통령과 김일성과의 최고 수뇌급 대화이다. 남북한 指導者間의 頂上會談을 가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결국 그들은 상호이해에 도달하게끔 될 것이며 이후 남북한간의

統一政策의 방향에 대한 분명한 指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政府間 다양한 수준의 대화에 상당한 성공을 보면 상호협력을 통한 經濟交流는 당연한 것이다. 인도적 명분의 교류는 다음 단계로서 이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다양한 문화분야의 교류가 어려움 없이 이룩될 수 있고, 그러면 남북간의 군사력 감축도 구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단계적 조치의 논리적인 이행 이후 韓半島에는 ‘安保社會’ (Security community)가 현실화 되고 이러한 ‘安保社會’로부터 남북한은 남북연합 (Korean commonwealth)이라는 기본적 정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만일 南北聯습이 성공한다면 한국연방 또는 고려연방이 통합절차의 다음 단계로서 계획될 수 있다. 韓國聯邦 (Korean Confederation)의 통치가 계속된 후 만일 그것이 성공적이라면 한반도에는 전국민의 Political union이 등장될 것이다.

WAYS TO BUILD A KOREAN NATIONAL COMMUNITY THROUGH THE SOUTH - NORTH COOPERATION

Yong Soon Yim
(Sung Kyun Kwan University)

I

In these days, the rise and demise of Communist political empire is an event to stimulate political discussion throughout the world. The communists challenged a long established capitalist political system and quite successfully established an empire in a relatively short duration. However, such a rapidly risen empire has been crumbling so quickly that to even most incisive experts on Communist politics, this political process is a most baffling event. Particularly, the political event unfolding in the two Germanys is a drama to every one in this world. Understandably, many Koreans expect such a possibility in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unlike the German unification process, the perspective of Korean unification has not been brightened. Many Koreans have even become impatient and very vociferous calling for the Korean unification.

Should indeed Korean unification is the most imperative one, it must be achieved through a peaceful mean. The unification attempt by a war as previously carried out by North Korea would cost intolerably high price in terms of human suffering. If indeed North and South Korea desire a peaceful unification, a few things must be in order. First, there must be a compromise between the two governments to form a new community. Or at least the governments from North and South Korea should be willing to hear what the other side suggests. Second, there must be a

consensus between the leaders of South and North Korea. Without reaching a consensus between the leaders, nothing can be accomplished. Third, whatever the leaders agreed, such attempts must have some measure of legitimacy to the extent that the people from both sides will accept the solution.

Therefore, the solution must be compatible to the political consciousness and political culture of the people. Once a consensus is reached, two ways to unify Korea can be contemplated. First, an amalgamation of one system into the other one can be accomplished as the two Germanys have attempted in recent years. In this case, superior and better party will simply absorb the other one with a consensus. The second method will be creating a new national community that will include virtues of the both parties. The third way will be restoring the traditional system. For the Korean unification, perhaps, only acceptable solution will be creating a new national community which will retain some merits of the both system. In this regard. This paper will explore a way to build a Korean national community.

II

So many methods and proposals to integrate the two Koreas into one have been evaluated by many scholars throughout the world. Yet most of those theories of models that have been proposed by students of Korean politics do not leap conceptually beyond conventional wisdoms. The conventional theories of national integration include federalism, communications theory, functionalism, and neo-functionalism. Federalism⁽¹⁾ tends to focus on important political decisions that can create unified political

organisations. Federalists are concerned about formulating constitutions and distributing rights and duties among various agencies within constitutional domains. They view that congruence between existing conditions and formal location of authority is more conducive to the federations success. Communication theorists view that high levels of communications and transactions among countries will promote the formation of an integrated society. Widespread and frequent communications among citizens of different countries will accelerate the exchange of information and expand the pool of memories and mutual perceptions shared by elites and ordinary citizens. Increasing flows of communication and exchange of economic goods and services among countries tend to promote the joint adoption of administrative measures to accommodate further exchanges. This leads eventually what professor Deutsch⁽²⁾ has called a "security community". Functionalism developed by David Mitrany⁽³⁾ assumes that the supplies must match demands for fulfillment of such basic human needs as food, shelter, and security. Increased specialization of production and broader exchanges of goods and people among different countries create mutual need and demand to cooperate and eventually integrate people among different nationalities. This is purely a non-political approach, which primarily is relied upon environmental changes. This environmental change will eventually force each government to accept existing reality. New-functionalism is a slightly deviant approach of functionalist version.⁽⁴⁾ Neo-functionalism is a mixture of functionalist theory and communication theory. At the same time,

it utilizes the existing political institutions to stimulate the integration process. It assumes that political, and other units established by agreements among nation states, particularly, in connection with common markets or economic agreements may also create pressures for strengthening their own authority. Thus new-functional approach does not merely rely upon environmental changes as advocated by functionalist to create needs for expanded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the ultimate integration. It rather relies on existing organizational activity including political ones, to generate pressures of the expansion of integrated international organization. Neo-functional approach is contemplating package arrangements that will have profound economic impacts on many spheres within the member countries. Such package arrangements can create new focuses of attention for lobbies and pressure groups within nation-states. These groups may attempt to develop alliances with similar groups in other countries to secure mutual interests. This spillover effect enlarges the scope of the bargaining process at the international level.

This paper contends that, among many theories, neo-functionalism is still conceptually most relevant approach to stimulate to build a new national community. In order to stimulate the process of the formation of a new national community, leaders of two Koreas should make political decisions which will bring economic, social, and other benefits to larger population in Korea. In return, those who have experiences

the benefits stemming from the selective political decisions will pressure on the perspective governments to create more opportunities for the furthering mutual exchang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Of course, in order to apply this neo-functionalism to the integration process, the mutual dialogue must be in order.

There are several things that political leaders as well as publics must choose to stimulate the process of creating Korean Community. Even neo-functionalists cannot accomplish their goals without purposive action of political leaders. Henceforth, in both North and South Korea, political system tends dominate rest of society, each governments as well as elites could promote followings. First, leaders of both Koreas could promote a common ideological symbol. Sometimes leaders and organized groups deliberately use potent ideological symbols to promote specific steps in an integration process. Perhaps, Koreans may find a common symbol that transcending ideological differences. Nationalism, mythology of "Tangoon" "Hongikingan", "sense of common destiny", of and other symbols that represent Korea, can extensively be promoted throughout Korea. Second, mutual responsiveness and respect must be restored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n order to form a new national community in Korea. Very often, responsiveness to the sensitivities of other actors is important in promoting trust and complementality of values among elites. Perusal of the negotiation process between Pyongyang and Seoul testify the shortage of such responsiveness.

Each, particularly, North Korea, has attempt to cultivate chaos and disorder in the other system. North Korea, very often, has taken unilateral actions that have injured South Korea. This type of disrespect or even contempt of North Korea toward the South will hamper future negotiations to unity Korea.

What should we expect now? More than anything else, political reunification requires what professor Karl Deutsch calls a security community. This security community is a community with reliable expectations of nonviolent relations. One thing the two Koreas can do in this vein is to mutually avoid and renounce war or any violent means as the ultimate instrument of unification. Furthermore, in order to build a sense of security, reduction of tens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s in order. Then Koreans will have to learn how to live together regardless of ideological persuasions, which requires recognition of the mutual existence of North and South Korea.

Second stage will be, after a long negotiation, partial functional integration of some agenci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n this process, perhaps, the most non-controversal areas will be an economic exchanges and humanitarian services such as mutual visitations of separated families and control of epidemic diseases. To carry out such tasks, some rudimentary, commonly-shared institutional structure can be established between Pyongyang and Seoul. Such a partially integrated functional institution would make the organizational decisions: (1) gathering, analyzing, and distributing information on a variety of areas such as the dispersed families, (2) evaluating

state activities in terms of the ultimate and full in integration of the institution; (3) recommending national laws and actions to be taken in the future; (4) creating and administering regulations; and (5) performing specific actions involving expenditure of funds such as helping flood damaged areas and to control epidemic diseases in both Koreas. In order to support this functional institution, there also must be at least some rudimentary level of policy integration between two Koreas. At the beginning of the integration process, the two Koreas may at least consult each other, and eventually establish a common policy dealing with issues such as protecting the natural environment and standardization of language, and management of free enterprise zone and a joint venture in international athletic competition, and common tariff system.

Third stage will be, after a reasonable success of the functional integration, a rudimentary level of commonwealth type of integration. As Etzioni's integration theory⁵ suggests, commonwealths are integrated more on the basis of utilitarian contentions. Furthermore, a commonwealth generally maintains of relatively high level of normative value of symbolic capacity being member of the integrated community. If the functional integration of some agencies becomes beneficial for the two Koreas, then further promotion of the status would logically be the commonwealth. Korean unification has very high symbolic value to most Koreans. At the same time, a commonwealth is not integrated on the basis of coercive

power. Next stage is, of course, a confederation, a federation, or even perhaps a union. If a system is not totally integrated, but its members can act in unison on wide range of matters, it is referred to as confederation, union, or federation. The completely integrated system is referred as a community.

III

National integration process or creating a national community is required, more than anything else, a mutual dialogues. A human interaction is always based upon the mutual conversation. This dialogue is a mean to understand each other, or to reduce mistrust on other party. The mutual dialogue then is to develop mutual affection.

An economic negotiation to sell a product requires a mutual dialogue. A political negotiation cannot be an exception in this rule. Whether you attempt to establish a commonwealth, a confederation, or even a community, the mutual dialogue must be in order. Without a talk, how can anyone accomplish of anything? Perhaps, mindful of this rule, North and South Korea have attempt to talk. A purview of frequency of North and South dialogue in Korea shows that both sides have made strenuous effort to find a way to unify, or at least, to facilitate people's demand to alleviate pains stemming from the national division. They have used various channels to accomodate the integration process. The first of such has been, of course, various political talks. Perhaps most

remarkable event was the meeting between Lee Hu-rak and Kim Young-Joo in Pyongyang on May, 1972. However, before the materialization of this meeting, a total of 11 rounds of Chong Hong-Jin, representing South Korea, and Kim Dok-hyon of North Korea, secret contacts were held at Panmunjom from November 20, to March 22, to arrange the meeting between Lee and Kim. There followed the Celebrated Joint Communiqué, signed by Lee Hu-Rak, Director of South Korean CIA and Kim Young-Joo, Director of the organization Bureau of the North Korean Communist Party, which was announced on July 4, 1972. According to the communiqué, seven points of agreement had been reached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 (1) reunification must be based on three principles-independence by outside forces, peaceful means to achieve unification, and acknowledgement that national unity transcended ideological and system differences:
- (2) disavowal of propaganda or armed provocations against each other:
- (3) various exchanges in many fields:
- (4) support for the Red Cross talks:
- (5) establishment of a direct telephone line between Seoul and Pyongyang:
- (6) establishment of a South-North Coordinating Committee: and,
- (7) a solemn pledge to carry out the agreement faithfully.⁽⁶⁾

Following this communiqué, and the mutual visits to Seoul and Pyongyang by Lee Hu-Rak and Park Sung-Chul and numerous high-level talks give birth to the South-North Coordinating Committee and a direct telephone line to connect South and North Korea. The South-North Coordinating Committee

and numerous meetings without a meaningful result to open the two societies. With a great expectation and media heap, however, the South-North Coordinating Committee has had a very rocky road that eventually resulted the suspension of the organizational activity at the end of 1970s. Then on January 11, 1980 North Korea initiated a working level contact for prime Minister's meeting. Lee Jong-Ok, North Korea's premier sent a letter to then Prime Minister Shin Hyon-Hwak of South Korea. In turn, on January 24, 1980, Prime Minister Shin proposed to have a "preparatory meeting between working-level representatives of the two sides." With a positive response from North Korea, the two sides agreed to hold the first working-level contact at Panmunjom on February 6, 1980. Thus, all practical purpose, the South-North Coordinating Committee was replaced by the preparatory meeting to renew political talks. As the South-North Coordinating Committee, the preparatory meeting of Prime Minister's dialogue has experienced the stalemates, suspensions and other abuses. However, unlike previous meeting, this negotiation for the preparatory meeting has still sustain again with a tangible result. In the past years alone, the preparatory meetings were held several times in Panmunjom with no fruit. The most recently on July 12, 1990, North and South Korea agreed to have meeting in September, 1990 between the Prime Ministers of the perspective parties.

The second channel that two Korea have extensively used

to open the societies is the frequently held Red Cross talk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n a special statement on August 12, 1971, Choi Doo-Sun, president of the South Korean Red Cross, proposed to the North Korean Red Cross to hold a conference to discuss ways to ease the sufferings of dispersed families in the South and North Korea and ultimately arrange their reunions. The epochal North-South Red Cross talks begun in September, 1971. After numerous meeting and negotiations, in July 4, 1972, the South-North Joint Communique was simultaneously announced in Seoul and Pyongyang.

Interestingly, this was made public by Lee Hu-Rak in Seoul and by Park, Sung-Chul in Pyongyang. The partial text of the Joint Communique was as follows:

- (1) The two sides have agreed to the following principles for the unification of the fatherland:
First, unification shall be achieved through independent efforts without being subject to external imposition of interference.
Second, unification shall be achieved through peaceful means,.....
Third, a great national unity,....., shall be sought first. transcending differences in edeas, ideologies and systems.
- (2)
- (3)
- (4) The two sides have agreed to cooperate positively with one another to seek an early success of the south-North Red Cross Conference, which is currently in progress amidst the fervent expectations of the entire people of Korea.(6)

In spite of the mutual communique, as other meetings, the both sides had failed to agree on any details as to

achieve the family reunion. Then following the seventh full-dress meeting held in Pyongyang July 10-13, 1973, the Red Cross talks were all practical purposes suspended by North Korea. Then the working-level meetings of the South-North Red Cross Conference began on July 10, 1974.

It was then suspended again on March 19, 1978 by North Korea on the ground that "the routine joining Korea-U.S. military exercise". This on and off type of the meetings were held frequently, yet without a tangible result until 1985.

Then the North Korean Red Cross proposed to provide flood victims in South Korea with 225,950 bushels of rice, 500,000 meters of fabric, 100,000 tons of cement and various medicines. South Korea After numerous meetings with Pyongyang decided to accept North Korean Offers. Then a remarkable event had occurred on September, 1985. The both sides of Red Corss agreed followings; (1) the mutual visits by delegates of dispersed families between the two sides and an exchange of artist troupes between Seoul and Pyongyang in observance of the 40th anniversary of national liberation. The size of dispersed families will be about fifty home town visitors from Seoul and Pyongyang areas. The composition of performing artists will be about fifty art troupe members and to perform in Pyongyang and Seoul. At the same time, about thirty press members will be allowed to report the events for their papers. (8) Finally, these agreements were materialized in Pyongyang and Seoul. After the spectacular and historical events, however, the Red Cross talks have stalemated again

as before. Recently, on May 31, 1989 Pyongyang proposed that the two sides have the second exchange of hometown visitors and performing artists. To this, Kim Sang-Hyop, President of the South Korean Red Cross offered to resume the inter-Korea Red Cross talks in Pyongyang for discussion of the proposed exchange of hometown visitors and performing artists.⁽⁹⁾

The third channel that they have used is the economic talks between Pyongyang and Seoul. North Korea announces on October 15, 1984 that it would agree to hold immediate talks with South Korea to find ways to improve bilateral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Then South and North Korea held economic talks on November 15, 1984, for the first time. The first meeting discussed various projects as to (1) establish joint fishing zones; (2) reestablish North-South railway line; (3) establish a North-South economic commission; and (4)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natural resources.⁽¹⁰⁾ Both sides, however, failed to produce an agenda at the first meeting. Then the subsequent meetings of inter-Korean economic talks were held numerously in Panmunjom. The fifth inter-Korean economic talks were held in November 1985, again without any concrete agreement. The South Korean delegation proposed an immediate economic exchange, such as South Korea's purchase of bartering of the 300,000 tons of coal from the North Korea. Again the North Korea announced the unilateral suspension of all scheduled inter-Korean talks on January 20, 1986. Interestingly, North Korea suspended the economic talks on the

ground of South Korean Military operation. North Korea demanded to stop the team spirit, a joint combined ROK-US military exercise. Again North Korea argued that the Team spirit was designed to prepare for a Northward invasion. To this South Korea responded that this exercise was merely defensive in nature and intent and, therefore, it should not be used as a political pretext to foil the on-going economic talks. South Korea constantly has appealed to North Korea to reopen the inter-economic talks without avail.

More recently Rha Woong-Bae, Deputy Prime Minister and Economic Planning Minister of South Korea announces a set of measures on October 7, 1988 to improve the inter-Korean trades.⁽¹¹⁾ Again the suspended economic talks has not been reopened.

The fourth channel is the parliamentarians talks. On April 9, 1985, when the second South-North economic meeting slated for May 18, 1985, North Korea proposed to hold a South-North parliamentarians conference to discuss the question of adopting a "joint declaration on nonaggression".⁽¹²⁾ South Korea responded positively, and proposed on June 4, 1985 that the two legislative bodies debate the possibility of drafting a united constitution of Korea.

Finally, a preliminary meeting of the inter-parliamentarians talk was held in Panmunjom on July 25, 1985, followed by a second meeting on September 25, 1985,

The first meeting of the parliamentarians talks produced an agreement on the procedural matters. The agreement reached at the first meeting was primarily procedural matters such as,

form of conference, size of delegation, place of conference, time, reporting and recording, and traveling procedures.⁽¹³⁾

The second meeting was dead locked on the more substantive issues. North Korea insisted that the question of the joint declaration of nonaggression must be discussed first. At the same time, it demanded for the discussion of the banning the Team spirit training in South Korea. South Korea, on the other hand, argued that "the parliamentarians conference should discuss the legislation of constitution of an unified state" and "the formation of a consultative conference to draft such a constitution".⁽¹⁴⁾

South Korea also reminded that "it has long ago proposed to hold a top leaders meeting between the south and north to discuss the alleviation of tensions and the prevention of the recurrence war"⁽¹⁵⁾ In this vein, South Korea argued that the nonaggression pact must be negotiated between the government authorities. North Korea then offered that "concerning the alleviation of tension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and the acceleration of national unification" must be priority topic for the conference. This conference, like others, was unilaterally suspended by North Korea on January 20, 1986 on the ground of the Team spirit exercise.

The fifth channel to facilitate for a mutual dialogue is the sports talks. North Korea proposed on February 20, 1979 that the delegates of North-South table tennis associations meet at Panmunjon to discuss the forming a single team for the 35th World Table Tennis Championships to be held in Pyongyang. With a positive respond from South Korea, the

the first meeting was held on February 27, 1979 at Panmunjom. Then three more rounds of meetings were held on March 5, and March 9, and March 19, 1979. Throughout the meetings, North Korea's demand for "unconditional agreement of the formation of a single team" was not acceptable to the delegates of South Korea. With the controversy that could not be settled, between them, the meetings were brought to an end.

North Korea again proposed on March 30, 1984, to discuss the issue of sending a single South-North delegation to the 23rd Summer Olympic Games to be held on July, 1984, in Los Angeles, and subsequent Asian and world championships matches. Then the first South-North sports meeting was held on April 9, 1984.

The meetings of second and third were subsequently held on April 30, and May 25, 1984 respectively. From the inception of the negotiations, this sports meetings were heading rocky road due to a series of incidents occurred in Rangoon, Burma, and the abduction of actress Choi Eun-Hee and film director Shin Sang-Ok. Then the North Korean Olympic Committee on June 2, formally announced their boycott of the Los Angeles Olympics.

An additional channel for the communication was provided by the meeting of inter-Korean sports talks in Lausanne, Switzerland, under the auspices of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The first meeting took place on October, 1985 and the second on January, 1986. The third and fourth meetings were followed on June, 1986, and on July, 1987 respectively.

Again ever since the 24th Summer Olympic Games in 1988 were awarded to Seoul, Pyongyang protested to the IOC decision on the ground that the Olympic games should be jointly sponsored or co-hosted by North and South Korea.

As expected, at the first meeting, the North Korean delegation demanded that the 24th Olympics be co-hosted by the south and the north, and each must host half of the games. South Korean chief delegate responded to the fact that the right to hold the 24th Olympics in Seoul has now become an irrevocable fact. Then North Korean delegate demanded that the title of the Games be changed to either Korean Olympic Games or Korean Pyongyang-Seoul Olympic Games.

At the Second meeting, the IOC Executive committee proposed to the both sides to discuss followings:

- (1) the question of simultaneous entry by the South and North Korean delegations into the opening ceremony of the 24th Olympics.
- (2) discussion of the sports that may be held in both sides Jurisdictional areas.
- (3) discussion of the sports that may be held in the North Korean area.
- (4) discussion of the question of North Korea's participation in cultural activities.⁽¹⁶⁾

Again no substantive agreement was reached at these meetings.

At the third meeting held in Lausanne on June, 1986, a compromise plan was offered by the IOC. According to the plan, North Korea will have rights to host part of the 1988 Summer Olympic Games. Under this plan Pyongyang would host

all the table tennis and archery competitions, as well as long distance cycling game and one of the soccer qualifying rounds. Again no agreement could be reached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 fourth IOC-sponsored South-North meeting was held in Lausanne on July, 1987. North Korea renewed its demand to co-host the Summer Olympics. It also demanded to host eight sports or one third of the total games, in proportion to the population of the South and the North. Furthermore, it insisted that the full matches of soccer must be played in the North Korean area. At the same time, the opening and closing ceremonies should be held in Seoul and Pyongyang. Due to irreconcilabl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sides, this meeting was thought to an end without a significant result.

The sixth channel to facilitate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m is the contacts between non-governmental civilians or public persons who are not representing perspective governments and government officials. Recently, Rev. Moon Ik-Hwan and Whang Suk-Young, a prominent writer from South Korea, paid a visit to North Korea, and had conferences with Kim Il Sung in Pyongyang. South Korean opposition leader Kim Young-Sam met with Ho Dam who is assumed to be prominent in North Korean power structure, on June 6, 1989 in Moscow. They had a serious discussion on various pending subject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¹⁷⁾ Recently, it was reported to the fact that Suh kyong-won, a member of South Korea's National Assembly secretly paid a visit to and met with Kim

Il Sung in Pyongyang.⁽¹⁸⁾ More recently, a group of South and North Koreans, so-called Pan-nationalists assembly, had attempted to have a meeting walking through the Panmunjon, again without avail.

IV

The historical purview of North-South dialogues shows clearly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on the issue of how two Koreas must be integrated into one. Throughout the successive dialogue and conferences between them, there appears to be a basic difference between the two Koreas on the matter of the approach to the issue of unification, and other agendas well. South Korea generally contends that the integration of Korea or any other issues to be settled can only be achieved gradually in a step-by-step way. Since there are substantial ideological and economic differences, South Korea argues that it would take some time to bridge and accomodate them. Thus, the first task is to establish a sense of mutual trust and ultimately of security in both the North and the south, as well as in the U.S. the Soviet Union, China, and Japan. The fact that a great deal of ill feeling remains between the two Koreas stemming from the Korean war and on-going incidents such Rangoon, DMZ, and others makes it imperative that a peaceful

co-existen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e established before any serious negotiations for peaceful unification can be contemplated. Therefore, the peaceful co-existence of the two Korea must be recognized as a necessary first stage. Thus South Korea has tended to attempt to gradually promote to tackle any given issues including the unification.

Meanwhile, North Korea takes a "once and for all" approach to the unification question, contending that the longer the division exists, the harder it becomes to unity the country. It argues that the so-called "cross recognition" of each Korea's present separate identity will perpetuate a permanent division of the peninsula. Thus, North Korea always demands immediate political negotiations to hasten integration of two Koreas. This pattern of behavior has been consistent throughout every conference. North Korea has tended always go back to fundamental issues such as the withdrawal of U.S. troops regardless of the nature of conference.

Even at the Red Cross talks or the sports talks, North Korea falls back to the fundamental political issues which have nothing to do with the on going negotiation. Thus it seems clear that while federalism being favored by North Korea, functionalism can be fundamental to South Korean approach to the integration of two Koreas.

Another observation one can make by glancing history of the North-South dialogues is the fact that North Korean behavior during the negotiation appears to be either very

naive or even unreasonable in understanding the rule of international negotiation as well as the reality of South Korea. North Korea constantly insists to carry out its own terms to South Korea regardless of their relevancy to the conference agenda. If they were not accepted as North Korea desired, then the meetings were cancelled unilaterally on the grounds of some other, very often, irrelevant causes. It gives an impression that North Korea not only lives its own world, but attempts to make also rules for other country as well. It tends to create a perception that North Korean behavior being portrayed as an immature one.

Interesting thing, however, is the fact that, in spite of the failure of the dialogue, North and South Korea have agreed Several Fundamentals. First, both South and North Korea assert repeatedly that reunification is the most important goal for them. South Korean leaders have stated time after time that unification is the supreme task of the Korean People. North Korean leaders have supported the view that reunification is the greatest national duty and most important revolutionary task.

Second, both South and North Korea are in basic agreement that the unification issue is a matter of internal affairs. South Korea has asserted that unification is a problem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lone, and no other nations should interfere in their mutual efforts. Kim Il Sung and others of North Korea have also repeatedly claimed that

unification is essentially an internal affair of the Korean people. Interference by other countries, particularly the United States, should not be permitted. The two Koreas go even further in support of this policy of non-interference. South Korea openly declares that it will not interfere in the internal affairs of North Korea. Reciprocall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claims to subscribe to a principle of non-interference in each other's internal affairs.

Third, the two Koreas agree that Korea must be unified the country by peaceful means. Though North Korea once attempted to unify the country by military means during the Korean War, its official policy now, as repeatedly announced in various policy statements, is a peaceful one. For its part, South Korea, even though it advocated a policy of "marching to the North" during the Rhee regime, has stated on many occasions that only peaceful means are acceptable for accomplishing unification. Both Koreas, cognizant of the fact that their modernized military capabilities are mutually lethal once a war begins, constantly pledge to each other that they will avoid another catastrophe in the Korean peninsula.

Fourth, both Koreas recognize that there is a great degree of mutual distrust and misunderstanding between them, and concomitantly, that in order to eliminate such misunderstanding and distrust, a great deal of patience is needed on both sides. Thus North Korean leader professed that certain conditions must

be allowed to mature, proposing that an undefined period of time is needed to achieve unification, while South Korean leaders Confessed that a substantial period is required to complete preparations for the integration of Korea.

If indeed the two Koreas share such fundamental premisses about Korean integration process, why should there be so much difficulties to achieve any concret result? In spite of such numerous meetings that two Koreas have had in the past, only minor successes such as exchanges of small hometown visitors and troupe of performing artists can be registered in the history of Korean unification politics. Contrary to the avowed mutual commitment to peaceful unification, there is evidence of hostility, distrust, and deceitfulnes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is has been frequently reflected in the meetings between them. Why is it so? The answer is politics in nature. Numerous intractable political problems have impeded otherwise sincere effort of negoti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problems can be summed up as follows:

- 1) Ideological and governmental differences.
- 2) Memory of Korean War.
- 3) Personality of Political leaders in South and North Korea
- 4) Mutually shared inferiority complex and sense of insecurity.
- 5) Large size of military establishment
- 6) Korean political cultures that impede the ability to negotiate with once avowed enemy.
- 7) Leader's perception of negotiation process and the ultimate integration as a zero-sum game rather than variable-sum game.
- 8) Mutual distrust.
- 9) Differences of Socialization process.
- 10) Dyadic linkage with foreign powers.
- 11) Group think. (19)

What we have seen through the North-South dialogues, it is obvious fact that the politics dominate too much of the negotiation process between two Koreas. Of course, the negotiation between different political systems is essentially political in nature. However, political interferences to every conceivable issues and areas of negotiation between two different countries may become very dysfunctional to the extent that the intent and purpose of the negotiztion can be foiled totally. Therefore, question is, paradoxically, how to reduce political interference to stimulate politically sensitive integration proces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Perhaps, most potent and yet tangible approach to reduce politics and induce the negotiation process is to establish the economic integration before the political unification. The benefits that North and South Korea expect from cooperation in integrated enterprises may profoundly affect their behavior. Important thing is that decision maker's perceptions that economic collaboration offers benefits may spur further integration. Problem may, however, be that perceived possibilities of loss, including political one, may offset actual gains, particularly its steps toward integration seem to threaten the economic or political bases of important individuals or groups. Thus economic factors may be important inducements to the integration, but political calculations can also be salient, particularly those related to domestic politics.

Current economic environment in Korean peninsula,

unfortunately, is not very favorable to induce mutual economic collaboration between Pycngyang and Seoul. It is well known that North Korea is very isolated in terms of economic activities from the rest of the world. Prior to 1970, North Knore's international transactions were primarily limited to Communist countries. Then she gradually increased her trade volume with non-Communist countries. Even Kim Il Sung made it known that North Korea must expand her economic activities with non-Communist countries. In this vein, North Korea adopted a Law of Joint Venture in September, 1984. In spite of such strenuous effort, North Korea's trade volume is lagging quite far behind compared to that of South Korea. Unfortunately, it is expected that the gap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ill continue to widen in the future. Furthermore, the GNP of South Korea is many fold bigger than that of North Korea. This gap will also most likely widen in the future. Problem is that such a widening gap will perpetuate North Korea's syndrome of inferiority complex. It is very difficult to negotiate with a party that has deep rooted inferiority complex. Thus at this point, the worsening inferiority complex would become an even more difficult impediment to the intra-Korean economic exchanges. North Korea might calculate that the opening North Korean society may bring more loss than profit politically to the ruling leaders.

Yet with such a adverse condition, and with a strong

political will, as previously suggested, a few transactions between Pyongyang and Seoul can be accomplished by setting up following :

- 1) Separation of economic and politic.
- 2) Induce North Korea to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trade with or without South Korea.
- 3) Utilize the third party strategy.
- 4) Negotiation with sectorial approach.
- 5) utilize secret negotiation more often.
- 6) Establish free enterprize zone.
- 7) Joint development of the natural resources.
- 8) Establish a joint economic commission to promote economic exchanges. It must be composed primarily of economists or expert on economy of Korea.
- 9) Exchange a team of business people on a regular bases.
- 10) A permanent organization to supervise the inter-Korean economic exchanges. (20)

Economic and business transactions lead individuals from various units to interact socially. In turn, the growth of transnational society has been accompanied by increases in international travel and communication. As travel and communication increase, then various groups between ,Pyongyang and Seoul will be linked in mutually beneficial ways. As a result, more importantly, transnational linkages may form along functional lines. When the production of a particular industrial good requires the coordination of firms, workers, and marketing facilities in South and North Korea, demands for common system of calculating taxes, revenues, and others may arise. Joint enterpris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may generate further indirect links which can result in decisions to enhance the scope and degree of community authority. This

kind of functional link is what the neofunctionalists call "spillover". This "spillover" could arise even from non-economic sector as well. As the scope of Red Cross grows, the officials of the both countries will have more frequent contacts each others. As home visitors of the separated families increase, the Joint authority of North and South Korea may generate further indirect links among the people. As the troupes of performing artists travel and communicate with their counterparts, the functional interdependence of the artists between Pyongyang and Seoul may require further coordination and planning. This in turn spurs such activities in other areas such as academic, cultural and other would.

Frequent contacts between the people will gradually establish a common mechanism of learning and socialization process among Korean elites and ordinary citizens. Very essential thing to the integration is to reduce hostility, prejudice, and negative belief toward each others in Korea. Indeed, perceived benefits, multiplication of transactions, and increased interdependence may well provide for psychological acceptance of each others due to a common learning experiences. Furthermore, positive experienc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s promote identifications and complementarity of elite values. Eventually they have impacts on entire country. Social learning and purposive behavior may change elites and publics of their attitudes and behavior in response to what they have learned about the value of inter-Korean intercourse and cooperation.

In conclusion, it will take a long time to build a national community. At the same times, it will require a courage of the political leaders with an enlightened vision to build an enduring national community. However, merely time consumption and courage of leaders alone cannot accomplish the national unification. The both governments and the people must follow a certain step that carefully and methodically planned to solve such a complex issue as the Korean unification. To build a mutually acceptable national community, we have to solve various problems such as historically accumulated ill feelings, psychological and social fear and hostility, and politically intractable issue. Then we might be able to restore a mutual trust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Once a mutual trust is restored, it would be easier to expect the mutual cooperation between them. Paradoxically, a restoration of the trust and mutual cooperation require dialogues on various levels of the government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 most important dialogue, however, is the top level talks of Kim Il Sung and Roh Tae Woo. It is imperative to hold the South-North summit meetings between the leaders of South and North Korea. After all, they have to reach a mutual understanding, and then give a clear signal to the direction of unification policy of each government.

After a reasonable success of dialogues on various levels of the governments, then the economic exchanges through the

mutual cooperation must be in order. The mutual exchanges for humanitarian causes can be followed as the next step. Following this, avarious cultural exchanges can be accomplished without difficulties. Then a reduction of military forc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may be contemplated.

After the methodical completion of these steps, the security community may become a reality in the peninsula. From the security community, the two Koreas will form a rudimentary political body as the Korean Commonwealth. If the Korean Commonwealth becomes successful, then the Korean or even Koryo confederation can be materialized as the next stage of the integration process. After years of rule under the Korean confederation, if it becomes successful, the political union of entire Koreans will be emerged in the peninsula. Thus North and South Korea must begin the mutual dialogue as soon as possible. For this purpose, North and South Koreans must cooperate each others.

- Footnote -

- 1) See, Riker, William H., Federalism: Origin, Operation, Maintenance (Boston : Little, Brown, 1964)
- 2) Deutsch, Karl W., et al., Political community and North Atlantic Area: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the Light of Historical Experie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7).
- 3) Mitrany, David, a working peace System (London: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1943).

- 4) See Lindberg, Seon, The Political Dynamics of European Economic Integration (Stanford : Standford University Press, 1963).
- 5) See Etzioni, Amitai, The Active Society (New York: The Free Press, 1968), pp. 553-576.
- 6) For the full text and content analysis, see young Hoon Kang and Yong Soon Yim, ed., Politics of Korean Reunification (Seoul: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1978), pp. 229-230.
See, The Korea Herald (May 3, 1973).
- 7) See A White Paper on South-North Dialogue in Korea (Seoul: National Unification Board, 1988), P. 202.
- 8) Ibid, pp. 218-263.
- 9) See The Korea Herald (June 13, 1989).
- 10) Korea herald (November 16, 1984).
- 11) See for full text, Korea Herald (October 8, 1988).
- 12) See, The White Paper, op. cit. p. 296.
- 13) Ibid, pp. 296-307.
- 14) Ibid.
- 15) Ibid, p. 303.
- 16) Ibid. p. 313.
- 17) See The Korea Herald (June 15, 1989)
- 18) See Hankook Ilbo (June 29, 1989).
- 19) For the detailed analysis, See Yim, Yong Soon, "The Significance of the January 22 Unification Proposal", Korea & World Affairs (Spring, 1982), pp. 23-35.
- 20) For a detailed analysis, see Yim, Yong Soon, "Stategy for Promoting Inter-Korean Economic Exchanges", Pespectives on Inter-Korean Relations, edited by Hong Nack Kim and Yong Soon Yim (Seoul: the Institute of Korean Studies, 1987), pp. 174-179.

제 4 부

남북연합의 제도적 접근과 당면과제

Institutional Approach to the Korean Commonwealth
and Its Facing Question

90年代를 향한 統一政策 韓民族共同體 統一方案의 再照明

金 學 俊
(靑瓦臺 社會擔當 補佐役)

I . 序

1989 ~ 1990 년 사이에 일어난 東歐圈의 革命이 양독간의 평화통일을 향한 급속한 움직임과 함께 동서 陣營間의 새로운 시대의 막을 열게 함에 따라 한국문제가 최근 관심의 초점이 되고있다. 노태우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간의 1990년 6월 샌프란시스코 頂上會談에서 나타났듯이 한국과 소련간의 중대한 관계변화에 뒤이어 한국의 北方政策은 東歐圈과 마찬가지로 소련과 또 중국과도 정도는 낮지만 상호협조관계에 새로운 국면을 열고있다. 동시에 최근의 言論報道에 의하면 蘇聯과 중국이 간헐적으로 지속되는 南北對話의 빠른 진척과 최소한 몇가지 改革을 단행토록 북한에 대해 壓力을 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남북간의 평화적이고 漸進的인 통합은 相互敵對感과 광범위한 信賴構築機構의 결여로 질식될 형편에 처해있다.

1990년대의 南北統一에 대한 展望이 어떻든지간에 1980년대 이후 한국내의 정세변화가 국내통일 論議의 모든 範疇에 영향을 미쳐왔다는 사실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들면 1987년 당시 민정당 노태우 대표의 6.29 민주화선언 발표이후 統一問題는 한국내에서 정치권에서 뿐만 아니라 학생운동과 보다 과격한 정치집단 사이에서도 論爭거리가 되어왔다. 더불어 몇명의 著名한 在野人士의 訪北을 포함한 일련의 事態發展은 한국정부로 하

어금 보다 效率的인 통일정책을 講究하게끔 요구하게 되었다. 동시에 점차 다극화되고 또 가끔씩은 양극화되고 있는 국내의 統一問題에 관한 論爭은 정부가 더이상 北韓과의 關係業務 遂行에 獨占權을 누릴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국내의 與件이 점차 복잡하게 얽힘에 따라 한국의 1990 년대의 대북정책도 어느때 보다 더 完璧하고 效率的인 形態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서 本 論文은 1989 년에 발표된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을 多體制 국가의 통일에 있어서 다양한 概念을 통해 檢討하고자 한다.

II. 南北統一 方案에 대한 몇가지 提言

南北韓 당국의 그동안의 統一政策을 비교해 볼때 北韓의 統一政策은 일찍부터 남북한을 하나로 묶는 단일구조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였으나 한국은 최근에 와서야 비슷한 提議를 내놓았다. 예를들면 북한은 1960年代 이래 일관되게 남북한간의 聯邦制를 提議해왔고, 1980년 이후에는 「고려민주인방공화국」안을 提議해 오며 통일국가의 公式名稱으로서 고려를 採擇한 聯邦制의 原則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民族, 民主, 自由, 福祉의 原則위에 통일된 민주국가의 創設을 강조한 1982년의 「민족화합 민주통일」 方案에서 처음으로 統一國家의 未來像을 提示하였다. 이것은 하나의 진전이나 統一國家의 名稱은 결여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한국정부가 남북한을 어떻게 하나의 制度的 틀속으로 묶느냐, 또 보다 단순히 南北韓을 어떻게 하나의 지붕아래 덮느냐, 또는 남북한 위에 어떻게 하나의 모자를 씌우느냐의 문제를 설명해 줄 보다 現實的인 統一方

案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狀況은 野黨이나 在野勢力으로 부터 ‘共和國聯邦制’ (金大中案)라든가 ‘聯邦制’ (文益煥案) 또는 당시의 統一民主黨이 주장했던 ‘한민족聯合體’ 등의 요구를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背景에서 韓國政府의 남북한을 어떤 體制統合의 形態로 묶는 統一方案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으며 또 國土統一院이 1988년 2월 第6共和政의 出帆以後 ‘한민족共同體’ 概念과 ‘南北聯合統一方案’을 提示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시 統一院의 李洪九長官은 1989년 1월 5일 政府가 “1민족2체제”에 기초한 體制聯合을 구상하고 있으며 그것은 결국 1민족1국가를 지향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렇다면 한국은 왜 이렇게 늦었는가? 이 質問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한국정부의 統一政策 遂行의 법적 근거를 상기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第1共和政으로부터 現第6共和政에 이르기까지 憲法은 대한민국의 領土를 韓半島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으며 現行憲法은 第3條에서 그러한 內容을 담고있다. 이 領土條項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반국가 단체이며 북한은 앞서 言及한 反國家 團體가 불법적으로 占據하고있는 地域이라고 規定하고 있는 舊反共法 및 이것을 吸收한 國家保安法의 해석에 의해 支持되고 있다. 결과로서 韓國政府의 基本立場은 북한주민은 그러한 不法的 占領으로부터 解放되어야만하고 북한의 反國家 團體를 解體시키며 우선적으로 불법적으로 점령당한 地域을 회복시키는 것이 한국정부의 法的義務라는 사실에 두고있다. 이러한 立場은 1948년 第3次 國際聯合總會가 採擇한 決議文의 한국 나름대로의 해석에 根據하고 있다. 이 決議文은 유엔 감시하의 總選에 근거하여 구성된 대한민국정부가 總選이 開催된 지역에서 유일

合法政府임을 宣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이 決議文을 한국정부가 韓半島에서 唯一의 合法政府라는 立場을 公고히 하는데 이용해 왔다.

이러한 기본입장은 1970년대까지 維持되었던 한국판 할슈타인 原則의 採擇에 反映되었다. 즉 한국정부가 韓半島에서 唯一 合法政府라는 사실과 ‘두개의 한국’의 狀態를 正當화한다는 이유에서 한국정부는 북한을 承認한 나라와 斷交하였으며 남북한 유엔 同時加入案에 단호한 반대의 立場을 維持하였다. 한국정부의 이러한 立場은 1950년대에는 國際社會에서 대체로 받아들여졌으나 1960년 이후 특히 非同盟 운동의 高조와 함께 북한의 실체도 國際社會에서 認定되어야 한다는 傾向이 보다 더 뚜렷해졌다.

결과적으로 한국정부가 基本的으로 갖고 있는 根本적인 어려움은 만일 國際社會에서 두개의 한국을 받아들이는 국제사회의 立場을 수용한다는 것은 사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反國家團體라고 주장해온 한국정부의 기본 立場에 矛盾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한국정부의 이러한 어려움을 緩和하기 위하여 1972년 이후 採擇된 憲法에는 韓半島의 평화통일의 條項을 포함해 왔으며 이는 한국이 북한을 최소한 政治的 실체로 인정하였음을 의미하고 있다.

예를들어 독일의 경우를 살펴보면 통일에 대한 매우 다른 接近을 하고 있음을 알게된다. 잘 알려진 바와같이 2次大戰以後의 分斷과 동독과 서독의 政府樹立에 이어 東獨政府는 ‘두개의 독일’론을 主張하면서 대등한 두개의 독일이 存在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背景에서 동독은 대등성의 原則위에서 독일 국가연합의 窮極的 創設을 提議하였다. 서독 역시 묵시적이지만 두개의 독일의 存在를 인정하였다. 한편 서독은 1960년대말 브린

트(Willy Brandt) 당시 首相이 동방정책을 발표하기 이전까지는 독일에 대한 유일한 代表權을 主張하였다. 그러나 서독은 자신의 領土權을 서독에 限定시켰다는 점에 留意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서독의 기본법은 서독의 관할 領土에만 適用되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므로 서독은 처음부터 하나의 독일의 創設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두개의 독일의 存在를 수용하였다. 이러한 立場은 서독으로 하여금 동서독의 유엔가입을 인용하는 基本條約을 1972년 동독과 締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 기본법 23條는 東獨地域을 構成하는 州가 西獨聯邦體制의 편입을 擇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지적해야만 할 것이다. 現在 進行中인 獨逸統一節次는 豫定된 1990년 10월 3일의 全獨選舉에서 統一獨逸이 기본법 23條에 의거 구성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경우를 보면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은 각각 자신의 正統性을 주장하여 왔으나 1970년말 이후 중화인민공화국이 ‘1 민족 兩個體制’ 方案 즉, ‘하나의 中國’이라는 前提下에 두체제의 存在를 認定하는 方案을 主張하였다. 여기에 對應해 대만의 一部 학자와 미국에 있는 대만계 학자들은 ‘1個民族 多體制國家’ 論을 提起해 왔다. 그러므로 중국의 接近方案은 하나의 중국이 存在하지만 여기에는 두체제가 있다는 점을 強調하고 있다. 이러한 대비되는 立場에서 볼때 한국문제에도 類似한 接近方案의 適用이 可能할 것인가?

南北韓의 매우 강한 민족주의적 전통에 비추어 볼때 남북한 어느쪽도 독일처럼 ‘두개의 한국’ 論을 公式的으로 採擇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여기에서 韓半島의 현재 여건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중국의 모델에 보

다 가까워진다고 단언할 수 있다.

- (1) ‘1民族 2體制’方案의 採擇을 前提하고
- (2) 어느쪽도 唯一 代表權을 拋棄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국가로서가 아니라 體制로서 인정할 뿐이며
- (3) 兩側은 體制聯合이나 聯邦이라는 形態로 接近하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바와 같이 남북한간의 접근은 몇가지 이유에서 어려운 것같이 보인다. 첫째 북한이 ‘두개의 조선’政策을 받아들이는 경우 김일성 獨裁體制는 남한의 해방을 一貫性있게 주장해온 관계로 内部的으로 심각한 반발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 남북간의 평화공존의 논지를 확립하기 위해 領土高權을 실질적 통치권이 미치는 地域으로 한정시키는 改憲을 하게 되면 내부적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정부가 통일이 成就될 때까지 暫定的으로 분단을 인정화시킴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평화적인 해결방안을 摸索하려는 조치를 취한다면 한국정부는 한국내의 일부 강경 反政府 세력으로부터 反統一 태도로서 비난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그러한 措置가 얼마나 많은 국민의 支持를 받게될지는 확실치 않지만 한국정부가 보다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통일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종래의 統一方案의 애매성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데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慎重할 것이다.

Ⅲ. 南北聯合의 制度的 틀의 형성을 위해 考慮되어야 할 몇가지 事項들

지금까지의 研究에 나타난 意見에 기초하여 볼때 制度的 틀이라는 형식에 根據한 統一方案을 마련하는데 있어 考慮되어야 할 事項들은 무엇인가? 몇가지 重要한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措置들은 이미 提示되어온 統一方案의 연장선 위에서 遂行되어야 한다는 점을 留意하는 것이 重要하다. 물론 새로운 方案과 方式도 무시될 수는 없지만 政策의 일관성을 極大化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批判的 이유에서 이미 세워진 범주내에서 遂行되는 것이 重要하다.

첫째, 韓國政府의 통일방안은 계속성이 결여되었고, 그러므로 非現實的이라고 비난 받을 수 있다.

둘째, 韓國政府의 통일방안은 새로운 政府가 設때마다 새로운 方案이 나오므로 信賴性을 잃은 것같이 보인다.

셋째, 韓國에 반대되는 北韓이 통일방안에 관해서는 주도하고 있는 것같이 보인다.

넷째, 한국정부의 統一方案은 대체로 비현실적으로 보이고 그것의 의도도 잘못 理解될 수 있다.

그렇다면 韓國政府의 기본적 통일에 대한 立場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서 韓國은 平和統一이라는 窮極的 목표를 위해서는 南北交流 협력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러한 점진적 단계를 통해서 相互信賴가 증진될 수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이러한 입장은 가끔 ‘先平和 後統一’이라는 구호로

言及되기도 하고 한국 정부가 급속한 統一보다 평화와 현상유지를 強調해 왔다는 점에서 통일문제에 擧장부린다는 非難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平和에 대한 강조는 대단히 重要하다. 왜냐하면 韓半島에서 또 다른 戰爭의 發발을 防止하고 信賴構築 조치들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는 努力을 하는데 重要하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에서 軍縮이나 軍비통제 조치가 南北韓에 취해질 수 있고, 이로써 모든 軍事問題들에 대한 상호 同意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基本的 接近 방안은 몇사람이 ‘統一이 가장 높은 가치이므로 어떠한 形態의 통일도 좋다’라든가 심지어 ‘共產化 統一’도 수용할 수 있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취해질 수 있고 이로써 모든 軍事問題들에 대한 상호 합의가 成立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基本的 接近方案은 통일을 성취해 나가는데 있어 부각된 政治軍事問題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달리 말하면 韓國은 자신의 추구하는 주요가치가 최소한의 條件으로서 보장된다는 양해아래서 통일문제가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立場의 근거는 대한민국 정부가 歷史的 發展에 기초한 민족사적 正統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말해 韓國政府의 元典은 大韓民國 臨時政府로 繼承되었으며 韓國政府는 大韓民國 臨時政府의 法統으로 繼承될 수 있다. 달리 말해서 韓國政府의 法統근거는 大韓民國 臨時政府의 法統으로 繼承될 수 있다.

더우기 국가계승의 다른 측면에서도 韓國政府는 한국의 歷史的 文化的

理想的 기원의 많은 것을 보유하고 있다. 大韓民國 政府가 1948年 8月 15日 樹立되었을 때 인구는 2천여만명이었으며 조선 民主主義 人민 공화국이 같은해 9월 樹立되었을때 인구는 9백만 정도였다. 달리말해 韓半島에 거주하는 人口의 3분의 2 이상이 大韓民國을 樹立한 것이다. 오늘날에도 韓國의 인구는 北韓의 인구에 비해 2배나 된다. 韓國의 인구가 4千2百萬인데 비해 北韓은 2千1百萬 정도인 것이다. 결과로서 장래의 統一問題에 관한 論議는 이점을 고려에 넣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소수의 이해(北韓)가 무시되어서는 안되지만 대다수의 見解(韓國)가 소수의 見解(北韓)에 뒤따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韓國의 고양된 지위에 相應하는 또 다른 要因은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높아지는 국위이다. 1960年代까지는 韓國에 대한 국제적 승인은 비록 以後에 그 차이가 줄어들었지만 北韓을 압도적으로 누르고 있었다. 韓國의 높아지는 經濟力과 보다 개방적인 外交政策에 힘입어 韓國의 국제적 지위는 北韓에 비해 보다 강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점차 活氣차고 생동적인 형세가 반드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重要 문제는 韓國의 최소한의 본질을 維持하면서 北韓政府의 존재를 인정하는 현실적통일 방안을 추구하는 것이 可能한가의 문제이다. 이 의문에 대해서는 다음 2가지 전제 아래서 대답될 수 있다.

첫째 南北間의 동등성의 原則이 고려되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몇가지 문제를 풀기 위한 努力은 南北韓의 동등성을 인정하고 나서 履行되어야만 한다. 예를들면 7·4 共同聲明에 나타난 동등성의 確認에 근거하여 만일 南北韓의 각각 자신의 내부법과 제도를 재정립한다면 평화통일을 실현

하기 위한 制度的 노력은 훨씬 쉬워질 것이다.

둘째 비중의 原則이다. 달리 말해서 窮極의 統合의 경우 한국의 위치는 다수파의 그것으로 北韓은 소수파의 그것으로 일치되게끔 하는 것이다. 北韓이 이를 받아들이기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또 國際社會에서 肯定的으로 받아들여리라고 기대하는 것도 비현실적이지만 이러한 조치는 몇 가지 주요 문제를 解決하는데 큰 效果를 나타낼 것이다. 그러므로 南北韓은 동등성의 原則을 받아들여야 한다.

만일 이 原則이 받아들여진다면 이것은 南北韓이 상대방을 자신의 체제 안으로 吸收한다는 概念을 확실히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각자는 그들의 차이점을 平和的으로 解決한다는 노력에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을 意味한다. 그러나 동등성의 原則에서 통일국가를 創設하려는 노력에서도 南北韓의 비중에서의 차이가 고려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念頭에 두어야만 한다. 만일 南北韓이 이 점에 留意를 본다면 그들은 각각 그들 자신만이 유일 대표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버려야만하고 그러한 立場은 각각의 대내외적 法制度에 반영되어야만 한다.

예를들면 北韓은 언방제 아래서는 상대방의 存在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함에도 불구하고 北韓은 자신이 韓半島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남조선 정부는 ‘미제국주의의 殖民地’이고 남조선의 ‘해방’을 공식 路線으로 規定하고 있다. 남한의 해방을 그들의 주요 정치목표로 간주하고 있는 시점에서 北韓의 統一方案을 어떤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韓國의 경우에도 北韓과의 타협없이 統一政策을 현실적으로 遂行한다는 것을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統一政策은 평화통일을 전제하고 있고 結果로서 北韓의 통치실체를 인정하는 보다 현실적이고 效果的인 政策이 요구되고 이러한 조처는 결국 韓國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적 대표라는 概念의 포기를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서 南北韓이 자신의 유일 대표권을 철회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힘들다. 왜냐하면 몇가지 이유로서 國內적으로 지탱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韓國으로서는 北韓이 그들대로의 방식으로 韓半島 統一에 집착하고 있는 시점에서 기꺼이 현재의 立場을 포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적어도 당분간 南北韓이 그들 각자의 立場을 유지하면서 동등성의 原則 아래서 暫定協定 형태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다.

Ⅳ. 한민족共同體論에 대한 檢討

지금까지 평가되어온 전제들 아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한민족공동체 概念의 근거를 분석해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독특한 용어는 두가지 주요 의미를 갖고있다. 첫째 공동의 유산을 누려온 한민족의 同質性에 대한 一般概念이다. 이 공동의 유산은 궁극적으로 政治的 共同體로 지향하게 될 공동의 文化, 社會, 經濟共同體가 형상화 되어있다. 둘째, 북한의 연방제 방안에 대항하는 보다 구체적인 개념으로서 특징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한국학자로서 한민족공동체 접근방안을 처음으로 주장한 학자중의 한사람은 李洪九 前통일원장관으로서 그는 1976년 멕시코시티에서 열렸던 '韓國 福祉共同體와 아시아共同體'라는 주제하의 동북아시아 인문학회 총회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이를 주장하였다. 李洪九교수는 이 방안의 특징은 통일의 주체가 정부나 권력체제가 아니라 민중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며 첫번째 우선 순위를 화해의 1次的 段階로서 민중의 福祉에 두자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 다른에는 金應, 安秉俊, 李相禹, 李洪九, 韓昇洲 교수등 다섯명의 교수들의 공동연구에서의 내용을 근거로 한 '民族共榮體'案이다. 그들은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남북 상호간의 협력이 강조되어야 하며, 또 그들은 정치적 협상과 민족적 화해를 통해 남북이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최고지도자간의 정상회담의 개최를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에는 1988년 당시 統一民主黨이 내놓은 「한민족共同體」案이다. 이 방안은 자주, 화해, 단계적 성취, 평화, 민족대참여의 원칙에 입각해 통일의 달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 방안은 한국내의 民主改革을 단행하고 북

한에서의 민주개혁을 촉구하며 다음으로는 모든 분야에서의 점진적 교류와 비정치 분야의 協力強化 궁극적으로 1민족 1체제로 발전시키는 목표를 지향하게 될 政治外交 分野의 협력의 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마지막 예는 재야인사인 金洛中씨에 의해 주장된 ‘統一高麗共同體’案으로 불리는 통일방안이다. 여기에서 金洛中씨는 남북간 기본조약을 체결하여 평화통일을 달성시키는 노력으로서 高麗民族聯邦會議를 창설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또 남북한의 청년들이 비동맹 중립노선을 채택하게 될 통일고려국으로의 과정을 담당할 수 있는 권한을 점진적으로 떠맡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최근의 예로 李洪九 당시 통일원장관은 1989년 1월 5일 협력에 근거한 잠정적 국가연합의 창설을 조장하기 위해 한민족共同體案과 南北聯合案을 제시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는 ‘1민족 2체제’의 원칙에 근거하여 모든 분야의 교류를 촉진시킬 ‘聯合’이 창설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남북한은 상대방체제를 서로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民族聯合’을 창설하여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人的 物的交流를 촉진함으로써 신뢰가 회복되고 여기에 기초하여 ‘1民族 2國家’로서의 체제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흥구 前統一院長官의 ‘民族聯合’概念은 북한의 연방제 제안에 대항하는 특수개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1民族 1國家’체제의 창설을 주창한 1988년 7월 7일의 노태우 대통령의 특별선언에서 나타난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때 한민족공동체의 개념의 육성은 체제통일의 발전과정에서의 일련의 사태발전에 영향받게 될 것이다. 달리말해 社會主義圈의 改革의 바람과 함께 멀지않은 장래에 남북한간에 교류협력이 공식화되는 경

우 북한도 韓國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 경우 북한에서도 自由化的의 움직임이 일어날 것이며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의 원칙의 수용을 구체화하게 될 것이다. 이런 여건 하에서 한민족共同體 概念은 福祉와 理念的 共同體的 측면을 포괄하게 될 것이다.

V. ‘南北體制聯合論’에 대한 檢討

한민족공동체 방안의 논점 가운데 논란의 주요 요인은 남북체제 연합론의 개념에 있다. 우선 國家聯合의 概念은 국가들의 통합 즉 주권을 보유한 영토적 국민국가들의 통합을 의미한다. 더우기 이 과정에서 中央政府는 통합된 국가의 대표들에 의해 제한된 권리를 보유하며 수립되나 이것은 국민이나 각 회원국가의 정부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각 회원국은 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국가 연합에서 탈퇴하기를 원하면 국가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 예외가 있지만 여기에서 논점이 되고있는 聯邦의 概念은 위에서 말한 國家聯合과 구별된다. 국가연합제로 출발했다가 聯邦制로 바뀐 경우는 2가지 경우로서 하나는 美國 國家聯合 (American Confederation) 이 존재하였던 1781년부터 1789년까지의 미국의 경우이며 또 하나는 스위스의 경우로서 스위스는 1848년에 聯邦制 憲法을 채택할 때까지 國家聯合制를 채택해 스위스國家聯合 (the Swiss Confederation)이란 명칭을 썼는데 연방제로 바뀐 뒤에도 그 명칭은 그대로 쓰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국가연합제는 가맹국의 주권을 인정하며, 즉 독립된 주권국가들의 하나의 회의체라는 사실이다. 오늘날의 예로서는 국제연합을 들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볼때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상호 제도적 인정을 위한 첫

단계로서 남북한은 보다 공식적인 통합을 위한 잠정적 조치로서 國家聯合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民族, 言語, 歷史, 文化를 달리해온 국가들 사이에서는 국가연합 창설 사례를 볼 수 있지만 남북한처럼 민족적 동질성을 가진 경우에는 국가연합을 채택한 사례가 없다. 더우기 그러한 개념은 - 그것이 잠정적 조치일지라도 - ‘1民族 2國家’ 체제를 연장하는 것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

여기에 대비되는 제도가 연방(federation)의 개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연방의 경우, 여기에 가입한 가맹국은 각각의 주권을 포기하고 결과로서 주권은 새로 구성된 聯邦政府가 행사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 제도의 실질적 결과는 일단 연방이 성립되면 統一國家가 樹立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이 방안이 한반도 경우에 적용된다고 했을 때 연방정부가 주권을 행사하고 또 남북한이 각각 자신의 주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생각하기는 어렵다. 달리 말해서 남북한이 그들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을 마음 내키지 않아한다는 사실 때문에 연방제로 통일국가를 수립한 경우에도 민족내부에 갈등이 따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國家聯合과 聯邦制 사이의 중간상태가 체제연합의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만일 국가연합의 개념이 ‘1民族 2國家’의 원리이고 연방제가 ‘1民族 2地域政府’의 원리라면 체제연합의 개념은 ‘1民族 2體制’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달리 말해서 남북한이 國際關係에 있어서는 각각의 주권을 행사하고, 뚜렷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연합의 기초에서 쌍무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요약해서 말하면 體制聯合方案은 現實적으로 남북을 분단시키고 있는 條件을 충족시키고 한편으로는 統一이라

는 共同目標을 달성시키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통일 의 논거는 연방의 형태에서 강하게 되나 남북한이 처해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은 이 방안을 배제하고 있고 國家聯合 형태에서는 통일의 논거가 미약하다.

그러면 體制聯合方案의 특징은 무엇인가? 우선 이 方案은 상대방의 體制를 인정한 토대위에서 민족적 協力과 화해의 조성을 추구함으로써 남북한간의 긴장을 완화하는데, 큰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그러므로 한민족共同體 統一方案의 주요 긍정적 특징은 한반도에서 두개의 다른 체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나아가서 平和統一의 기반을 조성하게 될 交流와 協力の 基礎 위에서 쌍무관계의 개선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VI. 結 語

한민족共同體 統一方案과 관련하여 노태우대통령은 1989년 9월 11일 ‘한민족共同體統一方案’을 발표하고 과도적인 단계로서 ‘南北聯合’案을 내놓았다. 이 제안의 전반적인 내용은 앞에서 설명한 민족공동체 개념과 다름이 없다.

안병준 교수에 따르면 민족연합이라는 표현은 平和와 協力の 원칙하에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쏟는 노력의 결집을 뜻하는 것이며, 이러한 절차를 ‘民族聯合’으로 표현함으로써 政治的實體로서 특정 체제로 표현되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이 제안의 원리에 상호 공동

이익이 보존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각기의 주권을 포기함이 없이 이러한 과도적 단계에 기초하여 統一民主國家의 창설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향한 화해와 협력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통일방안은 또 종전에 한국정부에 의해 제시되었던 통일방안의 취약점을 극복하였으며 한반도에서 경쟁체제의 존재를 기꺼이 수용함으로써 남북한간의 긴장을 완화하는데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다.

분명히 한민족共同體 統一方案은 북한당국에 의해 즉각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며 가까운 장래에 어떤 실질적 진전을 기대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구에서의 사태발전에서 보여지듯이 예상밖의 政治的 變化가 일어날 수 있으며 미소간의 새로운 협력 국면에서 나타난 동서간의 긴장완화 추세를 볼때 남북관계도 1990년대에는 진전될 지도 모른다고 추측하는 것도 전적으로 非現實的이지만은 아닐 것이다.

The Korean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As Seen Through the Various Concepts on the Unification of Multi-System Nations

Kim Hak joon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Social Affairs
(Former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I. Introduction

As the "revolution" of Eastern Europe in 1989-1990 ushered in a new era in East-West relations concomitant with the rapid movement towards the peaceful unification of the two Germanies, the Korean problem has been the focus of recent attention. Coming on the heels of significant changes in South Korea's relationship with the Soviet Union as evinced by the San Francisco summit meeting between President Roh Tae Woo and President Mikhail Gorbachev in June, 1990, Seoul's Northern Policy has introduced in a new phase of cooperation between with the Soviet Union as well as Eastern Europe and to a lesser extent, with China. At the same time, recent press reports have suggested that both the Soviet Union and China have begun to pressure North Korea to enact at least some reforms and to also expedite progress in the on and off South-North dialogue.¹⁾ But the process of peaceful and incremental integ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has been stifled by mutual hostility and the lack of any wide-ranging confidence building mechanisms.

Whatever the prospects may be for unification between the two Koreas in the 1990s, it is important to note also the changes in South Korea since the 1980s have influenced the entire spectrum of the domestic unification debate. For example, after the enunciation of the June 29 Declaration on Democratization in 1987 by President Roh (then the Chairman of the ruling Democratic Justice Party which has been reconstituted since February 1990 as the Democratic Liberal Party together with the former Reunification and Democratic Party and the New Democratic Republican Party) the unification issue has been a source of major debate within South Korea across the political spectrum but particularly amongst the student movement and the more radical political organizations. In addition, a series of developments, including the visit to North Korea by a number of prominent South Korean dissidents in 1989, have resulted in a growing demand for a more effective unification policy on the part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t the same time, the increasingly pluralized and at times polarized debate within South Korea on the unification issue has meant that the government no longer has a monopoly on the conduct of relations with North Korea. Therefore, as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 becomes increasingly complex South Korea's policy towards North Korea in the 1990s will warrant a more complete and effective posture than ever before. At this crucial juncture,

this paper seeks to examine some formulae, e.g., the Korean National Community Formula, the Unified South-North Systems Formula, and the Korean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propos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 1989 through the various concepts on the unification of multi-system nations.

II. Some Reflections on the Methods for the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In the course of comparing South and North Korea's unification policies over the years, it has been perceived that North Korea from the earlier period has paid an attention to a single structure under which the two Koreas can be unified, while the South has only in the recent period come up with a similar proposal. For instance, since 1960 North Korea has consistently called for a confed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nd since 1980 it has articulated the so-called Democratic Confederate Republic of Koryo proposal which upholds the principle of confederacy for a unified state with the official state name of Koryo. In South Korea's case, however, it was only in 1982 that it first proposed a future prospect for a unified state under the National Reconciliation and Democratic Unification proposal which stressed the creation of a unified and a democratic state built on the principles of nationalism, democracy, independence, and welfare. Whilst this was an improvement it still did not include, for example, the official name of the to-be-unified state.

Therefore, it is penultimate fo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develop a more realistic unification proposal which takes into account how to develop a single systematic framework for the South and North, or to put it more simply, how to create a single roof or a hat over the South and the North. Such a state of events ushered in calls from the opposition political parties as well as the opposition at large including the "Confederation of the Republics Proposal" (the Kim Dae-Jung proposal), "Confederation" (proposed by the Rev. Moon Ik-Hwan) or the "Korean National Confederation Proposal" which was called for by the Reunification and Democracy Party. 3) Seen from these perspectives, it was imperative fo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come up with a unification policy which included some form of systematic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and it is probably why the National Unification Board formulated in early 1989 the Korean National Community and the Korean Commonwealth Unification formula. Specifically, then Minister of National Unification Lee Hongkoo announced on January 5, 1989 that the government was considering a confederation based on a "One Nation, Two System" framework which would eventually lead towards the creation of a one nation, one state system. 4)

Then why has the South been so late? To answer this question, it is important to recall the legal basis on the conduct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unification policy.

From the First Republic until the current Sixth Republic,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stipulated that its territory consists of the whole Korean peninsula and its adjacent islands and the current constitution of the Sixth Republic (Article 3) maintains a similar clause. The basic spirit of this clause is legislated in the more specific form in the former anti-communist law and the present national security law which stipulates tha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an anti-state organization which illegally occupies a part of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 result, the basic posture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rested in the allegation that the citizens of North Korea should be free from such an illegal occupation and that it is the legal duty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dissolve the anti-state organization in the North and to also retake the territorial area which was illegally occupied. Such a position was based also on South Korea's own interpretation of a resolution by the third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in 1948. Although it stipulated tha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was formed on the basis of an election observed by the United Nations was the only legitimate government in the areas where that election was hel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used this resolution to solidify its position that it was the only legitimate government in the Korean peninsula. This basic posture was reflected in the adoption

of the South Korean version of the Hallstein Doctrine which was in effect until the early 1970s, i. e., given that South Korea was the only legal government in the Korean peninsula, the South Korean government broke off relations with those states which recognized North Korea since it would legitimize an anti-state organization as a sta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position was widely accepted throughout the 1950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ut after the 1960s, particularly with the rise of the Non-Aligned Movement a growing trend was visible which articulated that North Korea should also be recogniz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result, the basic quandary confronting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as that if it accept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acceptance of the two Korea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uch a move would in fact prove to be contradictory of South Korea's basic position which held tha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as an anti-state organization. Therefore, in order to modify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quandary, succeeding constitutions which were adopted after 1972 have included provisions calling for the peacefu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mplying that the South recognizes the North at least as an independent political entity. On July 7, 1988, the South went one step forward by declaring that the North is a South's partner in pursuing the national reconciliation and unification.

A brief overview of the German example, for instance, reveals a different approach towards unification. As is well known, following the partitioning of Germany after World War II and the creation of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in the East and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in the West, East Germany officially advocated the two German state theory, arguing that there existed the two equal German states. From this perspective, it called for the eventual creation of a confederated German state on the principle of equality. West Germany also recognized, albeit tacitly, the existence of two German states. Although, until the enunciation of Ostpolitik by Chancellor Willy Brandt in the late 1960s West Germany continued to apply the Hallstein Doctrine advocating West Germany's sole representation claim over the whole Germany, West Germany's territorial jurisdiction only applied within its own border. In other words, the provisions of the Basic Law of West Germany were only applicable to the territory under the jurisdiction of West Germany. Therefore, West Germany from the onset accepted the existence of two German states as a fait accompli. Such a position enabled West Germany to conclude the Basic Treaty with East Germany in 1972 which allowed for the two Germanies to enter the United Nations.⁵⁾ [Nevertheless, it should be pointed out that under Article 23 of the West German Basic Law, the provinces comprising East Germany could opt to enter the West German federal structure. The on-going German unification process has shown that with the planned October 3, 1990 all-German election a unified German state will be

formed according to Article 23.]

As for the Chinese example, bot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ainland) and the Republic of China (Taiwan) have both maintained its own legitimacy but since the late 1970s, the PRC has maintained the so-called "One Nation, Two Systems" approach which means that while there is only one China, there are two different systems. In contrast, some scholars in Taiwan as well as Chinese scholars in the United States with ties to Taiwan have called for the so-called "One Nation, Multi-system State."⁶ Therefore, the Chinese approach stresses that although there is only one Chinese nation there are also two systems.

Given these contrasting positions, is it feasible to call for a similar approach to the Korean problem? In light of the strong nationalistic tradition in both South and North Korea it is difficult to imagine that a "Two Korea" policy could be officially accepted by either of the two sides as in the German case. But seen from this perspective, it could be asserted that the current situ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has moved perhaps closer to the Chinese model for the following reasons: (1) assuming the adoption of the "One Nation, Two Systems" approach; and (2) considering also that neither side does not give up on the notion that each side retains unique representative powers but nevertheless recognizes each other not as a state but as a system; and (3) that both sides move towards a form of a commonwealth or a union.

Nevertheless, as has been noted above, any such rapprochement between the two Koreas may prove to be difficult for a number of reasons. To begin with, in the event of North Korea's acceptance of a "Two Korea" policy, the Kim Il Sung system will certainly face serious repercussions domestically since North Korea has consistently called for the "liberation" of South Korea. As for South Korea, should it revise its constitution which limits its territorial jurisdiction to the area under its realistic control in order to enhance the basis for the peaceful co-existence between the two Koreas, it will confront domestic opposition. More specifically, wer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undertake such a move as a measure to seek a more rational and peaceful solution towards unification by temporarily stabilizing the state of partiti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ould be accused of being anti-unification by some of the more strident opposition groups within South Korea. Therefore, it seems prudent to suggest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place a greater emphasis on decreasing incrementally such uncertainties as it seeks to advocate a more realistic and implementable unification policy although it remains uncertain as to how much public support such a move will receive.

Based on the reflections noted in this study thus far, what are some of the steps which could be taken in the formulation of a unification proposal based on some form of a systematic framework?

The key question is whether it is possible to formulate a realistic unification proposal which takes into account the existence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while maintaining at its minimum the principles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answer may be found in the principle of equality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Specifically, efforts to solve a number of issues should be implemented after recognizing the equality of the two Koreas. For instance, as based on the affirm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in the July 4 Joint Communique, systematic efforts to realize peaceful unification would be facilitated if both sides are willing to reorder their respective domestic laws and systems. If this proves to be the case, it means that both sides must resolutely discard the notion of absorbing each other's system. This means that each side must recognize each other as they are in an effort to peacefully resolve their differences.

Nevertheless, it is difficult to imagine at the present time that the two Koreas are likely to discard the so-called sole representation claim since it would prove to be untenable domestically for a number of reasons. For South Korea it is difficult to imagine that it would readily give up its current position when North Korea insists on unifying the peninsula under its own terms. Therefore, it seems realistic to assert that for the time being both sides will continue to maintain their respective positions while striving to

reach some form of modus vivendi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III. A Review of the Korean National Community Proposal

Based on the points which have been assessed thus far, it is fitting to more specifically analyze the basis of the Korean National Community concept. This particular phrase can be said to retain two main meanings, first, as a general reference to the homogeneity of the Korean people who have enjoyed a common heritage which embodies such themes as a common cultural, social, and economic community which could eventually lead towards the formation of a common political community. Second, it can be used to characterize a more specific meaning as a counterproposal to North Korea's own confederation proposal.

One of the first South Korean scholars to stress the Korean national community approach was Lee Hongkoo. In 1976, Lee, then a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tressed that the uniqueness of this proposal was based on the fact that the initiative for unification should not be led by the government or the political leadership but rather by the people at large and that the first priority should be placed on the welfare of the people as the initial step towards reconciliation.⁷⁾

Another example can be cited as the so-called "National Co-prosperity" proposal by five leading political scientists. In 1984, they stipulated that bilateral South-North cooperation must be emphasized in order to achieve peaceful unification. Moreover, they argued that through political negotiation and national reconciliation South and North Korea should exchange missions and to also hold summit meetings between the respective leaders. 8)

Still another proposal can be cited as the Korean National Community formula which was put forth by the Reunification and Democratic Party in 1988 which consisted of achieving unification on the basis of independence, reconciliation, incremental progress, peace, and mass participation. This proposal also included steps towards undertaking democratic reforms within South Korea and to also push for democratic reforms in North Korea followed by gradual exchange across all fronts including the strengthening of nonpolitical cooperation followed by cooperation in the political and diplomatic arenas which would lead ultimately towards the objective of developing a "One Nation, One System" structure. 9)

The final example can be cited as the unification proposal put forth by the opposition figure Kim Rak-Joong, the so-called "Unified Koryo Commonwealth." In this proposal, Kim argued that on the basis of the conclusion of a basic treaty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

Koryo National Federal Assembly should be created which strive to achieve peaceful unification. He also stipulated that the youth of South and North Korea would incrementally assume the authority to charter the course for a united Koryo state which would adhere to the principle of non-aligned neutrality.10)

In a more recent vein, then Minister of National Unification Lee Hongkoo announced on January 5, 1989 that the Korean National Community and the Korean Commonwealth proposal was made in order to foster the creation of an interim national commonwealth based on cooperation. He further noted that based on the principle of a "One Nation, Two Systems" a commonwealth could be created which would promote all aspects of exchange. Specifically, both South and North Korea on the basis of accepting each other's system would create a national commonwealth so that in all areas excluding diplomatic and military fields material and people exchange would be promoted so that confidence would be restored and on that basis a system unification would be formed on the basis of a "One Nation, Two State" process.11) Minister Lee's usage of the term Korean National Commonwealth is referred to here not as a specific measure to counter North Korea's confederacy proposal but as a reflection of a more broader term which was used by President Roh on the occasion of announcing a Special Statement on Unification on July 7, 1988 which called for the eventual creation of a "One Nation, One State" system.

Seen from this perspective, the fostering of a Korean National Community concept would be affected by a series of developments during the course of the development of a system unification. In other words, consistent with the wind of reform in the socialist bloc, it is not difficult to imagine that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North Korea would also be influenced by South Korea in the event that exchange and cooperation become formalized between the two Koreas. In such an instance, one could also expect that a movement towards liberalization would also take place within North Korea which could embody the acceptance of the principles of liberal democracy and a market economy. In such circumstances, the Korean National Community concept would encompass aspects of a welfare and ideological community.

V. Some Reflections on the "Unified South-North Systems" Concept

Among the points cited in the Korean National Community proposal, the key element of obfuscation lies in the concept of a unification of South-North Systems scheme. To begin with, the concept of a confederation can be examined which means the integration of states, i. e., the integration of sovereign territorial nation-states. Moreover, under this process a central federal government is created with circumscribed powers based on the representatives of the integrated states but it does not supercede the nationals nor the governments of the respective member states and since each retains sovereignty it

can opt to remove itself from the confederation should it choose to exercise that option. While there are exceptions, the concept of a commonwealth which is the point of focus here differs from the concept of confederacy noted above. Two cases of a state which moved from a confederated structure to that of a commonwealth can be cited as the American example from 1781 until 1789 when the American Confederation was existent and the example of Switzerland until it formed a commonwealth constitution in 1848 when it was organized as a Swiss Confederation although it continued to retain that title even after it was changed to a commonwealth system.

To reiterate, a confederated state structure recognizes the sovereignty of the member states and that it is a conference system based on the membership of sovereign states.¹²⁾ A current example can be cited as the United Nations. Based on such a perspective it could be argued that as the first step towards mutual and institutional recognition towards the process of peaceful unification South and North Korea could form a confederation as an interim measure towards a more formal integration. Nevertheless, whereas the creation of confederations can be found with states with different nationalities, languages, histories, and cultures the creation of a confederation among a homogeneous nationality such as the Koreans cannot be found. Moreover, such a concept--even as an interim measure--could be criticized for prolonging the "One Nation, Two State" system.

A contrasting scheme, however, can be found in the concept of a federation. In this example, those members who seek to join a federation give up their respective sovereignty and as a result, sovereignty is exercised by the newly formed federal government. As a result, a practical outcome of this scheme is that once a federation has been made, it can be said that a unified state has been created. However, if this approach is applied to the Korean context, it is difficult to imagine that a federal government would be able to exercise sovereign powers or for that matter, that both South and North Korea would completely renounce their respective sovereignties. In other words, owing to the fact that both Koreas are reluctant to renounce their sovereign powers it can be assumed that national discord would follow in the event that a united and federal state is formed.

As a result, an intermediary state between confederation and federation can be said to be the concept of a system commonwealth. If the concept of a confederation is said to retain the principle of "One Nation, Two State" and a federation retains the principle of "One Nation, Two Provincial Government", the concept of a system commonwealth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One Nation, Two System." In other words, while South and North Korea would both retain their respective sovereign rights in the conduct of international relations, both sides would maintain bilateral relations on the basis of a national commonwealth in order to overcome outstanding differences. In summary, it can be said that the systems commonwealth proposal

has the potential to satisfy the conditions which realistically divide the two Koreas while at the same time striving for the common goal of unification. In turn, it can be said that while the basis for unification is strong under the terms of a federation, the realistic problems confronting South and North Korea excludes this option whereas the basis for unification by a confederate structure is weak.

What is the likely response to the systems commonwealth approach? To begin with this proposal would go a long way towards reducing the tension between the two Koreas since it would seek to promote national cooperation and reconciliation on the basis of recognizing each other's system. Therefore, the major positive attribute of the Korean National Community proposal lies in the fact that it seeks to recognize the existence of two different systems in the Korean peninsula,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at further it seek to improve bilateral relations on the basis of exchange and cooperation which would lay the foundations for peaceful unification.

V. Concluding Remarks

With regard to the Korean National Community proposal which has been assessed above, it is instructive to note that President Roh on September 11, 1989 announced the Korean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Proposal and as an interim step this proposal called for the creation

of a Korean Commonwealth.13) The overall content of this proposal does not differ from the national community concept which has been described in previous sections.

According to Ahn Byung-Joon, it is important to bear in mind that the term National Commonwealth refers to the sums total of efforts which must be made in order to achieve peaceful unification based on the principles of peace and cooperation and that by referring to this process as one of a "National Commonwealth" one can overcome the realistic difficulty of referring to a particular system of political entity and that the preservation of mutual interests is preserved under the tenets of this proposal.14) Based on this interim step without discarding one's sovereignty a process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can be built towards the ultimate objective of creating a unified democratic republic. This proposal also warrants attention given that it seeks to overcome the weaknesses in previous unification proposals put forth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by stating the willingness to accept the existence of a contending system in the Korean peninsula, it is a realistic proposal which would go a long way towards reducing tension between the two Korea.

Obviously, the Korean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proposal will not be readily accepted by North Korea nor is it feasible to expect that any real progress can be made in the foreseeable future. Nevertheless, as the events in Eastern Europe have shown, hitherto

unexpected political change can happen in North Korea, although there exist differences between North Korea and Eastern Europe, and with the relaxation of tensions between the East and West as evinced by the new phase of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has shown, it may not be entirely unrealistic to assume that inter-Korean relations may also improve to the extent that the Korean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proposal would become a solid basis for inter-Korean negotiations in the 1990s.

Endnotes

1. The Korea Times, June 19, 1990.
2. Hakjoon Kim, "New Political Development with a Vision for the 1990s and Beyond," Korea and World Affairs, Vol.14, No.1 (Spring 1990), pp. 34-53.
3. For other references, refer to Kim Ho-Jin, "The Opposition and Students' Unification Discussion and Unification Policy Posture," Research Department of the Dong-A Ilbo, eds., How to Achieve Unification: A Symposium on South-North Unification Proposals (Seoul: The Dong-A Ilbo, 1988). In Addition, see Jung Tae-Yoon, "The Progressive Alliance's Unification Policy," Minjok Jiseong, April 1988, pp. 161-166 as well as Park Kwan-Yong "The Korean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Proposal," Minjok Jiseong, April 1988, pp. 142-147. (All three works are in Korean).
4. The Korea Herald, January 1, 1989.
5. John H. Herz, "Germany" in Gregory Henderson et al., Divided Nations in a Divided World (New York: David McKay, 1974), pp. 9-10.
6. Yung Wei, "The Unification and Division of Multi-system Nations: A Comparative Analysis of Basic Concepts, Issues, and Approches," in Hungdah Chiu and Robert Downen, eds., Multi-System Nations and International Law: The International Status of Germany, Korea and China (Baltimore: School of Law, University of Maryland, 1981), p.62.

7. Hongkoo Lee, "The Korean Commonwealth and the Asian Community," a paper presented at the 30th International Congress of Human Sciences in Asia and North Africa, Mexico City, Mexico, August 3-8, 1976.
8. Kim Deok, Ahn Byung-Joon, Rhee Sang-Woo, Lee Hongkoo, and Han Sung-Joo, National Coprosperity Unification Proposal, a project report submitted to the South-North Dialogue Bureau, National Unification Board, 1984. (in Korean)
9. For additional details, see Jang Myung Bong, "A New Unification Proposal: 'Commonwealth' or 'Confederation,'" Shin Dong A, February 1989, pp. 156-157. (in Korean).
10. Kim Rak-Joong, "Korean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Proposal: Its Problems and Limits," Minjok Jiseong, November 1989, pp. 37-43. (in Korean)
11. Hongkoo Lee, "Unification through a Korean Commonwealth: Blueprint for a National Community," Korea and World Affairs, Vol. 13, No. 4 (Winter 1989), pp. 635-646.
12. Ivo D. Duchacek, Power Maps: Comparative Politics of Constitutions (Santa Barbara, Calif: American Bibliographical Center-Clio Press, 1973), pp. 143-144.
13. National Unification Board, To Build National Community through the Korean Commonwealth - A Blue Print for Korean Unification (Seoul: National Unification Board, 1989).
14. Ahn Byung Joon, "In Search of a New Unification Proposal," Minjok Jiseong, September 1988, pp. 189-190. (in Korean)

남북연합의 제도적 접근전망

이즈미 하지메
(日,시즈오카大)

I

어떤 사람들은 남북한의 통일정책을 비교해 볼 때, 북한의 방안이 통일을 추구하는 진지함과 구체적인 면에 있어서 남한의 방안보다 더 좋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남한이 평화공존과 상호교류에 우선점을 두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일관되게 연방제 통일을 주장해왔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작년 가을 남한의 새로운 통일방안이 발표됨으로써 독청을 높일 수 없게 되었다.

1989년 9월 11일에 남한의 노태우대통령은 국회연설에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설에서 노태우대통령은 “자주, 평화, 민주의 3원칙하에 통일민주공화국으로 남북한이 통일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과도기적 단계로서 남북연합을 건설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더 자세한 것은 국토통일원, 「남북연합을 통한 민족공동체형성」, 서울, 1989. 9를 참조)

과거의 남한의 제안들과 비교해 볼 때 새로운 통일방안은 통일을 추구하는데 있어 더욱 진지하고 구체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

남북한이 제시한 통일방안에는 일련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다. 양측은 한반도에 다른 이념과 체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통일을 시작한다는데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남한의 한민족공동체란 개념과 북한의 민족통일간에 명확한 차이점을 발견하기란 어려운 문제이다. 그것들이 최종단계나 혹은 과도단계나 하는 문제를 차지한다면, 평양측이 주장하고 있는 연방은 서울측의 남북연합 주장과 유사하다.

제 3자인 우리가 의아해하듯이 위와 같은 유사점들에도 불구하고 남한과 북한은 아직 통일과 관련한 타협에 이를 수 없다. 이것은 아마 다음과 같은 논리에 기인하고 있는 것 같다. 타협이란 양측이 서로에게 양보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것이다.

최근 북한의 입지에서 볼때 — 북한의 입지는 국력에서의 남한의 우위와 사회주의의 붕괴라는 국제환경의 존재에 의해 남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는데 — 평양측이 서울측에 양보할 수 있는 범위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이 경우 서울측의 커다란 양보는 남북사이에 타협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러나 당분간 서울측이 북한을 향해 그렇게 대담한 조치를 취할 것 같지는 않다. 남북한간에 타협이 이루어지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나는 기본적으로 북한측에는 아마 불가능할지라도 우리가 남한측의 적극적인 양보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문에서는 첫째로 오늘날 북한의 수세적인 입지의 배경을 분석한 다음 남한이 할 수 있는 양보의 형태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현재 북한은 남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약한 입장에 있다는 인식에 근거하여 자신의 정책들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된다. 북한의 위약한 입지는

조선혁명에 대한 북한의 인식 변화를 검증해 보면 명확하게 된다.

북한의 조선혁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나 숨은 의도를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비록 북한이 조선혁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지라도 조선혁명이란 개념속에 사회주의 혁명의 대의하에 수행되는 내적건설과 연방의 수립을 지향하는 조국의 통일이 내포되어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북한이 조선혁명과 관련하여 시도하려는 조국통일은 1945년 해방이후 남북간의 세력균형이 변화됨에 따라 점차 변화되어 왔다.

1945년부터 1953년까지 북한은 조국통일, 남한해방, 남한내의 혁명등 세가지 정책들에 동등한 비중을 두었던 것 같다. 1950~53년에 걸친 한국전쟁은 이러한 북한의 입장을 확증해 주는 것이었다.

이 기간동안 북한은 국가의 역량에 있어서 자신들의 입지가 남한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으며, 이러한 힘의 우위에 입각하여 평양당국은 무력에 의한 남한혁명을 시도했다.

전후 남북간의 역관계는 변화했다. 1960년대 초반까지 북한은 힘에 있어서 남한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남북간의 차이는 본질적으로 좁아지기 시작했고 70년대 초에 이르러 남한은 힘에 있어서 북한과 동등하거나 우위에 있게 되었다.

북한은 세력균형의 변화를 완전히 인정해야 한다.

1960년대부터 70년대초까지 북한당국은 조국통일과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취급하던 남한해방 정책이나 남한에 대한 전면적 무력공격을 감행하지 않았다. 비록 평양당국이 계속해서 남조선혁명을 목표로 하고 있기는 하였지만 평양당국은 그 혁명이 북한의 지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남한 내부로부

더 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1972년에 실현된 대화는 북한으로 하여금 그들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남한이 힘에 있어서 북한을 압도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북한은 이 사실을 받아들인것 같았으며, 최소한 평양당국은 그들이 주장했던 자유선거에 의한 통일방식을 포기해야만 했다.

1980년대에 이르러 남북간의 세력차는 모든면에서 확대되었다. 서울당국은 평양당국이 경제적 침체를 겪던 70년대와 80년대에 극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더구나 남한은 제3세계를 포함한 세계 여러나라들과 관계를 증진시켜 왔으며, 특히 1988 서울 올림픽을 주최함으로써 관계는 더욱 증대되었다. 이제 서울당국은 중국, 소련 및 동구 여러나라들과 비정치적 — 경제적 — 유대를 적극적으로 고양시키고 있다.

반면, 평양당국은 미국, 일본등 유럽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으며, 오늘날 국제사회에서의 남한의 지위가 북한에 비해 명확히 우위에 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남북간의 격차는 1980년대에 더욱 확대되었으며, 평양당국은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간에 일화를 짓게 되었다.

즉 1982년에 출판된 백과전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조국통일은 우리의 분단된 인민과 땅을 통일시키는 일이며 남북한의 전체 혁명역량에 의거해서 자주와 민주의 원칙하에 성취되어야 할 민족적 과제이다. ; 그것은 남조선 혁명과 구별되어야 한다”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백과전서, 평양; 1982.10,p.927)

정치사전에는 “혁명이란 사회의 개혁과 근본적인 변화, 무엇보다 정치, 경제 체제에 있어서의 변화를 목표로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사회과학

출판사, 정치사전, 평양 : 1973, p.211)

혁명이 그렇게 계획된 것이라면 혁명을 통한 조국의 통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두개의 한국간의 사회·경제·정치체계가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북한이 조국통일과 남조선혁명간에 차이를 두어온 점을 볼때 북한도 그 어려움을 알고 있는것 같다.

오늘날 평양당국은 통일문제를 언급함에 있어 1972년 7월 4일의 남북공동성명의 3개원칙, 특히 세번째 원칙인 이념과 신념 및 체제를 초월한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념적·제도적 차이를 극복함으로써 단일민족으로 통일한다는 것은 혁명을 조국통일의 수단으로서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얼핏 보아도 당분간 혁명을 통한 조국통일을 하려는 의사가 평양측에는 없다.

III

백과사전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김일성이 남한혁명은 남한인민자신에 의한 투쟁이고 그들의 주도하에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볼때, 이제 북한은 남한혁명은 혁명을 지도하고 수행할 남한내부의 역량에 맡기는 코스를 택하고 있다.

실제로 1970년 제5차 조선노동당 당대회와는 달리 1980년 10월 제6차 대회는 남한혁명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었으며, 평양당국은 고려민주연방 공화국안에 상징되듯이 평화통일을 주창하게 되었다. 1986년 12월 30일 최고인민회의에서의 연설을 통해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국의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공화국 정부가 긴급히 해결해야 할

민족적 과제이다. … 조국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가장 합리적 방안은 제 6차 조선노동당 대회에서 제시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창설하는 것이다. 두개 조선으로의 영구분열을 방지하고 전쟁의 고통으로부터 전인민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흡수함이 없이 연방공화국으로 민족을 통일하는것 이외의 길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합법적인 통일방안을 성취하기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노동신문, 1986년 12월 31일 자).

연방공화국을 수립하는 것이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은 위에서 명백히 표명되었다. 이전은 조선노동당 외교담당비서인 황장엽이 1987년 9월 북한을 방문한 국제 카아네기 재단 사무총장 셀리그·S·헤리슨에게 한 다음과 같은 말에서 더욱 명확히 나타나 있다.

“우리는 다른 사회·경제체제 아래서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 연방은 과도기적 단계가 아니라 통일의 최종단계이며 두개의 다른 사회·경제체제의 통합은 상정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통합군이 오랜 목표일 것이지만 우리가 두개의 한국사이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다면 특히 그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면 두개의 군대를 가지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Selig S. Harrison , The Great Follower : Kim IL Sung Promotes a Chinese - style Open - door Policy ” , Far Eastern Economic Review , December 1987, pp .36-37)

황은 또한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우리가 두개의 조선을 합법화하는 방향으로가 아니라 연방을 향해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당신은 우리가 매우 유연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평양은 연방을 향한 운동과

일치하는 다른 생각을 토론할 준비가 되어있다.” (Selig S. Harrison, “North Korea Floats a Revolutionary Ideology : Realism”, New York Times, November 22, 1987)

그러므로 황장엽은 연방공화국이 통일의 최종형태라는 것과 아울러 남북간의 사회·경제적 통합은 있을 수 없는 것임을 천명하였다. 셀리그 S.해리슨은 황장엽의 언급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두개의 한국을 인정하는 것은 거부하고 있기는 하지만 당국자들은 두개의 한국이 존재하는 현실을 인정하는 정서적 통일에 대한 타협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다.” (Seligs. Harrison, “The Great Follower : …”, p.36)

황장엽의 언급은 1989년 1월 1일의 김일성 신년사에서 재확인 되었다. 김은 “조국의 통일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과제가 아니라 해결을 준비해야 할 과제이다. 평화를 보장하고 통일을 실천하는 것은 무관한 과정이 아니며, 그러므로 양자 사이에 중간단계란 있을 수 없다. 조국통일을 전국적인 단일체제의 수립문제로 간주하면서 더 진전된 목표를 향한 완전한 단계들을 수립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러한 행동은 실제로 통일을 희망하지 않는 것이며, 조선인민의 간절한 소망을 역행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노동신문, 1989년 1월 1일).

김일성은 남북통일을 전국적인 단일체제 건설의 문제로 간주하는 것을 거부하였으며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 통일의 마지막 단계임을 명확히 밝혔다.

문제는 노태우 정부가 민주적 정권이며 북한에게 있어 연방의 동등한 파트너이나 하는 것과 관련하여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남한과의 사회 경제체제의 통합을 거부해 왔던 것 같다. 더이상 남한을 사회주의화할 필요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김의

1988년 1월 1일 신년사는 주목할만하다. 그것은 다음의 문장을 포괄하고 있다.

“조국의 통일은 일방이 타방을 흡수하거나 일방이 타방을 (부력으로)전복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민족적 통합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역사가 우리에게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대화를 계속한다고 할지라도 상호존중이 없는 대결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 (노동신문, 1988년 1월 1일자).

나아가 김일성은 1990년 5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남북간에 합의되고 내외에 천명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3원칙은 전민족적 역량과 의지의 통합을 통해 통일을 성취할 방도를 명백히 제시하는 위대한 통일 프로그램이다.

이들 3원칙에 근거하여 우리 공화국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설립 방안은 남과 북에 다른 이념과 체제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일방이 타방을 정복하거나 정복당함이 없이 자주적이고 평화적일 뿐만 아니라 공평하게 나라를 통일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통일 방안이다. 이 방안은 통일 이후에 우리나라가 어떤 다른 나라의 위성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정치·군사적 동맹이나 불려에 참여하지 않고 중립국으로 발전해 나갈것을 상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방안은 자주에 대한 조선민의 열망과 일치할뿐만 아니라 이웃나라와 평화를 애호하는 전세계 인민의 바람과도 일치한다.” (노동신문, 1990년 5월 25일)

요약하자면, 김일성은 한반도에 다른 이념과 체제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조건하에서 일방이 타방을 경제력 혹은 군사력에 의해 정복하거나 정복되는 것은 그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다. 김에 의한 일

련의 연설들은 그가 군사력에 의한 남한 해방의 생각을 포기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김의 저의를 도출하는 것은 이 글의 영역을 초월하는 것이긴 하지만).

물론, 평양당국은 여전히 남한인민에 의한 남한혁명을 기대하고 있지만 위의 김의 연설에 내포되어 있듯이 평양당국은 그러한 혁명이 바로 남한의 해방을 이끌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늘날 북한이 최소한 남한혁명을 한반도에서의 전국적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하는 조선혁명과 구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IV

위에서 지적한 문제들에 대하여 나는 1989년 2월 나의 첫 평양방문 동안 북한 전문가들과 많은 논의를 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남한 해방이나 혹은 남한의 군사적 침공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했다. 재미있는 것은 미국을 대결의 상대로 하는 전쟁은 생각할 수도 없다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부연하자면, 북한과 같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중국이나 소련과 같은 강대국 조차 꺼려하고 있는 초강대국 미국과 전쟁을 하기를 희망하겠느냐?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중국이나 소련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양당국은 생각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전쟁억제 역할을 한다면 미군이 철수할 때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나는 이러한 질문을 여러번 제지했다. 그러나 북한에 있어서 유

일한 적은 미국이며 남한이 아닌 것 같다. 그들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철수한다손 치더라도 왜 자기들이 동족인 남한인들과 싸워야 하는가고 반문했다. 북한은 그러한 상황을 원하지 않으며, 남한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인들은 소위 “남한의 위협”을 “미국의 위협”으로 간주한다. 그들은 남한으로부터의 위협을 그다지 느끼지 않는다. 비록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을지라도 남한에서 혁명이 발생하는 것을 바라고 있을 가능성은 있다. 그들은 여전히 남한이 공산화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군사적 해방은 선택적이다. 그러나 내가 질문했던 평양의 전문가들은 남한혁명과 조국통일은 완전히 다른 계획하의 문제라고 강변하였다.

북한의 전문가들은 남한혁명이 남한인민들 자신의 주도하에 수행되어야 할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즉 자신의 이념과 체제를 선택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한인들의 권한이라는 것이다.

계속해서 그들은 말하기를 이 문제는 북한이 어떤 형태든 개입해서는 안되며, 그렇게 할 의사도 없다고 한다. 다른말로 하자면 남한혁명은 남한내부의 문제이다. 그러나 조국통일은 북과 남이 함께 추진해야 할 목표라고 그들은 주장한다. 즉 문제의 성격상 통일과 관련하여서는 남과 북은 합법적으로 서로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두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고 서방 사람들이 흔히 두문제를 혼동하는 것은 그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1980년 10월 6일에 개정된 조선노동당 강령에 명시된 선언을 고려해야 한다. “조선노동당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체사상에 따라 전사회를 공산주의 사회로 전면시키는 것이다.” 흔히 서방관측자들은 전사회란 용어는 전한반도를 지칭하는 것이며, 전사회란 용어가 유지되는한 북한은

남한을 해방시킨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점에 관하여 평양의 많은 전문가들에게 질문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답은 이 문장은 실제적인 정책적 함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것이라는 것이었다.

문제는 이들 북한전문가들의 견해를 실제로 가치있는 것으로 받아들일수 있느냐에 있다. 아마 우리는 북한이 앞으로 실제행동을 취할때까지 우리의 판단을 유보해야 할것 같다. 만약 평양당국이 38선을 따라 집중 배치된 군대를 후퇴시키거나 비무장지대의 완전한 무장해제의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그들의 말에 대한 신뢰는 증가될 것이다. 가시적이고 본질적인 진전이 남북대화에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1989년의 두번의 평양방문에서 받은 나의 인상은 북한은 현재 명백히 방어적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남한의 경제적 번영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간의 국력차가 전례없이 크다는 것도 알고 있다.

오늘날 그들의 방어적 자세는 북한이 연방에 기초한 통일을 주장하고 있으며 그것이 과도기적 단계가 아니라 통일의 최종단계로 보고있는 것에서 잘 보여진다. 그들은 두개의 현존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연방제가 평화통일을 성취할 수 있고 동시에 그들 자신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통일이 무력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전적으로 다른 이야기도 있을 것이다. 이경우에 있어서 한반도는 전적으로 공산화될 것이다. 혹은 만약 통일이 평화적 방법으로 추진되고 한 체제만이 선택되어진다면 한반도는 아마 남한의 체제인 자본주의화될 것이다.

평양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가능성이 큰 결과를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평화통일의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북한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나는 북한의 체제를 고수하려는 희망이 고려민주연방공화국에 대한 평양당국의 주창속에 담겨져 있다는 강한 인상을 받았다.

북한이 자신의 약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남한에 대한 무력사용을 포기할 것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이 즉각적인 위치를 전환시키기 위하여 무력에 의존할 것이라는 것도 부인될 수 없다. 당분간 우리는 두가지 가능성을 다 갖고 있는 북한의 행동을 지켜보아야 한다.

이상에서 논의된 바와같이 북한은 스스로의 한국에 대한 열세를 인정하였다. 북한은 지금 그들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에 골몰하고 있는것 같이 보인다. 문제는 한국이 ‘남북연합’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한국정부는 북한측이 한국이 그들을 흡수한다는(평화적인 병합일지라도) 인상을 갖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만일 북한이 한국의 그러한 의도를 알아채다면 지금까지 취해왔던 경직된 태도를 바꾸려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이 ‘남북연합’은 궁극적인 통일로 향한 중간단계라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왜 북한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해서 어느정도의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를 이해해야만 한다. 북한은 한국의 통일방안이 결국은 한국측에 유리하게 통일로 이끌어 갈것 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은 1972년 남북공동성명에서 사용한 “민족대단결”이라는 용어를 “민주”라는 용어로 바꾸었다. 이것은 아마 한국으로서는 조그만 문제이겠지만, 북한으로 하여금 한국이 북한을 병합하려 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남북한이 일단 합의한 공동성명의 내용을 왜 바꾸었는지는 의문이다.

한국정부는 과거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바꾼데 대해 재고해야 할 것이다. 아 물론 한국은 그들이 국제사회에서나 남북한관계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통일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한국이 장래에 북한측 주장인 연방제를 받아들인다고 했을때도 한국측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북한이 통일의 최종단계로서 “연방공화국”을 주장하고 있지만 단일국가로서의 “연방국”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다른 체제와 이념을 유지한 “연방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방국”이 상호체제의 평화 공존이라는 방법으로 현실화 된다면 양측간의 광범위하고 활발한 상호 교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일국가일체제 통일의 가능성을 높일 것이며 이것은 한국이 발표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Prospects of Institutional Approach to Korean Commonwealth

Izumi Hajime
(University of Shizuoka)

I

Some argued, comparing the unification policies of two Koreas, that the North's design was better than the South's in terms of earnestness and concreteness to pursue unification. This argument was based on the fact that North Korea consistently proclaimed "unification by a confederation" while South Korea gave priority to "peaceful coexistence" and "exchanges" between the two. The argument of this sort can be scarcely voiced since the South announced a new unification proposal in the autumn last year.

On September 11, 1989, South Korean President Roh Tae Woo released a Korean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in his speech before the Assembly. He stated, "It calls for the merger of South and North Korea, under the principles of independence, peace and democracy, in a unified democratic republic, which is to be built upon a Korean Commonwealth to be formed in an interim stage." [For further details, see National Unification Board, To Build a National Community through the Korean Commonwealth, Seoul: September 1989] Compared with the South Korean proposals in the past, the new Formula shows more earnestness and concreteness in pursuing unification.

The unification plans that North and South Korea have presented have a sort of common features. They basically agree to starting unification while admitting the existence of different ideologies

and systems on the Korean Peninsula. It is difficult to find out a clear-cut difference between the South's concept of "Korean National Community" and the North's "National Unification." The "confederation" that Pyongyang insists may be similar to the "Korean Commonwealth" that Seoul argues, apart from the question of whether they denote "the final stage" or "a transitional phase" of unification.

As a third party we wonder that, despite the above similarities, North and South Korea cannot yet come to a compromise in terms of unification. This probably results from the following logic. A compromise is impossible unless both parties make concessions to each other. In view of the North's current position -- which has been relatively weakened by the South's superiority in national power and by the existing severe international environment of collapsing socialism -- the extent to which Pyongyang can concede to Seoul is extremely limited. In this case it may happen that a large concession on the part of South Korea will lead to a compromise between the two Koreas. However, for the time being, it is unlikely that Seoul may adopt such a brave measure towards the North. There will be a long time until a compromise is formed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 basically considers that we can expect South Korea to make a dramatic concession, though not probable on the part of the North. In the below, I would like to first analyze the background of the

North's "defensive" stance of these days and then touch on the types of concession that South Korea can make.

II

North Korea is now forced to set up its policies based on the recognition of its "relatively weak" position vis-a-vis South Korea. North Korea's weak position becomes clear if we examine the changes in the North's conception of a "Korean Revolution."

It is very difficult to grasp the underlying intentions and details of what North Korea means by "Korean Revolution." Although the North has never clarified what "Korean Revolution" stands for, there is no doubt that the Korean Revolution implies the "domestic construction" to be done in the name of socialist revolution, and the "unification of the fatherland" targeted at the establishment of a confederation (Yonbangsh'e). The unification of the fatherland that North Korea attempted in connection with "Korean Revolution" has gradually changed as the power balance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changed after the Korean Liberation in 1945.

From 1945 to 1953, North Korea seemed to equate all these three policies, namely, unification of the fatherland, Liberation of South Korea, and a revolution in South Korea. The Korean War in 1950-53 was a manifestation of this North Korea's standpoint. During the period, North Korea appeared to perceive its position was superior

to the South in terms of national strength. Backed by this superiority in power, Pyongyang set out to Liberate the South by force.

The North-South power relationship changed after the war. Until the early 1960s North Korea continued to think that it stood in a better position than the South, however, the gap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began to substantially narrow and South Korea became equal or superior in power around the entry to the '70s.

North Korea may have fully recognized this change in power balance. From the 1960s to the early 1970s, the North did not display the policy of "Liberation of South Korea", or overall armed attack on the South, that Pyongyang treated as equivalent to the "unification of the fatherland." It remained aiming at the South Korean Revolution, though, it stucked to the rule that the Revolution should be ignited from inside of the South, not led by the North.

The dialogue realized in 1972 made the North recognize, willingly or unwillingly, that South Korea had toppled over North Korea in power for the first time. North Korea seemed to accept this fact, or at least Pyongyang had to abandon the unification by free election that they insisted.

In the 1980s the gap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got

widened in every respect. Seoul enjoyed a dramatic economic achievement in the '70s and '80s while Pyongyang went through an economic stagnation. Moreover, the South has improved its relations with other countries including the Third World, particularly by holding the 1988 Olympic Games in Seoul. Seoul is now actively enhancing nonpolitical (namely, economic) ties with China, the Soviet Union and the East European countries.

In contrast, Pyongyang showed little progress in its relations with Western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Japan. No one can deny that the South's position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today is definitely superior to the North.

The gap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widened further in the 1980s, and Pyongyang came to draw a line between the "South Korean Revolution" and the "unification of the fatherland." For example, there was the following entry in the Paekka Chŏnson (Encyclopedia) printed in 1982: "Unification of the fatherland is the task of unifying our divided people and land, a task for the nation that must be accomplished in accordance with principles of autonomy and democracy through the revolutionary abilities of the North and South as a whole; it is to be distinguished from a South Korean Revolution." [Kwahak paekka sojon ch'ulp'ansa, Paekka Chŏnson (Encyclopedia), Pyongyang: October 1982, p.927]

The Chongchi Saion (Dictionary of Politics) puts that the

Revolution is aimed at a reform and fundamental change of society, above all, the changes in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s. [Sahŏ-kwabak Ch'ulp'ansa, Chŏngchi Sajŏn (Dictionary of Politics), Pyongyang: 1973, p.211] If it is designed so, then attaining "unification of the fatherland" through a "revolution" is almost impossible, for the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systems of the two Koreas are so different. North Korea seems to be aware of the difficulty, because it has drawn a distinction between the unification of the fatherland and the South Korean Revolution.

When Pyongyang mentions the unification problem nowadays, it tends to emphasize the three principles introduced in the 7 July 1972 North-South joint communique, particularly the third principle that declares the Great National Unity surpassing the difference in ideology, belief and system. Uniting as a single nation (people) by overcoming the ideological and institutional gap means giving up the Revolution as a means to unify the fatherland. At a glance, for the time being, there is no intention on the part of Pyongyang to unify the fatherland through a "revolution."

III

As the Paekka Chŏnsŏ points out that Kim Il Sung says the South Korean Revolution is a struggle by the South Korean people themselves and can be carried out successfully under the initiative of them, North Korea now takes the course of leaving the South

Korean Revolution to the South's ability of setting up and conducting a revolution. [Paekka Chŏnsŏ, p.927] This implies that Pyongyang has virtually renounced the "Liberation of South Korea."

In fact, as opposed to the 5th Congress of the Korean Workers' Party (KWP) in 1970, the 6th Congress in October 1980 saw no reference to the South Korean Revolution. Pyongyang then came to hoist up "peaceful unification" as symbolized by the proposal of a "Democratic Confederal Republic of Koryo." In his speech at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on December 30, 1986, Kim Il Sung stated as follows:

"Realizing the peaceful unification of the fatherland is a national problem that the republic government should solve urgently....The most rational way of realizing voluntary peaceful unification of the fatherland is to establish a Democratic Confederal Republic of Koryo as in the plan offered in the 6th KWP Congress. To prevent a permanent split into "two Koreas" and avoid the entire people from suffering a war, there is no way to choose other than unifying the nation as a confederal republic without absorbing each other. We, therefore, will continue persevering efforts to achieve this legitimate unification plan." [Rodong Shinmun, December 31, 1986]

The idea that establishing a confederal republic is the only way to unify the fatherland was noted clearly in the above. This

point could be clarified further by the following statement that Hwang Chang Yop, secretary of the KWP responsible for foreign policy made before Selig S. Harrison, a senior associate of th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Affairs, who visited North Korea in September 1987: "We must find a way for North and South to coexist peacefully under different social and economic systems.... Confederation is no longer a transitional phase but the 'final stage' of unification, and integration of the two differing social and economic systems is not envisaged. In principle, a combined army would be a long-term objective, but if we can improve rel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then having two armies would be acceptable, especially if their size can be reduced." [Selig S. Harrison, "The 'Great Follower': Kim Il Sung Promotes a Chinese-style Open-door Policy," Far Eastern Economic Review, 3 December 1987, pp.36-37]

Hwang also said as follows: "You will find us very flexible, if we are all going in the same direction, toward confederation, rather than toward legitimizing two Koreas. Pyongyang is ready to discuss any other idea consistent with movement toward confederation, however gradual." [Selig S. Harrison, "North Korea Floats a Revolutionary Ideology: Realism," New York Times, November 22, 1987]

Thus, Hwang Chang Yop declared that a confederal republic is the final form of unification and that social and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would be improbable. Selig S. Harrison commented on Hwang Chang Yop's statement as

follows: "While continuing to reject the de jure recognition of two Koreas, officials appeared ready for a face saving compromise on the emotional unification issue that would acknowledge the existing reality of two Korean states." [Selig S. Harrison, "The 'Great Follower'," p.36]

Hwang Chang Yop's remarks were reaffirmed by Kim IL Sung in his New Year's speech on January 1, 1989. Kim said, "The unification of our fatherland is not a long-term task but a task ready to be solved. Securing peace and actualizing unification are not unrelated processes, and therefore there should be no intermediate stage between the two. Regarding the unification of our fatherland as a problem of establishing a nationwide single system, and setting up complicated stages for a far-reaching goal are unrealistic. Such behavior is virtually the same as the act of having no hope for unification and standing against the earnest wishes of the Korean people." [Rodong Shinmun, January 1, 1989]

Kim IL Sung avoided regarding North-South unification as the problem of "establishing a nationwide single system" and indicated clearly that a "Democratic Confederal Republic of Koryo" is the final stage of unification.

A question remains as to whether the Roh Tae Woo government is a "democratic regime," and is a qualified partner of confederation, to North Korea. Nevertheless, the North seems to have set back the

integration of social and economic systems with the South. It no longer requests South Korea to be socialized. Regarding this, Kim's New Year's address on January 1, 1988 is worthy of note. It included the following paragraph:

"Unification of the fatherland means neither that one side absorbs the other nor that one overwhelms the other (by force). It intends to achieve a national unity. As history tells us, we may achieve nothing in a confronting situation without any respect to each other even if we continued to dialogue." [Rodong Shinmun, January 1, 1988]

Kim Il Sung further stated at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on May 24, 1990 that: "The Three Principles of independence, peaceful reunification and great national unity agreed upon and made public at home and abroad jointly by the North and the South are a great reunification programme which clearly shows the way to reunify the country by incorporating the resourcefulness and will of the whole nation. The proposal for founding a Democratic Confederal Republic of Korea put forward by the government of our republic on the basis of these three principles is the most reasonable and realistic reunification proposal which makes it possible to reunify the country independently and peacefully as well as impartially without one side conquering the other or being conquered, in the circumstances in which different ideologies and systems exist in the North and the South. This proposal envisages that our country,

after reunification, will not become a satellite of any other country but will develop into a neutral nation which will not join any political and military alliance or bloc. Therefore, it not only meets all Koreans' desire for independence but also accords with the wishes of the peoples of the neighboring countries and the peaceloving people throughout the world." [Rodong Shinmun, May 25, 1990]

To sum up, Kim Il Sung seems to perceive the existence of different ideologies and systems on the Korean Peninsula. Under this condition, it may not be acceptable to him that one side conquers the other or is conquered (by economic or military force). The above series of statements by Kim suggest that he may give up the idea of Liberation of South Korea by military force (though the scrutinizing evaluation of Kim's real intention is beyond the scope of my paper). Of course, Pyongyang is still looking forward to a revolution in the South by the hand of South Korean people, and yet, as the above Kim's statements imply, does not expect that such a revolution would lead directly to the Liberation of the South. We may say that North Korea at least distinguishes a South Korean Revolution, these days, from the "Korean Revolution" which seeks for a total socialist revolu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V

On the above points, I had many discussions with the experts in North Korea during my first visit to Pyongyang in April 1989. These experts repeatedly stressed that "Liberation of the South," or a military invasion of South Korea, is improbable. Interestingly, they said that such a move is unthinkable with the United States as an opponent. To paraphrase their views, how could a little country like North Korea hope to wage war with superpower America, which even other great powers like China and the Soviet Union hesitate to take on?

It is Pyongyang's estimation that even if a war broke out, neither China nor the Soviet Union would take part in the war, because both do not want to see fighting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means that North Korea would have to confront the United States alone in that case.

One may argue that, if the presence of the US forces in South Korea acts as a deterrent, the North might attack the South when the US forces withdraw. I raised this sort of questions many times, but it seems that the only enemy to North Korea is the United States, not South Korea. They replied why they should fight with their colleagues, South Koreans, if Americans withdraw from the Korean Peninsula. The North does not want that situation, nor would the

South do. North Koreans count the so-called "threat of the South" as the "threat of the United States". They appeared to feel not much threat from South Korea.

Even if North Korea is not considering attacking the South, the possibility remains that it might want to see a revolution occur in South Korea. They might still be hoping for the South to go communist -- and military "Liberation" might still be an option. But the experts in Pyongyang, to whom I questioned, responded by stressing that a "South Korean Revolution" and "unification of the fatherland" are issues on completely different planes.

The North Korean experts explained that a South Korean Revolution would be a course of action taken by the people of the South on their own initiative; it is completely up to them to choose their own system and ideology. This, the experts continued, is not a thing North Korea should interfere with in any way, and the North has no intention of doing so. In other words, a South Korean Revolution is an internal issue for the South. But the unification of the fatherland, they observe, is a goal to be jointly pursued by the North and the South; given the nature of the issue, both North and South can legitimately make demands of each other in this connection. To them, therefore, the two are completely different issues, and it baffles them that people in the West should frequently confuse the two.

We still have to take into consideration, however, the declaration made in the platform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as revised on October 6, 1980: "The ultimate objective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is to convert the entire society to a communist society conforming to juche ideology." Observers in the West often argue that the term "entire society" here refers to the entire Korean Peninsula and that as long as this wording is maintained, the North has not given up on its ultimate objective of "liberating" the South. I questioned many experts in Pyongyang on this point, but their replies were to the effect that this passage is stating an ideal and not a policy for actual implementation.

There naturally remains the question of whether we can take the views of these North Korean experts at face value. It probably makes sense to reserve our judgment until we see how North Korea actually behaves from now on. Reliability on their statements will have increased if Pyongyang takes such measures as pulling back the forces it has concentrated along the 38th parallel or moving towards the complete demilitarization of the demilitarized zone. It is of primary importance that any visible and substantive progress could be seen in North-South dialogue.

The impression I received on my two visits to Pyongyang in 1989 is that the North Koreans are now clearly on the defensive. They not only have grasped the South's economic prosperity objectively, but know that the gap in national strength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widened unprecedentedly. Their defensive stance today is well presented in the fact that the North is insisting the unification based on a confederation (Yonbangch'e) and viewing it as not a transitional step, but the final stage of unification. They may think that a confederation, which would retain the two current systems intact, is the only way they can achieve the unification peacefully and can preserve their own system at the same time.

There would be an entirely different story if unification were achieved by force. The Korean Peninsula might be entirely communized in that case. Or, if unification were promoted by peaceful means and only one system were selected, the Peninsula would probably be colored by capitalism, i.e., the system of South Korea. The experts in Pyongyang are fully aware of this highly possible consequence. Then, the important question for them should be how to preserve the North's system in the case of peaceful unification. I got a strong impression that the desire to somehow maintain the North's system underlies Pyongyang's advocacy of a "Democratic Confederal Republic of Koryo."

It is conceivable that North Korea, being aware of its disadvantageous position, will discard the option of using military forces against the South. It cannot be denied at the same time, however, that North Korea would resort to force to revert its its position in an instant. For the time being, we should keep on watching the behavior of the North with both of the above

alternatives in mind.

V

As has been discussed, North Korea recognizes its inferiority to the South. Pyongyang now seems to focus on how they can achieve unification while maintaining its current system. The question is then what attitude would be most desirable on the part of South Korea to actualize its policy, the "Korean Commonwealth."

First of all,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ust be careful not to make Pyongyang feel that the South intends to absorb the North (even through a peaceful merger). If Pyongyang detects such an intention of the South, it will not change its rigid posture to the unification matters as maintained so far. For this, the South is not to overemphasize that Korean Commonwealth is an intermediate stage leading to the unification. We must understand why Pyongyang holds caution against South Korea's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while giving some positive interpretations of the Formula. Let us not forget that North Korea perceives the South Korean formula is after all to be run in favor of the South.

South Korea has replaced the term "great national unity," instated in the 1972 North-South joint communique, with "democracy." This, probably a minor problem to the South, caused the North to apprehend that South Korea would eventually merge the North. We are

wondering why one has to alter the contents of the communique once agreed upon by both? The Seoul government should reconsider such one-sided alterations in the past agreement.

At any rate, it is important for the Seoul government to initiate its unification policies with confidence, since it surely has gained superiority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as well as in the relations with the North. I think that it may not hurt South Korea even if Seoul adopts the North Korean term "Confederal Republic" in the future. Although North Korea insists on "Confederal Republic" as the final stage of unification, it no longer means a "Confederal Republic" of one state; rather it means a "Confederal Republic" maintaining two different systems and ideologies. Therefore, once a "Confederal Republic" is actualized by way of peaceful coexistence of two systems, we may observe a wide range of active mutual exchange between the two sides. This will increase the possibility of one-state and one-system unification, which seems not so different from South Korea's national unification formula in 1989.

南 北 聯 合 과 經 濟 協 力

알렉세이 세미요노프
(蘇, 과학아카데미)

지난 몇년간 國際情勢는 질적인면에서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 國際情勢는 평화와 國際安保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해 나아가고 있다. 오늘날 核미사일戰과 같은 전세계적 규모의 戰爭에 대한 직접적인 危險이 실질적으로 除去되었다. 서로 다른 국가들 및 國家群들 사이에 國際的 緊張緩和의 과정이 대결에서 對話로 전환하고 있으므로 軍備競爭制限과 지역적, 국지적인 紛爭解決에 대한 노력이 전세계적 성격을 띠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분명한 진전에 決定的인 要因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論할수가 있다. 이러한 결정적 要因은 客觀的인 동기나 規則일수도 있고 혹은 慎重히 立案된 政策이나 어떤 국가들의 지도자들이나 政府들의 활동일수도 있다. 어쨌든 내가 생각하기에 새로운 평화적인 접근과 主要強大國의 政治家들과 정부들의 평화조성 노력은 戰爭防止, 평화와 國際安保의 강화를 위한 鬪爭의 과정에서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미 모두가 認定했듯이 우리나라와 우리의 指導力이 이러한 변화에 지대한 貢獻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심히 만족해하고 있다.

사실 새로운 政治的 정신 (mentality)에 자극되어 蘇聯外交政策의 새로운 概念이 創出되었다. 이 概念은 현대세계의 상당한 矛盾에도 불구하고 現代世界는 어느정도 화합과 세계의 각 부분의 相互依存性을 보여주고 있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각국가들의 그러한 相互依存性은 평화적 共存, 協力, 緊急한 문제의 정치적 해결, 核戰爭勃發 條件의 예방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의 美-蘇頂上會談으로 인해 전체적인 분위기 정상화의 可能性이 확대되었고, 또한 一般國際關係에 있어서 호의적인 政治的 분위기 조성을 가능케 했다. 이 會談의 결과가 아시아-太平洋地域의 情勢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1970年代中盤의 기간과는 달리 국제분위기의 趨勢는 보편적인 정상화가 단지 유럽과 유럽의 문제에만 한정되지 않고 우리가 바라는 만큼 그렇게 빠르지는 않지만 다른 大陸으로 擴散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모든 國際問題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으며, 전아시아-太平洋地域의 國際關係 발전에 또한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심원하고 오래지속된 동인들에 근거하고 있다. 첫째로 금世紀를 거의 支配해왔던 “이테올로기시대”는 紛爭과 戰爭을 일으키곤 했는데 이제는 사라지고 있다. 국민들, 국가들 모두는 이테올로기 차이때문에 더이상 서로를 滅亡시키기를 원하지 않는다. 두번째로, 중공과 뒤를이어 蘇聯이 자신들의 國內問題 해결에 집착하고, 外交政策을 國內問題들보다 下位에 두게 되었다. 셋째, 국가의 힘과 安保 및 국민들의 繁榮이 軍備에 依存하기 보다는 經濟, 科學, 技術分野의 발전에 더 依存한다는 認識이 世界的으로 澎湃해가고 있다.

Perestroika의 등장으로 우리는 아시아-太平洋 政策을 어느정도 수정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 비교적 관심을 덜 가졌던 地域에서 ‘세계 相互 依存性 概念’을 실제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잃어버렸던 시간을 보상받고 싶어 한다. “태평양 정신”(Pacific Mentality)은 蘇聯의 해석으로는 “유럽공동의 집”(Common European Home)을 建設하기 위한 計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政治的 정신’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으로 되어가고 있다.

蘇聯의 아시아-태평양 Programm의 세측면은 政治, 安保, 經濟 分野 등으로 細分化하여 얘기할 수 있다. 이 세측면은 모두 한가지 目標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 目標은 蘇聯과 그 地域의 당사국 모두의 利益을 위해 安保 및 經濟協力發展體制(system)을 設立하는 것이다.

蘇聯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보다 정확하게 열거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종종 非難받았듯이 소련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을 支配하려는 과거의 “최상의 목표”(super aim)를 아직도 가지고 있으며, 단지 그 수단만이 변화되었다는 것은 사실일까? 客觀的인 관찰자라면 이는 사실과 다름을 알수 있을 것이다. 이 地域에서 蘇聯의 진로는 다음 세가지 주된 동기에 의해서 결정되어 진다. 蘇聯의 安保를 保障하는것, 국내 경제문제를 해결하는것, 아시아-태평양 共同體에 關係되는 構成員으로서의 지위를 얻는것이 바로 세가지 주된 동기이다.

4年前에 蘇聯은 아시아-태평양 地域에서 平和, 安保 및 協力 增進을 위한 방법을 공동으로 摸索할것을 提案했는데, 이때 蘇聯은 5개항의 指針으로 된 종합적인 行動計劃을 提案했다. ① 地域的 紛爭을 해결할 것 ② 核武器 확산을 종식시킬 것 ③ 태평양·인도양 근해에서 해군 활동 및 군대의 出現을 제한할 것 ④ 아시아에서 兵力과 재래식 무기를 단호히 減縮할 것 ⑤ “信賴方案(confidence measures)에 대한 실질적 토의를 시작할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 모든 과업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시급한 일이다. ①항과 ②항은 상당한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 蘇聯은 아프카니스탄문제에 관한 제네바협정을 이행해 왔다. 캄보디아(Cambodia)에서는 民族和睦의 原則에 관한 정치적 결정을 위한 방안이 摸索中에 있다. 韓半島에서도 緊張緩和를

향한 진전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軍事的 側面에 관한 한 根本的인 진전이 있다는 사실은 알려진바 있다. MSRR條約에 따라 소련은 소련영토의 아시아지역부분에서 뿐만아니라 유럽地域 部分에서 중·단거리 미사일을 폐기중에 있으며 워싱턴 조약에 따라 436기의 중거리 핵미사일을 蘇聯의 아시아 地域部門에서 폐기하였다.

1984년을 기점으로 蘇聯은 우랄산맥에서 동쪽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核地上兵力 增強을 중단했다. 또 1986년 이래로 蘇聯은 이 地域에서 항공모함의 數를 增加시키지 않고 있다.

또한 지난해 말엽에 蘇聯은 캄란(Kamram) 기지의 軍事的 주둔을 감축하기 시작했으며 MIG 23機와 TU-16機는 이 기지로부터 撤收했다. 단지 臨時要員集團의 6~10기만이 이곳에 기착하고 있다. 蘇聯과 中共은 관계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두국가는 軍事的 대결의 정도를 낮추기 위한 措置를 취했다. 中共은 백만명의 兵力을 減軍했다. 蘇聯은 일방적으로 50만정도의 兵力을 減軍했는데, 극동에서 십이만을 包含하여 蘇聯 領土의 아시아 地域部門에서 20만을 減縮했다. 地上兵力은 12個 師團이 減縮되었고 11개 航空聯隊가 解體되었다. 그리고 16대의 전함이 태평양 함대로부터 빠져나갔다. 남아있는 兵力도 단지 방어를 目標로 하고 있다.

蒙古로부터의 蘇聯軍 撤收도 進行中이다. 올 年末까지 $\frac{3}{4}$ 의 地上軍과 空軍이 歸還되어 질 것이다. 즉 1개의 機械化 보병사단, 2개의 機甲師團, 2개의 航空師團 및 5萬以上の 兵力을 가진 派遣部隊가 귀환되어 진다. 최근 蘇聯과 蒙古는 몽고주둔 蘇聯軍의 완전한 撤收를 위한 協定에 署名했다.

얼 마전까지만해도 주요 아시아 - 태평양 국가들 사이에 - 蘇聯과 美國, 蘇聯과 中共, 印度와 中共, 日本과 蘇聯 - 오랜 기간동안에 걸쳐 緊張과 紛爭이 있었으며 때때로 대결까지도 있었다는 사실은 周知하는 바이다. 이들 사이의 關係의 경직성이 모든 아시아국가들간의 相互關係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당연하다. 요즈음 아시아 - 태평양지역에서 進行되고 있는 積極적 과정들의 요체는 이 地域의 기본적인 地술적 亞各형 構圖에 속한 國家들 사이에서 정상적이고 우호적이기 조차 보이는 關係들이 形成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關係는 아시아의 政治적 분위기를 결정적으로 規定짓고 있다.

蘇聯과 中共 (PRC) 사이의 關係정상화는 아시아에서 전개되는 狀況의 質적인 面에서 分명한 발전의 중요한 要素이다.

政治, 經濟, 文化分野에서 蘇聯과 中共간의 關係를 호전하기 위한 또 다른 措置들은 國際情勢의 改善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蘇聯과 中共사이의 經濟的 關係의 進전에는 상당한 潛在性이 있다. 우리는 이웃이다. 두나라는 廣大한 천연자원과 貿易을 위한 廣範圍한 商品을 所有하고 있다.

1989년 봄 蘇聯과 中共의 指導者들이 “과거를 닫아버리고 未來를 열기 위해서” 北京에서 만났다. 이는 두나라의 關係를 완전히 정상화하고 자신들의 미래발전을 위한 초석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中共國家委員會 (The PRC State Council) 의 이붕首相의 蘇聯 公式訪問의 結果로 새로이 다수의 중요한 協정이 체결되었는데, 이 協定中의 하나가 “經濟・科學・技術協力을 위한 長期計劃 (program)”이다. 두나라간의 海外貿易은 급속히 增加하여 1989년에 30億\$을 증가했는데, 이는 中공의 1차 5개년 計劃期間의 1.5 배에 달하는 記錄的인 數值이다.

核戰爭의 危脅에 반대하고 평화와 국제안보의 강화를 위한 鬭爭에 대한 中共의 공로에 대해 우리는 매우 감사하고 있다. 이 세계의 兩大 社會主義國家의 노력이 여러가지점에서 類似하다는 것은 충분히 강조해도 무방하다. 蘇聯과 中共은 近接한 위치에서 많은 國際問題들을 바라보고 있다. 兩國家는 核武器를 결코 먼저 사용하지 않을 것을 闡明하고 있으며, 우주의 非軍事化와 核軍縮을 主張하고 있다.

우리의 국민들이 지금까지 中共에서 일어났던 그리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많은 일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며, 蘇聯에서 진행중인 일도 중공에 의해 항상 承認되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는 잘 認識하고 있다. 하지만 兩側은 國家水準에서 서로를 비난하지 않기로 暗默的으로 합의하고 있는데 이는 內情不干涉原則에 부합하는 것이다.

蘇聯과 印度간의 관계는 항상 密接했고 우호적이었다. 兩國의 관계는 뿌리가 깊고 기반이 튼튼하다. 兩國은 廣範圍한 經濟協力, 相互政治的 活動에 대한 이해로 연결되어 있고 國際問題에 대한 目標와 見解의 일치, 傳統이 깊은 우호적 감정, 信賴와 동정으로 연결되어 있다. “평화·우호·협력에 관한 蘇-印 條約”은 兩國의 協力展開를 위한 튼튼한 國際法的 기반이다.

蘇聯과 日本은 廣範圍한 정치적 대화를 進行中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蘇-日平和條約 締結과 관련된 일련의 問題에 관한 對話이다. 常設協商機構가 이 문제의 討議를 위해 設置되었는데, 이 機構는 專門家, 次官級 外務部長官級등 다양한 水準에서 작동되고 있다. 兩國의 政治, 經濟的 關係의 進展이 “北方領土”문제에 대한 양국의 비타협성 때문에 여전히 妨害받고 있기는 하지만 蘇-日間的 貿易量은 상당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와같이 주요 아시아국가간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性格을 띠어가고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관계가 상당히 對決과 競爭關係의 특징을 가졌으나 오늘날 이들 관계는 폭넓은 對話와 協力을 특징으로 하며 점점 우호적으로 되어가고 있다.

政治的 결과에 관한 한 아시아 4대(蘇聯, 中共, 인도, 日本) 주요 국가 간의 협력관계의 진전이 國際分野에서 세계정치상황을 호전시킨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아시아 및 세계공동체의 운명에 지대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事實을 우리는 確實히 말할 수 있다.

블라디보스톡과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의 고르바초프 演說은 그들의 적극적 歡迎表示에도 불구하고 이 地域에서 상황을 급격히 호전시키기 위한 效果的인 計劃을 제공해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蘇聯의 주도권으로 인해 美國과 日本은 부정적인 反應을 보여주었고, 中共, 인도 및 많은 아시아 국가들도 相當히 유보적인 反應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내가 보기에 이러한 提案들의 결정적인 결점은 아시아-태평양 狀況에 안전보장에 대한 근본적으로 유럽적인 接近을 시도해 보려는데 있다. 즉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유럽적인 양극화 및 兩軍事同盟의 영토적 대치상황이 存在하지 않으며 또한 中共, 日本,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그리고 여타 국가들간에 多-中心主義(multi-centrism)가 커다란 役割을 하고 있는 곳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영토적 紛爭과 국가 對 국가의 紛爭이 수없이 많으며 또한 분단국가도 여전히 存在한다. 이외에도 이 地域에서 重大한 정치적 영향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經濟的 影響力이 부족한 상황으로 인해 아시아 安保를 위한 운동의 주도권을 가지려는 蘇聯의 시도는 성공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상황의 어려움은 유럽과는 달리 軍비제한 및 갈등해소 회담을 위한 어떠한 공식적 협상기구가 設立되어 있지 않다는 사

실에 있다.

이제 소련은 상이한 計劃과 일본, 오스트렐리아, 美國, 아세안 국가들이 先導하고 있는 이 地域에서의 地域的 政治的 및 經濟的 구조의 概念을 綿密히 檢討해야 할 것 같다.

다양한 討論會(forums) 및 會議에 參席하는 일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역동적으로 展開되고 있는 多面關係에 대한 소련의 극동지역 관련성을 보장할 目的에서이다.

극동지역의 社會的 經濟的 후진성때문에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소련을 무력이나 政治的 공작을 사용해서 태평양지역에 침투하려는 勢力으로 볼 수도 있다.

관료주의에서 비롯되는 融通性的 결여 및 시의에 맞게 대외 經驗을 바라보고 그 經驗을 적절한 관점에서 評價하여 그것을 유익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관료적 무능력은 새로운 그리고 아직 미지수인 모종의 경제유대에 대한 우리의 관계에 부정적인 影響을 미친다. 嚴格한 규율과 장관들의 자의적인 규칙 適用때문에 海外商社들이 사업을 벌이는 것이 매우 힘들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우리는 “러시아의 주권선언”을 통과시킨 러시아의 회에 대해 상당한 希望을 품기 始作했다. 극동은 원래부터 러시아의 영토이며 ‘자주적 러시아 外交(sovereign Russian Diplomcy)’의 자연스런 活動의 무대였다. 러시아에서 權力을 행사하고 있는 새 세력이 우리의 극동을 태평양에 대면하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수년동안 아시아는 급박한 국제문제들과 多樣한 이해의 충돌과 紛爭이

複雑하게 뒤얽힌 地域이며, 수많은 폭발직전의 國際問題를 가진 고도의 政治的 불안정이 감도는 地域이며, 또한 紛爭이 발발하고 있는 地域 (hot spots)이기도 하였다. 지금도 이 地域은 긴장의 온상으로, 수많은 地域紛爭으로 여전히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아시아-태평양국가들간의 관계정상화 과정은 일종의 연쇄반응(chain reaction)의 모습을 띠어왔다. 아시아국가들의 국제관계체계는 平和와 국제안보란 대의에 유리한 方向으로 變化하기 시작했다. 우리의 눈앞에 아시아국가들 사이의 새로운 관계체계가 대두하고 있는데, 이 체계는 외부세력에 대항하여 軍事的 政治的 對應과 반격을 목표로 하는것이 아니라, 廣範圍하고 集中的인 경제협력, 과학과 技術文化的 交流, 세계적인 문제해결에 협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根本的이며 분명한 진전들 때문에 아시아국가들은 자신들의 外交政策의 概念에 중대한 수정을 할 수 있고, 또 外交政策의 우선순위 전체를 再考할 수도 있다.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는 과거에는 고도의 국제적 긴장과 地域國家들 간에 그리고 地域國家들의 상이한 국가그룹간의 대결에 目標을 두었으나 이제는 차츰 군사적 긴장을 감소하고, 協力을 增進하고, 이 地域에서 새로운 형태의 국제협력의 모색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아시아 및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展開되는 국제적 狀況속에 전반적으로 분명한 추세는, 혹자는 이를 “主된 方向”이라 하는데, 대륙에서의 국제긴장의 점진적 해소와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장기간에 걸친 쓰라린 紛爭 및 캄보디아문제의 점진적 해결을 위한 길을 모색하는데 유리한 狀況을 조성해 주고 있다.

아시아에서 아직도 진통을 겪고있는 地域中の 한곳은 韓半島이다. 비극적이며 破壞的인 韓國戰爭은 수십년전에 끝났지만 歷史的으로 存在하는 사실이 되었고 서로 다른 發展의 길을 選擇하여 사십년간이나 나란히 살아오고 있는 南韓과 北韓은 상호 이질감과 상호 대결을 극복하지 못했고, 한국이란 단일체를 分斷시킨 분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요즈음의 韓半島 狀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韓半島 狀況의 展開에 대해 어떻게 展望할 수 있는가?

韓國問題에 정통한 專門家들이 여기에 參席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狀況에 대한 나 자신의 설명은 짧막하게 줄이겠다. 내가 보기에 비무장지대(DMZ) 양쪽의 韓國人 모두는 비록 오늘날은 이문제 解決의 실질적 可能性에 대해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統一을 원하고 있는것 같다. 이 問題에 대한 關心은 南韓과 北韓의 사람들 수중에 달려 있다. 왜냐하면 韓國의 指導者들과 韓國國民들을 除外하고 이문제를 해결할 이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동시에 統一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은 한국분단에 責任있는 蘇聯과 美國은 물론 南韓과 北韓이 보장하는 안보와 均衡이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두 단계로 對策이 세워져야만 한다. 첫째, 한국측에서는 南韓과 北韓 사이의 모든 形態의 관계와 接觸은 인내를 갖고 展開되어져야 하며 고무되어져야 한다. 둘째 中共, 日本과 더불어 美·蘇兩國은 南北韓 대화의 展開는 물론 亞大陸에서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이 分野에서는 할 일이 많이 있다.

地域安全保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경제적 안보인데 이는 보통 국가안보의 일부분으로 看做되어 진다.

국가경제안보에 있어서 範圍를 充分히 좁혀 하나의 重要한 요소를 결정한

다는 것은 비교적 쉬운데, 한 국가 國民經濟 그러한 측면은 그 국가의 軍事的 安保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좁은 의미의 經濟安保란 한 국가의 영토가 단기간 침략을 당한 狀況이나 국가영토의 일부가 점령당하고 있지만 나머지 地域에서 국가가 계속 기능을 수행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한 국가의 生存을 보장할 수 있는 經濟의 能力과 관련이 있다.

원자재나 製品의 수입이 일반적인 안보—즉 經濟부분들의 상당한 개방, 유용한 내용의 情報에 接近, 군사적 목적에 중요한 技術이나 製品을 얻을 기회 등—를 維持하는데 특히 중요하게 생각되어질 때 이 문제의 軍事的 측면은 海外貿易의 形態에 또다른 중요성을 가진다. 위에서 보았듯이 이러한 점에서 經濟安保의 維持는 자원의 할당, 분배와 같은 한 국가의 經濟活動의 측면에 影響을 끼칠 뿐 아니라 다른 國家들과 經濟交流의 規模를 제한한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 문제는 軍事的 안전 보장과 관련됨은 물론 세계에 필수적 수단이요 國民의 생활수준과 관련되는 경제안보란 보다 넓은 概念을 얘기할 때 생겨난다. 國民들이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전체 삶의 방식 유지를 위해 經濟的 선결조건들은 마찬가지로 重要한데 특히 國民들이 소중히 여기는 정치체계가 중요하다. 이런점에서 經濟的 安保는 外部의 경제 Parameter가 變하여 선호되고 있는 사회체제 및 정치체제의 破壞를 초래할 때 중대한 危險에 놓여지게 된다.

一國의 경제안보에 대한 침해의 원인들은 국내적인 것이거나 海外로부터 일수도 있고, 客觀的인 것이거나 주관적인 것일 수도 있으며, 경제적인 것 혹은 비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다. 歷史的으로 경제 안보에 대한 위협의 가장 주된 원인은 전염병이나 자연적 災害와 같은 자연의 현상이었다. 이러

한 種類의 危險으로 부터 면제되는 나라는 없다. 자연적 현상의 결과의 規模를 제거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能力은 一國의 경제발전의 水準에 최종적으로 依存하지는 않는다.

경제안보에 대한 또 다른 危險의 集團은 환경오염, 사고, 에너지와 天然 폐기물과 같은 산업적 活動의 부작용과 관계된다. 최근에 이러한 危險은 종종 한번에 한지역의 수많은 國家들을 危險에 빠뜨리고 종종 세계 전 人類를 危險에 빠뜨린다. 국가란 단위를 넘어서 일어나는 이러한 危險은 자연적 원인이나, 人類愛란 전지구적 문제로, 自然의 이용이란 영역의 문제로 설명되어 진다.

經濟的 불안정은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경기후퇴, 공황, 해외무역이란 통로로 한 국가에서 다른 國家로 전파되는 인플레이션 등과 같은 자본주의의 分명한 特徵으로부터 생겨나기도 한다. 또한 海外貿易이란 통로를 통해서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격차가 確固하게 되는데 후진국은 대부분의 人類가 살고 있는 나라들이다.

상호의존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국가경제 안보는 전형적인 海外貿易關係(제품, 서비스, 기술, 자본의교역등)를 가진 一國의 거대한 경제적 잠재력에 의해서 가장 잘 확보되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한 국가의 他國에 대한 의존성은 他國의 이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성과 어느정도 균형을 맞출 수가 있다.

실제로는 그러한 균형은 주요 선진국 사이의 관계에서조차도 드문 예이다. 몇몇 국가가 무방비상태이고 또한 그들에 대한 他國의 경제적 제재 경우에 적당한 대응을 할 수 없을때 不均衡的인 경제의 상호의존이 오히려 빈번하다. 그러한 경우에 타국으로부터의 그 나라의 經濟的 安保의 위

협약의 증대에 대한 一國의 대응은 통상 두가지 방향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국내의 면역성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그 국가는 한편으로 그들에게 우호적인 국가로 인식되는 나라들과 對外經濟關係를 집중하고 확실한 供給源과 보장된 商品市場을 모색한다. 다른한편, 이나라는 비우호적인 국가나 잠재적 적대국가들과의 경제관계를 다양화하여 그들과의 관계에서 종속의 “危險水位”를 넘지 않으려 한다. 둘째 위외국가는 동시에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資源(經濟的인 資源뿐이 아니다)을 동원할 조치를 취하고 해외로부터 위협을 방지하거나 그들이 당할지도 모르는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外部世界에 대한 영향력의 축들을 바꾼다.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우리는 몇가지 結論을 얻을 수 있다. 이들은 각국의 발전의 다양한 수준, 社會經濟體制 및 國家經濟의 잠재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가단위의 참가자를 위해 상호의존하는 세계경제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평가하는데 이들은 무시되어져서는 안된다.

첫째 진정한 自國의 경제적안보는 一方的 행위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自國의 경제적 안보는 국제적 경제안보의 상황하에서만 유효하게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경제안보는 포괄적 國際安保體制의 필수적 요소의 하나라는 것이다. 경제적 안보의 결여 혹은 그 수준의 감소는 국가간의 政治的 關係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국가안보와 더불어 상당히 진보된 집단적 경제안보체제가 병존하고 있다. 그중 두가지 類型이 두드러진다. 하나는 Bloc system (資本主義 社會主義 국가별로 형성된 정치 bloc 구조내에서)으로 또하나의 지역적인 블럭內의 體制이다.(統合形成)

현대의 세계적 상호의존과 각 국가들의 정치적 자의식의 발달로 인하여

경제안보에 대한 불력적 접근은 한층 더 명백히 그 非效率性을 드러내고 있다.

남북한에 있어서 전반적 國家安保와 經濟安保에 대한 이해는 결정적으로 다르며 상당부문에 있어서 양립이 불가능하다.

남한의 경제안보는 무엇보다도 國家經濟의 안정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유리한 대외적, 대내적 조건의 유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내적 상황은 무엇보다도 노사분규, 이데올로기적 대립에 근거한 暴力事態, 계층갈등 등이 거의 없고 안정된 社會的 平和와 자유기업에 대한 공공의 분위기가 존재해야 한다.

안보의 대외적 측면은 무엇보다도 正常的 對外關係를 진전시키고 世界市場에 대해 無難하게 접근해 가는것을 내포하고 있다. 즉 선진국가나 개도국 시장에 자국제품을 수출할 수 있고 내외에서 원자재나 半製品을 안전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의 확보인 것이다. 이말은 구체적으로 국가와 국가간에 정치경제적 安定性, 군사적 분쟁이나 다른 충격의 不在, 국제적 교통 및 통신매체의 안정성확보를 의미하는 것이다. 보다 넓은 의미에서 경제적 安全保障의 의미는 국제안전에 대한 위협의 완전할 제거, 재화 자본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내포한다.

북한측에 있어서 경제적 안보란 사실상 정치적 안보와 일치한다.

北韓의 경제발전은 主體(thuchhay)經濟戰略에 의해서 지도되어 왔다. 이것이 기본원리는 自給自足으로써 다양화된 경제체제의 건설을 지향하며 균형성장보다는 成長率을 우선시 한다.

이제 북한경제의 특징은 전반적인 不均衡, 천연자원·원자재·전력의 만성적 부족, 産業財源의 정신적·물질적인 마모, 사용되는 기술의 低水準, 수송

에 있어서 不規則등이다.

農業生産性 향상은 심각하게 저해받고 있는데 그것은 적당한 경작지의 부족, 가축업의 後進性, 빈약한 原資材, 낮은 技術水準, 農業部門에 대한 연료, 원자재 전기공급에 있어서 현재적용되는 現地調達原理등에 연유하고 있다.

주곡의 수확은 그 국가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여 곡식 배급카드제도로서도 해결이 어려워 부족한 곡식을 수입해야 하는데, 이에 쓰이는 경화는 (hard currency) 극단적인 통화제한을 함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액수에 이르고 있다.

북한경제체제의 重大한 문제의 하나는 그 기술이 낙후되어 있다는데 있다. 科學과 技術研究는 매우 저급한 수준에 있다. 전문기술의 부족, 상대적으로 저조한 연구의 質때문에 과학적연구의 진척이 애로를 받으며 따라서 심지어는 수입된 충분한 현대식 장비를 갖추어도 마찬가지이다. 과학발전은 과학자들을 부당하게 격리시키고 해외에서 온 研究者들과의 접촉을 제한하는 일관된 정책때문에 저해받고 있다.

資本投資政策은 生産能力의 양적성장만을 지향하여 사실상 現在稼動中인 기업의 現代化가 안되고 있다.

경제메카니즘은 엄격히 中央集權化된 計劃政策을 고수하여, 물질적 유인이 가시적인 발전을 전혀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현존하는 북한의 자금자족적 전체주의 정권의 관점에서 보면 경제의 안보란 결국 超中央集權化되고 국가주도의 無市場經濟의 원활한 메카니즘의 기능을 교란시킬 수 있는 해외로부터의 경제적 영향력의 不在라 할 수 있다.

海外市場 및 그 경제구조로부터의 고립은 필연적으로 대외관계에 대한 국가의 가능한 고도의 統制, 포위된 성채 (seiged fortrees) 정신의 자극

을 가져오게 된다.

북한의 경제안보체제에서 대외경제는 오로지 두개의 기능만을 갖게된다. 하나는 자국에 不在하는 원재료의 調達이며 또하나는 輸入代金を 위한 外換의 획득이다.

북한의 지도자들은 현재 소련과 동구에서 진행중인 페레스트로이카의 진전 과정에 대해 아주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金一成과 그의 측근들은 경제전략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있는 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고 다만 自國內에서 존재하는 질서를 유지시키며, 경제메카니즘에서의 두드러진 역기능만을 줄이는데 전념하고 있다.

經濟發展에 있어서 침체는 또한 북한의 對外經濟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전반적인 문제들은 북한의 수출기반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오랫동안 주수출품은 야금제품 (압연철금속과 아연), 建築資材 (마그네사이트링어와 시멘트), 광산물, 해산물이었다. 강조되어야 할 점은 수출은 단지 수입의 대금을 위한 외환의 원천으로서만 간주되어진다는 점이다.

외채는 비대하여서 사회주의 국가와의 거래에서 약 이십오억 루블에 이르고 경화로는 십삼억 루블에 이르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북한의 해외무역관행은 가능한 한 많은 양의 물건을 資本主義 國家에 수출하여 景化*를 얻으려 하고 社會主義 國家와의 교역에서 남은 것을 가지고 分配하려 한다.

현재 소련만이 유일하게 북한에 대해서 經濟的 技術的 協력을 제공하고 있다. 절박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가장 빠른 시일내에 企業을 재건할 수 있으려면, 북한의 指導者들은 해외의 資本과 現代技術을 유치해야 하는데 이때 合作投資의 設立에 특별한 희망을 지녀야 한다.

이과정에서 소련에게 주어진 重要한 역할은 契約에 따라서 북한에게 발전소 건설이나 (核發電所를 포함하여), 비철금속 공장, 엔지니어링 공장 및 기타공장의 설립시에 북한에게 기술원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의류합작생산이나 공작기계산업에서의 合作投資에 새로운 類型의 협력이 권장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북한땅에서의 合作投資 經驗은 심각한 문제가 이 분야에 존재함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은 북한측의 非生産的 의존적 태도 및 일방적 이익과 혜택을 얻으려는 자세, 그리고 미약한 원자재와 관련이 있다.

남한과의 활발한 교역 및 경제유대는 현재 軍事的, 政治的 대치구조가 존속되는한 북한에게는 안정교란 요인이 될 가능성과 대체적으로 북한의 이해와 상충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러한 유대관계는 持續이고도 항상 統制되지 않는 위협을 북한의 現政治, 社會體制에 형성하기 때문이다.

분명한 사실은 남북간 經濟交流의 발전은 남북유대의 강화 및 남북대치 수준의 약화와 보조를 맞추어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관계 진전의 첫단계에서 있을 수 있는 여러방안중 하나는 이 과정에 第3國家들을 유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第3國家들은 이데올로기적 충격완화 장치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다.

즉 남한의 경제적 성공이 주는 과시효과에 대한 북한 지도자들의 경제심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것이다.

*경화 : 달러나 달러와 교환이 가능한 화폐

The Korean Commonwealth and Economic Cooperation

Alexei Semeynov
(Academy of Science. U.S.S.R.)

Last years the international situation undergoes qualitative positive changes. It is developing in the direction favorable for strenghtening of pea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Today the immediate danger of a global military catastrophe, i.e. of a nuclear-missile war is practically eliminated. The processes of relaxation of international tension, of different states and groups of states turning from confrontation to dialogue, efforts on arms race limitation and on regional and local conflicts settlement are indeed assuming a planetary character.

Certainly, one can argue what is the decisive factor in these positive developments - either it is the objective reasons and regularities or a deliberately worked out policy and actions of leaders and governments of these or other states.

In any case, I presume that new peaceful approaches and peacemaking efforts of statesmen and governments of major powers of the world undoubtedly play a priceless role in the process of struggle for war prevention, for strenghtening of pea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And we are deeply satisfied with the fact that a tremendous contribution to that end (as it is already acknowledged by everyone) has been made by our country and its present leadership.

Indeed, the new political mentality stimulated working out of a new conception of the Soviet foreign policy. It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modern world, notwithstanding its deep contradictions presents a certain unity, interdependence of its diverse parts. Such an interdependence of various countries calls for their peaceful co-existence, cooperation, political solution of urgent problems, prevention of conditions for nuclear catastrophe breaking out.

The Soviet-American summit meetings of last year enlarged the possibilities for normalization of general atmosphere and enabled the creation of favorable political climate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 general. The results of these contacts, no doubt, affect the situ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In contrast to the period of mid-1970s the trend of international climate, general normalization is no longer restricted exclusively to Europe and its problems, but is spreading to other continents, though not so quickly as we'd like, it manifests itself in all international affairs. This trend becomes apparent also in the international relations development in Asia and the Asia-Pacific region as a whole.

These changes are based on causes of deep and longstanding character. First, the "era of ideology" which dominated almost the whole current century, engendering conflicts and wars, is moving to its decline. Peoples and nations do not want any longer to annihilate one another for ideological differences. Second, China and later the Soviet Union turned to solving their domestic problems, subordinating their foreign policies to these causes. Third, an understanding is growing in the world that might and security of a

state, prosperity of its people are less and less dependent on armaments and - more and more on progress in the fields of economy, science and technology.

Perestroika enabled us to revise to a certain extent our Asia-Pacific policy. We'd like to make up for the lost time by way of practical use of the world interdependence concept in respect to the region that was paid comparatively less attention before. "Pacific mentality" in its Soviet interpretation is becoming the same integral part of a new political mentality as plans to build a "common European home".

One can specify three aspects of the Soviet Asia-Pacific program - political, security and economic. All three of them are directed at one aim - to build up a system of security and economic cooperation development in the interests of both the Soviet Union and the states-partners in the region as well.

It is important to specify more exactly the aims that the USSR pursues in the Asia-Pacific. Is it true, - as we are sometimes blamed that Moscow still has the former "super aim" to dominate the Asia-Pacific region and that only the means have been changed? An objective observer will find out that it is not true. The Soviet Union course in the region is more and more determined by three main motives: to ensure the USSR security, to solve domestic economic problems, to gain a position of a respected member to the Asia-Pacific community.

When four years ago the Soviet Union called to look jointly for the ways for strengthening of peace, security and cooperation in the Asia - Pacific region, it proposed a complex program of actions in five directions: to settle regional conflicts; to put an end to nuclear arms dissemination; to limit naval military activities and

military presence in the vicinity of the Pacific and Indian Oceans; to cut up decisively military forces and conventional armaments in Asia; to start practical discussions on "confidence measures".

All these tasks are as urgent now as they were, the first and the second directions showing positive developments. The Soviet Union has fulfilled the Geneva Agreements on Afghanistan. A search for political decision in Cambodia on the principle of national reconciliation is going on. Developments towards lessening of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begin to show.

As far as military aspect is concerned, it is known that there is also a basic development in this respect: according to the MSRMR treaty the Soviet Union is demolishing all medium and short-range missiles in the European as well as in the Asiatic parts of its territory. According to the Washington Treaty 436 medium and short-range missiles are to be demolished in the Asiatic part of the USSR. Starting from 1984 the Soviet Union unilaterally stopped building up its ground nuclear forces to the East from the Urals, and since 1986 it does not increase the quantity of aircraft-carriers in that area.

And also at the end of the last year the USSR started to cut down its military presence at the Kamran base. MIG-23 and TU-16 aircrafts have been withdrawn from the base. Only 6-10 aircrafts of a shift personnel group are now stationed there. Moscow and Peking, making efforts to normalize relations, undertook steps to lower the level of military confrontation. China cut down its forces by 1 million men. The Soviet Union unilaterally reduced its military forces by half Million men, that is - by 200 thousand men in the Asiatic part of the country with 120 thousand of them in the Far

East. Land forces were reduced by 12 divisions, 11 air regiments were disbanded, 16 warships were taken out of the Pacific fleet. The remaining forces are oriented exclusively at defence.

Underway is withdrawal of the Soviet forces from Mongolia. By the end of this year 3/4 of land forces and the whole air group will be returned home, that is: one mechanized infantry division, two armored and two air divisions and detached units with total strength over 50 thousand men. Lately Moscow and Ulan Baatar signed an agreement to completely curtail the Soviet military presence in Mongolia.

It is well known that not long ago the relations between the major Asia-Pacific countries - between the USSR and the US, between the USSR and China, between India and China, between Japan and the USSR - faced a long period of tension, conflictness and sometimes even confrontation. It is natural that stern character of relations between them affected interrelations between all the Asiatic countries. Nowadays the main meaning of positive processes going on in the Asia-Pacific region is that of new normal and even amiable relations establishing themselves between the "apexes" of this Asia-Pacific basic "magical pentagon", that decisively define a political atmosphere in Asia.

Normalization of relations between the USSR and the PRC is an important element of qualitative positive developments of situation in Asia.

Tremendous significance for improvement of international situation have further moves to the better in the relations between the USSR and the PRC in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spheres.

There are considerable potentialities for development of economic ties between the Soviet Union and China. We are neighbours. Both countries have vast natural resources and wide range of goods for trade.

In spring of 1989 the Soviet and Chinese leaders met in Peking to "close the past and to open the future", that is to normalize completely the relations between the two powers and to lay down a foundation for ^{their} future development. As a result of official visit of the Premier of the PRC State Council Li Peng to the USSR a number of new important agreements were signed, one of them being the Long-term Programme for Economic, Science and Technical Cooperation. Foreign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growing rapidly. In 1989 it surpassed 3 billion dollars or was one and a half times over the record figures reached during the years of the Chinese first five-year plan.

We appreciate very highly the PRC contribution to the struggle against the threat of a nuclear war, for strengthening of pea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One can stress with satisfaction that the efforts of the two largest socialist countries on the world scene are similar in many respects. The USSR and the PRC look at a number of international problems from close positions. The both states proclaimed that they will never use nuclear weapons first. Both of them advocate non-militarization of the space, nuclear disarmament.

We realise that our public is very critical about much of what has happened and is going on in China and that the things underway in the USSR are not always approved of by China, but the

two sides tacitly decided to abstain from criticizing each other at the state level, with that being in line with the principles of non-interference into domestic problems of each other.

The relations between the Soviet Union and the Republic of India were always close and friendly. They have deep roots and sound foundation. They are connected by interests of wide economic cooperation, mutual political activities, by unity of aims and views on international problems, feelings of traditional friendship, confidence and sympathy. The Soviet-Indian Treaty on Peace, Friendship and Cooperation is a sound international-law basis for development of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A wide political dialogue between the USSR and Japan is underway, first of all on a range of questions connected with signing of the Soviet-Japanese Peace Treaty. A standing negotiating mechanism is set up for discussion of these problems, which is functioning on the levels of experts, deputy ministers and foreign ministers. The Soviet-Japan foreign trade has reached ample amount, though development of economic as well as political t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still hindered by inflexibility of the both countries on the problem of the "Northern territories".

Thus, the relations between major Asian countries are acquiring absolutely new character. If in the years that passed this relations to a great extent had features of confrontation and rivalry, today they are characterized with wide use of dialogue, cooperation, are getting friendly.

As far as political results are concerned one can surely say that development of cooperation between the four major countries of

Asia - the USSR, the PRC, India and Japan - in the international sphere, in resolving urgent problems of the world policy, no doubt, changes to the better the world political situation and may have tremendous significance for the fate of Asia and the whole world community.

But we should admit that the Vladivostok (1986) and Krasnojarsk (1988) Mr. Gorbachev's speeches with all their positive content did not present an effective enough programme for radical change of situation in the region for the better, and even more than that - the Soviet initiative caused negative reaction on the part of the US and Japan and rather reserved reaction on the part of China, India and a number of other Asian countries. To my view, a main drawback of these proposals was an attempt to bring about some fundamental European approaches to security on the situation in the Asia-Pacific, where there is no European polarization, no territorial confrontation of the two military alliances, where tremendous role is played by multi-centrism of differences between the PRC, Japan, the US, India, Indonesia, Vietnam and other countries. There are multitude of disputed territorial and state to state conflicts in the Asia-Pacific, there are also still divided countries over there. Besides, the Soviet attempt to become a leader of movement for Asian security under the conditions of lack of any serious political and first of all economic influence in the region significantly lessen chances for the Soviet initiatives in this direction to be successful. The difficulty of the Asia-Pacific situation lies also in the fact that in contrast to Europe no negotiating mechanism was set up there for talks on arms limitation and on conflicts resolving.

It seems that now the USSR should study with great attention different projects, concepts of regional political and economic structures in the region that were forwarded by Japan, Australia, the US, the ASEAN countries. We are interested in the widest possible participation in different forums and conferences with the aim to ensure the USSR and especially our Far Eastern region involvement in dynamically developing multi-sided ties in the Asia-Pacific.

Social and economic backwardness of our Far Eastern region enables the countries of the Asia-Pacific to view the USSR as a power trying to penetrate the Pacific with the use of methods of force and by political maneuvering. Bureaucratic lack of flexibility, inability to see in time foreign experience, evaluate it in a proper perspective and use it to our profit have negative effect on our relation to new, unknown to us forms of economic ties. Strict regulations, arbitrary rule of ministers make it very difficult for the foreign firms to do business.

To be frank, now we set out great hopes on the Parliament of Russia which passed the Declaration of Russia's sovereignty. The Far East is a primordial territory of Russia and in the context of "sovereign Russian diplomacy" is a natural field of activities. I hope, that new forces that came to power in Russia will be able to turn our Far East "to face the Pacific".

For years Asia was a zone of the most complex mix up of urgent international problems, collision of diverse interests and conflicts, and thus was a region of high political instability with a number of explosive regional problems and "hot spots". Nowadays this region is still being shocked by hotbeds of tension, a number of

local conflicts.

The process of normalization of relations between the countries of the Asia-Pacific of late has acquired a character of a kind of "chain reaction". The whole system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Asiatic countries started to change in a favorable for the cause of pea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direction. Before our eyes a system of new relations between the countries of Asia are arising that is oriented not at military and political confrontation and counteraction against external powers but at a wide and intensive economic cooperation, exchange of science and technological achievements, cultural values, cooperation in solving of global problems.

All these fundamental positive processes in a very near future will undoubtedly enable the Asiatic countries to do serious corrections and even certain re-thinking of their foreign policy concepts and the whole system of foreign policy priorities, that in the past were oriented at the situation of high international tension and even confrontation of different groups of countries of the region between themselves and with extra-regional powers, and now they are step by step reoriented at the main priority - lessening of military confrontation, development of cooperation and search for new form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region.

General positive trends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in Asia and the Asia-Pacific region going, as one can say on its "main azimuths", create favorable conditions for search for the ways for gradual resolving of international conflicts on the continent and among them such longstanding and painful as conflict between India

and Pakistan, Cambodian problem.

One of the "sore" points in Asia is the Korean Peninsula. The tragic destructive war in Korea ended years ago. But the North and the South, that came into existence historically, have chosen different ways of development and have lived side by side for forty years, failed to overcome mutual alienation and confrontation and resolve the problems that cut apart a joint body of Korea.

How do we view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nowadays and how do we imagine prospects for its development?

With serious experts on the Korean problem being present here I'll restrict myself to a brief summary of my own elaboration of the situation. It seems to me, that the Koreans on both sides of the DMZ want to unite, though today it is difficult to talk of real possibilities to solve this problem. The decision of the question is in the hands of people in Pyongyang and Seoul, for there is no one except for the Korean leaders and Korean people to resolve the problem. At the same time an indispensable condition of unification should be security and stability which is guaranteed by the North and by the South as well as by the USSR and the US, the two powers responsible for separation of Korea. So, actions should be undertaken on two planes: first, - on the Korean level, where all forms of ties and contacts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should be developed with tolerance being encouraged; second, - both the USSR and the US together with such countries as China and Japan should cooperate for safeguarding of security on the sub-continent as well as for development of two Koreas dialogue. There is much to be done in this field.

The most significant aspect of the region's stability ensuring is economic security, which is usually considered as part of national security. It is comparatively easy to determine only one narrow enough but a key element of "national economic security", namely those aspects of a country's economic development, that have great significance for its military security.

This narrow concept of economic security is relevant to an economy's ability to ensure survival of a country both in a situation of a short-time direct invasion on the territory of a country and in a situation when a part of national territory is occupied, but the state continues to function in the regions, that remained unoccupied.

A military side of the problem might also have other consequences for the pattern of foreign trade when import of some raw or manufactured goods might be considered especially important for maintaining of general security; for a degree of openness of an economy's branches and for access to appropriate cadres and information, and also for other countries opportunities to get technology and products significant for military purposes. Thus, maintenance of economic security in this aspect not only influences such sides of economic activities in a country as allocation and distribution of resources, but also limits the scale of mutual economic exchange with other countries.

But more serious problems do arise when elaborating a more wide concept of economic security relevant to ensuring not only military security but necessary means of livelihood and living standards of population.

Equally important are economic preconditions for the whole life style preserving, that population consider as desirable, especially political system, which people cherish. In this respect it is assumed that economic security is under serious threat when outside economic parameters are changing so that these invite destruction of preferable social and political system.

The causes of a country's economic security breach might be domestic and foreign, economic or non-economic, objective or subjective. Historically the most prevailing causes of a threat to economic security were natural phenomena (epidemics and natural calamities). There is no country in the world immune from that kind of danger. The ability to prevent and limit the scale of their consequences not in the last place depends on the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of a country.

Another group of threats to economic security is connected with negative side-effects of industrial activities (environmental pollution, accidents, exhausted sources of energy and natural resources). Lately these threats more often endanger a number of states of a region at a time and sometimes all the population of the world. These threats going out of national framework are explained by natural causes, by global problems of humanity, by problems in the sphere of use of nature.

Economic instability also comes out from distinctive features of capitalism, i.e. cyclical recessions and crises , inflation,- that "flows over" through foreign trade channels from one country to another. Through these channels gap between the industrially developed states and economically backward ones is also secured, and the latter are the countries, where the majority of humanity lives.

National economic security under the conditions of growing interdependence could be ensured best of all by mighty economic potentialities of a country with symmetrical structure of foreign trade ties (exchange of goods, services, technology, capital and so on). In this case dependence of a state on other countries is kind of balanced with dependence of other countries on this particular state.

But in practice such a balance is a rare case even in the relations between major industrial countries. More often there is an asymmetric economic interdependence when some of them are defenceless, unable to give an adequate answer in case of economic sanctions of other countries against them.

In such a case a reaction of a state to a growing threat to its economic security from other countries goes as a rule in two directions. First, with the aim to strengthen its inner immunity the state on the one hand concentrates its foreign economic relations, realizing them generally with friendly countries, seeks "reliable" sources of supply and "guaranteed" commodity markets; - on the other hand— diversifies its economic ties with unfriendly or potentially hostile countries so that not to exceed "critical points of dependence" in relations with each of them. Second, the same state simultaneously undertakes steps to mobilize all resources at its disposal (and not only economic), switches on levers of influence on outside world to prevent foreign threat or to minimize damage it might inflict.

Historical experience provides us with some conclusions, that should not be ignored while evaluating the problem how to make an interdependent world economy more secure for all the states-parti-

cipants with all their diverse levels of development, differences in social and economic systems and potentialities of national economies. First, genuine national economic security can not be achieved only by unilateral actions. Second, national economic security can be reliably ensured only under conditions of international economic security. Third, economic security is a necessary element of a comprehensive system of international security. Lack of economic security or lessening of its level will cause destabilization of political relations between the states.

Nowadays along with national also exist rather developed systems of collective economic security. Two types of them could be marked out: a) bloc systems (in the framework of political blocs of capitalist and socialist countries); b) regional intra-bloc systems (integration groupings).

Under modern conditions of global interdependence and growing political selfconsciousness of nations bloc approach to ensuring of economic security demonstrates more and more clearly its insufficiency.

Apprehension of national security in general and economic security as well in the North and in the South of Korea are decisively different and in a number of aspects are incompatible.

For the South economic security of the country means first of all preservation of favorable foreign and domestic conditions for a stable growth and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From this point of view domestic conditions should first of all include lack of major labour conflicts, outbreak of violence on the basis of ideological confrontation, class differences and so on, solid social peace and public climate favorable for free enterprise.

Foreign aspects of security include first of all chance to develop regular foreign ties and unhindered approach to world markets, possibilities for stable supply of the country's economy with raw materials, semi-produced goods as well as ^{for} export of its own manufactured goods on markets of industrial and developing countries. It implies political and economic stability of the states-partners, lack of military conflicts or other shocks, security of international ways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In a wider context foreign economic security means also complete elimination of a threat to international stability and free flow of goods, capitals and labour.

For the North economic security in fact coincides with political.

Development of the DPRK economy is regulated by "Chuchihay" economic strategy the basic principles of which are "self-reliance", orientation at building up of a diversified economic complex, priority for the rate of growth over balanced development.

Now the situation in the Republic's economy is characterized with its general disbalance, chronic deficit of natural resources, materials and electric power, significant moral and physical wear of basic funds of industry, low level of technologies used, irregularity in transportation.

Growth of agricultural productivity is significantly hindered by lack of suitable for cultivation land, backwardness of cattle-breeding, poor material and technical base, the existing practice of agricultural sector supply with fuel, materials, electric power and other resources on the residual principle. Major foodcrops' harvest does not satisfy the needs of the country even with existing

ration-card system on food, so the DPRK has to import grain, allocating for it great sums in hard currencies, inspite of extreme currencies limitation.

One of the serious problems of the DPRK economic complex is also its technical backwardness. Science and technological research is on a very low level. Lack of professional skill, relatively low qualification of researches impede progress of scientific research even in cases when research groups are provided with modern enough imported equipment. Development of sciences is also complicated by continued policy of unnatural isolation of scientific intelligentsia, restrictions on contacts with researches from abroad.

The policy of capital investment is oriented at quantitative growth of producing capacities while there is practically no modernization of acting industrial enterprises.

Economic mechanism preserves a system of strictly centralized planning, material stimulation doesn't have any visible development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existing in the DPRK autarchical totalitarian regime economic security is reduced to lack of any foreign economic influence which is able to disrupt functioning of a smoothly working mechanism of overcentralized state-administrative marketless economy. Isolation from foreign market and its economic structures necessarily demands highest possible state regulation of foreign ties, stimulation of a "sieged fortress" mentality. In the DPRK system of economic security foreign economic relations have only two functions - to supply the North Korean economy with raw materials that are not found in the country and to acquire foreign

currencies for import payments.

The Korean leadership showed strictly negative approach to the processes of perestroika which is underway in the Soviet Union and the East European countries. Kim Il Sung and his closest circle are not ready to start any meaningful changes in economic strategy trying by all means to preserve the order existing in the country and only restrict themselves to attempts to reduce the most noticeable malfunctioning of economic mechanism.

Stagnation in economic development also affect the DPRK foreign economic activities. The whole complex of beforementioned problems hinder development of export base of the Republic. The main export goods for many years have been produce of metallurgy (rolled ferrous metal, zink), construction materials industry produce (magnesite clinker, cement), mining industry produce, sea products. It should be stressed that export is looked upon as only a source of currencies for bying imported goods.

Great foreign debt which has reached about 2.5 billion rubles in trade with socialist countries and 1.3 billion rubles in hard currencies is still a serious problem.

The DPRK in its foreign trade practice is eager to export in capitalist countries the largest possible quantaty of goods to get hard currencies and distribute only what is left between the socislist countries. The Soviet Union remains the only the DPRK partner still rendering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to it.

To be able to reconstruct in the nearest future industrial enterprises, the urgent necessity of which is understood, the DPRK

Leadership is to invite extra foreign capitals and modern technology with special hopes being pinned on setting up of joint ventures. A great role is given in the process to the Soviet Union rendering, according to the obligations, technical assistance to the DPRK in building of power plants (a nuclear one among them), nonferrous metals industrial enterprises, engineering plants and a number of enterprises in other fields of economy. New forms of cooperation will be encouraged in joint producing of garments among them and also setting up of joint ventures in machine-tool industry.

But joint venture experience on the soil of the Republic indicates existense of serious problems in this field connected with non-constructive, dependent approach of the Korean side, seeking to get unilateral gains and advantages, and with narrow raw material base.

Active trade and economic ties with the South of the country with the structure of military and political confrontation being preserved most likely will play a destabilising role for the North and in general contradict the interests of the latter because such ties might bring about a long-standing and not always controlled threat to political and social system in power over there.

It is obvious that development of economic contact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must go hand in hand with the rise up of intra-Korean ties and lowering of the level of confrontation. One of the possible directions of economic relations development at the first stage could be invitation of the third countries in this process where they could play a role of a kind of "ideological shock-absorber", mollifying watchfulness of the DPRK leadership towards a demonstration effect of the South's economic success.

제 5 부

- 종 합 토 론
- 국제학술회의 전체일정

〈 종합 토론 〉

안 병 준 : 이틀동안의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이제까지 쟁점이 되었거나 미해결된 문제들에 대해 토론하겠다. 우선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의 실현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자. 내 견해로는 한반도 평화정착에 있어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장애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시도이며,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경우 한반도 군사균형은 더욱 파괴될 것인바, 소련은 북한의 핵개발을 적극 중지시켜야 한다.

Lambeth : 한반도 긴장을 고려할 때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것은 확실하며 자체개발능력도 있다. 재래식무기에 있어서도 북한은 남한에 비해 우위에 있으며, 주한 미군은 이에 대한 대응책이다. 따라서 성급한 주한미군 철수는 긴장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Lewis : 동감이다. 북한의 재래식무기가 남한에 비해 우위인한 주한미군은 점진적으로 감축되어야 한다.

Kunadze : 북한의 핵문제는 소련도 우려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러나 소련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잠재적이며 우리는 원칙적으로 합리적 선택을 설득할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해야 한다. 북한의 핵개발과 아울러 소련은 미군이 보유한 핵무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려를 하고 있다. 한반도 핵철거는 소련의 안보와 직결됨으로 미소협약의 필요하다. 그러나 주한미군문제는 한미 양국간의 해결문제이며, 소련으로서는 간여할 입장이 아니라고 본다.

이 시 영 : 북한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보아 소련은 한반도 평화와 긴장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한다.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주변국의

교차승인이 중요한데, 교차승인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다. 즉 한-소 평화, 미-북 평화는 남북한의 평화로 연결될 것이다.

Nossov : 소련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소련은 북한에 명령할 입장은 아니다. 한소관계 정상화는 북한에게도 유리한 것이며, 특히 경제적 분야에서의 다자간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Kunadze : 교차승인이 한반도 평화구조정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북한이 미·일과의 국교수립을 회피하고 있고 상황이 경직되어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신정현 :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문제를 남북한이 독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이상일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분단구조자체가 강대국의 이해가 깊이 내재해 있는 상황에서 강대국이 한국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어불성설이다. 교차승인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중요한 문제이며, 그 첫걸음은 한-소 수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김학준 박사께 우리의 통일방안에서 체제연합은 국가연합을 배면에 깔고있는것 아닌지 여쭙고 싶다.

다케사다 히데시 : 북한은 군비절감을 위해서도 반드시 핵무장을 하려할 것이다. 전통적인 소련의 한반도 비핵지대화 정책은 주한미군 철수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을 깨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교차승인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남북관계의 발전과 더불어 추진되어야 한다. 일본은 남북관계를 주시하면서 일·북관계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안 병 준 : 다음에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논의해 보고 한반도 통일의 장래를 전망해보도록 하자.

이 영 호 : 우선 Nossov 박사가 주제발표에서 제기한 실무자 그룹형성문제에 대해 논의를 진전시켜 보았으면 한다.

Nossov : 남북한 및 미·소간의 공식적인 관계가 어렵다면 잠정적으로 비공식적인 실무진 그룹을 창설하는 것도 공식적인 관계발전에 유용하다고 하는 것이 내생각이며, 여기에는 물론 중국도 포함되는 것이 좋다. 그룹의 성격은 우선 학술적·문화적인 것에서 정치적인 것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Idea이며,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며, 또한 평양의 입장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 물론 북한에 대해서도 회의때마다 얘기했으며, 북한 학자들도 동의했지만 실천적 결과는 없었다.

Lambeth : 정책입안자들의 모임 전에 학자 및 시민들의 예비모임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며, 이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할 것이다. 이번 회의만 보더라도 평양측이 토론에 참석했으면 더욱 의미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시 영 : 같은 성격은 아니지만 몽골리아 그룹회의가 좋은 보기가 될 것이다. 8개국 학자들이 참석했는데 세바르드나제의 외상회담 제의에 대한 예비모임으로 보였다. 지역적인 다자간 대화가 일상화되어야 한다.

안 병 준 : 실무회의가 구성되어 안보협정에 이르게 되었으면 한다. 그러나 실제로 세바르드나제가 다자간 협상을 제의했을 때 북한은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북한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불가

능하다. 우선 개인적 초대 즉 학술·문화적인 목적에서 모임이 가능하다. 소련의 연구소에서 계획을 세워 북한학자, 예술가들을 초대하면 북한학자들이 오지 않겠는가?

최 평 길 : 한반도 긴장완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변화가 중요한데, 북한의 권력승계가 북한의 변화 및 남북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또한 북한의 변화가 가능한가?

Nossov : 북한의 민주적 변화없이 통일의 전망은 없다. 그러나 북한의 민주화를 달성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중의 하나는 북한의 고립을 회피하는 것이다. 즉 북한을 코너에 몰아넣지 않고 가능한 교류협력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아마 북한이 제안한 학생교류는 그 시작으로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케사다 히데시 : 북한의 변화 가능성과 더불어 남한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은 다섯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특수부대를 보내는 것

둘째, 쿠데타를 기대하는 것

셋째, 억제력을 가지면서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

넷째, 북한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기다리는 것

다섯째, 전면적 변화를 지원하는 것

이 다섯가지 정책중에 어떤것을 택하느냐는 북한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개인적으로는 세번째가 적당하다. 북한의 변화징조는 보이지만 아직도 북한의 변화는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변화가 생길때까지 주시하고 그때까지 억제력을 가져야 한다.

이 영 호 : Nossov 박사의 얘기처럼 북한의 체제변화가 없는한 교류협력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대결적 자세로 나아가거나 북한을 고립시키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다. 현시점에서는 대화를 계속적으로 요청하면서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달라진 북한과 교류협력할 수 있으며, 통일은 북한의 기본적 변화후에 국민의 목소리가 지도자들을 움직일 수 있을때 가능하다.

안 병 준 : 방청석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다.

모 목 사 : 지금까지 토론을 통해 볼때 주제발표자들의 주장은 남북한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평화공존을 하면서 통일에 이르는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발상은 비현실적이다. 지구촌에 공산주의 국가가 생긴이래 이러한 통일에는 없다. 한국이 앞으로 해야할 과제는 3가지라고 본다.

첫째, 소련과 중국 및 동구와의 관계를 긴밀히 함으로써 북한의 남침의욕의 뇌관을 빼버려야 한다.

둘째, UN에 단독가입함으로써 한국의 국제적 지위를 공고히하고 아울러 김일성 정권을 고립시킴으로써 북한 내부의 변혁 이를테면 쿠데타를 유도해야 한다.

셋째, 일북관계 개선을 방지해야 한다. 만약 일북관계가 진전되고 일본이 북한을 지원한다면 이는 김일성 정권을 강화시키고 통일을 지연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끝으로,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문제가 있다. 통일정책은 전국민적인 합의와 지지속에 추진되어야 힘이 있다. 개인이나 사회단체와의 보다 많은 논의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이즈미 하지메 : 현재 북한의 입장은 남한에 비해 위약하며 방어적이다. 나

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통일을 위한 남한측의 이량과 양보를 기대하고 싶다. 아마 연방이라는 이름만 받아들인다면 평화공존 및 교류협력은 확대될 것이다.

다케사다 : 정치란 간단한 것이 아니다. 북한에 쿠데타가 생기면 나쁜 방향 즉 내란이나 강한 대남정책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드시 루마니아와 같이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는 예상할 수 없다. 나는 주제발표에서도 얘기했지만 통일민족주의를 강조하고 싶다. 남북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통일은 평화통일이다. 이는 평화공존을 전제로 하며 그런차원에서 체제연합론이 나오고 있다. 평화공존은 체제간의 공존·경쟁을 통해서 상호 수렴 및 변화의 과정을 의미한다. 체제연합의 타당성을 공감하면서 한가지 아쉬운 점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표방하는 체제연합이 사실상 국가연합에 치우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즉 국가간의 정상회담, 국회회담등을 통한 체제연합을 상정하고 있는 것 같다. 이 경우 국민적 참여, 민족대표성 있는 모임체가 배제되는 것 같다. 나는 각계각층의 대표성 있는 모임의 참여가 체제연합에 중요하다고 본다.

김 학 준 : 우리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통일방안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에 두개의 국가가 실존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쿠나제 박사도 주장했듯이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는 기본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이는 다른 말로 평화를 제도화 하는 것이다. 평화의 제도화는 분단현실 즉 남에는 대한민국이 있고 북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있다는 것을 사실상에 있어서는 수락해야 한다. 이것 없이는 남북한간에 협상이란 있을 수 없다. 한국이 추구하고 있는 분단현실을 인식하는 바탕위에서 평화를 제

도화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남조선 해방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영호 박사가 주장했듯이 한반도 문제해결의 열쇠는 북한이 쥐고 있으며, 북한이 변화해야 한다. 즉 분단현실을 북한이 인정해야 한다. 그렇게 인식할 때,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상정하고 있는 통일의 전단계인 남북연합은 남북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서 남북관계를 평화관계로 전환시키자는 것이다. 우리의 입장은 국제사회에서도 지지받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과정은 민족구성원 전체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이는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국민, 사회단체와의 대화를 늘려갈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여기에서 또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로서 의회민주주의를 따르는 한 최종 결정은 국회에서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결정사항의 집행 즉 북한과 협상하는 최종주체는 정부일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외교·교섭의 대권은 정부에 속하는 것이며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적 권한이기 때문이다. 즉 논의의 과정은 정당, 사회단체 그리고 활성화된 언론의 토론을 통해서 모두 수렴되어야 하나 집행은 정부가 주체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며 개인적인 의견이다.

〈국제학술회의 전체 일정〉

I. 일시 및 장소

- 일시: 1990년 9월 11일~12일
- 장소: 롯데호텔
사파이어 볼룸(3층)

II. 개회식

9월 11일(화) 오전 9:30~10:20
롯데호텔 사파이어 볼룸(3층)

- 개회사
국토통일원 장관 **홍 성 철**
- 기조연설
- 남북한 경제·사회공동체
모색을 위한 제언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 **이 현 재**
(전 국무총리)

III. 분과회의

9월 11일(화) 오전 10:30~12:00
오후 1:30~ 3:30

제1회의: 동서화해와 한반도
평화구조

- 사회자: 이영호(한국정책연구원)

I. The date and site

- Date: From 11 to 12
September, 1990
- Site: Lotte Hotel
Sapphire Ballroom, 3rd Floor

II. OPENING CEREMONY

September 11(Tuesday)
9:30 a.m.~10:20 a.m.
Sapphire Ballroom(3rd Floor)
Lotte Hotel

- Opening Address
Hong Sung Chul,
Minister of National Unification Board
- Keynote Speech
- A Suggestion to explore
the Ways to the Korean
Economic & Social Community
Lee Hyun Jae,
President of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Ex-Prime Minister)

III. PANEL MEETINGS

September 11(Tuesday)
10:30 a.m.~12:00
1:30 p.m.~ 3:30 p.m.

Session I : East-West Detente and
Peace-framework
on the Korean Peninsula

- Chairman: **Lee Young Ho**
(Korea Policy Research
Institute)

○ 주제발표자:

- "소련의 위협감소와 한반도 평화구조

벤자민 램버스(미, 랜드연구소)

- "테탕트와 한반도 통일전망"

미하일 노소브

(소, 미·캐나다연구소)

- "동서화해와 한반도 통일의 당면과제

다케사다 히데시

(일, 방위청 방위연구소)

○ 토론자

- 안병준(연세대)
- 이시영(외무부, 아·태 담당대사)

9월 12일(수) 오전 9:30~12:00

제2회의:한민족공동체 회복과 남북협력

○ 사회자:정종욱(서울대)

○ 주제발표자:

- "한반도 통일:현실주의와 이상주의"

조지쿠나제(소, 과학아카데미)

- "한민족공동체 형성과 군사문제"

캐빈 루이스(미, 랜드연구소)

Papers:

- "Soviet Threat Disappearing and Peace-framework on the Korean Peninsula"

Benjamin S. Lambeth

(RAND Corp., U.S.A.)

- "Detente and Prospects of Korean Reunification"

Michael G. Nossov(U.S. & Canada Studies Institute, U.S.S.R.)

- "Detente and Facing Problems of Korean Reunification"

Takesada Hideshi

(The National Institute for Defense Studies, Japan)

Discussants:

- Ahn Byung Joon(Yonsei Univ.)
- Lee See young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eptember 12(Wednesday)
9:30 a.m.~12:00

Session II :Restoration of the Korean National Community and South-North mutual cooperation

Chairman:Chung Chong Wook
(Seoul N. Univ.)

Papers:

- "Unification of Korea:Realism vs Utopianism"

George F. Kunadze

(IMEMO, U.S.S.R.)

- Toward a Korean National Community:Selected Strategic, Military, and Arms Control Issues"

Kevin N. Lewis

(RAND Corp., U.S.A.)

- "남북협력을 통한 한민족 공동체 형성"

임용순(성균관대)

○ 토론자:

- 남주홍(국방대학원)
- 최평길(연세대)
- 래리 헤핀스탈(메릴랜드대)

9월 12일(水) 오후 1:30~3:30

제3회의: 남북연합의 제도적 접근과 당면과제

○ 사회자: 안병준(연세대)

○ 주제발표자:

- "90년대를 향한 통일정책-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의 제주명"

김학준(청와대 사회담당보좌역)

- "남북연합의 제도적 접근의 전망"

이즈미 하지메(일, 시즈오카대)

- "남북연합과 경제협력"

알렉세이 세미요노프
(소, 과학아카데미)

- "Ways to Build a Korean National Community through the South-North Cooperation"

Yim Yong Soon

(Sung Kyun Kwan Univ.)

Discussants:

- Nam Joo Hong
(National Defense College)
- Choi Pyung Gil(Yonsei Univ.)
- Larry G. Hepinstall
(Univ. of Maryland)

September 12(Wednesday)
1:30~ p.m.~3:30 p.m.

Session III :Institutional Approach to the Korean Commonwealth and its facing question

Chairman: Ahn Byung Joon

(Yonsei Univ.)

Papers:

- "The Korean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as Seen Through the Various Concept on the Unification of Multi-System Nations."

Kim Hak Joon(Chief Social Affairs Assistant to the President)

- "Prospects of Institutional Approach to Korean Commonwealth"

Izumi Hajime

(Shizuoka Univ., Japan)

- "The Korean Commonwealth and Economic Cooperation"

Alexei I. Semeynov

(Academy of Science, U.S.S.R.)

○ 토론회자:

- 신정현(경희대)
- 이영호(한국정책연구원)

Discussants:

- Shin Jung Hyun(Kyung Hee Univ.)
- Lee Young Ho
(Korea Policy Research Inst.)

9월 12일(水) 오후 3:30~4:30

September 12(Wednesday)
3:30 p.m.~4:30 p.m.

제4회의:종합토론

- 사회자:안병준(연세대)
- 토론자:참석자 전원

Session IV :General Discussion

Chairman:Ahn Byung Joon
(Yonsei Univ.)

Discussants:All Participants

IV. 참가자명단

IV. LIST OF PARTICIPANTS

미 국

U.S.A.

벤자민 S. 램버스

- 정치학박사, 하바드大
- 하바드大 교수
- RAND연구소 국제안보담당
수석연구원

Benjamin S. Lambeth

- Ph. D., Harvard Univ.
- Teaching Fellow, Harvard Univ.
- Director of the Int'l Security
Program, RAND Corp.

캐빈 N. 루이스

- 정치학박사, MIT
- 존스 홉킨스大 교수
- RAND연구소 선임연구원

Kevin N. Lewis

- Ph. D., MIT
- Professor, Johns Hopkins Univ.
- Senior Research Staff, RAND Corp.

래리 G. 헤핀스탈

- 정치학박사, 워싱턴大
- 메릴랜드大 교수

Larry G. Hepinstall

- Ph. D., Univ. of Washington
- Professor, Univ. of Maryland

소 련

알렉세이 세미요노프

- 경제학박사,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
- 소련과학아카데미 사무총장

조지 F. 쿠나제

- 역사학박사, 동양학연구소
- 동양학연구소 선임연구원
-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
일본·한국부장

미하일 G. 노소브

- 정치학박사,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
- 미·캐나다연구소
미·태평양정책연구실장

일 본

다케사다 히데시

- 게이오대 졸업
- 스텐포드대 연구원
-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 교수

이즈미 하지메

- 일본 중앙대 졸업
- 평화안전보장연구소 선임연구원
- 시즈오카대 교수

U.S.S.R

Alexei I. Semeynov

- Ph. D., IMEMO
- Deputy Secretary-Academician of the U.S.S.R. Academy of Science.

George F. Kunadze

- Ph. D., the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 Senior Research Fellow, the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 Head of Dep. of Japanese & Korean Political Problem, IMEMO

Michael G. Nossov

- Ph. D., IMEMO
- Head of U.S. Pacific Policy Department, U.S. & Canada Studies Institute

JAPAN

Takesada Hideshi

- Keio Univ.
- Research Staff, Stanford Univ.
- Professor, the National Institute for Defense Studies

Izumi Hajime

- Chuo Univ.
- Senior Research Fellow, Research Institute for Peace & Security, Tokyo
- Professor, Univ. of Shizuoka

한 국

김학준

- 정치학박사, 美 피츠버그大
- 대통령 사회담당 특별보좌관

남주홍

- 정치학박사, 英 런던大
- 국방대학원 교수

신정현

- 정치학박사, 美 뉴욕시립大
- 경희대 교수

안병준

- 정치학박사, 美 콜롬비아大
- 연세대 교수

이시영

- 서울대
- 주UN공사
- 외무부 아·태담당대사

이영호

- 정치학박사, 美 예일大
- 체육부장관
- 한국정책연구원장

임용순

- 정치학박사, 美 루트게大
- 성균관대 교수

정종욱

- 정치학박사, 美 예일大
- 서울대 교수

최평길

- 정치학박사, 美 시라큐스大
- 연세대 교수

KOREA

Kim Hak Joon

- Ph. D., Univ. of Pittsburgh
- Professor, Seoul N. Univ.
- Chief Social Affairs Assistant to the President

Nam Joo Hong

- Ph. D., Univ. of London
- Research Fellow, Harvard Univ.
- Professor, National Defence College

Shin Jung Hyun

- Ph. D., City Univ. of New York
- Visiting Professor, Columbia Univ.
- Professor, Kyung Hee Univ.

Ahn Byung Joon

- Ph. C., Columbia Univ.
- Professor, Yonsei Univ.

Lee See Young

- Seoul N. Univ.
- Minister, Permanent Observer Mission to the U.N., New York
- Ambassador at Large, Head of Special Foreign Policy Task Force, MOFA

Lee Young Ho

- Ph. D., Yale Univ.
- Minister of Sports
- Chairman, Korea Policy Research Inst.

Yim Yong Soon

- Ph. D., Rutgers Univ.
- Professor, Virginia Commonwealth Univ.
- Professor, Sung Kyun Kwan Univ.

Chung Chong Wook

- Ph. D., Yale Univ.
- Professor, Seoul N. Univ.

Choi Pyung Gil

- Ph. D., Syracuse Univ.
- Visiting Professor, Stanford Univ.
- Professor, Yonsei Univ.

'90년대 동북아 새질서와 한민족공동체형성

1990년 11월 19일 인쇄

1990년 11월 21일 발행

발행처 : 국토통일원

(제1교류협력관실)

인쇄소 : 문성경인 (주)

비매품